

ISSN 2092-500X

통일과 평화

16집 2호
2024

특 집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완의 탈냉전

-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 션즈화
: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 이상숙
: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국제합법성(國際合法性)'의 경쟁 | 씨에당원 · 고양개
: 남북 올림픽회담 분석(1984~1988)

기획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 정대진

일반논문

- 김정은 시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북한 내 연구와 국제 협력 연구 동향 | 윤순진 · 박정현 · 김은진
- 국제 수확학술지에 수록된 북한 피인용 논문 실적 분석 | 김수연
-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Distress)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 김경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통일과 평화 16집 2호 2024년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편집위원장	김병로(서울대)
부편집위원장	한모니까(서울대)
편집위원	강구섭(전남대) 김귀옥(한성대) 김다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지훈(부산대) 김진환(국립통일교육원) 박태균(서울대) 배개화(단국대) 전재성(서울대) 한준성(강릉원주대)
해외 편집위원	김동진(Trinity College Dublin) 김연호(George Washington Univ.)
편집간사	조현주(서울대)
발행인	김범수(서울대)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I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 (031) 5176-2332 Fax | (031) 624-4751
E-mail: tongil-journal@snu.ac.kr

인쇄 도서출판 선인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48길 1(신월동 163-1) 1층
전화 02-718-6257
팩스 02-718-6253
이메일 suninbook@naver.com

ISSN 2092-500X

값 10,000원

통일과 평화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6, No.2 2024

16집 2호 · 2024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차례

특집 :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완의 탈냉전

- 션즈화 ■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7
- 이상숙 ■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47
- 씨에딩원 · 고양개 ■ ‘국제합법성(國際合法性)’의 경쟁
: 남북 올림픽회담 분석(1984~1988) 81

기획 :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 정대진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127

일반논문

- 윤순진 · 박정현 · 김은진 ■ 김정은 시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북한 내 연구와 국제 협력 연구 동향 169
- 김수연 ■ 국제 수확학술지에 수록된 북한 피인용 논문 실적 분석 ... 211
- 김경미 ■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Distress)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257

198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미완의 탈냉전

1970년대 미중 데탕트와 국교 정상화로 지구적 냉전 정세는 커다란 전기를 맞았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틈타 남북한 정부 역시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모색을 전개했으나 결국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후과는 상호 불신을 강화하는 결과로 남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1980년대 남북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가 개선을 추구했으나 좌절을 겪게 된 사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1990년대 북핵 문제로 연결되는 맥락을 탐색한다. 선즈화가 개혁개방 이후 안정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중국이 한국과 국교 수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한계를 사료를 통해 상세히 보여주었다면, 이상숙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대일관계 개선의 좌절 원인이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세딩원은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개되었던 남북스포츠회담이 애초의 의도였던 평화교류를 전진시키기보다 오히려 남북한의 정당성을 놓고 갈등이 비화된 장이었다고 주장한다.

특집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1978~1992)

선즈화 (瀧志華, 중국화동사대)

번역: 한재환 (군산대 강사)

국문요약

한중 관계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훑어보면,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의 전환으로부터 급작스러운 한국과의 수교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이 있었다. 그중 개혁개방이 가져온 중국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외교 이념의 전환은 모든 변화의 논리적 토대였다. 신속한 생산력 성장과 국제체제의 진입, 고립과 포위의 국제환경으로부터 탈피, 나아가 냉전 종식 후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의 수립은 중국 측의 필요와 원동력이었다. 한중 관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은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중국이 ‘두 조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남북의 화해와 교차승인이었고, 노태우 정부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실현은 중국에 있어 다시 오지 않을 역사적 기회였다.

주제어: 한중 관계, 북중 관계, 중국의 한반도 정책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7>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성과이다. (NRF-2021S1A5A2A03063022).

I. 서론

1978년~1992년의 중국 한반도 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역사적·실제적 의의를 지닌다. 한국전쟁 종전 후 1960년대 말까지 한반도는 첨예한 냉전적 대치 상황에 있었다.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가 이루어지면서 북중 관계 및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미국과 손 잡아 소련을 견제하고 북한이 소련과 손 잡아 미국에 저항하면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대외 정책상의 불일치가 발생했지만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 관계를 지속해야 했다. 또한,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중국은 ‘혁명 국가’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북한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모종의 딜레마에 빠졌고, 미국과 공조하여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특히 1974년 이후) 소극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¹⁾ 그 후 10여 년 동안 중국은 경제 건설 중심의 정책을 기반으로 굳건하게 ‘개혁개방’을 유지하며 세계와 손을 잡았다. 국제 정세는 점차 완화되어 냉전 후기와 탈냉전 초기에 접어들었으며 평화와 발전은 이 시대의 주제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첫째, 미중 관계는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안정적 발전 추세를 보이며 정상화되었고 양국 관계는 전술적 수준에서 전략적 수준으로 전환되었

1) 상세한 내용은 선즈화, 「중미 화해와 중국의 북한 문제 처리의 딜레마(中美和解與中國處理朝鮮問題的困境(1971-1976))」 『南國學術』 제1기 (2024), pp.32-45를 참조. (Shen Zhihua, "Allies in Trouble: The Direction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amid the US-China Rapprochement, 1971-1976" *China and Asia*, No.6 (2024), pp.32-59.)

다.2) 둘째, 동북아 지역의 두 삼각동맹인 북·중·소 및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점차 해소되었고, 미국이 제시한 ‘교차승인’ 원칙은 사실상 북한·중국·소련 3국의 승인을 얻었다. 이러한 구상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역 정세의 완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의 조선’만 인정하던 기존의 방침에서 ‘두 조선’을 동시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한중 수교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결실을 보았으며,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역사학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는 중국의 한국 인식과 정책 전환이다.

II. 중국 정책 결정 변화에 관한 기존 학계의 논의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한국 인식과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공문서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기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중국 지도자의 연보와 공개된 문헌, 당사자들의 회고록뿐이다. 그러나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급격한 변화와 (북핵 위기를 포함하여) 그 변화가 동북아 경제와 안보 구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학계에서는 한중 관계의 변화 및 중국 정책 결정 변화의 원인과 근거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2) 마오쩌둥의 대미 관계 개선의 결심은 주로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되었으며, 외교 전략의 전환이었다. 덩샤오핑의 조속한 미중 수교와 대미 관계 발전의 결심은 안보 문제보다는 세계평화와 중국의 발전 노선에 대한 고려가 컸다. 그래서 덩샤오핑은 미중 관계가 전략적 문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공산당 중앙문헌연구실 編, 『鄧小平年譜(1975-1997)』,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4, p.788, pp.825-826, 874-875, 897-898, 1293-1294.

연구자들은 다음의 요인들을 제시했다. 첫째, 중소 관계의 완화가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 북한으로부터의 압력을 덜어 주었다. 둘째, 톈안먼(天安門) 사건 이후 중국은 외교적 고립의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한국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나라였다. 셋째, 한국은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넷째, 동유럽과 소련이 한국과 관계 정상화를 한 것은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 관계를 전환하는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 다섯째, 대만의 공세적 ‘은탄외교(銀彈外交: 금전외교)’에 자극을 받은 중국은 대만의 국제 외교 공간을 제한해야 했다. 여섯째, 북한과 한국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한중 수교의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일곱째, 냉전 종식 후 아시아 중심 외교 정책을 채택한 중국에게 한국은 잠재적인 파트너가 되었다. 여덟째, 동유럽의 격변과 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은 서구의 ‘평화적 변화(和平演變)’ 정책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국을 서방 진영의 분열을 위한 가장 약한 고리로 삼았다. 이 가운데 특정 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도 있고, 몇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열거하는 학자도 있었다.³⁾

³⁾ Samuel Kim, “The Making of China’s Korea policy in the Era of Reform,” in David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374~375, p.381;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Edition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p.246; Jae Ho Chung,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pp.69~70; Hun-Bong Park, “The Factors Why China Changed to a De Facto ‘Two Koreas’ Polic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and 1988”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77 (2015), p.317; 이동률, 「한중 수교에서 ‘북한 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2018.9), 151~178쪽; 董洁, 「中韩建交中的中国决策再探讨」 『党史研究』 第8期 (2019), pp.103-115; Daekwon Son, “When Beijing Chose Seoul over Pyongyang: China-South Korea Diplomatic Normalization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2023), pp.960~976.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으며, 어떤 요인이 어느 시기에 영향을 준 것인가? 현재까지의 논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다. 첫째, 개혁개방 정책 시행 후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외교 사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 관계 변화의 바탕이자 기본이 되는 요인이다. 둘째, 10여 년의 한중 관계 여정에서 중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 중 어떤 요인이 어떤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요인 가운데 어떤 요인이 중국에 한국과의 관계 변화를 위한 필요성과 원동력을 형성했는지, 어떤 요인이 한중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에 속하는지, 또 어떤 요인이 중국 정책결정자들의 관점에서 한중 수교를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은 어째서 갑작스럽게 한국과의 수교 일정표를 제시하고 이를 서둘렀는지 분석해야 한다. 이상의 요인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중국의 의사결정의 원인과 근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한중 관계의 변화부터 수교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의사결정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하다.⁴⁾

Ⅲ. 한중 관계 변화 과정의 회고

한중 양국은 1970년대 말부터 접촉을 시작하여 10여 년이라는 긴 성숙

4) 지면 절약을 위해, 아래 역사적 과정의 서술에서 학계에 자주 사용되는 자료들은 주석을 생략한다.

기를 거쳐 1990년대 초 외교관계 수립에 이르렀다. 그 과정은 ‘물이 흐르면 수로가 만들어진다(水到渠成)’라는 중국 외교부장 첸치첸(錢其琛)의 말처럼 자연스러웠다.⁵⁾

1. ‘문을 닫되 걸어 잠그지 않는(關門不上鎖)’ 외교 방침

『노자(老子)』 제80장에는 “이웃 나라와 서로 마주하여 닭과 개의 울음 소리는 들리지만,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隣國相望，鷄犬之聲相聞，民之老死不相往來)”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6·25전쟁 종결 후 1970년대 말까지의 한중 관계의 단면을 생생하게 그려 주는 듯하다. 미중 양국의 화해 이후 한국 외무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중국 정책을 전환하여 ‘중공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⁶⁾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베이징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중국 정부의 냉대와 거부에 부딪혔다. 미중 수교 이후 한국은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중국은 소수 교민의 왕래만을 허용했을 뿐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까지 한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중국 지도자와 정부 기관 및 학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받았고, 덩샤오핑(鄧小平)도 이를 언급했다.⁷⁾ 이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문을 닫되(關門) 걸어 잠그지 않는(不上鎖)’ 방침을 내세웠지만, 무게는 여전히 ‘문을 닫는다’는 데 두었다.⁸⁾ 이 시기에 한중 민간에서 간접 무역이 은밀

5) 錢其琛, 『外交十記』,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pp.146~148.

6) 한국 외교사료관, C-0051-03, 15~17쪽, 18쪽.

7) 朝尚初, 「對南朝鮮經濟發展的看法」 『外貿調研』第662期(1986年8月25日), pp.13~20; 「남조선 문제 토론회 개최에 관한 의견」, 1988年3月25日, 山東省檔案館, A180-02-0116-009; 『鄧小平年譜(1975-1997)』, p.320, p.565.

8) 黃華, 『八十年代外交形勢、政策與今后的任務』(台北: 國防部情報局, 1981),

이 개선되었지만, 북한이 불만을 표하고 항의하자 중국은 즉각 조치하여 1982년 6월 한중 무역을 중단하라는 문서를 하달했다.⁹⁾

요약하면, 이 시기 한국은 미중 화해의 움직임을 틈타 적극성을 보였지만, 중국은 북한에 묶여 소극적이었고 따라서 한중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 느슨해진 ‘하나의 조선’ 정책

1983년 5월 5일 발생한 쥐장런(卓長仁)의 민항기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한중 양국 정부는 직접적 접촉과 협상을 개시하여 공식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 돌발적인 사안의 처리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합법적 존재를 인정하는 기점이 되었다. 7월 20일 중국공산당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工作領導小組)는 남조선 정책을 조정하고 북조선을 설득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¹⁰⁾ 이어 중국 외교부는 국제 다자간 행사에서 한국 인사의 중국 방문과 중국 인사의 한국 방문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공식화했다.¹¹⁾ ‘하나의 조선’ 정책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1983년 10월 중국은 북한이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미얀마 아웅 산 테러 사건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는 한중 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1984년 중국에는 개혁개방의 2차 파고가 일어났다. 1월부터

pp.29~30.

9) 对外经济贸易部办公厅编, 『对外经济贸易重要文件汇编(截止1982年底)』(下册)(北京: 中国对外经济贸易出版社, 1984), pp.269-270; 한국 외교사료관, 2012-0028-17, 122쪽.

10) 本书编写组, 『李先念年谱』第六卷(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1), p.201.

11) 钱其琛, 『外交十记』, p.150; 张庭延, 「邓小平关心朝鲜半岛局势」『党史博览』第5期(2013), p.28. 张庭延의 논문에서는 외교부의 규정이 1982년 7월에 수립되었다고 했으나, 이는 분명 기억의 오류일 것이다.

2월까지 덩샤오핑이 경제특구를 시찰했으며 5월에는 연해 도시 14곳을 개방했다. 10월, 중국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 개혁이 제안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 경제 도약의 경험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한국과의 관계 조정을 여러 차례 지시했고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전략적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월에는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를 통해 김일성에게 중국과 한국의 관계 개선이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고 전달했다.¹²⁾

이처럼 이 시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방식 및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맞물려 양국이 공동으로 교류의 물꼬를 텃던 것이다.

3. ‘관민유별(官民有別), 정경분개(政經分開)’의 한국 정책

1985년 3월 발생한 중국 해군 어뢰정 망명 사건은 다시 한번 한국의 대중국 관계 개선에 뜻밖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은 1983년 민항기 납치 사건을 처리한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반란 병사와 어뢰정을 함께 귀환시켜 중국 정부에 큰 감동을 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과 신화사(新華社) 홍콩지사를 통해 양국 간 진행 상황을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홍콩 채널’이 구축되었다는 점이다. 덩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중앙외사소조에서는 5월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비공식 접촉을 시작하고 점차 경제·무역·문화·과학기술 교류의 점진적 확대를 결정했다.¹³⁾ 이후 양국의 관계는 스포츠 교류와 민간 무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중국은 북한의 제지와 간섭을

12) 张庭延, 「邓小平关心朝鲜半岛局势」, p.28.

13) 本书编写组, 『李先念傳(1949-1992)』,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9, pp.1237~1238.

피하고자 ‘정부와 민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官民有別, 政經分開)’ 정책과 ‘행동만 할 뿐 발언은 삼간다(只做不說)’는 방침을 채택했다.¹⁴⁾ 이를 통해 양국의 민간교류는 대폭 확대되었다.

1986년 7월 서울 아시안게임은 한중 관계 발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1985년 4월 중국이 서울 아시안게임 참가 의사를 공식 선언하자 북한은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¹⁵⁾ 중국 측은 홍콩 채널을 통해 중국이 아시안게임 참가를 그해 한중 관계 개선을 최대의 사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의 증진을 도모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¹⁶⁾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의 설득으로 베트남과 몽골이 모두 참가를 거부한 상황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일하게 서울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이다.¹⁷⁾ 대회 개막 직전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515명이라는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했다.¹⁸⁾ 그리고 평양을 달래기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의 서기 후치리(胡啓立)는 중국이 서울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선언했다.¹⁹⁾ 그러나 아시안게임은 중국이 한국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7년 7월, 덩샤오핑은 한 문건에서 ‘남조선과의 관계 정상화’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텐지윈(田紀雲) 부총리가 주관하는 한중경제협조소조(韓

14) 山东省对外经济贸易委员会, 「关于鲁经贸专字452、704号文件的起草说明」, 1988年12月24日, 山东省档案馆, A208-02-0025-002.

15) 한국 외교사료관, 2016-0067-15, 63~64쪽.

16) 한국 외교사료관, 2016-0067-19, 65쪽.

17) Victor D. Cha and Ramon Pacheco Pardo,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3), p.106.

18) 『人民日报』1986년 9월 15일 제1판; 1986년 8월 17일 제1판.

19)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China, October 7, 1986, D3.

中經濟協調小組)를 구성했다.²⁰⁾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정상화’는 외교관계가 아니라 경제관계를 의미한다. 11월 14일 중앙외사소조는 평양과의 관계 및 북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당분간 중앙위원회의 방침을 따라 한국과 간접 무역만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몇 달 후인 1988년 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국과의 간접 무역을 민간 직접 무역으로 발전시키기는 것으로 결정했고,²¹⁾ 3월 10일 외교부는 산둥성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와 중국인을 통해 한국과 민간 무역을 직접 시행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²²⁾

이 시기에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 중요한 전환이 있었다. 양국의 교류는 민간 경제와 스포츠에 한정되었지만, 한중 관계의 진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한중 민간 관계의 비약적 발전

1988년 9월에 열린 서울 올림픽은 한중 관계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두 조선’을 획책하는 미국과 한국의 모략이라며 반대했으며, 평양과 서울의 공동 개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저지 운동을 벌일 기세였다.²³⁾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희망에 기반하여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협상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²⁴⁾ 그러나 로잔 회담은 남북이 각자의 정권의 합법성을 다투는 경연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1987년 7월 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8월

20) 田纪云, 「怀念小平同志」『炎黄春秋』第8期(2004), p.3.

21) 中共中央对外联络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未刊(2004.4), pp.105~106.

22) 山东省档案馆, A189-04-0444-001.

23) 『参考消息』1985년 8월 8일 제3판; 『로동신문』1986년 5월 31일 제6면.

24) 『人民日报』1985년 12월 30일 제3판.

북한은 IOC의 최종 중재안을 거부했다.²⁵⁾ 11월 29일 대한항공의 여객기가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에서 폭발하여 115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 공작원이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올림픽 개최까지 위협했다. 1988년 1월 12일 북한은 남조선이 단독 개최하는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틀 후 중국은 IOC에 올림픽 참가 확인 서한을 보냈다.²⁶⁾ 그해 7월, 덩샤오핑은 한 보고서에서 “남조선과의 경제와 문화 관계를 발전시킬 시기(時機)가 무르익었고, 발전의 보폭을 원래의 계획보다 더 빠르고 넓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남조선과의 관계 발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수이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했다.²⁷⁾ 덩샤오핑이 말한 ‘시기’란 서울 올림픽을 의미했다. 이제 한중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이 기간에 한중 간 민간 경제 무역과 인적 교류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무역 총액은 1987년 16억 7,900만 달러, 1988년 30억 8,700만 달러에 달해 1984년의 4억 6,200만 달러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²⁸⁾ 1988년 공무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누적 인원 4,200명으로 209명이었던 1987년의 20배를 넘었고, 공무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도 누적 인원 880명으로 전년도 52명의 17배에 달했다. 1989년에는 각각 1만 3,600명과 9,400명으로 증가했다.²⁹⁾ 나아가 중국은 올림픽 직후 한국 고위층과의 정치적 접촉을 위한 민간 비밀채널을 열었다. 1987년 11월 대선 후보 노태우는 임기 내

25) 谢定元, 『“合法性的竞争”: 朝韩奥运会谈探析(1984-1988)』 『边疆与周边问题研究』 第4期 (2023), pp.37~61.

26) 『人民日报』 1988년 1월 13일 제3판, 1월 16일 제3판.

27)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 p.106.

28) Kyung-Hee Che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1979-1992: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4), p.136. 통계 수치는 한국 통상산업부의 자료를 취했다.

29) Kyung-Hee Che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p.127;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 회고록』 (서울: 삶과꿈, 2002), 120쪽.

중국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공약했다.³⁰⁾ 노태우는 집권 초부터 대중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본인의 친척과 친구를 잇달아 중국에 파견하고 거액의 차관을 약속하는 등 중국 고위층과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응하는 중국 측 기구와의 접촉 부족으로 인해 일부 정보만 전달되었을 뿐 결국 별다른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³¹⁾ 중국국제우호연락회(中國國際友好聯絡會, CAIFC)는 1988년 11월 ‘조선 실무팀’을 조직하여 실질적으로 한국 대응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정부를 배후에 둔 민간 사회단체로 당시 명예회장은 왕전(王震) 국가부주석, 부회장은 중국공산당 원로 간부인 조선족 인사 진리(金黎)와 중국공산당 원로 예젠잉(葉劍英)의 차남 웨핑(岳楓, 본명 葉選寧)이 맡았으며, 이사진은 중국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중국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우호연락회의 한국 대응 관련 업무는 부총리 텐지윈이 이끄는 한중경제협조소조에서 직접 책임을 졌다. 한국 측에서도 고위층을 중국에 파견하여 접촉을 시도했다. 한국의 국제우호협회 장치혁 회장, (주)선경(이사장 최종현은 노태우의 사돈)의 이순석 사장, 대통령 정책보좌관과 정무장관을 지낸 박철언이 모두 우호연락회를 통해 중국 고위층과 친분을 맺었다.³²⁾ 이 채널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등, 민간 외교는 한중 정치 관계 발전사의 뚜렷한 특징이 되었다.

30)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East Asia, November 30, 1987, p.10; 22 December 1987, p.14.

31) 刘亚洲, 『刘亚洲文集(二)』, 『中共重要历史文献资料汇编』第二十七辑(洛杉矶: 中文出版物服务中心, 2009), pp.310~312; 张雅文, 「中韩建交秘闻录」 『南方周末』 1995년 10월 27일 제1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남북한 UN 동시 가입』(서울: 국립외교원, 2021), 298쪽.

32)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복한 실무팀 팀장 네샤오화(聶曉華)와 필자가 진행한 인터뷰. 2024년 3월 31일, 베이징.

이 시기에는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중 민간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이 한국을 더욱 중시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정책 재조정 움직임이 싹텄다.

5. 실질적으로 ‘두 개의 조선’을 인정한 중국

올림픽 이후 한중 경제 관계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었다. 1989년 1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서울과 베이징에 각각 중국과 한국 사무소를 두자고 제의했다. 두 기관의 대표는 각각 3월과 5월에 상호 방문하여 무역사무소 설치를 논의했다.³³⁾ 4월 22일, 북한을 방문한 자오쯔양(趙紫陽)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김일성에게 “중국과 남조선의 경제 관계는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이익이 된다. 향후 중국이 정치적 고려를 할 때는 반드시 북한과 상의할 것이다”라는 덩샤오핑의 말을 전했다.³⁴⁾ 5월 4일 한국 재정부 장관 이규성이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에 참석하여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첫 장관급 관료가 되었다.³⁵⁾ 6월에 발생한 헨안면 사태는 중국의 국제 이미지와 대외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져왔으나,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11월 6일, 김일성이 방중하여 중국 지도자들에게 남조선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북한을 고립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장쩌민(江澤民)은 한중간 무역사무소 설치를 나중으로 미룰 수 있다고 대답했다.³⁶⁾ 그러나 몇 달 뒤인 1990년 4월 25일, 우호연락회의 주선으로 텐지윈이 인민대회당에서 이순석을 만났다. 이는 중국 지도

33)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20쪽.

34)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 pp.106~107.

35)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20쪽.

36)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 pp.186~187.

자급에서 처음으로 한국 인사를 접견한 것이었다. 이 만남에서 텐지원은 한국 지도자에게 “중국이 양국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루고 있음”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한중 “무역대표부 상호 설립은 불가피한 흐름”으로서, 북한의 입장과 수용 능력을 고려해 사무소를 일단 “민간 차원에서 순수하게 상업적으로 운영하지만 실제로 절반은 공적인 성격”이며 이후 정세와 경제무역 규모의 발전 상황을 보아 “점차 이 기구의 성격을 바꾸자”고 말했다.³⁷⁾ 6월 21일, 국무원 대변인 위안무(袁木)는 한중 양국이 무역사무소 설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³⁸⁾ 10월 20일, 중국국제상회(中國國際商會)와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베이징에서 상호 무역사무소 설립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두 개의 조선’을 사실상 인정했고, 무역사무소를 통해 ‘정경분리’에서 ‘정경합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한중 수교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이다.

요약하면 이 시기 베이징에서 정치적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이 한중 관계의 발전을 해치지 않는 않았다. 양국은 무역대표부 상호 설치를 결정하여 사실상 수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6. 크게 열린 한중 수교의 문

곧이어 중국은 한국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한중 수교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다.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분단 이후 남북한은 줄곧 유엔 가입을 거절당했다. 1985년 10월, 한국

37) 『刘亚洲文集(二)』, pp.318~326. 며칠 후 최종현은 노태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노태우, 『노태우회고록(下): 전환기의 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244쪽.

38) 『조선일보』 1990년 6월 22일 제1면.

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및 미·일·소·중 4개국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가속화했다. 북한은 그것이 분단 고착과 ‘두 조선’의 국면을 형성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남북이 우선 연방제를 채택하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수립한 후 통일 국가의 형식으로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³⁹⁾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동안 중국은 줄곧 북한의 주장을 지지했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위상이 크게 높아진 한국이 유엔 가입을 서둘렀다. 1989년 11월, 한국은 북한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한국의 가입을 수용해 달라”고 유엔에 요구했다.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동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한국을 인정했다. 한국과 소련의 수교도 임박한 상태였다. 한국과 수교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증가했고, 북한과 수교한 101개국 중 84개국이 한국과도 외교관계를 맺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회담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한국은 유엔 단독 가입 신청 의사를 거듭 밝혔다.⁴⁰⁾ 한국이 비밀채널을 통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중국에 전달하고 도움을 청했다는 점은 주목할 지점이다.⁴¹⁾

9월 20일 유엔총회가 개최되었고 9월 30일 소련과 한국이 수교했다. 이제까지는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국의 유엔 가입을 막았다면, 양국의 수교로 이 장애물이 사라졌다.⁴²⁾ 유엔총회에서 71개국 대표가 남북 동시 가입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지만, 북한의 단일 의석 유엔 가입 제안을 지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도 한국을 지지하되 북한의 유엔 가입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9)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46쪽.

40) 『参考清樣』 1990년 10월 6일.

41)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3』, 287~288쪽; Hakjoon Kim,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 South Korean Perspectiv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3, No.2 (Summer 1994), pp.40~41.

42)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3』, 30쪽, 78쪽, 91쪽.

다.⁴³⁾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여부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상황이 되었다. 10월 베이징 주재 한국 무역사무소는 중국도 북한의 제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찬성하며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청와대에 전했다.⁴⁴⁾ 한편 중국 측은 신화통신 홍콩지사를 통해,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과 한중 관계 발전을 고려하여 한국이 오는 유엔총회에 유엔 가입을 신청하기보다, 북한과 계속 협의하여 내년에는 남북이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전했다. 한국은 중국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중국 측이 이 문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⁴⁵⁾

1991년 2월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용순 조선노동당 중앙서기는 북한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통일 후 유엔 가입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⁴⁶⁾ 한국 정부는 북한이 계속해서 동시 가입을 거부한다면 올해 열리는 제46차 유엔총회 전까지 단독 유엔 가입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외무부 성명으로 이에 맞섰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국 외무부 장관은 3월 8일 북한의 반대 여부와 관계 없이 1991년 유엔 가입을 신청할 것을 선포했으며, 평양은 현실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⁴⁷⁾ 4월 7일, 한국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유엔총회 개막 전 단독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비망록을 배포했다.⁴⁸⁾ 이튿날 북한 『로동신문』은 이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

43)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48~49쪽.

44)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3』, 101~102쪽;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49쪽.

45)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3』, 30쪽, 102쪽, 211쪽;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58~59쪽.

46) 『人民日报』 1991년 3월 1일 제6판.

47)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57쪽, 63쪽.

48) 노태우, 『노태우회고록(下)』, 387쪽.

비난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4월 19일, 김일성이 직접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은 남북한의 단일 의식 유엔 가입이며, 유엔 단독 가입은 역사에 분열의 책임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⁴⁹⁾ 결국 이 교착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국가는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뿐이었다.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이 현실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해야 했다.⁵⁰⁾ 이에 5월 3일 리펑(李鵬)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직접 김일성을 설득했다. 북한의 리펑 총리 접대는 과거 외국 정상의 예우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⁵¹⁾ 리펑 총리 또한 공개 담화에서 북한의 연방제 방식의 통일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⁵²⁾ 그러나 비공개 회담에서 리펑 총리는 남북이 유엔 가입 문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단독 가입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경우 중국이 매우 난처하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했다. 이 말에는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김일성은 마지못해 “북한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대답했다.⁵³⁾ 5월 9일 한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리펑 총리의 방북이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협상이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를 희망하며 북한 측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라고 전했다.⁵⁴⁾

중국의 설득과 압박에 밀린 북한은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으로 수세적

49) 『로동신문』 1991년 4월 8일 제5면, 4월 21일 제1면.

50)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参考清樣』 1990년 10월 28일; 1991년 4월 16일.

51) 『参考清樣』 1991년 5월 13일.

52) 『人民日报』 1991년 5월 5일 제1판.

53) 李鵬, 『和平发展合作: 李鵬外事日记』(上) (北京: 新华出版社, 2008), p.338, 347.

54)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82~83쪽.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득이 선제적 행동에 나섰다.⁵⁵⁾ 5월 27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 가입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이 결정은 긍정적인 의의가 있으며 남북대화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⁵⁶⁾ 리펑과 북한의 합의에 따라 첸치첸(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6월 방북하여 유엔 가입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은 유엔의 표결에서 한국의 가입 신청은 순조롭게 통과되고 북한의 신청만 저지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북한은 중국이 남북한 유엔 가입 개별 상황에 끝까지 반대하고, 만약 미국이 핵 사찰을 구실로 북한의 가입을 거부한다면 중국도 남한의 가입을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첸치첸은 유엔의 남북한 동시 가입 심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및 다른 강대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하나의 안건으로 통합해 상정하고 만장일치의 방식으로 통과시킬 것임을 알렸다. 또한 그는 총회 기간 중 중국이 국가 간의 조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⁵⁷⁾ 이후 남북한의 유엔 가입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9월 17일, 유엔총회는 결의안 46/1호를 표결 없이 통과시켜 남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동시에 인정하기로 결의했다.⁵⁸⁾ 북한은 안심했고 한국은 만족했다. 한국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실질적인 정치적 걸림돌은 제거되었고 마침내 한중 외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55) 太永浩著, 张琪惠译, 『三楼书记室的暗号: 前北韩驻英公使太永浩的证词』(台北: 2018), pp.14~15.

56) 『人民日报』1991년 5월 29일 제6판, 제1판.

57) 钱其琛, 『外交十记』, pp.153~154; 万经章, 「中国在朝·韩同时加入联合国中的作用」『纵横』第12期(2018), p.60.

58)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91, Volume 45,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pp.95~96.

이 시기 중국이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은 중국이 한국과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7.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르기로 한 중국

한중 수교의 문은 열렸지만 그 문턱을 중국이 언제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차승인’이 대세로 굳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감정과 이익을 고려해 북미 수교 이후 한국과 수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약속을 어겼다는 점이다.

1990년 9월 11일,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중 영수 회담에서 김일성은 북미 수교 전까지는 남조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지 말아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장쩌민은 중국이 남조선과 결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는 경제 관계를 발전시킬 뿐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이 보고를 들은 덩샤오핑은 “경제 교류는 한중 모두에 도움이 되므로 무역사무소를 설립해야 한다. 한중 수교 문제는 당장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2~3년, 심지어 5년이라도 일단 미루는 것이 좋다.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은 완충지대 없이 한·미·일과 최일선에 서게 된다. 이는 당면한 전략적 문제이므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⁵⁹⁾고 지시했다. 9월 23일, 진리와 웨핑은 박철언을 만나 “한중 양국이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은 듯하다”라는 중국 측의 의견을 전달했다. 1991년 7월 25일, 박철언은 노태우의 동의를 얻어 행정부 장관과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중국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한중 외교관계의 조속한 수립을 건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⁶⁰⁾는 것이었다. 9월 초, 한국 안전기획부는 우호연락회 이사 류야저

⁵⁹⁾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 pp.190~200, 212~214.

우(劉亞洲, 중국공산당 원로 李先念의 사위)를 극비리에 초청하여 중국 지도부에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게 했다. 즉,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에게 특사를 파견하여 친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여기엔 한국이 유엔 가입 후에도 중국과 계속 교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내용이었다. 류야저우는 귀국 후 당 중앙에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건의했다.⁶¹⁾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증명할 사료가 없다. 10월 2일, 한중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기간 중 처음으로 회견했다. 이상옥 장관은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의 진전을 희망했다. 첸치천 부장은 중국은 남북대화를 지지하고 북일 수교와 북미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며, 중한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현재는 과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용히 실질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⁶²⁾ 김일성은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회담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북한을 승인할 때까지 “중국은 남조선과 수교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장쩌민은 중국과 남조선 간에는 민간 무역 관계밖에 없다고 말했다. 덩샤오핑은 북중 양국이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북중 관계는 동맹이 아닌 형제로서의 특수한 관계라고 말했다.⁶³⁾ 덩샤오핑의 이 발언에는 분명히 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이 시점에서 아직은 한국과의 수교를 결심하지 못했다.

11월 12일 APEC 제3차 장관급회담 기간 중 노태우 대통령은 외교부장

60)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2)』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5), 195~197쪽, 204~208쪽.

61) 『劉亞洲文集(二)』, 339~343쪽.

62)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34~138쪽; 첸치천은 회고록에서 이 회담을 ‘의례적’ 만남이었다고만 기록했다. 钱其琛, 『外交十记』, p.146.

63)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 pp.201~211.

첸치첸을 접견하고 양국 간의 오랜 역사를 거론하며 조속한 정상 국가 관계 수립을 촉구했다. 첸치첸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최근 양국의 무역 관계가 크게 발전했으며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⁶⁴⁾ 11월 14일 오전 양국 외무부 장관이 조찬을 함께 했다. 이상옥은 무역사무소를 정부 기구로 승격하고 조속한 수교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첸치첸은 양국 관계의 진전을 보고 싶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민간 방식이 좋으며 양국의 외교관 접촉은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중 수교 문제에 관해 중국은 남북회담의 진전 및 북·미·일 관계 개선을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도 이들 방면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⁶⁵⁾ 양국의 정치적 교류의 문은 이미 활짝 열린 상태였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의 수교를 서두른 데 반해 중국은 신중하게 시기를 기다렸다.⁶⁶⁾

1992년 초 상황이 돌변했다. 베이징 주재 한국무역사무소의 정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월 4일 ‘남조선’이라는 호칭을 ‘한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선전 당국에 발송했다.⁶⁷⁾ 『런민르바오(人民日報)』 1월 10일 자부터 ‘한국’이라는 단어가 ‘남조선’ 대신 기사에 슬그머니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중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신호였다. 1월 23일 텐지윈은 웨핑의 주선으로 장치혁을 회견하고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장치혁이 노태우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이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을 때 한국 관원들은 눈앞에 다가

64) 노태우, 『노태우회고록(下)』, 246쪽; 钱其琛, 『外交十记』, pp.144~146.

65)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45~148쪽; 钱其琛, 『外交十记』, pp.146~148.

66) 1991년 마지막 날 중국 대외경제무역부는 「남조선과의 경험에 관한 통지문」을 보내면서 중앙정부가 정한 ‘정경분개(政經分開), 관민유별(官民有別)’ 및 ‘행동만 할 뿐 발언은 삼간다(只做不說)’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对外经济贸易部办公厅编, 『1991年对外经济贸易重要文件汇编』, 1992, 未刊, pp.410~412.

67)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54쪽.

은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⁶⁸⁾ 첸치천이 1992년 2월 외교부에서 한중 수교의 여건이 거의 무르익었음을 선언했다는 초대 주한 중국대사 장팅옌(張庭延)의 회고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⁶⁹⁾ 이와 함께 한국 외무부도 중국 정부가 한국과 수교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무역 사무소의 보고를 받았다. 이상옥은 즉시 주 오스트리아 대사 이시영에게 방중하여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첸치천은 2월 27일 베이징에서 이시영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를 확인하고, 4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총회에 한국 외무부 장관이 참석해 수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했다.⁷⁰⁾

첸치천과 이상옥은 4월 13일 베이징 회담에서 수교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⁷¹⁾ 며칠 뒤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은 평양에 김일성의 생일 축하연 참석을 기회로,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고려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고 북측에 알렸다. 김일성은 현재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국과의 수교를 1년 연기해 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⁷²⁾ 그러나 중국은 이미 결심을 굳혔고, 굴러가기 시작한 바퀴를 멈출 수는 없었다. 한중 수교의 협상 과정은 한 달 만에 걸친 세 차례의 회담 끝에 6월 말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칠 정도로 신속하고 간단했다.⁷³⁾ 7월 15일 방북한 첸치천이 그 결과를 통보했

68) 배진영, 「덩샤오핑을 감격케 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 『월간조선』, 2014년 9월호, 163~164쪽. 필자는 얼마 전 네샤오화(聶曉華)를 통해 장치혁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 1992년 11월, 노태우는 이 건으로 장치혁에게 수교훈장을 수여했다.

69) 延靜, 「历史的抉择」 『报告文学』 第1期 (2008), p.72.

70)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56~157쪽.

71)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167~169쪽; 钱其琛, 『外交十记』, p.156.

72) 延靜, 「历史的抉择」, p.74.

73) 한국 측은 협상 초부터 조속한 수교를 희망하며 선결 조건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张瑞杰, 「四十年积怨—瞬间消——中韩建交往事」 『世界知识』 第17期 (2002),

을 때 김일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⁷⁴⁾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수교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시기 중국 정책의 최대 변수는 북미 수교 이후로 계획되었던 한중 수교가 1992년 초 중국의 갑작스러운 조기 수교 결정으로 실행에 옮겨졌다는 점이었다.

IV. 중국의 한국 정책 전환의 요인 분석

한중 관계 변화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기존에 언급한 요인들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환에 크든 작든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중 관계의 변화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시점이 있었음을 짚어야 한다. 1984~1985년, 중국은 한국에 ‘관민유별(官民有別), 정경분개(政經分開)’ 정책을 펼쳤다. 그 배경은 중국이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데 있다. 1988~1989년, 양국은 직접 무역을 시작하고 상호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중국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동의했고 ‘정경분개’는 ‘정경합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배경으로는 올림픽을 거치며 한중 관계가 고조된 점, 소련과 동유럽의 정세 급변, 그리고 베이징의 정치 파동(텐안먼 사건)으로 중국이 외교적 고립에 빠진 상황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992년 초 갑자기 한국과의 조기 수교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실행에 옮겼다. 그 배경은 첫째, 덩샤오핑이 중론을 배제하고 지방개혁과 세력을 이용하

pp.38~39.

⁷⁴⁾ 钱其琛, 『外交十记』, pp.158~160.

여 개혁개방의 노선을 굳건히 유지했다는 점, 둘째, 중미 관계가 그들을 벗어나면서 전략적 협력관계가 기본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점, 셋째, 소련의 해체로 동북아시아와 국제 외교 구도의 변화가 발생한 점, 넷째, 남북 회담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전망이 밝아진 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 다양한 요인이 같은 시간대와 같은 차원에서 작동한 것이 아니다. 중국 정책 결정의 전체 과정과 변화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에 상응하는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

첫째,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정책을 전환한 논리적 기반을 먼저 짚어야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행한 후 국제문제 처리와 외교 사상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시대에 대한 관점은 전쟁과 혁명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은 국제체제 파괴에서 기존 국제체제로의 진입과 유지로, 외교 사상은 이데올로기 주도에서 국가이익 우선으로, 외교 방침은 동맹(진영) 외교에서 비동맹 전방위외교로 전환했다.⁷⁵⁾ 이러한 기반 위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관련국인 일본·미국·소련과의 관계를 점차 정상화했으며, ‘두 조선’의 인정과 한국과의 수교 결정은 바로 이러한 전환 논리의 연장이었다.

둘째, 중국의 한국 정책 변화, 특히 한국과의 수교에는 나름의 필요성과 원동력이 있다. 덩샤오핑은 1988년 5월부터 9월까지 외빈과의 회담에서 한국과의 민간관계 발전은 백익무해로서, 경제적으로는 양국의 발전에 유리하고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통일에 유리하며 외교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략적 묘수라고 거듭 지적했다.⁷⁶⁾ 1990년 4월, 텐지윈은 중국은 한중 관계의 발전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의 번영 및 아시아와 세계 평화의 증진에 유익하다는 점을 인

75)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논증은 任晓, 「经验与理念: 中国对外政策思想三十年的发展及其意义」 『复旦学报』 第3期 (2009), pp.36~45.

76) 钱其琛, 『外交十记』, p.151.

식하고 있다고 밝혔다.⁷⁷⁾ 이러한 고려는 1992년 초에 특히 중요했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지위 및 정치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한중 관계의 발전은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의 생산력을 향상하고 국제체제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국제환경을 타파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아시아에서 대만 독립세력 최후의 ‘외교 거점’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 새로운 경제질서와 정치질서를 확립한다는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중국 자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셋째, 중국이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중 관계 정상화 실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했는데, 그것은 주로 북한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1989년 이전까지 한중 관계 발전을 저해한 요인은 소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북한이었다. 이 시기는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북한을 두고 다투었던 때였다. 북한은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구사하면서 중국이 한국에 접근하면 소련에 다가서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우려했던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추진할 때 어쩔 수 없이 번번이 물러서야 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경제무역 관계 발전, 무역사무소 설치, 한국의 유엔가입 수용 등 일련의 조치들에서 소련의 방식을 따른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한의 압력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중소 관계 정상화 이후 소련 요인이 사라지면서, 한중 교류에서 북한이라는 장애물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김일성은 중국에 ‘하나의 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라고 요구했다.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중국의 교류를 허용한 후에도 북한은 중국이 정책 결정을 바꿀 때 평양의 동의를 얻고 북한의 이익과 외교적 상황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이런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이유는,

77) 『刘亚洲文集(二)』, p.321.

덩샤오핑의 말처럼, 북한과의 관계 유지도 하나의 전략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북중 간에 이견이 존재하고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졌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었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다양한 관계의 균형이 필요한 바, 한국을 얻기 위해 북한을 잃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중국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야 했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평양과 협의해야 했다. 한중 수교는 북한의 감정을 고려하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덩샤오핑이 3~5년을 더 기다리자고 말했던 것은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었다.

넷째, 중국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한중 수교의 원칙은 북한을 해치거나 북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바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조건이 있었다. 첫 번째 조건은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 화해하는 것이다. 덩샤오핑은 1985년 8월 한중 관계의 수립과 발전은 주로 남북대화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⁷⁸⁾ 10여 년의 남북 접촉과 주변국의 다각적인 노력 끝에 이 조건은 결국 실현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은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했고, 31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두 문서는 1992년 2월 19일에 정식 발효되었다. 남북한은 이와 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했다. 연형묵 북한 총리는 이 문서들이 세계, 특히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들에 보내는 조선 민족의 평화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정원식 한국 총리는 이 문서들이 적대와 대립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희망과 광명이 충만한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런민르바오』도 희망과 걱정으로 가득찬 이 발언들을 게재했다.⁷⁹⁾ 남북의 형제가 손을 맞잡고 평화를 논의하게

78) 『邓小平年谱(1975-1997)』, pp.1063-1065.

되자 중국과 한국의 교류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첫 번째 조건은 1992년 초에 갖추어졌다고 하겠다. 두 번째 조건은 한반도 주변의 4개국이 각각 남북한과의 교차승인을 실현하는 것이다. 애초에 중국은 북한의 반대로 교차승인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3년 11월 우쉐첸(吳學謙) 외교부장은 일본 방문에서 교차승인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⁸⁰⁾ 그러나 한중 관계가 점차 개선되면서 1984년 12월 중국의 태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⁸¹⁾ 1989년 2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 회답에서 리펑 총리는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직접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⁸²⁾ 1991년 4월 리펑은 일본 외무장관을 접견하면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⁸³⁾ 이처럼 중국은 분명히 교차승인의 원칙을 받아들였다. 1990년 9월 30일 소련이 한국과의 수교를 선언하고 그해 연말에 동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했다. 이는 중국에 ‘교차승인’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한은 모스크바의 이 조치를 ‘배신’이자 ‘허위’라며 분노하면서도⁸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미국 및 일본과의 접촉을 서둘렀다. 중국은 북일 회담과 북미 회담 추진에 협력하면서 한중 간 정치 관계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

79) 통일정책실 편저, 『통일백서1992』 (서울: 통일원, 1992), 114~115쪽; 『人民日报』 1992년 2월 20일 제6면.

80)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开示文书』, 18/04-1028/3, pp.1~15.

81) 한국 외교사료관, 2014-0008-14, 47~48쪽.

82) National Security Council, Memcons, Presidential, 28. Memcon, 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83) 『外事动态』 第5期, 1991年4月25日.

84)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 제2면.

1990년 2월까지 주중 미국대사관과 북한대사관의 참사관이 7차례 만났고, 미국 전 국무부 차관보와 전 주중대사의 첫 방북이 이뤄졌으며,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에서는 한반도의 군사 대치 요인이 약화되고 있어 ‘교차접촉’과 ‘교차승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⁸⁵⁾ 그러나 교차승인의 길에 다시 북핵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의심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을 요구했다. 1991년 말부터 1992년 초까지 북한과 미국의 참사관급 접촉이 18차례 진행되었고 베이징의 북일 공식 회담도 6차례 시행되었지만, 모두 북핵 문제로 인해 교차 상태에 빠졌다.⁸⁶⁾ 핵 사찰로 평양을 압박하는 일에는 반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던 중국은 북한에 핵사찰 수용을 설득하겠다고 비공식으로 알렸다.⁸⁷⁾ 1992년 1월 30일, 북한은 마침내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했다.⁸⁸⁾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류화추(劉華秋) 외교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중 및 북미 간 교차승인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미국 측은 이 문제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으며,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이전에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⁸⁹⁾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핵안전협정」 비준을 결의하고 핵사찰에 즉각 응하겠다고 선언했다.⁹⁰⁾ 4월부터

85) 『政党与世界』 第26期, 1990年3月1日.

86)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151쪽; Hong Nack Kim, "Japan and North Korea: Normal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Tokyo," in Young Whan Kihl, ed.,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123~125.

87)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243쪽, 367쪽; Chae-jin Lee,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96), pp.93~94.

88) 『人民日报』 1992年2月1日第6版.

89)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151쪽.

90) 『人民日报』 1992年4月10日第6版.

6월까지 북한은 대미 민간 외교를 펼쳤다. 김일성은 미국 손님을 자주 접견했는데, 주인이 연회를 마련하고 손님은 선물을 주는 등 분위기가 ‘훈훈하고 우호적이었다.’⁹¹⁾ 한중 수교 협상은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진행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1992년 8월 한중 양국이 수교를 선언했을 때 북미 및 북일 간의 협상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국이 제시했던 교차승인의 조건은 실현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덩샤오핑에게 한중 수교 전 북미 관계 정상화 실현을 위해 1년을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리 서둘러 한중 수교를 추진한 것인가?

다섯째, 노태우 대통령 임기 내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는 중국으로서는 놓쳐서는 안 되는 역사적 기회였다. 텐안먼 사태 발생 이후 중국에 대한 노태우의 우호적 태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미국과 대다수 서방 국가가 중국을 봉쇄하고 고립시킨 위기 상황에서 노태우는 장치혁과 우호연락회를 통해 중국 지도자에게 친서를 보냈다. 장치혁의 회고에 따르면, 노태우는 친서에서 불가피하게 군대를 동원해야 했던 중국의 고충을 잘 이해하며, 한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에도 그런 뜻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리는 장치혁에게 덩샤오핑이 노태우의 친서를 읽고 크게 감동했다고 전했다.⁹²⁾ 이후 노태우는 미국의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및 영국 총리와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중국의 입장을 누차 해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첸치첸은 이를 중국 지도부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⁹³⁾ 중국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개최를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91) 『로동신문』 1992년 4월 3일 제1면, 4월 13일 제2면, 6월 2일 제1면, 6월 29일 제1면.

92) 배진영, 「덩샤오핑을 감격케 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 『월간조선』, 160~161쪽. 노태우의 편지와 관련하여 필자는 마오마오(덩샤오핑의 딸)에게 확인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덩샤오핑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건 확실하지만, 원래 그는 어떤 일에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93) 노태우, 『노태우회고록(下)』, 247~248쪽.

개혁개방을 추진할 중요한 기회로 판단했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이를 위해 전국에 특별 통지를 하달했다.⁹⁴⁾ 한국은 광고와 관광을 통해 베이징 아시안게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⁹⁵⁾ 중국이 가장 어려웠던 몇 년 동안 한중 양국의 교역액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증가하여(표 참조)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설중송탄(雪中送炭)의 역할을 했다. 중국이 한국을 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표 1〉 1989~1992 한중 교역 총액 및 한국의 대중 투자 추이⁹⁶⁾

	한중 무역	한국의 투자 항목 및 금액	
	(억 달러)	(개)	(백만 달러)
1989	31.43	17	14.2
1990	38.21	39	54.6
1991	58.12	116	83.2
1992	82.18	269	221.4

그러나 중국이 한국을 가장 필요로 할 시기인 1992년 말 한국은 대선을 앞두고 있었으며,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좋은 시기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태우 임기 내 수교 협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즉시 확정했다.⁹⁷⁾

⁹⁴⁾ 安徽省凤阳县档案馆, 1990XW02, pp.41~44.

⁹⁵⁾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4, 1990, p.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1: 한중 수교』 (서울: 국립외교원, 2020), 188쪽.

⁹⁶⁾ 표에서 무역액 수치는 한국 통상산업부, 투자액 수치는 한국은행의 자료를 인용했다. Kyung-Hee Cheon, *South Korea-China Relations*, p.136; Jae Ho Chung, *Between Ally and Partner*, p.50.

⁹⁷⁾ 延静, 『出使韩国』, (济南: 山东大学出版社, 2004), pp.17~18; 『한국 외교사 구술

V. 소결

1970년대 초부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던 한국은 시종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국 정책은 1980년에야 ‘문은 닫되 걸어 잠그지는 않는다’라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이후에도 복잡한 굴곡을 겪었다. 중국은 1983년부터 점차 인적교류와 무역을 허가하고, 1985년에는 ‘정경분리’의 방침 아래 양국의 민간관계 발전을 추진했다. 1988년에는 방침을 대폭 수정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검토하면서 무역대표부 상호설립-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남한과의 정식수교라는 ‘삼보주(三歩走)’ 전략을 채택했다. 1992년 초, 돌연 한국에 협상을 제의하고 신속하게 수교에 도달했다. 민항기 납치사건과 어뢰정 사건의 순조로운 처리에서부터 서울 올림픽과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르기까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중국은 흡사 한국에 떠밀려 소극적으로 대처한 듯 보이지만, 사실 중국에는 내적 동력과 수요가 있었다.

중국의 한반도 외교 방침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바뀐 근본적 이유와 내적 동력은 중국이 경제건설을 중심에 두고 ‘개혁개방’이라는 국책을 유지한 데 있다. 이 같은 중국의 국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주도의 외교 이념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대외 정책을 채택하여 평화롭고 안정적인 주변 환경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경제적 수요와 외교적 목표는 중국의 한국 정책을 바꾸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미중 데탕트 이후 양국의 일치된 입장이자 공통된 주장이다. 미중 협력은 동북아 지역 정세 안정의 기초인 동시

에 한중 관계 발전의 긍정적 요소이자 지원 요소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중 관계 정상화가 한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의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 또 미중의 긴밀한 협력이 '교차승인'과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을 추동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소련은 중소 갈등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조정의 제약 요소였으나, 중소 관계 정상화 이후에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의 보호자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 발전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및 수교에 이르기까지 소련은 중국에 전초 기지를 마련해주었으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객관적으로 감소시켜 주었다.

북한은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자 저항이었다.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수교하면서 한-미-일에 맞선 북-중-소 3각 동맹은 철저히 와해되었지만, 북한은 이러한 국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이라는 기본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 북중 간에는 견해차가 발생했고, 북한은 경제와 외교에서 중국에 부담이 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이미 동맹 관계가 아니었지만, 중국은 이 역사적 부담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로 여겼으며 따라서 북한이라는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과의 수교에서 중국이 북한에게 약속했던 전제 조건은 남북의 화해 실현 및 북미 수교였다. 중국은 이 조건들이 1992년 초에 실현되었거나 곧 실현될 것으로 판단하고, 노태우의 임기 내에 한국과의 수교를 달성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북핵 사찰 문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이 표류했지만, 그 시점에서 한중 수교의 협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전되어 있었다. 중국은 북한을 외면하거나 미움을 살 의도가 없었으나, 결국은 북한의 불만과 적개심을 받게 되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조선'으로 전환됨으로써, 중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남북한과 동시에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유일한 대국이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에도 흠집을 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환은 성공적이었고 동북아 지역에도 평화의 서광이 비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북핵 위기가 터지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불안정한 국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된 역사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이 논문의 결론을 재고하게 될지도 모른다.

■ 접수: 2024년 6월 20일 / 심사: 2024년 7월 2일 / 게재 확정: 2024년 7월 2일

【참고문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1: 한중 수교』, 서울: 국립외교원, 2020.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편, 『한국 외교사 구술회의: 남북한 UN 동시 가입』, 서울: 국립외교원, 2021.
- 노태우, 『노태우회고록(下): 전환기의 대전략』, 서울: 조선뉴스프레스, 2011.
- 박철언,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2)』, 서울: 랜덤하우스 중앙, 2005.
-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 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 회고록』, 서울: 삶과꿈, 2002.
- 통일정책실 편저, 『통일백서1992』, 서울: 통일원, 1992.
- Chung, Jae Ho,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Lampton, Davi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1978-200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91*, Volume 45,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2.
-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Indianapolis: Basic Books, 2001.
- Lee, Chae-jin,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1996.
- Cha, Victor D. and Ramon Pacheco Pardo, *Korea: A New History of South and North*,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23.
- Kihl, Young Whan, *Korea and the World: Beyond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p.960-967.
- 对外经济贸易部办公厅编, 『1991年对外经济贸易重要文件汇编』, 1992.
- 对外经济贸易部办公厅编, 『对外经济贸易重要文件汇编(截止1982年底)』(下册), 北京: 中国对外经济贸易出版社, 1984.
- 刘亚洲, 『刘亚洲文集(二)』, 『中共重要历史文献资料汇编』第二十七辑, 洛杉矶: 中文出版物服务中心, 2009.

- 李鹏, 『和平发展合作: 李鹏外事日记』(上), 北京: 新华出版社, 2008.
- 本书编写组, 『李先念年谱』第六卷,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11.
- 本书编写组, 『李先念傳(1949-1992)』,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9.
- 張延靜, 『出使韩国』, 济南: 山东大学出版社, 2004.
- 钱其琛, 『外交十记』, 北京: 世界知识出版社, 2003.
- 中共中央对外联络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未刊, 2004.
-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邓小平年谱(1975-1997)』(下),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2004.
- 中联部办公厅, 『中联部老部领导谈党的对外工作(上)』.
- 太永浩著, 张琪惠译, 『三楼书记室的暗号: 前北韩驻英公使太永浩的证词』, 台北: 2018.
- 黄华, 『八十年代外交形势、政策与今后的任务』, 台北: 国防部情报局, 1981.
- 이동률, 「한중 수교에서 ‘북한 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2018, 151~178쪽.
- Cheon, Kyung-Hee, “South Korea-China Relations, 1979-1992: The Normalization Process in Transnational Perspec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4.
- Kim, Hakjoon,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Chinese Diplomatic Relations: A South Korean Perspective”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13, No.2 (Summer 1994), pp.40-41.
- Park, Hun-Bong, “The Factors Why China Changed to a De Facto ‘Two Koreas’ Polic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85 and 1988”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77 (2015).
- Shen Zhihua, “Allies in Trouble: The Direction of Sino-North Korean Relations amid the US-China Rapprochement, 1971-1976” *China and Asia*, No.6 (2024).
- Son, Daekwon, “When Beijing Chose Seoul over Pyongyang: China-South Korea Diplomatic Normalization Revisited” *The China Quarterly*, (2023).
- 董洁, 「中韩建交中的中国决策再探讨」 『党史研究』 第8期 (2019).
- 万经章, 「中国在朝·韩同时加入联合国中的作用」 『纵横』 第12期 (2018).
- 谢定元, 「合法性的竞争: 朝韩奥运会谈探析(1984-1988)」 『边疆与周边问题研究』 第

4期 (2023).

延静, 「历史的抉择」『报告文学』第1期 (2008).

任晓, 「经验与理念: 中国对外政策思想三十年的发展及其意义」『复旦学报』第3期 (2009).

张瑞杰, 「四十年积怨一瞬消——中韩建交往事」『世界知识』第17期 (2002).

张庭延, 「邓小平关心朝鲜半岛局势」『党史博览』第5期 (2013).

田纪云, 「怀念小平同志」『炎黄春秋』第8期 (2004).

배진영, 「덩샤오핑을 감격케 한 노태우 대통령의 친서」『월간조선』 2014년 9월.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북한 실무팀 팀장 네샤오화(聶曉華) 구술 자료.

한국 외교사료관, 2012-0028-17.

한국 외교사료관, 2014-0008-14.

한국 외교사료관, 2016-0067-15.

한국 외교사료관, 2016-0067-19.

한국 외교사료관, C-0051-03.

『로동신문』 1986년 5월 31일.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

『로동신문』 1991년 4월 21일.

『로동신문』 1991년 4월 8일.

『로동신문』 1992년 4월 13일.

『로동신문』 1992년 4월 3일.

『로동신문』 1992년 6월 29일.

『로동신문』 1992년 6월 2일.

『조선일보』 1990년 6월 22일.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4, 1990.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China, October 7, 1986.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 East Asia, November 30, 1987.

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山东省档案馆, A189-04-0444-001.

安徽省凤阳县档案馆, 1990XW02.

日本外务省外交史料馆, 『开示文书』, 18/04-1028/3.

『南方周末』.

『外事动态』 1991년 4월 25일.

『人民日报』 1985년 12월 30일.

『人民日报』 1986년 8월 17일.

『人民日报』 1986년 9월 15일.

『人民日报』 1988년 1월 13일.

『人民日报』 1988년 1월 16일.

『人民日报』 1991년 3월 1일.

『人民日报』 1991년 5월 29일.

『人民日报』 1991년 5월 5일.

『人民日报』 1992년 2월 1일.

『人民日报』 1992년 2월 20일.

『人民日报』 1992년 4월 10일.

『政党与世界』 1990년 3월 1일.

『参考消息』 1985년 8월 8일.

『参考清样』 1990년 10월 28일.

『参考清样』 1990년 10월 6일.

『参考清样』 1991년 4월 16일.

『参考清样』 1991년 5월 13일.

From “One Korea” to “Two Koreas”
: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about South Korea, 1978-1992

Shen Zhihua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Abstract

In examining the history of Chinese-South Korean relations, this article contends that various factors altered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about South Korea and led to Beijing’s sudden decision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Seoul. China’s reform and opening changed its worldview and understanding of foreign relations, laying the groundwork for subsequent policy adjustments. China strived to grow production rapidly by integrating the international system, end the predicament of international isolation, and create a new order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world. Hindered by North Korea’s concerns and objections, China’s shift to a “Two Koreas” policy needed to follow reconciliation and mutual recognitions between the two Koreas. Beijing saw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as a rare historical opportunity for achieving normalization of Chinese-South Korean relations.

Keywords: China-South Korea Relations, China-North Korea Relations, China’s Korean Peninsula Policy

선즈화 (潘志華, Shen Zhihua)

중국 화둥사범대학교 종신교수이자 주변국가연구원 원장이며 냉전사연구 센터의 소장이다. 또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세계냉전사 연구프로젝트 전임 연구원 및 중국 ‘타이허’ 싱크 테크에서 연구원직을 맡고 있다. 연구 업적으로 <이코너믹 벵투스: 냉전의 시작에 대한 재고찰>(Economic Vertox: The Beginnig of The Cold War Reinterpreted, Kaiming Shudian, 2022), <최후의 천조: 모택동 ·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서울: 선인, 2017), <After Leaning to One Side: China and Its Allies in the Cold War>(Stanford University Press, 2011) 등을 비롯한 20여 권의 저서가 있으며 Diplomatic History, Cold War를 비롯한 영어권 및 한국, 일본, 러시아의 주요 학술 저널에 약 10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집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상숙 (국립외교원)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1980년대 중반 대외경제 확대 및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교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북한의 대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킨 성과를 이룬 반면,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하여 북일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통해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47>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3022)

일본의 대북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 중반 신냉전 구도는 최근 미중 신냉전 상황과 유사성이 있어 외교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주제어: 1980년대, 신냉전, 북한외교, 합영법, 북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I. 서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대립은 ‘신냉전(New Cold War)’으로 지칭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무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된 가운데,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을 심화시켰다. 왜냐하면 북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협력 강화를 제도화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초반 미소 간의 신냉전 시기와 유사성이 있다.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 강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NATO의 안보가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 시작된 미소 신냉전 정세 속에서 소련은 미국의 반공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동지역의 안보를 강화시켰고 북한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간접적으로 확대하였다. 당시 북한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아시아 나토(Asia NATO)’라고 비난하면서 소련의 극동지역 안보 강화를 활용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미소 신냉전 시기 한국은 중국과의 접촉면을 확

대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북한은 1984년부터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무역 확대를 꾀하였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은 1980년대 후반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반면 1980년대 중반 북한은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987년 대한항공 테러와 북핵문제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1980년대 북한외교의 실패 원인은 일반적으로 1987년 대한항공 테러 사건과 북핵문제로 알려져 있다. 정규섭은 북한이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의욕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하면서 그 원인은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 테러 사건이라고 분석하였다.¹⁾ 또한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연구한 정세현에 따르면 한국의 ‘7·7 선언’에 대한 북한의 공식 반응은 ‘두 개 조선’을 합법화하려는 비난성 논평이었으나, 중·소의 남북관계 개선 요청과 대미 및 대일관계 개선에 대한 이중적 반응으로 북한의 정책은 한계를 보였다라고 분석하였다.²⁾

위의 두 연구 모두 1980년대 후반 북한 외교의 실패 원인은 설명하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 북한외교가 신냉전을 타개하기 위해 취한 대일관계 개선노력을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북한이 1980년대 중반(1984~1986) ‘합영법’이라는 경제 개방을 실시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은 학계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였다.

이 글은 1980년대 중반 북한의 외교정책 전환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북방정책 성공에 대한 사실은 많이 소개되었으나 이에 대응한 북한

1) 정규섭,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34쪽.

2) 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정치논총』 제29권 2호 (1990), 137~140쪽.

의 대일관계 개선 노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남북한 모두가 신냉전의 구조 속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했던 1980년대 중반의 북한 외교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에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에 대응을 견제하면서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남북한 외교 경쟁으로 인하여 북일관계 개선에 실패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 글의 연구 자료는 한국 외교문서와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83년부터 1987년에 집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사건부터 1987년 10월 대한항공 격추사건 이전의 시기이다. 특히 1987년 북한의 KAL기 테러사건은 북한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1987년 북한의 KAL기 테러사건 이전까지로 시기를 한정하기로 한다.

II. 1980년대 초반 신냉전과 남북관계의 긴장

1. 미소 신냉전의 국제 정세

1979년 12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1980년대 초반 국제질서는 미소 간의 새로운 냉전 구도로 진입하였다. 1970년대 데탕트와 다른 국제질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 시기를 ‘신냉전’으로 불렀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해 미국의 대소 강경주의자인 레이건(Ronald W. Reagan)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소 군비경쟁이 확대되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반공 기조 속에서 소

련에 대한 일련의 공세를 펼쳤다. 그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 여러 나라들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지칭하면서 소련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다.³⁾ 1980년대 들어서서 소련 역시 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면서 미소 대립이 심화되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경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발전에 집중하였다. 실질적으로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제경제질서에 뛰어들어 국가 현대화를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하였다.⁴⁾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정식 수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시켰다. 미국과 중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발표에 ‘반패권(反霸權)’ 조항을 포함시켰고, 중국 언론은 이를 홍보하였다. 1978년 12월 17일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은 베이징과 워싱턴의 “반패권주의 원칙이 대(major)패권주의나 소(minor)패권주의, 세계적 패권주의나 지역적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⁵⁾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세계적 패권주의는 소련을 지칭하고 지역적 패권주의는 베트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미국의 강력한 반공정책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시켰다. 미국은 소련의 아시아에 대한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안보적 역할을 확대시켰다. 당시 한국은 신군부의 등장으로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한미관계를 중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에 전투용 핵무기와 중성자무기 및 미사일 무기를 배치했으며,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매해 실시하였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받으면서 한일협력을 제고시켜서 한일관계가 개선되었다. 미소 간의 냉전전선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동력을

3) 아서 사이어,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서울: 오름, 1999), 62-63쪽.

4) 송영우·소치형,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서울: 지영사, 1992), 189-190쪽.

5) 『人民日報』 1978年 12月 17日.

제공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 북한의 아웅산 테러와 남북관계 단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서 남북대화를 제안하였다. 1980년 1월 12일 이종욱 정무원 총리와 김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한국 국무총리에게 편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은 남북총리 회담 개최에 동의하였고 이를 위한 10차례 실무대표 접촉을 이루었으나 북한이 제11차 접촉을 무산시켰다.⁶⁾ 1982년에도 한국 정부는 서울-평양 간 도로연결 개통, 이산가족 우편교류 및 상봉, 인천-남포 자유교역항 개방 등을 담은 ‘20개 시범 실천사업’을 제의하였으나 남북관계 진전은 없었다.⁷⁾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의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한국의 국내적 혼란을 활용하여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으나, 실질적 관계 개선 의지는 부족하였다.

당시 북한은 국내적으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대내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였고,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는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연방제를 통한 통일방안을 완성시켰다. 6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서에서 김일성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련(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⁸⁾ 그는 연방형식의 통일국가를 구성하

6)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2), 198쪽.

7) 위의 책, 198쪽.

8) 김일성,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이한 편,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 (청주: 온누리, 1989), 621쪽.

여, 남북의 동수 대표들과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연방회의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정치, 안보, 대외관계를 토의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1981년 ‘남북한민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한국 정부의 제의가 두 개의 조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1981년 한미 양국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하자 북한은 이를 비판하였고, 1982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남북의 기본관계에 관한 협정’이 두 개 국가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3년 소련에 의해 한국 민간항공기가 격추되는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과 북한 당국에 의한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웅산 테러의 배후가 북한 당국이라는 미얀마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자본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도 북한을 비난하였고, 사건이 발생했던 미얀마는 북한과 단교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테러에 대한 비난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는 데에 외교력을 집중하였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사건은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다.

3. 북한의 대중·소관계 강화

1979년 북한은 미중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난을 하였다.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국주의와의 타협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특히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⁹⁾ 이것은 1970년대 초 미중 간의 접근 시 북한의 우호적

9)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II 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0), 70쪽.

인 반응과는 다른 것으로 북한의 대중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후 1981년 12월 중국 자오쯔양(趙紫陽) 총리의 북한 방문은 1978년 중일 평화조약의 체결과 중미 관계정상화 이후 발생한 중국과 북한 양국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요청하였다. 중국에서는 자오쯔양과 김일성의 회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이며, 같은 가족이고,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점도 기대하지 않는다”¹⁰⁾고 김일성의 연설을 인용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공통성을 찾아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후 1982년 4월 후야오방(胡耀邦)과 덩샤오핑(鄧小平)이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하였고 1982년 6월 경박오 국방부장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그해 9월 15일에서 26일 사이에 김일성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하여 북중 양국은 양국 관계를 안정시켰다. 김일성이 중국에서 돌아온 지 12일 만에 중국의 정치국원인 시중쉰(習仲勳)이 중국 인민대회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그는 “만약 미국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압록강을 건너와서 북한을 지원할 뿐 아니라 다른 방법도 모색할 것”¹¹⁾이라는 안보협력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도 발전시켰다. 북한 이종욱 정무원 총리는 1981년 2월 제26차 소련공산당대회에 참석하여 ‘동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전초기지’로서의 북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한 데 대해 소련에 감사를 전하였다.¹²⁾ 그해 2월 소련 『프라우다(pravda)』는 북한이

10) 로버트 서터, 『毛澤東 이후의 중국외교정책』 (서울: 대광문화사, 1989), 202~203쪽.

11) 『人民日報』 1982年 9月 16日.

12) 도널드 자고리아, 「소련의 대북한 정책」, 이흥구·스칼라피노, 『북한과 오늘의

노동신문에 바르샤바조약기구(Warsaw Pact) 가맹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사이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소련의 제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하였다.¹³⁾ 이후 1983년 1월 말 소련의 『프라우다』는 레이건 행정부가 한국 및 일본과 추진하고 있다는 삼각 군사동맹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북한 측의 입장을 보도하였고, 1983년 2월 소련의 군사지인 『레드스타(Red Star)』는 1983년부터 한미일 3각동맹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위협성을 강조한 북한의 의견을 게재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83년까지 미소 신냉전의 구조 속에서 한미일 삼국에 대한 안보위협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미국의 당시 정책을 ‘대아시아침략’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팀스프리트(Team Spirit) 훈련을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으로 비판하고,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 강화를 비판하였다.¹⁴⁾

북한은 비록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긴 하였으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국보다 미국과의 대결을 강조하는 소련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군사적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 신냉전 시기 북한은 중국보다 소련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었고, 소련의 안보지원 확보에 집중하였다.

세계』(서울: 법문사, 1989), 141~142쪽.

13)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담론201』 제19권 3호 (2016), 102~103쪽.

14) 『노동신문』 1983년 10월 3일.

Ⅲ. 1984년 북한외교의 전환

1. 북한의 3자회담 제시와 남북대화 재개

북한은 1983년 후반기부터 한국을 포함한 미국과 남북한의 3자회담을 주장하였다. 1983년 10월 제3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신뢰 구축방안’을 남북미의 3자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제의하였다.¹⁵⁾ 북한은 3자회담에서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교전상태를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한 간에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 단합과 평화통일을 열어갈 것을 주장하였다.¹⁶⁾ 3자회담은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 방한 시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제안한 것이었고 이를 북한이 1983년 10월 역제의한 것이다. 북한은 1974년 북미 양자회담을 제안한 이래 지속적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미국에 제안하였으나 1983년 3자회담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하는 다자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이었다.

1984년부터 북한은 공식적으로 3자회담을 다시 제의하였다. 북한은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다시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아시아판 새로운 군사블록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 진출을 비롯한 해외

15)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나라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644쪽.

16) 위의 책, 271쪽.

파병의 길을 열어놓을 뿐 아니라 남조선 국군 무력까지도 아세아태평양 지역에 출동시킬 수 있는 합법적 조건을 마련¹⁷⁾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음을 고려하면,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안보 위협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해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고 3자회담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¹⁸⁾

3자회담 제안 이후 북한은 1984년 3월 그해 개최 예정인 미국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등에 대한 남북 단일팀 구성 회담 참가 의사를 보였다.¹⁹⁾ 1984년 3월 이전 한국의 남북 단일팀 구성 회담 제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던 북한이 갑자기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이 4월 9일 개최되었으며, 4월 30일과 5월 25일에 각각 제2차 및 제3차 남북체육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3차례 회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났으나 북한이 그동안 수용하지 않던 남북대화에 참여한 것은 변화된 행태였다.

이후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반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이 한국의 수해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1984년 여름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자, 북한은 9월 8일 북한적십자회 방송을 통해 남한에 쌀 5만 석(약 7800톤),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톤,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9월 14일에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대응하였다.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이한 편,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권)』 (서울: 이한, 1989), 688쪽.

18)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270쪽.

19) 김재우,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관련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제1차 로잔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2권 3호 (2017), 71쪽.

당시 한국 정부는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이전 악화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수해 지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해 1985년 4월 4일 북한은 직통 전화를 통해 5월 17일 판문점에서 경제회담을, 5월 28일 서울에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198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에서 허담 조국평화통일 위원장이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였다. 이에 한국이 동의하여 1985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과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들을 통해 남북한은 1985년 8월 15일 광복 40주년을 기념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합의하였다.

2. 대외무역 적극화와 합영법 도입

북한은 1983년부터 대외무역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198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대외무역의 확대와 수출품생산의 확대를 강조하였다.²⁰⁾ 이를 반영하여 1984년 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에서 “남남협조²¹⁾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며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를 통해 대외무역 적극화를 천명하였다.²²⁾

1984년 북한의 외교 변화 원인은 경제 개혁의 필요성이었다. 북한은 1984년 9월 외국과의 경제기술의 교류 및 합작투자를 위한 조치로 최고

20) 정규섭,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22쪽.

21) 저개발국가들 간의 협력을 의미함.

22)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IV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589~590쪽.

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 제10호에 의거하여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영법 제1조는 “합영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경제기술 협력과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하였다.²³⁾ 합영법은 북한이 최초로 외국과의 합자투자를 제도화한 것으로 출자대상과 범위, 이사회구성과 이윤분배, 국외송금과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 합자기업의 운영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문 5장 26개 조로 구성된 합영법은 북한이 외국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화폐, 재산, 현물, 발명권, 기술 등을 담은 것으로 1985년 3월 20일 정무원 결정 14호로 전문 10장 71개 조의 시행세칙이 발표되었다.

북한은 1984년을 기점으로 정치적으로는 3자회담을 제의하고 경제적으로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경제 개혁·개방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합영법 성공을 위해서는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의 이미지를 희석하고 우호적 남북관계가 필요하였다. 이에 북한은 합영법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 개선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한 및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 노력하였다.

3. 북한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

북일 경제관계는 1950년대 후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1971년 북한이 제1차 6개년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각종 플랜트 수입을 추진하자 일본 기업들이 플랜트 수출 조직을 만들어 경제교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북일 경제협력은 1976년부터 북한의 채무지불 연기 문제가 발생하자 북일 경제교류는 축소되었다. 이후 1979년 전후로 일본은 북한과 경제교류를 재개하였

²³⁾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113쪽.

다. 이후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인해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여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급격히 축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하면서 경제협력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²⁴⁾ 1985년 1월 1일 일본이 1983년 미얀마 테러 사건으로 인한 대북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대표단의 방일을 요청한 것이 북일 경제관계 개선의 출발점이었다. 특히 일본의 아사히상사(朝日商社)는 1985년 2월 18일 평양에 북한 합영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북한 낙원 상사와 합작투자에 의한 낙원백화점을 개설하였다.²⁵⁾

또한 1985년부터 북일 간의 초청외교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였고,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회당 다나베 서기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방북하였으며, 6월 5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의 일조우호촉진친선협회 김우중 회장이 일본을 방문하였다.²⁶⁾

특히 1985년 6월 9일 김일성은 일본잡지 “세계”지의 편집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의 남북대화 성과를 제시하면서 지하자원 공동 개발, 농업, 수산업 등의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었다.²⁷⁾ 일본의 잡지 편집국장과 김일성이 인터뷰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그만큼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민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4) 「한강개발에 대한 관계국의 이점과 제약요인 검토」 (외무부, 1985.5).

25) 「한강(주일 대사대리)」 (외무부, 1985.5).

26) 위와 같음.

27) 이한 편,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권)』, 717쪽.

〈표 1〉 북일무역의 추이²⁸⁾

(단위: 만 달러)

년도	대북한 수출	대북한 수입	계
1956	51	10	61
1958	193	212	405
1960	309	185	494
1965	1,472	1,651	3,123
1970	3,442	2,334	5,775
1975	16,483	18,063	24,546
1980	18,005	37,430	55,435
1985	17,929	24,707	42,636
1990	30,028	17,590	47,618

이러한 북일 간의 움직임은 북한 청진항을 경유한 일본과 중국의 교역량 확대로 나타났다. <표 1>과 같이 실제로 198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일본에서 청진항 수송량은 14,756 R/T(운임톤), 청진에서 일본 수송량은 37,569 R/T에 그쳤으나, 1984년 일본에서 청진 수송량은 56,265R/T로, 청진에서 일본 수송량은 96,797 R/T로 확대되어 전체 수송량은 52,325 R/T에서 153,062 R/T로 세 배나 확대되었다.²⁹⁾ 또한 <표 1>과 같이 1985년 북일 무역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1980년의 약 5억 5천만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즉 북한은 중일 교역의 요충지로 대외무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였다.

28) 「일북관계(국회답변자료)」 (외무부, 1987.9).

29) 「일·중공간 교역」 (외무부, 1985.2.27).

IV. 북한외교 전환의 원인

1. 동유럽 체제 변화의 움직임

동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들어서서 점진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1980년을 전후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하락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980년 8월 폴란드는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지지하는 자유노조(Solidarity)를 인정하였고, 1981년 헝가리는 계획과 시장의 병존이라는 변화를 시작하였다.³⁰⁾

1982년 소련에서 브레즈네프의 17년 시대를 마감하고 안드로포프가 집권한 이후 1983년 6월부터 노동규율 강화와 기업의 자주권 확대를 통한 경제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안드로포프의 개혁은 당내 반대에 부딪혔고 1984년 2월에 등장한 체르넨코 서기장은 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은 이러한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를 1984년 이전부터 인지했을 것이나 1984년 김일성의 동유럽 순방으로 변화를 확실히 체감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소련을 방문하고, 이어서 5월 27일부터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차례로 방문하였다.³¹⁾

당시 그는 동유럽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생산 효율성 및 제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경쟁을 위한 정책을 지지하였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

30)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245쪽.

3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14쪽.

다.³²⁾ 그리고 그는 동유럽 국가들이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나토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 회원국들의 평화관계를 구현한 비핵지대 창설과 대외정책을 지지한 점을 고려하면, 헬싱키 프로세스에 따른 동유럽 변화를 체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일성의 동유럽 방문 중 가장 중요한 관계 강화를 이룩한 것은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가장 능동적인 변화가 있었던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에서 북한은 협력 지속을 위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만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오히려 변화가 더딘 동독,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경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변화의 필요성은 체감하면서도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경계한 것으로 파악된다.

2. 한중 직접 접촉의 시작

한국의 북방정책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선언)’에서부터 비롯되었으나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신냉전의 영향으로 소련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 않았고 한국은 중국과의 교류와 협력에서 미약하나마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민간 교류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제삼국을 통해 이뤄지다가 1980년대부터 교역까지 확대되었다.

1983년 5월 5일 중국민간항공기가 한국에 불시착한 것은 한중관계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중 간의 직접 접

³²⁾ 위의 책, 216쪽.

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중국간의 직접교섭 및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식 첫 접촉 이후 한중 양국은 일본과 중국의 상하이를 운항하는 민간항공기가 1983년 8월 4일부터 한국의 비행정 보구역을 통과하도록 새로운 항로개설에 합의하였다.³³⁾

한중 공식 접촉 이후 한국 외교부는 대중국 접근을 적극화하였다. 1984년 당시 한국 외교부는 한중 관계 개선이 북한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중국의 남북 균형정책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중국 측에 보내는 정책 기조를 수립하였다.³⁴⁾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중국을 중점국가로 선정하여 중국과의 교역, 체육 교류,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미일 양국의 영향력을 활용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³⁵⁾

이후 한중 양국이 접촉하는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5년 3월 22일 중국 해군 소속 어뢰정이 선상 반란으로 표류하다 한국 영해를 침범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중국 함정이 부주의로 한국 영해에 들어갔음을 인정하였으며, 중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홍콩 신화사와 한국 홍콩 총영사관 간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월 28일 해군 어뢰정 1척과 승무원 전원을 공해 상에서 돌려준 것에 대해 한국에 당국이 감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은 한중 양국 간 홍콩의 신화사 채널을 통한 단기 접촉을 가능하게 하였다.³⁶⁾

1985년 5월 시점에 한국 정부는 미중일러의 강대국과 남북한 관계를 비교하여 한중관계가 가장 뒤쳐져 있었다고 분석하였다.³⁷⁾ 당시 미국과

33) 이흥구·스칼라피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92~93쪽.

34) 「정책참고자료(정무1): 한국의 대중공 외교정책 방향」 (외무부, 1984.5).

35) 「중점국가 선정」 (외무부 84-711, 1984.6.9).

36) 장영태·양철, 「한중수교 당시 국내 인식에 관한 연구」 『아태연구』 제24권 4호 (2017), 20쪽.

37) 국립외교원, 『한중수교』 (서울: 선인, 2021), 21쪽.

일본은 유엔 다지회의 개최 시 북한 대표단을 참가시켰고, 소련도 한국 대표단 참가를 허용하였고, 북일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 유엔회의 개최 시에도 한국 대표단의 입국을 불허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은 한중 관계 개선을 우선 순위에 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본격화하였다.

3. 한중 경제협력의 확대와 북한의 우려

한국은 일본을 통해 중국에 한중 교류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중국은 북한을 고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1984년 3월 중국을 방문한 일본 나카소네(中曽根康弘) 총리는 자오쯔양 총리에게 한중 교류 확대를 원하는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중국은 이를 거절하였다. 자오 총리는 국제회의와 스포츠게임 한국인 참여 허용을 언급하면서 한중간 직접 교역은 아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평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³⁸⁾ 여기에서 한중 관계 발전의 조건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이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중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는 북한을 의식한 것이었다. 1982년 가을 한국 이범석 장관의 국회 발언에서 중국과의 정치관계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이에 대해 북한이 중국에 항의하자, 중국은 북한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한국과의 교역을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홍콩을 경유한 한국산 섬유 수입 시 한국제조업자가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고 표시한 것을 북한이 적발하여 항의하였기 때문에

³⁸⁾ 「Cable from Ambassador Katori to the Foreign Minister, Prime Minister Visit to China(Summit Meeting- Korean Peninsula Affairs, March 24, 1984),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2002-113, <www.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이 건에 대해서만 교역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1982년 이스라엘, 한국, 남아공과의 교역금지 공고는 없었으며 단지 교역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다.³⁹⁾

중국은 북한의 우려를 고려하여 한중관계의 속도 조절을 한 것이다. 1983년 중국 우쉐젠(吳學謙) 외상은 방북 시 김일성과 회담하면서 민항기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하였고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확대하였다. 1983년 7월 중국과 북한은 청진과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사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청진을 중국과 북한의 우호에 있어서 '새로운 가교'라고 상징하였다.⁴⁰⁾

특히 1984년 11월 김일성의 비공식 중국 방문에서 북한은 중국이 “앞으로 세계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국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조선인민의 편에 확고부동하게 서서”라는 표현을 강조하였다.⁴¹⁾ 이것은 당시 북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발언을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중 경제협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5년 2월 대우는 푸젠성 관계회사와 홍콩에서 킹우(Kingwoo)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 냉장고 및 티브이 조립 3~4개 조립라인을 설치하였는데, 한 라인당 4~5만 달러 정도의 규모였다.⁴²⁾ 1986년 5월에는 한중 간 에너지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중국 코스탈 개발사(China Costal Development)의 상하이 지사 유럽 대리인이 자사의 석탄과 산시성 화력발전 및 공장 건설을 위해 한국의 화력발전설비 및 철강 장비에 대해 바티교역을 요청한

39) 「마이니찌 신문 서울지국장 외무차관 면담요록」(외무부 한·중공 관계 개선, v. 1. 분류번호 722.2, 1984.1.12).

40) 이흥구·스칼라피노, 『아시아공산주의의 지속과 변화』, 110쪽.

4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05쪽.

42) 「교차수교 문제」(외무부 아일700-7, 1986.1.7).

사례도 있다.⁴³⁾

당시 홍콩 무역업자들은 중국이 대일 무역 역조에 대한 중국 내 불만을 달래기 위하여 앞으로 수개월간 일본 상품을 한국 상품으로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았다. 1986년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한중 교역 및 투자관계에 대해 “양국은 상업관계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⁴⁴⁾

이후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중국 참가를 계기로 한중 경제교류는 확대되었다. <표 2>와 같이 홍콩을 통한 한중무역은 1984년에 345만 달러 규모였다가 1986년에는 653만 달러 규모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무역 규모가 확대될수록 한국의 무역 흑자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1986년 중국은 한국 기업인에 대한 선별적 입국을 허가해주고 중국 내 합작 및 현지법인 형식의 진출을 허용하였다. 당시 한중 양국은 제3자 명의의 간접형식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상담은 직접 접촉으로 진행되고 있었다.⁴⁵⁾

<표 2> 홍콩 경유 대중국 수출입 추이⁴⁶⁾

(단위: 백만 달러)

	79	80	81	82	83	84	85	86
수출	6	45	145	56	45	160	355	276
수입	21	33	74	94	115	185	249	377
총액	27	78	219	140	160	345	604	653
수지	-15	12	71	-38	-70	-25	106	101

43) 「대중공 바터 교역」 (외무부86-560, 1986.6.7).

44) 위와 같음.

45) 「한-미 공동 대중공 진출 협력방안」 (외무부 86-520, 1986.5.28).

46) 「홍콩 경유 한·중공 교역 현황과 대책 검토」 (외무부, 1986.12.18). 86-87쪽.

1986년 중국은 경제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있었다. 특히 포항제철을 모델로 중국 국무원 야금공업부에서 바오산 제철소 제2기 공사 계획을 수립하였다.⁴⁷⁾ 1986년 11월 중국 조종사 망명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은 중국에 조종사를 돌려보내주면서 한중 상설사무소 설치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조종사의 타이완 송환을 최대한 지연시켰다. 그러나 중국은 1986년까지 ‘두 개의 한국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설사무소는 설치되지 못하였다.⁴⁸⁾

이러한 가운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한중 경제교역이 적극화되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일본을 통해 중국에 전달하였다. 1986년 11월 중국공산당 13차 당대회에서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는 연설을 통해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⁴⁹⁾ 냉전 시기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진전시켰으나, 북한을 고려하여 공식적 관계 개선에 거리를 두었다.

47) 「중공인사 접촉(중공 길림대학 교수 Zhang Shi He와 주일대사관 윤해중 참사관과의 대담)」 (외무부 86-007, 1986.8.7).

48) 「한·중공 관계(인론 보도)」 (외무부86-807/HKW-2755, 1986.11.23).

49) 「The Secret Parts of General Secretary Hu's Statements (November 08, 1986)」,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2017-0639, <www.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V. 북한외교 전환의 실패

1. 한국의 ‘한강개발계획’ 제안과 한미일 협력 강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북일 무역은 항상 일본의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1986년 2월부터 북한이 일본 조총련계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1987년 일본의 대북 수입액은 처음으로 수출액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⁵⁰⁾ 이것은 북한이 합영법을 통해 조총련계 기업들과 경제협력으로 얻은 성과였다.

북일 경제관계의 확대는 한국이 북일관계 개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북일관계 개선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과 일조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 등의 일본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외교부에 대처를 요구하였다. 만약 불가피하게 북한 노동신문 대표단의 방일이 허용되더라도 입국 시기를 연기시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 정부 인사와의 접촉을 막도록 외교부에 지침을 내렸다.⁵¹⁾

이에 따라 1985년 1월 16일 주한 일본대사는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을 만나 노동신문 대표단과 북일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의 방문을 일본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당시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에게 “노동신문 대표단과 북일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의 방일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며 “설사 일본 정부가

50) 「일북관계(국회답변자료)」 (외무부, 1987.9).

51) 「각하 지시사항 전달」 (외무부 분류번호 725.1, 1984.1.7).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이는 대북제재 조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할 뿐, 북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정책방향 설정이나 대북한 관계 격상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언급하였다.⁵²⁾ 그러나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신문 대표단과 북일우호촉진친선협회 대표단은 그 해 일본을 방문하였다.

1985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일본의 필요 이상의 대북한 접근을 통해 한일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다. 한국은 한중 경제관계는 확대시키면서 북한이 일본과 경제관계를 확대시키는 것을 우려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북일관계 진전에 위기를 느낀 한국은 북일관계 진전을 막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교차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바로 ‘한강개발계획’으로 불리는 이원적 교차승인 방안이 그것이다. 교차승인 이전 한중 및 북일 간 무역 대표부 상호 설치를 추진하여 교차승인 기반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 한강개발계획이다. 한강개발계획은 1984년에 이미 미국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말 워싱턴에서 미 국무성 차관보는 중국 우쉐젠(吳學謙) 외상에게 한중 및 북일관계의 국가 승인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한국 이원경 장관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였다.⁵³⁾ 1984년까지 북일관계가 한중관계를 훨씬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의도는 북일관계를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한강개발계획에 대해 미일 양국의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왜냐하면 미일 양국은 한국의 한강개발계획에 대해 중국이 무역 등 비정치적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과 공식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입장임으로 적극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2) 「각하 지시사항 전달」 (외무부 분류번호 725.1, 1984.1.7).

53) 「통화요록」 (외무부 1985.1.8).

미국은 한강개발계획의 장점을 평가하면서도 한중 무역사무소 교환에 앞서 북일 무역사무소 교환이 이뤄진다면 한국의 입장이 곤란하므로 한중 무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일관계만 진전되는 것을 우려하였다.⁵⁴⁾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교차승인에 대해 미일 양국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대중국 접촉은 남북대화 진전에 따라 신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교차승인을 중장기적 외교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당시 중국은 남북 경제회담이 진전되고 중국에 대한 다년간 무역 흑자 전환 시 한중 직교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⁵⁵⁾ 다시 말하면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일본의 일방적 대북 조치가 북한을 남북대화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 일본의 북한 관계 개선 조치를 추진해야 하며 현 상황으로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일본에 전달하였다.⁵⁶⁾

1985년 4월 전두환 대통령 방미 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강개발계획이 논의되었다. 한미 양국은 기본적으로 북일 관계 진전을 최대한 늦추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5월 2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한미 간 조율된 입장을 나카소네 총리에게 전달하였다. 나카소네 총리는 우선 남북대화가 실시된 이후 한중 양국이 한중 간 무역대표부 상호설치 논의를 개시하고 그 반응에 따라 북일 간 무역대표부 설치를 중국에 전달하는 순서에 대해 동의하였다.⁵⁷⁾

54) 「면담록 송부(주일대사 친전)」(외무부 아일 700-1123, 1985.4.18).

55) 「한강개발계획 추진대책」(외무부 한 85-5, 1985.3.19).

56) 「면담요록(이상욱 차관, 클리블랜드 주한 미 대사대리)」(외무부, 1985.4.26).

57) 「면담요록(권병현 아주국 심의관, 아라 주한 일본공사)」(외무부 1985.5.7).

그러나 당시 한국은 현재 북일관계가 한중관계보다 더 앞서나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일관계의 현 수준 변경을 자제하고 한중관계는 일보 진전을 이룩하도록 한미일 삼국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일본 사회당 및 일조의원연합회가 북일 무역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에 대해 북한이 환상을 가지지 않도록 일본이 협조해줄 것을 일본에 다시금 요청하였다.⁵⁸⁾ 한국의 제안은 중국과의 관계는 진일보 발전시키면서 북일 관계는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2. 북한산 계획과 북일관계 개선의 좌절

미일 양국의 우려를 청취한 한국은 한중 간 무역대표부 우선 설치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양보하여 한중 및 북일 공식 무역대표부 상호 동시 설치를 의미하는 ‘북한산’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한국은 무역대표부를 정부 기능을 배제한 각서 형식 민간무역협정을 코트라와 중국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CCPIT) 간 서명으로 체결하고 직교역 원칙에 합의하여 대금 결제, 비자발급 장소, 교역항구 지정, 통신 수단 이용, 교역사절단 교류, 분쟁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⁵⁹⁾

한국의 북한산 계획 추진에 대해 1985년 6월 19일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차관, 미국 클리블랜드(Cleveland) 주한공사, 일본 다니노 주한공사는 한미일 3자 협의를 하였다.⁶⁰⁾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미일 간 정치적 단합과 일치되고 조화된 행동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일 간 접촉 확대 역제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⁶¹⁾ 미국은 한미일 삼자 협력이 공

58) 「한강개발 계획(미일 수뇌회담)」(외무부 1985.5.10).

59) 「정책참고자료(정무1): 한국의 대중공 외교정책 방향」(외무부 1984.5).

60) 「북한산 관련 한미일 3자 협의」(외무부 한85-18, 1985.6.19).

고한 시기에 북일관계 문제로 협력이 와해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일본 나까소네 총리는 북일 간 접촉 확대 억제에 대한 부정적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한미일 협력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고 북일 경제관계는 다소 정체되었다.

한편 한미일 협력과 달리, 냉전 시기 북중러 삼각관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이 1980년대 신냉전 시기에도 이어졌다. 실제로 1985년 9월 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은 한중 직접교역과 한중 및 북일 무역대표부 동시 상호 설치 문제를 중국 측에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반대하였다. 일본으로서는 한중 간 공식 채널이 생기면 북일 공식 채널이 설치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 우쨌젠 외상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⁶²⁾ 또한 미국 역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북소관계의 긴밀화를 우려하는 시기에 한중협력 강화는 북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⁶³⁾ 당시 중국은 1980년대 초중반 북소관계 강화를 견제하였으며, 한중관계와 북소관계를 연계시켰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남북한은 모두 신냉전을 벗어나고자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 가능하다. 한국은 대중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북방 정책을 지속하였으나, 북한은 대일 경제협력이 위축되면서 북한의 '남방 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1980년대 초반 형성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로 인하여 한국이 미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일관계를 억제하였던 것에 기인된다고 분석된다. 결국 한미일 협력의 강화가 북일관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61) 「북한산 관련 제1차 한·미·일 실무협의 결과보고」 (외무부 한85-20, 1985.6.21).

62) 「일·중 외상 회담시 북한산 관련 협의내용」 (외무부 한85-28, 1985.8.2).

63) 「면담요록: 북한산(박건우 미주국장, Paul Ray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 (외무부 한85-30, 1985.9.5).

VI. 결론

이 글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1980년대 중반 대외경제 확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남북한 외교 경쟁으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반 미소 신냉전은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와 북소 협력 강화의 구도가 만들어졌다. 남북한은 미소 대결의 한복판에서 1983년 KAL기 격추사건과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으나, 1984년 신냉전의 완화를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였다.

1980년대 초 신냉전 구조가 이전 냉전 시기와 다른 차별성은 바로 미중관계의 변화였다. 한국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을 공고화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북한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잘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확대하였다. 한국의 노력이 효과적이었던 것은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지원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일 협력과 달리, 냉전 시기 북중러 삼각관계는 1980년대 초반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분열이 이어졌다. 당시 북소관계의 협력 강화를 견제한 중국은 한중 무역대표부 설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일 무역대표부 설치도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반면, 북한은 중소관계의 경쟁과 한미일 협력으로 인하여 북일 경제관계

확대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북일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자, 한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 국내에 부각시키도록 하여 북일관계 개선을 억제한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한다.⁶⁴⁾

이러한 1980년대 초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북러 안보협력 및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와 남북관계 단절로 요약되는 현재 한반도 정세와 유사하다. 최근 북일 양국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자 접촉이 이뤄지고 있으나, 한미일 삼각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발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6월 4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⁶⁴⁾ 국립외교원 외교사연구센터, 『한국 외교와 외교관: 유병우 전 아주국장/전 주 터키대사』 (서울: 역사공간, 2023), 52~54쪽 참조.

【참고문헌】

- 국립외교원, 『한중수교』, 서울: 선인, 2021.
- 국토통일원,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Ⅳ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로버트 서더, 『毛澤東 이후의 중국외교정책』, 서울: 대광문화사, 1989.
-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송영우·소치형, 『중국의 외교정책과 외교』, 서울: 지영사, 1992.
- 아서 사이어, 『탈냉전기 미국 외교정책』, 서울: 오름, 1999.
-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출판, 2004.
- 이한 편,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권)』, 서울: 온누리, 1989.
- 이흥구·스칼라피노,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법문사, 1989.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 김재우,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관련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제1차 로잔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2권 3호, 2017.
- 박봉규, 「북방정책과 한국의 대미·일관계」 『국제정치논총』 제29권 2호, 1990.
- 박영호, 「북방정책과 북한의 대외관계: 대소련·중국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29권 2호, 1990.
- 이동률, 「한중 수교에서의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3호, 2018.
- 이상숙,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담론201』 제19권 3호, 2016.
- 이정철, 「탈냉전기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 『정신문화연구』 제35권 2호, 2012.
- 이희욱, 「한중수교 교섭 과정 연구」 『중소연구』 제43권 3호, 2019.
- 임재형, 「북일관계의 주요 결정요인과 특징」 『분쟁해결연구』 제2권 1호, 2004.
- 정규섭, 「1980년대 북한의 외교와 대남정책」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2004.
- 정세현, 「북방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국제정치논총』 제29권 2호, 1990.
- 차정미, 「1980년대 한중관계 태동기, 정부-비정부 협력외교의 발전과정 외교문서

(1980-1986)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8권 1호, 2018.

- 외무부, 「각하 지시사항 전달」, 1984.1.7, 분류번호 725.1.
- 외무부, 「강석주의 유엔사무차장 접촉」, 1987.9.30.
- 외무부, 「교차수교 문제」, 1986.1.7, 아일700-7.
- 외무부, 「김일성의 중공방문 결과 보고」, 1987.5.
- 외무부, 「김일성 방중결과에 대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토의」, 1987.5.
- 외무부, 「대중공 바터 교역」, 1986.6.7, 86-560.
- 외무부, 「마이니찌 신문 서울지국장 외무차관 면담요록」, 한·중공 관계 개선, 1984, v. 1 1-6월, 1984.1.12, 분류번호 722.2.
- 외무부, 「면담록 송부(주일대사 친전)」, 1985.4.18, 아일 700-1123.
- 외무부, 「면담요록(권병현 아주국 심의관, 아라 주한 일본공사)」, 1985.5.7.
- 외무부, 「면담요록: 북한산(박건우 미주국장, Paul Ray 주한미대사관 1등서기관)」, 1985.9.5, 한85-30.
- 외무부, 「면담요록(이상옥 차관, 클리블랜드 주한 미 대사대리)」, 1985.4.26.
- 외무부, 「미측의 북한동태보고」, 1987.10.31, 87-904.
- 외무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 대책 및 조치: 보고서 및 일지」, Box. 23192, 1983.
- 외무부, 「북한산 관련 제1차 한·미·일 실무협의 결과보고」, 1985.6.21, 한85-20.
- 외무부, 「북한산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1985.6.19, 한85-18.
- 외무부, 「북한 외교부장 소련방문 결과보고」, 1985.4.22, 85-277.
- 외무부, 「북한의 군축제의 및 올림픽 문제에 관한 중공반응」, 1987.8.5.
- 외무부, 「북한의 미국무장관앞 서한」, 1987.9.11, 87-2304.
- 외무부, 「북한의 미북한 의회회담 제의 관련 보고(최고인민회의의 미 상하원앞 서한)」, 1987.7.
- 외무부, 「북한 인민무력부 대변인 답화: 군축 예비회담 호응 촉구」, 1987.9.10.
- 외무부, 「알리에프 소련 정치국원 겸 제1부수상 북한 방문」, 1985.7.13.
- 외무부, 「외무장관. 시거 차관보 면담결과」, 1987.9.14.
- 외무부, 「일북관계(국회답변자료)」, 1987.9.
- 외무부, 「일·중공간 교역」, 1985.2.27, WJA-517.
- 외무부, 「일·중 외상 회담시 북한산 관련 협의내용」, 1985.8.2, 한85-28.
- 외무부, 「정책참고자료(정무1): 한국의 대중공 외교정책 방향」, 1984.5.
- 외무부, 「중공인사 접촉(중공 길림대학 교수 Zhang Shi He와 주일대사관 윤해중

- 참사관과의 대답」, 1986.8.7, 86-807.
- 외무부, 「최근 북한의 대미접촉 시도 동향(미주국 북미과)」, 1987.12.26.
- 외무부, 「통화요록」, 1985.1.8.
- 외무부, 「한강(주일 대사대리)」, 1985.5.
- 외무부, 「한강개발 계획(미일 수뇌회담)」, 1985.5.10.
- 외무부, 「한강개발에 대한 관계국의 이점과 제약요인 검토」, 1985.5.
- 외무부, 「중점국가 선정」, 1984.6.9, 84-711.
- 외무부, 「한강개발계획 추진대책」, 1985.3.19, 한 85-5.
- 외무부, 「한국의 대중공 투자모색 기사」, 1986.1.17, HKW-0125.
- 외무부, 「한·미 공동 대중공 진출 협력방안」, 1986.5.28, 86-520.
- 외무부, 「한·중공 관계(언론 보도)」, 1986.11.23, 86-807(HKW-2755).
- 외무부, 「홍콩 경유 한·중공 교역 현황과 대책 검토」, 1986.12.18, 86-207.

「Cable from Ambassador Katori to the Foreign Minister, Prime Minister Visit to China(Summit Meeting- Korean Peninsula Affairs)」(March 24, 1984),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2002-113, <www.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The Secret Parts of General Secretary Hu's Statements」 (November 08, 1986),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2017-0639, <www.digitalarchive.wilsoncenter.org>.

「Memorandum of Conversation between George H. W. Bush and Zhao Ziyang」(Feb 26, 1989),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133956, <www.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33956>.

The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rth Korea's Diplomacy Change in mid-1980's

Lee, Sangsook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uses and effects of North Korea diplomatic shift in mid-1980. This article explained that North Korea kept South Korea's access to China in check and sought to expand the external economy and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in mid-1980's. However, North Korea failed due to the cooperation of South Korea-the U.S.-Japan.

North Korea severed inter-Korean relations and carried out terrorist attacks on South Korea in 1983. However, she changed her foreign policy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enact Joint Venture Act in 1984. The causes of the change were the economic reform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n particular, North Korea expected to keep better economic relations with Japan.

In conclusion, South and North Korean diplomatic efforts to break through the 'New Cold War' structure shared similarities. South Korea succeeded in growing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throughout the 1980s, whereas North Korea failed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This research demonstrates that the cooperation of South Korea-U.S.-Japan effectively could prevent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Japan relations.

Keywords: Mid-1980s, New Cold War, North Korea's Diplomacy, North Korea-Japan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Joint Venture Acts, South Korea-China relations

이상숙 (Lee, Sangsook)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관계 특성 비교」(2018), 「국공내전 시기 북한의 중국공산당 지원에 대한 재검토」(2016), 「개혁·개방 시기 중국과 베트남의 정치기구와 권력구조 변화 비교」(2012)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북한의 선군정치』(공저, 2019)가 있다.

특집

‘국제합법성(國際合法性)’의 경쟁*

: 남북 올림픽회담 분석(1984~1988)

씨에딩원(謝定元, 화동사범대학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고양개(高陽凱, 경북대학교)***

국문요약

동아시아 정세 완화와 한반도 남북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1984년 4월 남북 올림픽회담이 열렸다. 판문점에서의 세 차례 체육회담은 “싸워도 깨지지 않는” 형국으로 남북한이 상대 정권을 공격하는 ‘선전전(宣傳戰)’으로 전락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1988년 올림픽이 더 이상 보이콧되지 않도록 남북 양측 대표를 로잔으로 초청해 회담에 참가시켰다.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이 서울올림픽 출전 의지를 내비치자, 사마란치는 기회를 틈타 남북한 양측에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남북은 어쩔 수 없이 IOC위원회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로잔 올림픽회담에 참석했다. 로잔 회담에서는 공동 개최와 경기 배분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북한은 올림픽 명칭과 조직위원회 등에 대해 ‘공동 개최’ 명분을 유지하면서 8개 종목 이상의 경기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이 실질적인 양보를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81>

* 본고는 한국 최종현학술원 2023-2024 국제학술교류프로그램(ISEF)의 지원을 받았다. 본고를 심사하고 애정 어린 심사평을 남겨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또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도움을 주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백지은 교수와 서울대 사회학과 박동찬 동학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제1저자(xiedingyuan@126.com)

*** 교신저자(346222857@qq.com)

원하지 않아, 로잔 회담은 네 차례 만에 결렬되었다. 판문점에서의 ‘선전전’이든 로잔에서의 물과 기름 같았던 ‘공동 개최’ 논쟁 과정은 모두 자신의 “합법성”에 대한 평양과 서울 정권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올림픽 회담은 남북한 정권의 ‘합법성’의 경기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주제어: 남북통일, 합법성, 국제올림픽위원회, 판문점회담, 로잔 회담

I. 들어가며

1970년대 남북한 간 인도적 차원의 RCS(국제적십자위원회) 회담, 정치적 차원의 남북조정위원회 회담 등 대화 채널이 열렸지만, 큰 진전 없이 중단됐다. 1980년대 중반 남북은 상호 신뢰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접촉 계기와 대화 채널을 만들어 체육회담, RCS회담, 경제회담을 시작했다. 남북은 또 이산가족의 서울-평양 교환 방문을 상징적으로 성사시키는 등 1970년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가운데 1984년 LA 올림픽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체육회담은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전개됨으로써 한층 복잡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기존 대다수 학자는 남북체육회담을 남북통일정책이나 남북 교류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하여, 그중 일부만이 남북 간 올림픽회담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용한 문서나 문헌자료의 질적 양적 부족으로 인해, 이들 연구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판단상의 실수가 보이기도 한다.¹⁾ 한국 외교문서의 공개에 따라 더 많은 한국 학

1) 김재우,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관련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제1차 로잔 회의를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Korean Journal of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제22집 (2017), 65~77쪽; 茹亞偉·郭振·劉波, 「東北亞變局與20

자는 남북올림픽회담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신중대에 따르면 1988년 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의 승리로 돌아갔고, 한국은 이를 계기로 사회주의 진영과의 외교관계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의 고립과 폐쇄를 초래하였다고 분석한다. 최진환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남북 공동주최 의제는 올림픽 준비기간 가장 치열했던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남과 북은 하나의 독립적 실체로서 체육 교류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허정필은 북한이 1988년과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주최 구상의 배경, 과정 및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²⁾

핀란드 학자 스티븐 란저(Stephen Ranger)는 1980년대 중반의 북·남 대화는 양측 정권의 합법성의 중요한 근원이었으며, 서울올림픽은 합법성에서 북·남 정권 모두에 커다란 도전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³⁾ 아쉽게도 란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했고 합법성이 북남회담의 개최와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충분히 서술하지 못했다. 합법

世紀80年代朝韓對話—以朝韓奧委會洛桑會談為視角的解讀』『冷戰國際史研究』 제28집 (2019).

- 2) 신중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제25권 3호 (2013), 71~110쪽; 허정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018), 75~97쪽;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 (2020), 1~20쪽; 최진환,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8권 1호 (2022), 171~201쪽; 최진환,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41~87쪽; 허정필,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 참여 요인 분석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7권 2호 (2021), 43~83쪽.
- 3) Stephen Ranger, “Searching for Legitimacy? The Motivations Behind Inter-Korean Dialogue During the Mid-1980s” *UNISCI Discussion Papers*, Issue 52 (Jan., 2020), pp. 23~33.

성의 경쟁은 확실히 남북한 같은 분단국가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분단국가의 합법성 경쟁은 다음 두 가지 차원을 포함한다. 첫째, 쌍방은 자신의 정권이 주도하는 통일의 ‘정통성’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경제발전, 국제적 영향력, 이데올로기, 사회체제 등 각 방면의 경쟁을 포함한다. 둘째, 국제관계 차원에서 ‘국제적 합법성’⁵⁾ 즉 국제사회가 여러 국가의 정권의 합법적 신분에 대한 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71년 중국의 UN 가입, 1970년대 ‘UN한국부흥위원회’의 존폐 및 분단국가의 오랜 외교 경쟁은 모두 국제적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1980년대 남북올림픽회담에 대해 부분적인 역사적

-
- 4) ‘분단국가’란 냉전으로 인해 둘로 나뉜 나라를 가리키는데, 주로 독일, 중국, 베트남, 한반도와 예멘 등 나라를 포함한다.
- 5) 서양 연구자들은 국제적 합법성과 그 구성 기초에 대해 주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 정치학자 이니스 클로드(Inis L. Claude)와 영국학파 마틴 화이트(Martin Wight)가 대표적이다. 클로드는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의 행위와 그 지위의 합법성은 동일체의 동업자들이 내린 정치적 판단이라서 국제법정에 따른 법률적 승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Claude I L. Jr., “Collective Legitimization as a Political Funct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0, no.3 (1966), pp. 367~379 참조). 또한, 화이트는 국제적 정당성 개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논술하였는데, 국제적 합법성은 국제적 합법성이란 국제 대가족의 합법적 구성원에 대한 일종의 집단적 인정, 다시 말해 국제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법적 신분, 국가 주권이 어떻게 이전되고 국가의 상속권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집단적 판단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M. Wight, *Systems of State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7), pp. 153~173 참조). 또 다른 관점은 마사 피너모어(Martha Finnemore)를 대표로 한다. 피너모어는 국제사회에서의 합법성은 각국에 의해 내재화된 국제규범과 제도로서, 만약 단극적 패권국이 이런 규범 제도를 위반하면 다른 나라의 저항과 배격을 받게 되므로 합법성은 단극패권국에 대한 감독과 제약의 역할을 한다. 피너모어는 추상적인 정치 판단보다는 컨센서스를 구체적인 국제규범 및 제도와 동일시했다(Martha Finnemore, “Legitimacy, Hypocris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Unipolarity” *World Politics*, vol. 61, no. 1 (2001), pp. 61~68).

사실을 보여주었지만, 회담의 경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못했으며 복잡한 국내 및 국제적 정세 속에서 남북이 상호 경쟁할 때 어떤 사고를 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한국 통일부의 북한 자료센터, 국가기록원, 외교사료관 및 미국의 월슨센터를 비롯한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인들의 연구와 관련 회고록을 결합하여,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남북 올림픽회담이 시작된 배경과 원인, 그리고 양측이 회담의 다양한 단계에서 벌인 경쟁을 드러냄으로써 국제합법성의 경쟁이 남북 상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II. 남북 올림픽회담의 시작

1. 동북아 정세 완화와 3자회담

1970년대 말 중·미관계는 한층 완화되었다. 지미 카터(James Carter)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남·북 3자회담을 한국에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은 3자회담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미국과의 대화를 원했던 북한은 중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하고 싶어 했다.⁶⁾ 1977년 8월 22일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와 황화(黃華) 중국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미국은 미·남·북 3자회담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며, 중국이 한국과 협상하기를 원한다면 미

⁶⁾ 한국외교사료관, 「Carter(미국) 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 노력 1977-80. 전3권 (V.1 1977-78.3월)」, 룰 번호 2010-0035, 파일번호 7, 46-48.

국도 북한과 회담하여 4자회담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남북이 공동으로 UN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했다. 황화는 미국이 UN군과 해체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연기하여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여겨, 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 즉, 중국은 남북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책임을 진다는 방향”을 결연히 지지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분열 시키기 위한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⁷⁾

중일 양국 수교 정상화 및 중·미 양국 수교에 따라 동아시아의 냉전 구도는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1978년 8월 12일 《중일평화우호조약》이 조인되었다. 후쿠다 시게오(福田紘夫) 일본 총리는 덩 샤오핑(鄧小平)과의 회담에서 중일 협력으로 남북한 통일이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덩 샤오핑은 중공은 일관되게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주장을 지지해 왔으므로 간섭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⁸⁾ 그러나 미국은 4자회담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후 중미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제안했다.

1979년 1월 9일 주중(駐中) 미국연락사무소 코델 넌(Codel Nunn)은 덩 샤오핑에게 4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기했지만 덩 샤오핑은 거절했다. 덩 샤오핑은 중국은 소련과 달리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⁹⁾ 29일 지미 카터는 덩 샤오핑에게 중국과 한국이 상업·무역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미국과 북한도 비슷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덩

7)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A Critical Oral History*, pp. 234-235.

8) (中國)外交部新聞司, 『新情況』 第73期, 1978年11月7日.

9)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A Critical Oral History*, pp. 435-436.

샤오핑은 카터의 제안을 명료하게 거부하면서 “우리로서는 남북한의 상호 접촉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¹⁰⁾ 5월 4일 미국 대통령 안전사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주미중국대사 차이저민(柴澤民)과의 회담에서 중미가 3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다. 차이저민은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 회담하기를 원하지만 3자회담 형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은 북한과 단독으로 회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저민은 미·중 쌍방이 노력하여 남북한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브레진스키는 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왜냐하면 남북한은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안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¹⁾ 8월 28일 미국 부통령 먼데일(Water Mundale)은 덩 샤오핑과의 회담에서 다시 한번 3자회담을 언급했다. 덩 샤오핑은 미국이 먼저 3자회담을 그만 놓고 북한과 직접 다층의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북한은 3자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²⁾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않다는 원칙을 견지했던 중국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기 위해 4자회담을 거부했고, 미국에 북한과 직접 회담할 것을 재차 권유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줄곧 한국에 3자회담 참가를 권유하면서도 한국의 “안전감(安全感)”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단독 회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정희 암살로 정국이 동요하게 되자 미국은 3자회담을 잠시 보류했다.

10) Ibid., pp. 445~448.

11) GALE USDDOL, Document Number: CK2349162515.

12) *The Carter Chill :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A Critical Oral History*, pp. 663~664.

2. 한국 올림픽 개최권 신청을 성공한 후 남북 대립 격화

1970년대 말 북한의 경제력은 이미 한국보다 현저히 뒤쳐졌다. 1978년 북한의 GDP는 약 100억 달러였고, 한국은 460억 달러였다. 북한(인구 약 1,700만 명)의 1인당 GDP는 약 700달러인 데 비해 한국(인구 약 3,700만 명)은 1,242달러였다.¹³⁾ 1979년의 한국은 모든 개발도상국 중 가장 높은 15%의 경제 성장 속도를 자랑했다.¹⁴⁾ 북한과의 경쟁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문화적 교류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¹⁵⁾ 박정희 암살 후 얼마 되지 않아 최규하가 이끄는 과도 정부는 북한과 잠시 총리회담 실무접촉을 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¹⁶⁾

강대국 관계가 완화된 것과 달리, 한반도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결했다. 1980년 광주항쟁 후 얼마 되지 않아 전두환이 집권하자 김일성은 남측의 정국 불안을 틈타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 통일방안을 제시했다.¹⁷⁾ 한편, 북한은 비동맹운동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의 통전전략(統戰戰略)을 그대로 운용하여, 두환 정권의 합법성을 약화시키면서 “남조선 혁명(南朝鮮革命)”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일성의 통일방안에 대해 전두환은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1981년 1월 2일 전두환의 미국 방문 후 정권이 점차 안정되자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주장하는 기초에서 ‘민족화합과 민주통일’ 및 20개 시범 교류 항목을 제안했다.¹⁸⁾

13) Ibid., pp. 510~513.

14) Ibid., p. 399.

15) 『동아일보』 1978년 6월 23일.

16) 남북대화사무국 편, 『남북대화 백서(1988)』 (서울: 국토통일원, 1988), 북한자료센터, UM4864, 136~151쪽.

17) 노중선 역음,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96), 216~219쪽.

3월 3일, 전두환은 재직 연설에서 김일성 정권하에 북한 주민들은 “비참한 생활에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으며 자유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¹⁹⁾ 10월,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식 선포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으로 되었다.²⁰⁾ 1980년대 들어 상대 정권의 합법성을 공격하고 약화시키는 것은 남북통일 경쟁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1981년 9월 30일, 한국은 제24회 올림픽의 주최권을 얻었을 뿐 아니라, 11월 27일 제10회 아시안게임 주최 자격까지 얻었다. 북한은 한국과의 국제적 합법성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남측을 상대로 더욱 치열한 선전전을 펼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올림픽 개최 부당성(不當性)을 제기했다. 12월 3일, 북한 『로동신문』(「올림픽 운동의 리념과 어긋나는 움직임」)은 한국이 올림픽을 통해 사회주의 및 비동맹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건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 최종 목적은 “합법성 인증(合法性認證)”이라고 비판했다. 반년 후, 『로동신문』(5월 6일)은 「《올림픽도박》의 희생물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다시 게재하여, 한국이 “군사 파시스트의 유린을 당하고 있고 사회 불안으로 쇠퇴하고 있다”며 올림픽 개최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²¹⁾ 상대방 정권의 합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남북한의 선전전 속에, 급기야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발했다.

18) 國土統一院, 『南北韓統一提議資料總覽(제3권)』(서울: 國土統一院, 1985), 1139~1143쪽.

19) Sang-Woo Rhee, eds.,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Volume III*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6), pp. 183~185.

20) Ibid., pp. 186~187.

21) 茹亞偉·郭振·劉波, 「東北亞變局與20世紀80年代朝韓對話—以朝韓奧委會洛桑會談為視角的解讀」.

3.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교착상태를 타개하다

1983년 10월 8일, 북한은 처음으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미국·한국의 3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기하였다. 바로 그다음 날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전두환 정권의 내각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며 아웅산 테러를 계획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²²⁾ 그 후 북한은 국제 언론의 혹평을 받았고 국제 환경은 악화되었다. 1983년 11월 12일,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은 한국 방문 중 한국 국회 연설을 통해 미얀마에서 자행한 북한의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전두환과 레이건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한국 GNP의 6%를 국방에 지출함으로써 국방력을 현대화·업그레이드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레이건은 “미국은 대한민국의 충분하고 평등한 참여 없이 북한과 회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²³⁾

이런 상황에서 1984년 1월 10일 북한은 정식으로 미국·한국과의 3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다음날 통일부 장관은 남북이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²⁴⁾ 25일 북한은 3자회담을 다시 제안하며 이 회담에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했다. 31일, 폴 울포위츠(Paul Wolfowitz) 미국 외무부 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미국·남북한의 4자회담을 제안했다.²⁵⁾ 북한이 3자회담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남한과 직접 회담을 해야 했다. 이에 남북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가피한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²²⁾ Sang-Woo Rhee, eds., *Korean Unification*, pp. 308~310.

²³⁾ Ibid., pp. 315~317.

²⁴⁾ Ibid., pp. 322~326.

²⁵⁾ Ibid., pp. 330~336.

4. 판문점 남북 체육회담의 실현

한국의 올림픽 개최 신청이 성공한 후 북한은 서울올림픽의 정당성을 강력히 비난하며 남북 단일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3년 5월 19일 재미한국교포들은 워싱턴에서 남북통일동포회의를 개최했다. 8월 30일, 남북연합운동총회(南北聯合運動總會) 회장 박봉철은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 단일팀 구성을 건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북한에 보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그럼에도 1983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김우순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참가 의향을 밝히고, 8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방북(訪北) 초청을 하여 교섭을 시도했다. 1984년 2월 1일, 북한은 미국에 17명의 기자단원 명단을 제출하고 대표팀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²⁶⁾ 동시에 북한은 남북 체육회담이 국제적으로 평화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3자회담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訪中) 및 후야오방(胡耀邦)의 방북을 앞두고 남북 체육회담을 제안했다.²⁷⁾

1984년 3월 30일,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우순은 한국 체육회장 정주영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여 7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제23회 올림픽과 그 후의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 단일팀 문제를 토론할 것을 제의했다.²⁸⁾ 북한이 이를 제안한 날 진의중 국무총리는 안전기획부, 통일부, 외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진의중은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

26)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V.1 남북체육회담 제의 및 준비)」, 룰 번호 2014-0041, 파일번호 09, 38~63쪽.

27) 위의 사료, 77~78쪽.

28) 國土統一院, 『南北韓統一提議資料總覽(제2권)』, 1006~1007쪽.

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때 중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 이산가족과 체육 교류의 촉진을 제안하게 하자고 말했다. 전두환이 한국 측에 지시한 담장에는 다음의 사안이 포함되어야 했다. 첫째, 북한 측이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을 회피한 것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한다. 둘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논의한다. 셋째, 남북 체육 교류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한다.²⁹⁾ 전두환의 지시로 한국 정부는 결국 회담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첫째, 협상과 선전전의 공세로 상대방을 압도하여 남북 회담을 진일보 성사시킨다. 둘째, LA 올림픽,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함께 놓고 토론한다. 셋째, 북한의 선전전을 과감히 봉쇄하고 “북한이 남북체육회담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중점을 둔다.³⁰⁾

북한은 3자회담 추진을 위해 남북 양측이 체육회담을 열어 남북 단일팀을 구성, LA 올림픽에 참가할 것을 자발적으로 제안했다. 전두환 정부의 반응을 보면 한국은 북한의 제안에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LA 올림픽 출전 마감 시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은 거의 불가능했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이 미얀마에서 자행한 테러에 대해 아직 사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 정부는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한 분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4월 2일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³¹⁾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냉전 국면의 이완과 남북 정권 사이의 대결이 상호 장력을 이루는 가운데, 판문점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29) 남북단일팀구성회담실무대책회의 결과(1984. 3. 30), 국가기록원서울기록관, BA0883963, 1~3쪽.

30)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38~63쪽.

31) 남북대화사무국 편, 『남북대화 백서(1988)』, 191~193쪽.

Ⅲ. 남북 판문점체육회담

1. 제1차 판문점체육회담

1984년 4월 9일, 한국올림픽위원회 부주석 김종규와 북한올림픽위원회 부주석 김덕준이 이끄는 남북대표단이 제1차 회의를 가졌다. 한국은 회담 초반부터 미얀마 테러 사건, 최은희·신상옥 납치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측 체육인들이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북한이 이를 인정하고 적절한 사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남측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4월부터 각종 스포츠 경기를 거행하여 대내외에 남북 단일팀 구성 의지를 표명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북한은 회담의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먼저 논의하고, LA 올림픽 참가 문제를 토론한 후에 스포츠 교류 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³²⁾ 남북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선수 선발, 선수·임원 구성, 선수 관리, 경비, 선수단의 깃발과 노래, 명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했다.³³⁾

그러나 북한 측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전에, 한국 대표는 갑자기 북한이 미얀마 암살 테러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남측의 자작극으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북한을 비판했다. 그리고 한국은 미얀마 암살 테러 사건이 명백히 입증된 만큼 북한은 전민족(全民族)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여 성실한 대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한국 측이 체육회담 자리에서 양곤 테러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격렬한

32)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서울: 통일원, 199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UM4887, 9~11쪽.

33) 위의 사료, 14~15쪽.

비판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이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은 체육 정신과 남북 체육인 단결을 위한 회담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었다.³⁴⁾ 한국 측은 계속하여 “한국 선수의 안전”을 이유로 북한 측에 최·신·납치 사건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이하 ‘최·신 납치 사건’). 한국 측은 단일팀 구성 후 한국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이유로 북한 측이 당장 두 사람을 돌려보내는 성의와 믿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 측은 ‘최·신 납치사건’은 두 사람이 동독 영화업계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간첩이 조작한 것으로 한국 매체가 근거 없이 퍼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한국 측이 스포츠와 무관한 사안을 가지고 체육회담을 영동한 방향으로 몰아간다고 비난했다.³⁵⁾ 양측의 적개심이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상대방의 내정과 정치제도를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북측 대표는 한국 측의 집요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퇴장을 선언했다. 북한 측은 한국 측에 정치문제에 관한 회담을 할 것인가, 체육회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이후의 회담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최·신 납치 사건’을 제기하는 한 회담은 없다는 것이다. 회담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 대변인은 회담 실패를 북한 측의 “일방적 퇴장”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기자들에게 북측이 체육인의 면모와 정신으로 회담장으로 돌아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³⁶⁾ 사실, 남북 체육회담을 이용하여 3자회담을 달성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한국 측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은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신 납치 사건을 격렬하고 끈질기게 다루어 북한을 수세로 몰아넣은 것이다. 회담이 종료된 후 한국 측은 회담이 계속될수록 북한

34) 위의 사료, 15~17쪽.

35) 위의 사료, 18쪽.

36) 위의 사료, 21~23쪽.

제도의 단점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겁에 질려 일방적으로 퇴장한 북한의 회담 전략은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³⁷⁾

회의가 종료된 후 대한체육회장 정주영은 회담 실패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그 후 한국 외무부는 반북(反北) 성향의 기자, 친한(親韓) 정치학자 및 유명 기고가들을 동원하여 북한의 진정성 부족을 비난했다.³⁸⁾ 다음날 북한은 한국 측이 처음부터 회담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비난하면서도 한국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³⁹⁾

2. 제2차 판문점체육회담

1984년 4월 30일, 남북 양측 대표는 다시 체육회담을 가졌다. 북한 측은 처음부터 체육회담과 무관한 사안은 논의하지 말고 최대한 성의를 보이라고 남측에 당부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신 납치 사건을 다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청와대 습격, 땅굴 침입 등의 지나간 사건도 다시 제기했다. 북한 측에 대한 한국 대표의 공격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담이 수차 중단되며 급기야 상호 막말로까지 번졌다. 남측은 아웅산 테러 사건 및 최·신 납치 사건에 대한 북측의 합리적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했고, 북측 이런 정치적 발언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⁴⁰⁾ 그러나 양측은 아웅산 사건, 납치 사건, 김대중 사건을 둘러싸고 다시 서로를 비난했다. 한국 측은 북한 측에 사

37) 위의 사료, 25쪽.

38) 위의 사료, 25쪽.

39) 國土統一院,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올림픽委員會代辯人 聲明(1984. 4. 10)」 『南北韓統一提議 資料總覽(제2권)』, pp. 1013~1015.

40)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212~214쪽.

과한 후 체육회담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 측은 아웅산 테러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의 결과라며 언제까지 이런 발언을 계속할 것이냐고 반문했다.⁴¹⁾ 양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상대방의 발언을 끊고 장광설을 펴며 상대방의 정치체제를 규탄하였다.⁴²⁾

회담 후 한국 측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2차 회담 당시 북한 대표단의 행동은 상당히 이상했다. 북측은 한국 측에 아웅산 사건의 인정을 3차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것인지 거듭 확인을 요구했다. 한국 측이 김정일, 김일성이 민족의 반역자라는 말을 해도 북측은 퇴장하지 않았고 심지어 기자들까지 합세하여 한국 측에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북측은 세 차례나 퇴장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때마다 지휘부가 쪽지를 보내 그들의 퇴장을 막았다. 한국 측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맹렬히 비판하면 북한 측은 성냥갑을 던지고 물건을 내려치는 등 소음을 냈다.⁴³⁾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은 북한이 3차회담을 달성시키기 전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 대표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북한을 비난하고 공격했다. 전두환 정부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을 이용하여 한국 국민 및 세계 여론에 북한에 대한 비호감과 두려움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북한은 그 장단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3. 제3차 판문점체육회담

1984년 5월 25일 양측은 제3차 체육회담을 가졌다.⁴⁴⁾ 3차 회담에서도

41) 위의 사료, 192~194쪽.

42)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56~61쪽.

43)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파일번호 01, 214쪽.

한국 측은 마찬가지로 아웅산 테러 사건과 최·신 납치 사건을 제기했다. 북한 측은 한국 측이 사과하고 더이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는 도발을 멈출 것을 명백히 요구했다.⁴⁵⁾ 한국 측은 다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국제대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고, 남북체육교류의 취지와 구체적 방안을 재차 설명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은 정치문제에서 양보를 원치 않았고, 3차 회담은 다시 말다툼으로 번졌다. 그런데 북한 대표는 앞서 두 차례와 달리, 한국 측의 비난을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회의 정결 전에 한국 측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남북 직통전화선을 즉각 개통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 측은 비공개회의도 진전이 없을 것이라며 기존대로 공개회의로 하자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먼저 다음 회담일정을 정하고 회의장을 떠날 것이라 생각했으나, 북한 측은 서신으로 연락하겠다고 일어섰다.⁴⁶⁾

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냉담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84년 5월 8일 소련이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LA 올림픽을 보이콧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전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소련을 무턱대고 따르는 북한의 주체성이 결여된 태도를 비판한다. 5월 19일, 한국 정보문화국은 전두환의 명령에 따라 남북 체육회담 대책회의에서 북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제안을 확정했다.⁴⁷⁾ 그러나 22일 국토통일원이 회담 대책을 마련한 뒤에는 이를 삭제하고 LA 올림픽에 남북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계속 제안했다.⁴⁸⁾ 북한이 LA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 평화를 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44) 위의 사료, 212~214쪽.

45)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파일번호 02, 253~258쪽.

46)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78~81쪽.

47)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파일번호 02, 171쪽.

48) 위의 사료, 185쪽.

위함이었다.

판문점 3차 체육회담을 돌이켜보면 북한은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불리한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남북 체육회담을 이용하여 남북관계 완화 국면을 조성하고 나아가 3자회담을 달성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 정부는 아웅산 테러사건과 최·신 납치 사건을 이용해 북한을 막말 싸움으로 끌어들이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막았다. 그러나 한국은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해 LA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부산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회담을 열어 사회주의 및 제3세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했다.⁴⁹⁾ 이처럼 남북 양측의 복잡한 동기로 인해 남북올림픽은 판문점에서 ‘싸우되 상대를 때려눕히지는 않는’ 국면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1984년 6월 2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LA 올림픽을 정식으로 보이콧한다고 선포했다. 그 이유는 반공(反共)·반사회주의(反社會主義)를 공개적으로 모의하는 곳에서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으며 단독으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 또한 국가의 영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앞으로 올림픽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모든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 주장했다.⁵⁰⁾ 북한의 발언은 서울올림픽이 남북의 또 다른 국제합법성 경쟁의 아레나가 될 것을 공표한 것이었다.

49)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파일번호 03, 40~44쪽.

50) 위의 사료, 66~70쪽.

IV. IOC 남북 로잔 체육회담을 추진하다

1. IOC의 로잔 남북체육회담 개입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상호 보이콧을 당하자 IOC는 똑같은 상황이 서울올림픽에 재현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IOC는 적극적으로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이로써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이콧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IOC는 남북한 판문점 체육회담이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1984년 5월 4일, IOC위원장 사마란치(Antonio Samaranch)는 한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노태우에게 전화를 걸어 남북올림픽위원회 관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서 회의를 열 것을 희망했다. 한국 정부는 그것이 북한이 부추긴 결과라 의심했지만, 올림픽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⁵¹⁾ 5월 10일, 스위스 주재 한국대사 안재석은 사마란치를 방문하여 북한이 아웅산 테리와 최·신 납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마란치는 판문점 체육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IOC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그는 양측이 로잔에서 그가 주재하는 회담을 열고 양측이 통일된 국호를 사용하여 개막식에 함께 참가한 다음 따로 경기에 참가한다는 1단계 원칙에 합의할 것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사마란치는 안재석에게 회담 중 양측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마란치의 제안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다. 북한이 회담을 빌어 정

51)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전16권 (V.1 회담개최교섭, 10.1984-85.6)」,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3, 3~4쪽.

치적 선전을 하고 서울올림픽을 파괴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여 로잔 회담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⁵²⁾

IOC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남북 모두 감히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 7월 6일, 한국대사 신동원은 곧 북한을 방문할 IOC 부주석 쿠마(Kumar)를 방문했다. 쿠마는 판문점 체육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3자 조율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IOC가 남북 양측 사이에서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IOC가 남북 각각과 단독으로 접촉하고 진전이 있으면 남북 공동 회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동원은 한국은 IOC의 체육회담 개입을 원치 않는다고 북한이 아웅산 테러에 사과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남북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쿠마의 북한 방문 기간 중 김우순은 남북통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측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 측과 협력하기를 원했지만, 한국이 체육회담에 미얀마 사건과 납치 사건을 끌어들이며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3자회담을 원하는데 한국이 방해한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로잔 회담 제안과 관련하여 김우순은 “남북 단결에 관한 어떤 의제도 환영한다”며 모호하게 답했다.⁵⁴⁾ 이로 보건대 남북 양측 모두 로잔 체육회담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쿠마의 북한 방문 후 얼마 되지 않은 7월 28일 사마란치는 IOC 주재로 남북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이 LA 올림픽 기간 중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⁵⁵⁾ 이에 한국 정부는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논의했다.⁵⁶⁾

52) 위의 사료, 16~17쪽.

53) 위의 사료, 16~17쪽.

54) 위의 사료, 97~100쪽.

55) 위의 사료, 56~57쪽.

56)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사마란치 3자회담 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말고 노태우가 사마란치와 상의한 뒤에 북한과의 접촉 여부를 판

손재식 국토통일원장은 이영호 체육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남북이 LA에서 접촉하는 것은 대표단 관리, 선수들의 사기 등은 물론 현지 동포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⁵⁷⁾ 회답이 가져올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은 LA에 회답 개최를 반대했다. 또 LA국제올림픽 위원회 회의 중 사마란치가 북한 대표단과 회답을 갖고 3자회담을 협상하려 했지만 역시 북한 측이 거절했다.⁵⁸⁾

2. ‘분산 개최’에서 ‘공동 개최’로

남북한 모두가 명백히 거부했지만, 사마란치는 중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1984년 9월 4일, 사마란치는 주제네바 한국대사 박근을 만나 남북 단일팀 구성의 모습을 다음과 같다고 제기했다. 첫째, 국제 스포츠 경기 개막식에 공동으로 참가한다. 둘째, 올림픽 깃발을 함께 사용하여 입장한다. 셋째, 국호는 KOREA로 한다. 넷째, 남북한은 따로 대회에 참가한다.⁵⁹⁾ 17일, 서독 이타르타스 통신사(Information Telegraphic Agency of Russia-TASS) 사장은 윤석현 주프랑스 한국대사와 소련 대사가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여 서울올림픽 문제를 은밀하게 논의하게 했다. 소련 대사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에 맹렬히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타르타스 사장은 북한이 2~3개 경기 종목을 주관하면 소련이 서울올

단한다. 2. 공식적인 회답은 되도록 피하고 LA 올림픽이 끝난 뒤에 제3국에서 갖기로 했다. 3. 사마란치의 구상을 존중하지만, 올림픽 개최지 변경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다. 4. 기존 선수단은 체육 교류와 단일팀 구성을 내세워 회답 결렬에 남측이 주장한 정당성을 낮췄다. 5. LA에 올림픽 매체가 운집한 상황에서 개최지 변경 주장을 펴뜨려 악선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사료, 77~85쪽 참조.

57) 위의 사료, 88~89쪽.

58) 위의 사료, 97~98쪽.

59) 위의 사료, 96쪽.

림픽에 참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련 대사는 북한이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⁶⁰⁾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사마란치는 기회를 틈타 로잔 회담 추진을 위해 외교 활동을 벌였다. 9월 하순, 사마란치는 모스크바 체육대회에서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에 변화가 없음을 재천명했다.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 안드레띠(Giulio Andreotti)가 북한에 2~3개 경기 종목을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김우순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회의 후 사마란치는 동구권 국가들의 서울올림픽 참가에 낙관적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의 체육계 인사들이 LA올림픽 보이콧을 잘못된 선택으로 여기는 있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⁶¹⁾ 9월 28일, 서울 방문에서 사마란치는 노태우에게 북한이 IOC의 주재하에 한국과 제4차 체육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노태우는 북한이 사과하지 않는 한 4차 회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분산 개최’는 IOC 현장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사마란치는 한국이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용의가 있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북한이 2~3개 종목 주관이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올 구실을 갖게 된다. 노태우는 한국 정부가 해당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겠으나 북한과 경기 종목을 반반씩 나누거나 육상경기 같은 주요 대회를 북한이 주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마란치는 서울올림픽은 서울올림픽이며, 그 외의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IOC는 양궁 같은 소규모 대회를 북한에서 개최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모든 주요 행사와 개막식·폐회식은 서울에서 열릴 거라고 하였다. 사마란치는 북한의

⁶⁰⁾ 위의 사료, 101~104쪽.

⁶¹⁾ 위의 사료, 111~112쪽.

국경 개방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종목을 반반씩 나누자는 제안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⁶²⁾

북한은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태도 변화를 느끼고 입장을 조정할 것 같았다. 11월 6일, 김우순은 사마란치에게 로잔 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전달하고 북한이 여러 경기 종목을 주관하고 단일팀을 구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⁶³⁾ 북한의 갑작스러운 전환에 한국은 남북 체육회담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IOC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⁶⁴⁾ 결국 한국 정부는 북한이 모든 IOC 회원국 앞에서 문서로 서울의 개최권을 인정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로잔 회담에 참석하기로 했다.⁶⁵⁾ 1988년 올림픽 개최권 변경은 한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이자 북한이 손에 쥔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 북한은 한국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은 북한이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사마란치의 권위에 앞에서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⁶⁶⁾

11월 29일, 한국이 가장 우려한 일이 발생하였다.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사마란치에게 서울이 올림픽을 주관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과 세계 평화에 불리하므로 남북이 경기 종목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⁶⁷⁾ 사마란치는 IOC는 남북 회담을 주재하기를 원하지만, 그 전제는 남북한 양측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62) 위의 사료, 113~116쪽.

63) 위의 사료, 127~128쪽.

64) 위의 사료, 139~147쪽.

65) 위의 사료, 151~152쪽, 156~157쪽.

66) 위의 사료, 159쪽.

67) Letter from Fidel Castro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Juan Antonio Samaranch, November 29, 198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6>>.

또한 종목 배분 문제는 IOC가 국제체육연맹(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⁶⁸⁾ 12월 4일, 김우순은 사마란치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은 서울의 올림픽개최권을 인정한다는 전제 조건을 거절한다고 밝혔다.⁶⁹⁾

3. 남북, 로잔 회담의 제안을 받아들이다

남북이 팽팽히 맞서자 IOC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1985년 2월 1일, 사마란치는 정식으로 남북의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초청장을 보내 남북 대표가 로잔 회담에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⁷⁰⁾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기회를 틈타 개최지 변경을 전 세계에 주장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판문점 체육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사마란치의 노력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⁷¹⁾ 장단점을 따져본 후, 한국정부는 3월 13일 IOC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최종으로 결정했다.⁷²⁾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사마란치 외교도 성과를 거두었다. 3월 10일, 불가리아 체육위원회 위원장 마텐스키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에 참가할 뜻을 표명했다.⁷³⁾ 소련의 마라프 그라모프 체육부 장관을

⁶⁸⁾ Letter fro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Juan Antonio Samaranch to Fidel Castro, December 4, 198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7>.

⁶⁹⁾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3, 255쪽.

⁷⁰⁾ 위의 사료, 192쪽.

⁷¹⁾ 위의 사료, 249~262쪽.

⁷²⁾ 위의 사료, 72~73쪽.

⁷³⁾ 위의 사료, 263쪽.

만난 후 사마란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출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다. 사마란치는 4월 25일 로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88년에도 국제정세가 지금과 같다면 모든 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할 것이며 소련 또한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IOC가 정치적 분쟁에 맞설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⁴⁾ 북한이 아직 응답하지 않았지만,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태도는 사마란치로 하여금 로잔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음이 분명하다.

사마란치의 외교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는 한국의 거센 학생운동이 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한국이 올림픽 개최권을 신청한 후 북한은 줄곧 한국의 국내 정치문제를 이유로 서울이 적절한 올림픽 개최지가 아니라고 선전해 왔기 때문이다. 3월 3일, 사마란치는 뉴욕 주재 한국 총영사 박정규에게 선거 시기 한국 대중들의 올림픽 반대 여론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정규는 이를 부인하며 한국 국민들은 올림픽을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라 답했다.⁷⁵⁾ 사마란치는 18일 강경한 학생 시위가 한국 정부로 하여금 긴급사태를 선포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표명했다. 박정규는 학생 시위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며 특히 봄이 되면 학생 시위가 잦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학생운동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규의 관심사는 긴급사태를 선포할 경우 올림픽 개최지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었다. 사마란치는 일부 국가들이 그로 인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IOC를 매우 화나고 곤란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다.⁷⁶⁾ 사마란치의 걱정은 결코 기우가 아니었다. 1980년대 중

74) 위의 사료, 287쪽.

75)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 서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및 공동 개최 문제·제1권(1984-1989)」, 2018-62-03, 238~239쪽.

후반 한국의 긴장된 정세는 로잔 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IOC와 소련 등의 압박에 북한은 몇 달 동안 침묵한 끝에 로잔 회담에 반응했다. 6월 6일, 사마란치는 다시 한번 북한을 로잔 회담에 초청했다.⁷⁷⁾ 19일 북한 노동당은 세계 각국 공산당에 서한을 보내 미국과 한국이 올림픽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서울은 올림픽 개최지로 적절하지 않고, 올림픽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남북이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고 경기 종목을 반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⁸⁾ 26일 박성철은 평양에서 마라트 그라모프가 이끄는 선수단을 접견했다.⁷⁹⁾ 사흘 뒤 북한은 1988년 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개최하고 경기 종목을 반반씩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전 세계에 발표했다. 7월 9일, 핀란드 주재 북한대사 리남규는 언론매체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⁸⁰⁾ 북한의 변화는 평양 정부가 국제적 분위기의 변화를 느껴 사회주의 국가들의 후원 아래 공동 개최를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남북 로잔 회담과 그 결과

1985년 10월 8일부터 1987년 7월 15일까지 남북은 IOC의 중재 아래 총 네 차례의 회담을 진행했다. 남북 양측은 공동 개최와 종목 배분 등의 문

76) 위의 사료, 263~264쪽.

77) Report b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Vice President on His Trip to North Korea, July 16, 198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44>>.

78)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4, 40쪽.

79)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3, 308쪽.

80)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4, 15~17쪽.

제를 놓고 치열한 쟁탈을 벌이며 침예하게 대립했다. 북한의 서울올림픽 참가는 IOC의 중재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1) 제1차 로잔 회담

1985년 10월 8일, LA에서 IOC의 중재로 김우순·김종하를 대표로 하는 남북 고위급 대표 회담이 열렸다. 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남북 양측은 IOC 연석회의에서 각각 기조 발언 발표.
- (2) IOC의 내부 비공개회의 거행.
- (3) IOC가 남북 양측 대표단과 각각 회담.
- (4) 회담 결과 발표 및 공동 기자회견.

한국 대표는 IOC 총회와 <올림픽현장>에 따라 제24회 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되며 한국의 국문(國門)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측은 1988년 올림픽은 “개최지 변경” 혹은 “공동 개최” 두 선택지밖에 없으며, 심지어 올림픽을 “북한 올림픽” 또는 “북한 평양-서울올림픽”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은 경기 종목의 절반씩 분배, 북한의 주최권 행사, 평양과 서울에서 별도로 개막식 개최, 인신의 안전과 자유로운 교류의 보장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⁸¹⁾

2) 제2차 로잔 회담

1986년 1월 8일부터 9일까지 제2차 로잔회의가 개최되었다. IOC는 6개 의제를 선정하고 2차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24회 올림픽의 주최권이

⁸¹⁾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93-94쪽.

서울에 부여된 사안은 더는 토론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⁸²⁾ 의제 협상 과정에서 사마란치는 먼저 개막식에 남북이 공동으로 입장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양측 논쟁의 핵심은 여전히 공동 개최 문제였다. 한국 측은 북한이 남측의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면 남북이 개최식에 함께 참가할 수 있고, 북측에 핸드볼, 배구, 축구 예선 경기 등을 양보하고 남북이 도로 사이클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한국 측은 북한 측과 문화행사 참가 의제를 논의하고 남북 직접 회담을 통해 단일팀 구성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 북한 측은 IOC에 단독으로 개최하거나 남북을 연결하는 경기에 대해 상세히 제안했으며 남북 간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막식 관련하여 북측은 단일팀을 구성한 뒤 공동의 깃발 아래 공동의 유니폼을 입고 함께 경기에 참가하겠다고 했다.⁸³⁾ 또한, 한국이 로잔에서 북한과 단일팀 구성 문제를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원치 않음을 뜻한다고 했다.

북한은 시종일관 평등한 올림픽 개최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통일 의제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기 종목 분배 문제에서 12개 종목을 한국에 분배하고 11개를 북한에 분배하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사마란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IOC가 북한의 공동 개최와 올

⁸²⁾ IOC집행위원회는 1985년 10월 23일에 남북한 양측에게 6개 문제를 选定과 通知하다. 다음과 같다. 1. IOC 위원장 축사; 2. 24회 올림픽 개최식 남북 선수단 동시 참가 문제 논의; 3. 북한에서 열릴 수 있는 경기 종목 논의; 4. 양측 관할 범위 내에서 열릴 수 있는 체육 종목에 대해 토론하다; 5. 북한의 문화행사 참가 문제를 토론하다; 6. 마무리 문제와 IOC위원장 총괄연설; 남북대화사무국 편, 『남북대화 백서 (1988)』, 311쪽.

⁸³⁾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룰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7, 120쪽.

림픽 명칭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일부 문화행사를 주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림픽 문화행사에 관하여 김우순은 북한의 참가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IOC는 반드시 남북 평등이라는 전제 조건하에 이를 중재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언제까지나 조연 역할을 하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⁴⁾

사마란치는 문화 공연은 IOC가 아니라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Organizing Committee for the Seoul Olympic Games)의 주관이라고 했다. 이로써 IOC와 북한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사마란치는 북한이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지 않다면 3차 회의가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⁸⁵⁾ 북한과의 회담이 결과가 없자 사마란치는 한국 측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북한이 농구, 축구, 핸드볼, 배구 중 한 개 종목의 모든 경기를 주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⁸⁶⁾ 이는 북한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었다.⁸⁷⁾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주석 진충국은 북한에서 8개 종목을 주최하고 여기에 최소한 축구, 탁구, 양궁 3개 종목을 포함할 것을 견지하고 있었다. 사마란치는 거듭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으며 필히 한국올림픽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공동조직위원회 구성의 요구를 강력하게 거절하였지만, 평양을 위

⁸⁴⁾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Boston: Little Brown, 1994) pp. 140-141.

⁸⁵⁾ Ibid., pp. 141-142.

⁸⁶⁾ Letter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NOC) of the ROK with a Summary of the January 8-9 1986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n NOCs, January 15,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82>>;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를 번호 2018-0062, 파일번호 07, 124쪽.

⁸⁷⁾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 147-149.

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⁸⁾

사마란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1차 회담에 비하여 북한의 입장은 조금씩 완화되었고, 주최를 요구하는 종목의 수도 감소하였다. IOC는 남북체육회담의 성과가 양측 최고 지도자 간의 협의와 남북관계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쿠바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서울올림픽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도 따라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⁸⁹⁾

3) 제3차 로잔 회담

1985년 6월 10일부터 11일, 제3차 회의가 열렸다.⁹⁰⁾ 북한이 먼저 양보해 북한에서의 개최 종목을 6개로 줄였다. 그러나 북측은 평양에서 개최할 대회를 ‘제24회 평양올림픽’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양에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설립했다. 사마란치는 평양에서 탁구와 양궁 2개 전체 종목과 자전거 경기 3종목, 1개 조별 축구 예선을 치를 수 있는 종목 배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개 종목만을 온전하게 주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축구 경기 전부를 주최하겠다고 고집했다.⁹¹⁾

사마란치는 북한이 양보를 했으므로 한국도 한발 양보하자고 설득했

⁸⁸⁾ Meeting Between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DPRK's 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Increas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88 Olympic Games, January 09,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58>>.

⁸⁹⁾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116~117쪽.

⁹⁰⁾ 위의 사료, 122쪽.

⁹¹⁾ Memorandum of the Two-Day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n 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June 10-11, 1986, June 10,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07>>;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126쪽.

다. 북한이 올림픽 명칭의 변경을 요구한 데는 공동주최라는 명분을 챙기기 위함이다. 반면 한국은 국제법 및 절차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IOC에 중재 여지를 제공하였고, 이로써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고 하였다.⁹²⁾ 김종하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이 먼저 한국의 올림픽 주최권을 인정해야 몇 개 경기 종목을 북한에 배정할 수 있다고 고집했다. 11일 사마란치는 북한의 요구가 (8개에서) 6개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마란치는 김우순과 만날 때 북한에서 주최할 일부 대회를 ‘제24회 평양올림픽’이라고 명명하고, 평양이 별도로 조직위원회를 설치해 IOC를 직접 상대하는 안을 최대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⁹³⁾ 그러나 한국이 좀처럼 양보하지 않아 사마란치는 진퇴양난에 처했고 제3차 로잔 회담은 여전히 결과를 얻지 못했다.

4) 제4차 로잔 회담

제3차 회담 후 북한과 IOC는 여러 차례 협의하면서 제4차 회담 전에 결과를 얻기를 바랐다. 1986년 7월 19일,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사마란치에게 서한을 보내 평양에서 2개 경기 종목을 개최하는 것은 북한 측의 제안과 배치되니 종목을 추가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다. 28일, 사마란치는 북한이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4차 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없고, 회담의 전제 조건은 북한이 IOC의 중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기본적으로 IOC의 입장을 동의하고, 탁구와 양궁 외에 축구 예선 경기와 사이클 경기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⁹⁴⁾

92) 위의 사료, 127~128쪽.

93) 위의 사료;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123~125쪽.

94) 노중선 엮음,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260~263쪽.

북한이 진일보 완화된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IOC와의 합의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국제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1986년 10월 11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가 ‘국제정세를 개선하고 평화를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소련의 대외 정책에 중대한 전환이 일어났다. 고르바초프는 김일성에게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림픽을 소련이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중요한 경로로 보았으며, 따라서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에 해롭다고 생각했다.⁹⁵⁾ 이는 소련의 서울올림픽 보이콧 설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부인하면서 북한은 더욱 수세에 처하게 되었다.

1987년 2월 12일, IOC와 북한은 공식 회담이 끝난 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중국은 북한 측은 결승전을 포함한 탁구, 양궁 2개 종목의 주최를 받아들이지만, 5~6개 종목 개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평양조직위원회와 서울조직위원회가 함께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의 명칭을 별도로 ‘평양올림픽’과 ‘서울올림픽’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마란치는 북한 측이 원칙적으로 IOC의 ‘분산 개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선포하고 남북은 이러한 틀에서 제4차 로잔 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⁹⁶⁾

1987년 7월 14일, 제4차 로잔 회담이 개최되었다. 사마란치는 북한 측에 여자배구 경기를 추가하고 북한에서만 남자 사이클 단체 경기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축구를 포함한 8가지 전체 종목을 개최한다. 둘째, 올림픽 명칭은 “제24회 올림픽 대회·평양”으로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둔다. 셋째, 서울과 평양이 합동하

⁹⁵⁾ Statement by Gorbachev, “The Ameliora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Strengthening of Peace”, November 11,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20>.

⁹⁶⁾ 노중선 엮음,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271쪽.

여 개막식과 폐회식을 통일로 개최하고, 문화행사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넷째, 로잔 회담과 함께 남북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회담을 가진다.

남측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2개 종목 전체 경기와 2개 부분 경기를 개최하는 것만을 받아들였다. 사마란치는 북측에 IOC의 초기 제안을 받아들여야 북한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북한은 축구경기 중 한 개의 조별예선만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순은 IOC가 북측을 무시하는 대우라고 주장했다. 사마란치는 제24회 올림픽 개최권이 이미 서울에 수여되었기 때문에 차별 대우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응대했다.⁹⁷⁾

제4차 회담에서 북한의 주장은 애초의 “공동 개최, 경기 종목 균등 분배”의 입장으로 되돌아가 회담이 결렬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새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종목 추가와 공동 개최를 주장했다. 한국은 북측에 분배할 구체적인 종목을 IOC와 함께 재검토할 수 있다며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⁹⁸⁾ 그러나 올림픽 공동주최 불가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제4차 회담 후 올림픽 시일이 다가오는 상황이 불리하다고 여긴 북한은 제5차 회담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5) 로잔 회담의 결말

1987년 8월 10일, 김우순은 사마란치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4차 회담이

⁹⁷⁾ Memorandum of the Two-Day Meeting Between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Lausanne, July 14-15, 1987, July 14, 1987,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76>>.

⁹⁸⁾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136~138쪽.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같은 날 주중 북한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5개의 종목의 완전한 개최와 1개의 경기의 부분 개최를 바란다고 밝혔다. 북한은 가능하면 제5차 회의를 8월 또는 IOC가 올림픽 초청장을 보낼 9월 17일 이전에 개최하기를 바랐다. 24일 사마란치는 남북 양측이 여전히 기한 내에 최종 합의에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단 그것은 북한이 IOC의 “중요하고 역사적인” 제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답했다.⁹⁹⁾ 북한은 IOC와 여러 차례 협의가 무산되자 한국 국내 정국 변화에 희망을 걸고 5차 로잔 회담 시기를 한국의 대선 이후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¹⁰⁰⁾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에서 대한항공 항공편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되어 승객 115명 전원이 숨졌다. 폭파사건 이후 북한은 올림픽 논의에서 가일층 고립되었고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을 잃기 시작했다. 12월 초 미국과 소련은 정상 회담에서 서울올림픽 문제를 토론했다. 그 후 지역 사무 회의에서 미국은 소련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소련은 95%의 소련 국민이 올림픽 참가를 찬성하며 1988년 1월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¹⁰¹⁾ 중국 정부도 1988년 서울올림픽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지만, 적극적으로거나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신청 마감일까지 참가를 미루었다.¹⁰²⁾

KAL기 폭파 사건으로 제5차 로잔 회담은 유산되었고 올림픽의 안보

⁹⁹⁾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 259~263.

¹⁰⁰⁾ Letter from the DPRK's 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Stating North Korea's Position Regard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1988 Seoul Olympics, January 11, 1988,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81>>.

¹⁰¹⁾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 265-266.

¹⁰²⁾ 中共中央對外聯絡部辦公廳, 『中聯部老部領導談黨的對外工作(上)』, 2004年4月, 第105頁.

문제가 중요 우려 사항이 되고 있었다. 1988년 1월 25일 서독올림픽위원회는 IOC에 평양의 올림픽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으며 한국에서 폭탄 습격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KAL기 폭파 사건 이후 『로동신문』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 위협하기까지 했다. 서독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빌리 다우머(Willi Daume)는 IOC가 소련 올림픽위원회를 통해 소련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모스크바가 북한 정부에 이런 범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가 북한 정권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¹⁰³⁾ 4월 25일, 한일 양국은 서울 올림픽 기간 중 발생 가능한 테러 문제에 대한 협의했다. 일본 총리는 한국의 올림픽 개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국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평양 정부에 서울올림픽이 순조롭게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¹⁰⁴⁾ 강대국들이 서울올림픽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경솔한 행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순조롭게 개최되었다. 결국 북한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을 따라 서울올림픽을 보이콧한 나라는 쿠바, 에티오피아, 니카라과 등 국가뿐이었다.

103) Intelligence Note From West Germany's 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t Threats to the 1988 Seoul Olympics, January 25, 1988,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92>>.

104) 茹亞偉·郭振·劉波, 「東北亞變局與20世紀80年代朝韓對話」 pp. 122-123; Richard W. Pound, *Five Rings over Korea*, pp. 282-296.

V. 결론

판문점에서 로잔까지 남북 대표는 올림픽 공동 참가를 둘러싸고 체육 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올림픽회담은 평양과 서울 정부가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화해를 실현하는 경로가 아니라 양자 간 ‘합법성’ 경쟁의 전장이 되고 말았다. 양측은 상대 정권을 부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합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다. 남북 올림픽회담의 전개 과정과 최종 결과를 돌아보면, 국제질서 구도 변화와 동아시아 냉전의 해소가 남북 올림픽회담 개최에 동력을 제공했지만, 평양과 서울 양 정권 간의 ‘합법성 경쟁’은 회담의 결과에 다음 세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남북은 올림픽회담을 국제 합법성 경쟁의 중요한 무대로 보았다. 판문점 회담은 상대방의 국내 정치 공격을 위주로 했으면서도 회담 후에는 각국 영사관을 통해 선전전을 벌이며 회담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남북 양측의 국제적 합법성 증감에 대해 깊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국제적 합법성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와 비동맹국가들의 지지에 기반한다. 그런데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가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북한 정권의 국제적 합법성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한국이 이들 사회주의·비동맹 국가와 관계를 수립하거나 심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의 올림픽 개최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선전했던 것이다.

둘째, 남북의 정치체도의 차이는 거대한 긴장을 낳았다. 체육 협력과 교류는 양측 정권의 합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실현되기 어려웠

다. 판문점회담에서 남북 대표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를 받아 ‘선전전’을 펼쳤다. 상대 정권에 대한 신랄한 공격은 양측의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었다. 로잔 회담에서 IOC는 남북 양측에게 정치문제를 제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정치제도의 차이는 여전히 회담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보다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대외 개방의 정도가 높은 한국은 북한에 올림픽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드러냈다.

셋째, 1980년대 한국 민주화의 성과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 사건 이후 국내 야당의 항쟁에 직면해 왔다. 북한은 이 기회를 틈타 올림픽 개최가 전두환 독재 정권의 “연명(延命)”을 위한 것이라 국제사회에 선전하며 서울의 올림픽 개최권 변경을 주장했다. 사마란치 또한 격렬한 학생운동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여러 차례 우려한 바 있다. 한국 야당은 올림픽 임박을 이용해 “선(先) 민주, 후(後) 올림픽”을 주장하여 전두환 정부를 압박했다.¹⁰⁵⁾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노태우는 ‘6·29선언’을 발표하여 올림픽 이전에 민주 선거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한국이 민주화에서 얻은 성과는 서울 정권의 합법성을 강화시켰고, 한국 국내 정치가 올림픽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북한의 경제 격차의 증가와 한국 올림픽 주최권의 성공은 상당한 부분에서 고속경제발전이 입각하여 얻어낸 성과였다. 1980년대 중반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국과의 무역을 점점 더 중시했고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장벽은 점차 허

¹⁰⁵⁾ Memorandum of the Two-Day Meeting Between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Lausanne, July 14-15, 1987, July 14, 1987,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76>>;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132~135쪽.

물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 평양 정권은 김정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립하고 기존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경제와 사회 면에서 고도로 개방적 태도를 취하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었다. 한국은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 모두에서 북한을 앞질렀다. 1991년 9월 17일 남북은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합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으로 평양 정부는 사회주의권의 비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국제적 합법성’ 경쟁에서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 접수: 2024년 5월 2일 / 심사: 2024년 5월 26일 / 게재 확정: 2024년 6월 6일

【참고문헌】

- 國土統一院, 『南北韓統一提議資料總覽(제2권)』, 서울: 國土統一院, 1985.
- 國土統一院, 『南北韓統一提議資料總覽(제3권)』, 서울: 國土統一院, 1985.
- 남북대화사무국 편, 『남북대화 백서(1988)』, 서울: 국토통일원, 1988,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김재우.
- 남북회담사무국 편, 『남북체육회담 결과보고 (종합)』, 서울: 통일원, 1993,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UM4887.
- 노중선 엮음,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1996.
- 한국외교사료관, 「Carter(미국) Tito(유고슬라비아) 간 남북문제 해결 노력 1977-80. 전3권」.
- 한국외교사료관, 「남·북한 단일팀구성 및 체육교류, 1984. 전6권」.
- 한국외교사료관, 「1988년도 서울올림픽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문제, 1984-89. 전16권」.
- Christian F. Ostermann, James Person & Charles Kraus, *The Carter Chill: US-ROK-DPRK Trilateral Relations, 1976-1979*, A Critical Oral History Conference, 2013.
- Rhee, Sang-Woo, ed., *Korean Unification: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Volume III*,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6.
- Wight, M., *Systems of State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7.
- Pound, Richard W., *Five Rings over Korea: The Secret Negotiations behind the 1988 Olympic Games in Seoul*, Boston: Little Brown, 1994.
- 김재우, 「88서울올림픽경기대회 관련 남북체육회담에 관한 연구: 제1차 로잔회의를 중심으로」 『체육사학회지』 제22집, 2017, 65-77쪽.
- 신종대, 「서울의 환호, 평양의 좌절과 대처: 서울올림픽과 남북관계」 『동서연구』 제25권 3호, 2013, 71-110쪽.
- 최진환, 「1991년 남북 단일팀 성사와 단절에 관한 고찰: 제41회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28권 1호, 2022, 171-201쪽.
- 최진환, 「88 서울올림픽 남북 공동주최 논쟁에 관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41-87쪽.
- 최진환, 「남북 스포츠 분단의 역사적 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 회 승인과정을 중심으로」『한국체육학회지』 제59권 3호, 2020, 1~20쪽.
- 허정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과 북한의 스포츠 정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19권 3호, 2018, 75~97쪽.
- 허정필, 「북한의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 논의 참여 요인 분석 - 1988년·2032년 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북한학연구』 제17권 2호, 2021, 43~83쪽.
- Claude I L. Jr., "Collective Legitimization as a Political Function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0, no.3 (1966), pp. 367-379.
- Finnemore, Martha, "Legitimacy, Hypocrisy, and the Social Structure of Unipolarity" *World Politics*, vol. 61, no. 1 (2001), pp. 61-68.
- Ranger, Stephen, "Searching for Legitimacy? The Motivations Behind Inter-Korean Dialogue During the Mid-1980s" *UNISCI Discussion Papers*, Issue 52 (Jan., 2020), pp. 23-33.

『동아일보』 1978년 6월 23일.

남북단일팀구성회담실무대책회의 결과(1984. 3. 30), 국가기록원서울기록관, BA0883963.

Letter from Fidel Castro to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Juan Antonio Samaranch, November 29, 198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6>>.

Letter from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Juan Antonio Samaranch to Fidel Castro, December 4, 1984,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917>>.

Intelligence Note From West Germany's National Olympic Committee to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t Threats to the 1988 Seoul Olympics, January 25, 1988,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92>>.

Letter from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President to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NOC) of the ROK with a Summary of the January 8-9 1986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n NOCs, January 15,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82>>.

Meeting Between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DPRK's 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Increasing Nor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1988 Olympic Games, January 09,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58>>.

Memorandum of the Two-Day Meeting Between the Two Korean 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on June 10-11, 1986, June 10, 1986,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0007>>.

Memorandum of the Two-Day Meeting Between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Two Koreas and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Lausanne, July 14-15, 1987, July 14, 1987,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76>>.

Report by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Vice President on His Trip to North Korea, July 16, 1985,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3444>>.

茹亞偉·郭振·劉波, 「東北亞變局與20世紀80年代朝韓對話—以朝韓奧委會洛桑會談為視角的解讀」『冷戰國際史研究』 제28집, 2019.

(中國)外交部新聞司: 『新情況』 第73期, 1978年11月7日.

中共中央對外聯絡部辦公廳, 『中聯部老部領導談黨的對外工作(上)』, 2004年4月, 第105頁.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Legitimacy
: An Analysis of the Inter-Korean Olympic Talks, 1984-1988

Xie Dingyuan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Gao Yangka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April 1984, the inter-Korean talks on the Olympics were launched under the tension between the easing of the situation in East Asia and the intensification of the north-south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talks in Panmunjom showed a situation of “fighting but not breaking”, and were reduced to a “propaganda war” in which the two Koreas attacked each other's regimes. To prevent avoid another boycott of the 1988 Olympics, IOC President Samaranch invited representatives of the two Koreas to Lausanne for talks. As the Soviet Union and other socialist countries began to reveal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Seoul Olympics, Samaranch took the opportunity to intensify diplomatic pressure on the two Koreas, who finally accepted the IOC's invitation to attend the Lausanne Olympics talks. In the Lausanne talks, the two Koreas engaged in a heated contentious debate of “co-hosting” and programme allocation. North Korea insisted on retaining the title of “co-host” and hosting more than eight events, while South Korea was unwilling to make substantial concessions, and the Lausanne talks broke down after four rounds. Whether

it was the fierce “propaganda war” in Panmunjom or the intolerable “co-hosting” dispute in Lausanne, it reflected the anxiety of the Pyongyang and Seoul regimes about their own legitimacy, and the Olympic talks inevitably became an arena for asserting “legitimacy”.

Keywords: Korean Reunification, International legitimacy, IOC, East Asian Cold War

씨에딩원 (謝定元, Xie Dingyuan) —————

현재 화둥사범대학 사회주의역사 및 문헌연구원(Academy of History and Documentation of Socialism), 역사학과(History Department,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박사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전쟁시기 중국의 대북한 철도지원 — 전쟁지원에서 건설지원까지」(2017), 「「先軍事後財經」：中國對朝鐵路援助探析(1950-1955)」(2022) 등이 있다.

고양개 (高陽凱, Gao Yangkai) —————

국립경북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연구 분야는 동북아시아 문학사, 한중문 화교류사 등이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한반도 미래북한은 2023년 노동당 제8기 9차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0차 회의에서 지난 70여년간 유지해 왔던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대남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정면승부의 반미 적대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집권당과의 관계 발전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러한 대남·대외 전략의 전환에 따른 영토조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만간 법제화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남북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존 통일방안에 대한 수정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통일과 평화』는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론과 통일 불추구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 문제를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호에서는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 전환에 관한 논문과 국제관계의 변화를 다룬 논문 2편을 게재하였다. 이어서 이번 호는 한국의 대응 방안으로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을 다룬다.

기획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정대진 (한라대학교)

국문요약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된 현 시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계속 유효한가? 지난 세기에 이어 지금까지 남북한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맞이했던 '분단'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그리고 최근의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으로 인해 남북한은 스스로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는 '분할'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듯한 모양새이다. 특히 남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부정과 회피 의식도 확산하고 있어 남북한이 공히 '분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방향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단일국가 형태를 포함한 연합, 연방의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와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중간단계를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일방적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큰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의 해석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127>

* 이 글은 줄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유용성과 개선점」 『넘어야 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비전의 전략』,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18주년 기념학술회의(2024년 5월 3일) 발표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했습니다.

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며 통일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제어: 적대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국가형태, 연합, 연방, 단일국가

I. 머리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된 현 시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계속 유효한가?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말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시점에서 때마침 발표 30주년을 맞고 있는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가지는 유용성과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남북 관계는 물론 대내외 통일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중대한 지각변동을 겪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가장 큰 규모의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한은 당국 간의 공식 대화가 부재했던 1950~60년대를 거쳐, 1970년대 대화를 공식 시작한 이후 경쟁과 협력의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한 개념으로 '1991년 체제'를 사용할 수 있다.

남북한은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한 이후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는 특성을 가지는 한편으로 같은 해 1991년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의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나라이되, 서로의 관계에서는 나라의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 성격을 가진 것이 현재 '남북' 혹은 '남북한'¹⁾ 관계의 현실이며, 이를 '1991년 체제'로도 표현할 수 있다.

1991년 체제는 남북한이 국제관계 보편성과 남북관계 특수성의 동시 적용과 규율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사실은 남북이 유엔 무대에서는 별개의 두 국가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 헌장 제4조 1항에 따르면 국가만이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데 남북은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두 개의 한국(Two Koreas)임을 공식화한 것이다.²⁾

또한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문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특수성 기준이 적용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주권국가를 규율하는 국제관계 보편성 기준도 적용되는 이중적 현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1991년 체제는 남북한 특수관계와 국제적 일반관계의 두 기둥(two pillars)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말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발언으로 1991년 체제는 중대한 도전을 맞이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

1) 본 논문은 ‘남북’과 ‘남북한’을 망라해서 사용한다. 현재 이를 언급하는 통일된 공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제 용법상 혼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이라는 용어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를 표방하는 어휘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회담에서도 서로를 남한이나 북한, 남조선이나 북조선으로 부르지 않고 ‘남측’, ‘북측’이라고 부르는 예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국제적·대외적인 관계에서 남한이 북한을 호칭할 때 쓰는 용어를 접목하여 사용하는 예로 보고자 한다. 남북한 관계를 한중관계나 한일관계처럼 한조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남북한 특수관계론 입장에서 ‘남북한’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므로 통례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 (2023) 참조.

2) 제성호, 「법적으로 본 남북관계의 위상」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98쪽.

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엔에서 남북한은 영원히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통일을 포기했다고 간주한 사실도 없고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 출신의 분단국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었는데 한 당사자인 북한이 이 통념을 전복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1991년 체제의 한 기둥인 남북관계 특수성에 균열이 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대내적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 증대, 대외적으로 미중 경쟁의 격화와 지정학의 귀환 같은 한반도 통일의 원심력³⁾이 확대되는 장애요소에도 직면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현재적 의미와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진실의 순간(the moment of truth)이 다가온 것이다.

II.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 이후 대내외 환경변화

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립과 계승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계승되었다. 이 통일방안은 현재 남한의 공식 통일방안이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3) 한반도 통일을 원심력과 구심력 관점에서 설명한 연구로는 윤영관,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2.4.29.) 참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여 통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핵심은 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완성해 간다는 것이다.⁴⁾ 1단계에서 남북한이 화해 및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2단계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남북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지막 3단계에서 1민족 1국가1체제1정부 형태로 통일국가를 구성해 간다는 접근방법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제시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통일로 가는 1단계로 남북한이 상호 적대 및 불신을 해소하며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이다.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이 각기 현행의 두 개 체제와 정부를 유지하며 분단상태를 우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는 1단계 화해협력 단계에서 쌓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해서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 단계이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에서 남북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한편 남북한 합의에 근거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체계화하는 것이 이 단계의 골자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를 구성한다. 이 기구들을 통해 통일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정책은 물론이고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에서 협력관계를 조성해나간다는 것이다. 1민족 1국가 통일국가는 이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을 토대로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고, 이 선거에서 통일국회 및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완성된다는 계획이다.

4)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대진, 「선평화·후통일 원칙의 현재적 의미와 발전 방향」 『평화담론』 2021-5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22.2) 참조.

마지막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이 함께 달성되는 상태를 목표로 한다. 통일국가는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유와 함께 인간 존엄성 및 복지를 보장하는 민족공동체의 새로운 국가를 의미한다.

분단 이후에 남북관계 발전 양상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남북의 상호 신뢰 구축이 관건이다. 그리고 통일은 단순하게 영토와 제도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가 정체성 및 문화, 의식 면에서 공유하는 공동 가치관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나 회담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축적되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그래서 장구한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체계화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원안 그대로 계속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대외환경에 따라 응용되며 계승되고 있다.

김영삼 정부는 통일국가의 미래가치와 기본철학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담론을 확장시켜 왔다.⁵⁾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교류협력을 중시했고, 윤석열 정부는 북한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출현 등으로 인해 구체적인 통일방안의 실시와 추진보다 대북 상황관리와 한반도 리스크 관리에 치중된 대북정책이 주를 이루

5)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4), 1-33쪽.

고 있는 형편이다.⁶⁾

〈표 1〉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

구분	역대 정부		
1948년~1960년	제1공화국 (이승만정부)	유엔 감시하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론	
1960년대	제2공화국 (장면정부)	남북자유총선거론(유엔감시하)	
	제3공화국 (박정희정부)	선건설·후통일론(1966)	
1970년대	제4공화국 (박정희정부)	선평화·후통일론(1974)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두환정부)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982)	
1990년대	제6공화국 (노태우정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2000년대	김영삼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김대중정부	대북화해협력정책	
	노무현정부	평화와번영정책	
2010년대	이명박정부	상생·공영의대북정책	
	박근혜정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문재인정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2020년대	윤석열정부	비핵·평화·번영의한반도	

* 출처: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 통일문제이해』 참고하여 필자 작성

6)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문제이해』, 166~170쪽; 통일부, 『통일백서』 (1995), 83쪽; 정대진, 「탈영토 통일과 연결국가 네트워크」 『정전 70년 평화축제 통일 컨퍼런스』 자료집 (2023년 3월 20일) 참조.

2. 대내 통일환경 변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 특징은 통일로 가는 ‘과정’을 중시한 것과 함께 국민적 합의를 통한 통일방안의 대국민 지지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그 모체가 되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그 합리성과 현실성 못지않게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이를 모태로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통일장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발표 당시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와 사회 지도층과 전문가들의 의지가 합쳐진 전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남북한이 서로를 하나의 체제로 일단 인정하고 긴 시간 평화와 신뢰관계를 조성한 후 최종적으로 단일한 국가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자는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그 배경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통일방안을 입안하기 위해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250회에 이르는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학계를 비롯해서 언론계와 종교계, 문화계와 재계, 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국회 통일특별위원회의 공청회 활동을 통해 제도 정치권은 물론 재야 의견까지 광범위하게 청취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활동했던 제13대 국회의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매우 이상적이고도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1988년 7월 25일에 북한에 남북국회 연석 회의를 제안하는 것을 첫 의제로 선택했다. 이후 통일정책특별위원회는 남북학생회담을 놓고 정부와 학생 측 사이에서 벌어진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한 공청회, 통일정책 관련 공청회와 한민족공동체통일

방안에 대한 정부 보고회를 지속 개최하여 정부와 여당 및 야당과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내놓는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체계화된 통일방안을 작성하고 전국 단위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공론화를 거쳐 공식적인 통일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이 방안은 지금까지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기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⁷⁾ 하지만 통일논의 자체는 활력을 잃어가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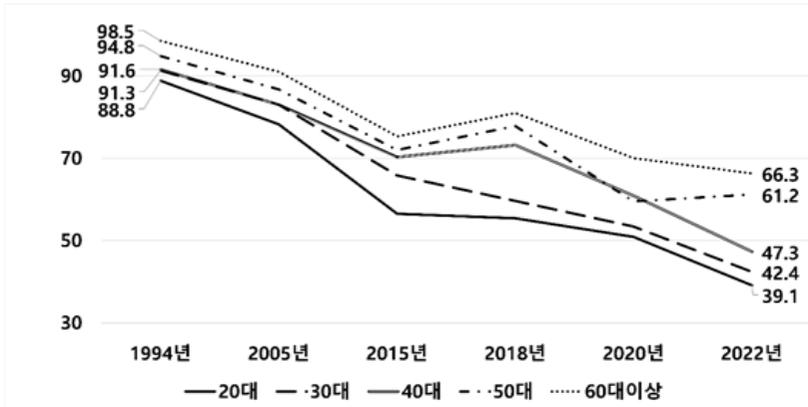
21세기 들어 모든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인식변화는 주목할 만하다.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던 1994년에 88.8%가 통일의 필요성을 지지하던 20대들은 2020년 현재 40대 중반~50대 초반에 접어들었는데 이들의 통일 지지도는 60%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2022년에 40대의 통일 지지도도 급기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20대는 39.1%만이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았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지지도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확연하다.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6·25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인구 구성의 절대다수를 점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2030세대 중심의 MZ세대가 등장하면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하여 단일국가를 형성하는 통일에 대

7) 김상범·김중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155~157쪽.

8) 정대진,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홍현익 외,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서울: 시공사, 2021), 222쪽.

〈그림1〉 세대별 통일에 대한 지지 변화



* 출처: 박주화, “통일에 대한 걸마음과 속마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구자료, 2022)

한 전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는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각종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가운데 미래 이벤트인 통일의 목표가 왜 과거 지향적인 민족동질성 회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도 제기되는 시대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37.3%, 2021년 45.7%, 2022년 42.3%에서 2023년 30.6%로 급감했다. 최고치였던 2008년 57.9%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편 당위로서의 ‘민족’보다 현실로서의 ‘평화’를 통일의 이유로 택한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조사에서 2020년 37.9%, 2021년 28.1%, 2022년 31.6%에서 2023년 38.9%로 증가했다. 서울대 통일의식조사에서 2020년의 경우에는 통일의 이유로 전쟁 위협 제거라는 현실로서의 평화를 선택한

응답(37.9%)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당위적 이유를 선택한 응답(37.3%)보다 매우 근소하지만 높게 나타난 적도 있다.⁹⁾

서울대 통일외식조사의 2023년 결과에서 응답자의 대다수(60.3%)가 통일의 이미지를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일의 필요성에는 43.9%만이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통일외식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한 이후로는 그 경향성이 지속되고 있다.

통일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1.3%)’,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심화되는 것(12.7%)’,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5.8%)’ 등을 통일이라고 여기는 국민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일의 이미지에 대해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외에 응답자들은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13.2%),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0.0%)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삼분의 일(33.2%) 가까이 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일국가 통일보다는 평화로운 공존상태를 통일의 이미지로 선호했다.¹⁰⁾

3. 대외 통일환경 변화

한반도의 분단은 20세기 냉전의 동아시아화가 만든 구조였다. 이 구조는 20세기 말 탈냉전기에도 해체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다. 탈냉전이 펼쳐진 20세기 말과 21세기에도 남북은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었고, 이제는 ‘신냉전’이라고 일부가 평가하는 국제정세의 기류가 다시 한반도를 덮

9)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외식조사』 (2023.12), 36쪽.

10) 위의 책, 29~30쪽.

고 있다.¹¹⁾ 비유적으로 보자면 남북한은 20세기 ‘구냉전’에 21세기 ‘신냉전’을 덧입는 ‘이중냉전’의 장막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이 발표되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시기의 탈냉전 조류 속에서 북한의 최대 우방국이던 소련과 중국은 각각 1990년과 1992년에 남한과 수교를 맺는다. 냉전 기간 정식 수교 관계가 없던 남한과 소련, 남한과 중국의 수교는 한반도에서 탈냉전 및 6·25전쟁의 주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남북한을 제외하고 6·25전쟁의 최대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를 수립하며 중대한 변화를 이미 맞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북한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한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을 선언하며 유럽에서의 냉전과 분단질서는 공식적으로 종언을 고했다. 이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고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기도 한다. 탈냉전 초기 남북한도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향한 구체적 합의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 시기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고 남한의 통일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한 상황대응과 관리가 우선시되는 대외 환경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11) ‘신냉전’ 구도의 최대 수혜자는 현재로서는 북한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2022.12.26.~31)에서는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전승절 연설 중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존망의 조국방위전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으로 대립된 두 극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라며 ‘신냉전’ 질서 인식을 보였다.

우연히도 북한 핵문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이 발표되던 시점에 분기점을 보이기도 했다. 우선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던 해에 프랑스 상업 위성에 북한 영변 핵단지 사진이 포착되면서 북한 핵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냉전 해체 및 동구권의 몰락으로 경제적·외교적 면에서 고립되기 시작한 북한은 가장 강력한 방위 수단인 핵무기 개발을 선택했다. 1994년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진 1차 북핵 위기(1993)가 북미제네바합의가 잠시 봉합되기도 한다. 이후 북한 핵문제는 2차 북핵 위기(2002), 6차회담(2003-2007), 6차례의 핵실험(2006-2017)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탈냉전기 유럽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던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반면 동아시아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던 남북한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 상황 대응 및 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환경을 직면했다.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6·15) 이후 2007년과 2018년에 4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07년 10·4, 2018년 4·27, 5·26, 9·19)이 열리기도 하고 수많은 경제협력, 사회문화 교류가 시도되었지만 북한 핵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이를 둘러싼 북한과 주변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가다서다를 반복했다.¹²⁾ 특히 ‘한반도의 봄’이라고 불렸던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는 현상전환 대 현상유지의 구도가 교차하다가 2022년 이후에는 폐쇄적인 현상유지 구도가 지배적인 상황이다(아래 <표 2> 참조).

12) 북한 핵문제는 대상지역, 협상의 성격, 선결과제, 비핵화방법, 대상범위를 놓고 북한과 관련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102~105쪽 참조.

〈표 2〉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

〈2018년〉	〈2019~21년〉		〈2022~23년〉
현상전환	현상유지 vs 현상전환		현상유지
북한: 경제·핵병진노선→ 경제건설총력노선	북한: 대남·대미단절 폐쇄적 조치 8차당대회		북한: 강대강, 선대선 적대적 두 국가
한국: 남북정상회담	미국: 대북기조불변 국내상황관리 정권교체 실용적접근 조건없는대화	한국: 남북관계개선 북미대화촉진 한반도평화프로 세스	미국: 전략적인내2.0(?) 대중봉쇄와북한
미국: 북미정상회담			한국: 담대한 구상 8.15통일독트린

* 출처: 필자 작성

탈냉전기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상황관리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래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체적 추진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핵을 가진 통일국가가 한반도에 출현하는 일은 동아시아 안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일이기에 통일에 앞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할 필수과제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남북한 대화와 협력과 선순환되어 병행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전개되지를 않았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자신들의 근본적인 안보문제를 주장하며 핵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한이 단독으로 상응조치를 해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남한이 통일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촉진하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 수는 있지만 북한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중지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우호적인 한반도 정세가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현재 미중경쟁의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미 일 안보협력 확대 등 대외 통일환경은 난관에 봉착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¹³⁾ 이런 가운데 2023년말 북한은 급기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Ⅲ.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9차 전원회의(2023.12.26.~30) 결정문에 따르면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밝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규정을 버리고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산하 통일전선부를 비롯해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개편한다고 밝히면서,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줄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¹³⁾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조성렬·정대진, 『현시기 한반도정세 평가와 바람직한 통일의교안보 정책 방향』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2024.4) 참조.

국력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말했다.

당 전원회의 후 2주 뒤인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헌법개정과 함께 《동족, 동질관계로서의 북남조선》,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 등의 상징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거 시대의 잔여물들을 처리”,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남관계가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관계라는 현실은 외세의 특등 주구집단인 대한민국이 극악하고도 자멸적인 대결망동으로 써놓은 북과 남의 명백한 현주소”라고 작금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남측으로 돌리는 발언도 했다. 김 위원장은 2월9일 건군절에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괴뢰족속들을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통일·대남정책의 극적인 변화를 김 위원장이 세 차례에 걸쳐 공식확인한 셈이다.

북한의 통일·대남정책은 대남인식에서 기인하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혁명화의 대상으로 보고 민주기지론에서부터 남조선혁명론, 민족공조론 등의 대남기조를 선보였다. 통일방안으로는 연방제를 중심으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느슨한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보였다.

〈표 3〉 북한의 통일·대남정책 변천

시기	통일·대남정책	전략
김일성정권 (1945~1994)	민주기지론(1945) 남조선혁명론(1950년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1970)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1980) 느슨한 연방제(1991)	하층 통일전선(학생, 재야인사 등)과 남조선 지역혁명
김정일정권 (1994~2011)	낮은 단계의 연방제(2000) 민족공조론(2001)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2010)	하층 통일전선에서 상층 통일전선(민주세력 공조)으로 전환
김정은정권 (2011~현재)	당규약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삭제(2021) 적대적 두 국가론(2023)	상층 통일전선에서 통일불가론으로 전환중

* 출처: 통일·대남정책 부분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 통일문제이해』 참고, 전략 부분은 박수유,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 1980~1990년대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참고하여 필자 작성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전시 무력통일, 평시 대남단절이라는 기초를 선보이며 통일불가론을 최고지도자가 나서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유사시에 무력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대남인식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어 보이기는 한다.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시 북한은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당규약 개정 결정서중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과 업 부분(통일전선)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혔다”면서 “이것은 강위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선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당규약 서문에서 민족해

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통일노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평시 대남 통일전선 기조는 수정하되 본질적으로 유사시 국방력 중심의 무력통일 기조는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했다.

〈표 4〉 통일 관련 북한 노동당 규약 개정 전후 관측(2021년 8차 당대회)

개정 전	개정 후
(서문)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
(제4조 당원의 의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삭제

* 출처: 필자 작성

당 규약 서문 개정 및 제4조 삭제를 통해 현재 불가능해진 남조선혁명을 통한 적화통일론을 폐기하는 대신 국방력에 의거한 대외 위협 억제 및 통일 위업 달성을 표명하여 국방력 중심 대남우위론을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탈냉전기 이후 북한은 ‘느슨한 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주장을 통해 1민족1국가2제도2정부를 내세우며 북한 체제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한 대남인식을 선보인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1민족1국가1체제1정부)과 달리 남북이 각기 제도와 정부를 유지하자는 안을 제안하며 체제유지 및 수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시에 무력

통일을 지향하되 평시에 대남 통일전선 등을 배제하고 완전한 두 국가로 대할 것이라는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 북한 내에서도 대남기조 변화에 따른 각종 문헌 수정 작업이 있을 것이며, 2026년 제9차 당 대회에서 당규약 중 통일 부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일방적 남북한 특수관계 파괴 시도라는 측면에서는 중대한 변화이나 냉정하게 보면 국제적 일반관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측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적대적 두 국가론'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평화적 두 국가'

남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나라이되, 서로의 관계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이 남북한 1991년 체제의 요체이다. 국제사회 시각에서 보자면 이후 남북한은 시기에 따라 협조적 두 국가 혹은 경쟁적 두 국가 사이였다. 2023년 말 김정은의 언술은 국제사회 입장에서 Two Koreas 중 일방이 적대적 관계를 선언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북한이 통일, 동족, 동질 개념을 부정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를 공식화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에 입장에서는 기존의 두 개 국가가 협조적, 경쟁적 관계를 지나 적대적 관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상 이하의 의미도 아닌 행위이다.

국제법적인 면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로 인한 특별한 현상 변경이 있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총 258건에 달하는 남북한 합의서가 유엔에 기탁되거나 국제사회에서 제3자적 효력을 가진 내용들로 문제시된 적은 현재 없는 상태이므로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로 인해 국제사회 행위자들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로 인해 무력 충돌

이 발생하거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국제법적인 개입 여지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요건이 미충족한다. 남북한 1991년 체제는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변주 과정을 거치며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 가능하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남북관계가 평화 국면에서 급격하게 대결 국면으로 돌아선 것이라면 동북아 질서 변화를 유의 있게 관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겠으나 최근 수년간 남북한 관계가 경색 국면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급격하게 경색 국면으로 전환한 단일변수이거나 독자적인 중대요인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북미관계, 남북관계 경색의 누적 결과로 본다면 긴장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정도이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구조변화와 전쟁 가능성이 확연해지는 수준의 중대 변수로 볼만한 여지 또한 미약하다.

남북한 1991년 체제는 존재론적으로 규범상(de jure) 두 국가, 인식론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를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두 국가라는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인식론적인 면에서 남북한 관계가 화해와 협력 혹은 경쟁과 갈등 관계를 넘어 적대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나 남북한 특수관계를 공식 폐기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식론적으로도 남북한 사이에 합치된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규범상 한 민족, 사실상 두 국가라는 존재론적·인식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 ‘화해협력’ 단계를 지나 1민족 1국가 통일을 이루기 전 단계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남북연합’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이 각기 국제사회에서 개별국가로 활동하되 통일을 지향하며 공동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및 공동사무처를 운영하는 과정이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남북관계의 중국적 상태를 선언한 것이라면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이라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적 상태가 아니라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한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평화적 두 국가' 상태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가치에도 부합하고 국제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통일 지향의 두 국가인 남북한 관계에도 합치되는 설명이다. 국제사회에서 대해서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요체를 강조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북한의 주장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에도 반하므로 국제사회에서 남한은 '평화적 두 국가'와 통일지향 입장을 보다 선명하게 내세워야 한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두 국가, 대내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원칙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한 남북한 특수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북한 스스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는 행위로서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estoppel)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또한 남북한 1991년 체제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남북한 관계에 대해 한 민족, 두 국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북한도 그동안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가 없어 응고의 원칙¹⁴⁾이 적용된다고 판단 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특수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비평화적인 정책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

14) 응고의 원칙은 여러 관행의 집적, 묵인,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관행이나 사실이 법적 효력을 획득한다는 원칙.

며 이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제1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된다.¹⁵⁾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사실은 남북한이 유엔에서는 두 개의 국가로 인정되어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자체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국제법상 상호승인에 미해당하며,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별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두 국가론은 현 단계에서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지 국제법적으로 남북한 두 국가관계를 설정하는 국제법적 효력을 새로이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다.

1950년 3월 8일 당시 리(Trygve Halvdan Lie)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한 「유엔, 대표 문제의 법적 측면에 관한 비망록(Memorandum on the Legal Aspects of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in the United Nations)」에서 특정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사항은 유엔 기관인 안보리와 총회의 집단적 행위라고 명시한 바 있다.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국가 승인은 일방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유엔 가입과 국가 승인은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하게 제시했다.¹⁶⁾ 남북한은 유엔 가입 이래 지금까지 상대방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국가 승인한 적도 없고¹⁷⁾ 또 유엔이 남북한은 영원히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어

15) 유엔헌장 제1조 제1항,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16) 1949년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가입이 승인되었을 때 이집트가 그에 반대하며 국가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사실을 배경으로 이 비망록은 작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및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 보완수정판 (서울: 일조각, 2007), 128쪽 참조.

통일을 포기했다고 간주한 사실도 미존재한다.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 또한 남북한이 같은 민족 출신의 분단국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자 통념이다. 이에 입각하여 우리는 국제사회의 관행과 상식을 존중하는 남북관계 발전을 모토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통일 국가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유지 및 발전적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

국내적 차원에서도 남북한을 사실상 두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여론과 인식에 남북한 1991년 체제가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며 국제사회 평면에서는 남북한이 두 국가이지만 민족관계 평면에서는 엄연히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특수관계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

대북 차원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책적인 대응을 새로운 통일방안이나 정부정책, 담화 등으로 공식 제시하기보다는 북한 내부 추이를 살펴보며 탄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동족, 동질 관계를 부인해도 남북관계를 통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에 호응할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접점과 출구가 생길 경우 북이 제시한 두 국가 상태일지라도 국제사회에서 협력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고 관계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통일 의지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서도 남북한의 667회의 회담, 258건의 합의서는 통일을

17) 우리 헌법재판소도 92헌바6·26 결정과 93헌바34·35·36 결정 등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남한이 북한에 대해 국가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4), 151쪽.

지향하는 남북한의 의지와 역사를 축적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부정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일방인 남한은 한민족(Korean Peoples)의 자결권 행사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고 향후 이행하며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할 필요도 있다.

3. 민족자결의 원칙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유용성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민족’은 한민족(Korean Peoples)를 의미할건데 이는 규범적으로 합의되거나 정의된 적은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자결권의 주체¹⁸⁾가 되는 ‘우리들 대한국민’의 범위를 밝힌 바 있고, 이는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으로도 확대해 볼 수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이전 법률 및 규정과 제헌헌법 직후 국적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논의를 연결해서 ‘우리(들) 대한국민’의 범위를 살펴보면, 1948년 국적법 제정 이전 시기와 제정과정에서 ‘조선인’이 국민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역사적 측면에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이전 ‘조선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 「조

¹⁸⁾ 국제법상 자결권은 전통적으로 비자치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해당 지역의 정치적·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다. 이 정치적·법적 지위는 대외적으로는 독립이나 다른 국가로의 합병 혹은 연합의 형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자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외부의 간섭 없이 그들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결권은 실현되며 대외적으로 독립을 이룬 후라도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계속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적 자결권의 의미와 경향에 대해서는 Elizabeth A. Martin, *A Dictionary of Law*, 4th edition(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Antonio Cassese,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 A Legal Reappraisa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Rosalyn Higgins, *Problems and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2000), pp. 111~128; Joshua Castellino, *International Law and Self-Determination* (Hague :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등 참조.

선호적령」에 따라 등재된 호적이 사용되었고, 미 군정기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해서 북한지역에 본적을 두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호적에 대한 임시조치로서 이들에게 가호적(假戶籍)의 효력을 북한 지역에 있는 호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갖는다고 해서 가호적의 효력을 인정하였던 점,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정과정에서 ‘조선인’의 범주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면서 제3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가운데에도 불가피한 이유로 독립운동을 위해 망명한 자들의 경우에는 집단적 귀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는 점, 1948년 ‘국적법’ 제정과정에서 일제강점기와 미 군정기에 출생한 자를 대한민국 국적에 귀속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칭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북한 지역과 주민까지도 대한민국 정부 출범 당시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기하여 우리 헌법 전문상의 ‘우리(들) 대한국민’은 헌법 제2조와 현행 국적법상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최초 대한민국 국민’ 문제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people’의 범주적 한계에 대한 해석 및 그 정당성을 역사적 측면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¹⁹⁾

남북한 지역을 통틀어 ‘민족’을 통일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이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전히 유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민족자결권 행사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 입장과 목표를 뚜렷하게 상정하고 있기에 대외적인 차원에서 남한이

19) 박민,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58호 (2024), 82-87쪽.

이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통일의 주도권과 명분 면에서 축적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이것이 독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목표로서 통일국가형태의 다양성을 열어두고 북한과 새로운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는 등 창의적인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한 특수관계 측면보다 국제적 일반관계가 북한에 의해 도드라지고 있다면 아예 발상을 전환해 동북아 국제관계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 창출 과정에 북한도 동참하도록 접근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연합’ 단계를 남북관계의 통일 이전 잠정적인 목표로 한다면 두 개의 주권국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연합’ 단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두 국가’ 상태를 ‘평화적 두 국가’ 상태로 전환한다는 정책목표 아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를 패키지로 포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조관계’로 가되 이를 ‘사실상의 남북연합’ 상태로 해석적으로 간주하고 정책 동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²⁰⁾

20) ‘평화적 두 국가’ 상태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에 대한 기존 논의는 그 위상, 역할, 성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북연합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남북연합이 그 전 단계의 조건을 성취해야 형성된다는 주장과 남북연합 자체가 독자적 위상을 갖는다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즉, 남북연합은 그 전 단계에서 기준이 되는 조건 예컨대 경제연합 형성, 비핵화 협정, 남북기본조약 체결 등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의 기계적 분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남북연합의 독자적 위상에 좀 더 주목하는 주장도 있다. 덧붙이자면 통일을 논할 때 ‘단계적·점진적 통일’과 같이 ‘단계’와 ‘점진’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양자는 다르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의 위상을 바라보는 주장도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단계’는 앞 과정의 조건이 성취되어야 다음으로 진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점

4.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개선방향

남북한 특수관계에 충격이 가해지며 남북한 1991년 체제가 도전받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남북한의 새로운 미래상을 구상할 때 우선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통일국가는 반드시 민족공동체 단일국가여야 하는가?”이다.

남북한이 사실상 두 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단일국가로 남북한

진은 특별한 조건의 성취보다 과정의 진행과 경과를 보다 중시한다는 점에서 남북연합의 위상을 법적인 실체 혹은 정치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로 논점이 갈린다고도 볼 수 있다. 남북연합을 ‘평화적 두 국가’ 상태로 표현할 때는 ‘단계’와 ‘점진’이 모두 포괄된 양자가 혼용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맥락상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언적·정치적 개념이며 남북연합과 같은 실제적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연합의 ‘역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주장이 존재한다. 남북연합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으로서의 역할을 긍정하는 주장과 함께 그동안 남북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부재로 인해 진전과 퇴보를 거듭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 또는 분단국가연합에 대해 ‘평화 구축’ 역할을 부여하자는 주장도 있다. 셋째, 남북연합의 ‘성격’에 관해 남북한의 국가성 강화 경향을 인정하고 일반적 두 국가 간 결합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잠정적 특수관계론’을 기초로 해서 대외적·형식적으로는 두 국가 사이의 결합이지만, 대내적·내용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 내부 정치체의 결합으로 보자는 주장이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사실상의 남북연합’은 현실적으로 충족이 어려운 전 단계의 성취를 필수적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 통일과정으로 자유왕래나 교류협력이 심화된 상태를 남북연합에 준하는 위상으로 보자는 취지에 가까우며, 궁극적으로는 평화구축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역할을 하며, 성격상 대외적으로는 일반적인 두 국가 결합관계로 보되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 정치체 결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이라는 수식어 붙는 남북연합을 의미한다. 또한 ‘사실상’이라는 전제에서 정태적 의미의 남북연합이라기보다는 상황전개와 현실에 기반한 능동적 해석이 가미된 동태적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 관련 위상, 역할, 성격에 대한 기존 논의의 쟁점과 입장 정리에 대해서는 김진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약사(略史) -남북연합 논쟁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9권 제2호 (2023) 참조.

을 다시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상호대화가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단기적으로 아니다. 남한의 연합제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개방적으로 점검하여 다양한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열어두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방안과 연합 및 연방제를 기초로 한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형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의 기본유형이 도출된다.

〈표 5〉 정치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남북한 통일과정 및 통일국가 형태안

구분	통일과정	내용	통일국가형태
①	3단계과정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구상	3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②	3단계과정 (연합 → 연방 → 단일 국가)	남북연합·연방 구성 후 단일국가로 통합	3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③	2단계과정①: 연합 후 통합 (연합 → 단일국가)	남북연합 구성 후 단일국 가로 통합	2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④	2단계과정②: 연방 후 통합 (연방 → 단일국가)	남북연방 구성 후 단일정 부로 통합	2단계 통합과정 단일국가
⑤	1단계과정①: 국가연합	남북연합 형식의 통합	1단계 통합과정 연합국가
⑥	1단계과정②: 연방국가	남북연방 형식의 통합 (거시, 미시, 중위연방 등)	1단계 통합과정 연방국가

* 출처: 정대진, 「남북한 통합형태의 법적 쟁점: 자결권을 중심으로」 『통일과 법률』 제 35호(2018) 기초로 재구성

국제법상 자결권(self-determination rights) 행사 측면에서 보아도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단일국가 외에도 연합국가나 연방국가를 완성

된 통일국가의 형태로 결정지을 수도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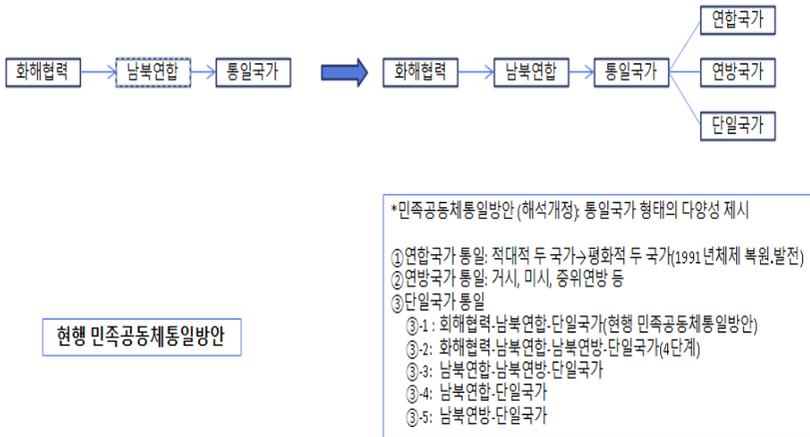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든, 아니면 남북한 관계를 한 민족 출신의 두 나라 사이의 특수한 나라 대 나라 관계로 규정하든 이론상 남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에 따라 단일국가, 연합국가, 연방국가의 형태로 통일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아래 <그림 2> 참조).²²⁾ 그리고 각 단계에서 ‘민족’ 개념은 강력한 순간접착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민족 개념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에 살아온 수천만 명에 달하는 Korean Peoples가 공통적인 언어, 역

21)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에 대해서는 그 범위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로 인종이나 언어, 역사와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남북의 경우에는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같은 문화적 정체성을 얼마나 현재까지 공유하고 있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이 공동의 언어와 역사, 지리적 공유를 가지고 있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남북한 주민이 Korean Peoples의 자결권 주체가 된다는 점은 문화적 정체성 외에도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은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남북이 통일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남북 양측의 노력 또한 한반도 지역에 하는 Korean Peoples가 자결권 행사의 일환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 사이에 정치·군사적 경쟁과 충돌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향한 남북의 지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뜻으로 신용호, 「한반도 통일과 민족자결권」 『법학논총』 제12집 (1995); 홍성필,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20권 3호 (2016) 등 참조.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해석을 주장하며 향후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2) 같은 뜻으로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참조.

사, 혈연을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를 기초로 통일논의의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된다면 통독과정에서처럼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folk)'라는 관념이 작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림 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일국가' 형태의 다양성 검토



이러한 개념적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단일국가를 최종목표로 상정한 20세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검토와 전환이 필요하며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남북한 당사자주의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한반도 문제의 국제주의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과정이 남북한 특수관계에만 입각한 것이 아닌 국제적 일반관계에도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통합구상도 결합되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 창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중간단계 재검토와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우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분단국가연합에 해당한다. 분단국가연합은 최종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인 분단해소와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에 해당하며 정태적 이라기보다는 동태적인 개념에 가깝다. 남북한이 서로를 분단국가로 인정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가 장기간 공존을 수용하면 통일국가 구상도 단일민족국가를 상상하는 것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분단국가로서의 자의식 및 분단국가연합이라는 중간단계와 연결될 통일구상은 '경성(hard)' 이라기보다는 '연성(soft)' 형태로 유연해져야 한다.²³⁾ 분단국가연합은 남북한이 서로 실질적인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기존 관할 지역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 하며 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식명칭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이미 드러나 있다.²⁴⁾

이 중간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할 통일국가의 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상상력이 필요한데 남북연합 그 자체를 평화공존체로 규정하고 이를 '민족공동체통일방안2.0'으로 제안하는 주장, 한반도의 2국가론을 적극 수용하여 1민족2국가의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입장, 세계 시민주의의 변화에 걸맞은 정치공동체로서 통일을 추구하자는 견해 등이 제시된 바 있다.²⁵⁾ 지향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 주장들은 대체로 남북한의 개별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점²⁶⁾, 국제관계의 보편적 프레임을 중시하자는 점, 평화공존 중간단계를 실질화하여 남북관계 통합수준을 높이자는 점, 연성적이고 복합적인 통일형태를 추구하자는 점에서는 공

23) 이는 연성복합통일이라는 명칭으로 학계에서 논의가 발전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경기도: 창작과 비평, 2012), 352~372쪽 참조.

24) 남북한 두 국가 실체 인정의 중간단계 기반 위에 경제공동체와 통일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로는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서울: 늘품플러스, 2012) 참조.

25) 이에 대해서는 박명규 외, 『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경기도: 나남출판, 2022) 참조.

26) 남북한의 개별 국가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로는 김병로, 『한국과 조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참조.

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공통점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남북한~중국 동북3성~산둥반도~일본 열도~러시아 연해주를 연결해서 인구 4억 5천만 명 이상의 동북아 일일생활권 조성이나 단일 경제권 조성을 추진하는 연결국가 네트워크도 구상해볼 수 있다. 이 연결국가 네트워크를 통일 중간단계로 상정하여 통일로 가는 장구한 선행화 과정(2체제2경제)으로 보거나 남북한 합의에 따라 통일의 대안(1체제2경제)²⁷⁾으로 선택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력과 영토를 실체적으로 하나로 합치는 영토 통일에 대한 상호부담감을 덜 수도 있다. 또한 연결국가 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개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핵심으로 하여 남북한을 넘어 동북아 연결과 교류의 이익과 혜택을 신장해간다는 기본 구상을 확대해서 주변국들도 한반도 분단이라는 현상유지보다 한반도 연결 및 통일이라는 현상전환이 편익이 된다는 점을 구체화한다면 연결국가 네트워크도 현실적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 시대에 동북아 관련국들이 누렸던 경제 성장과 편익을 고려하면 현재 ‘신냉전’으로까지 일부가 평가하는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국면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 이익임을 공유하고 동북아 역내 상호협력의 토대를 남북한 연결부터 시작해보자는 이니셔티브를

27) 2체제2경제, 1체제2경제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남북한 통합 시나리오는 아래 표 참조.

		발전·수렴 방식	
		1경제	2경제
북한체제 전환여부	1체제	① 1체제1경제(통일국가)	② 1체제2경제(일국양제 방식)
	2체제	③ 2체제1경제(현실적 불가능)	④ 2체제2경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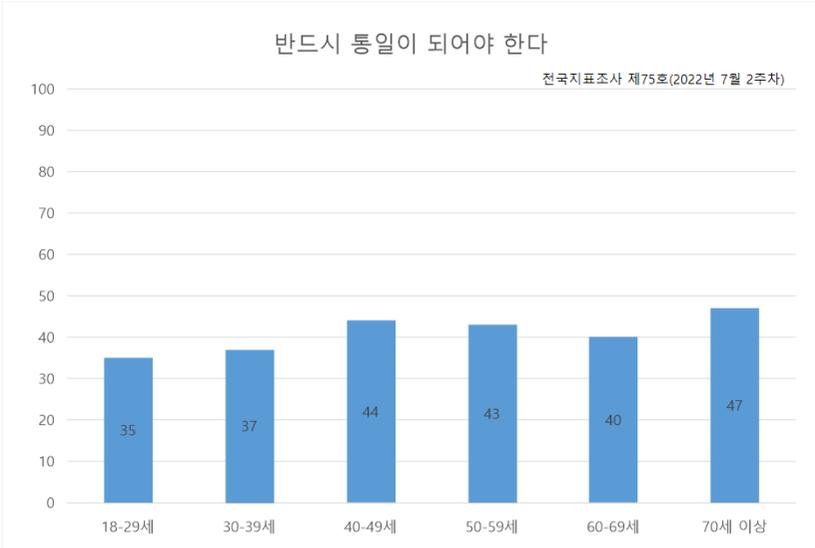
* 출처: 문성민·민준규,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통일과법률』 제25호 (2016), p.61 기초로 재구성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반도 분단 유지는 동북아 지역에서 장기적인 비용지출 구조에 해당하며 이를 넘어서는 연결국가 네트워크의 편익에 주목하도록 '통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며 현실적인 동력을 찾아가야 한다. 당위적인 구호나 논리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통일'을 목표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중요한 국가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확실히 각인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일대일 대응보다는 전반적인 방향 선회와 정세전환을 주도해가야 한다. 단기간에 이를 성취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연결성 강화와 교류 확대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 이런 방향성은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통일논의에서의 '개인'의 출현과 이들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방편이 될 것이다.

통일논의에서의 '개인'의 출현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7월 전국지표 조사에서는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묻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모든 세대에서 통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과반 이하였다. 주목할 점은 전국지표 조사에서 세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통일이 필요한지만 물어보면 세대 간 차이가 있지만 통일이 '반드시' 필요한지 물어보면 세대 간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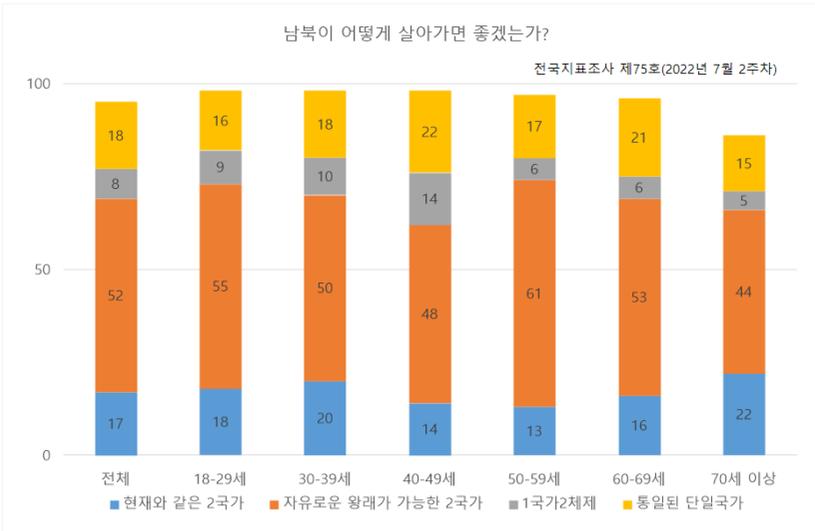
28) 박주화, 「통일에 대한 결마음과 속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구자료, 2022).

〈그림 3〉 통일의 절대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같은 조사에서 남북한의 미래상을 물어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52%)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남북한 관계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44%에서 61%에 이르는 비율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남북한 관계의 미래상으로 선택했다. 반면에 통일된 단일국가를 선호하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전 세대에 걸쳐서 통일된 단일국가를 답한 비율도 15%에서 22%에 그쳤다. 또 현재와 같은 분단된 두 국가(13~22%), 1국가2체제(5~14%)를 꼽는 선호도도 확실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 남북한의 미래상



이러한 응답의 특징을 꼽자면 통일 문제의 주체로 ‘개인’이 본격 출현했다는 점이다. “통일된 단일국가”나 “현재와 같은 2국가” 또는 “1국가2체제” 모두 ‘국가’와 ‘민족’ 단위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는 ‘개인’을 기본 전제로 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남북이 두 국가로 남아 있다고 해도 개인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사실상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누리고자 한다는 뜻이 반영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1국가2체제 혹은 단일국가 형태로 통일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마찰을 직면하기보다는 그리고 현재와 같은 두 국가의 분단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아닌, 한반도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통일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의 출현은 중요한 전환의 의미를 지닌다. 국가와 민족 단위에서 통일과 평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전제로 해서 통일과 평화를 바라며 이전과 사뭇 다른 남북의 새로운 관계 및 미래상 그리고 이런 미래상이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하며 새 질서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²⁹⁾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민족’이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에 사는 개별적 의미의 개인도 포괄하여 민족을 이루는 각 개인 Korean People이 자유롭게 남북한과 동북아를 연결국가 형태로 오가는 새로운 상상과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한 남북한 1991년 체제의 진화와 통일로 가는 다음 단계를 그려나가야 한다.

IV. 맺음말

1945년 한민족(Korean Peoples)은 분단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당시 우리 민족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남북 지역 사이에 경계선을 설정하고 그 이북은 사회주의 체제로, 그 이남은 자본주의 체제로 각각 정부를 구성할 테니 각 개인의 선호도와 사정에 따라 이주하도록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일정 기간 각 개인들의 이주가 끝난 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출범했다면 우리는 이를 ‘분단’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분할’이라고 부르고 있을 것인가? 아마도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을 했다는 의미에서 ‘분할’로 부르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 세기에 이어 지금까지 우리는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맞이했던 ‘분단’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그

²⁹⁾ 정대진, 「탈영토 통일」, 2쪽.

리고 최근의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으로 인해 ‘분할’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듯한 모양새도 보인다. 특히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부정과 회피 의식도 확산하고 있어 남북한이 공히 ‘분할’을 선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방향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단일국가 형태를 포함한 연합, 연방의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와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중간단계를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접촉점과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일방적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큰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해석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고 통일의 동력을 이어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 접수: 2024년 8월 2일 / 심사: 2024년 8월 29일 / 게재 확정: 2024년 9월 4일

【참고문헌】

- 김병로, 『한국과 조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23 통일의식조사』, 2023.12.
- 박명규 외, 『연성복합통일론』, 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0.
- 박명규, 『남북 경계선의 사회학』, 경기도: 창작과 비평, 2012.
- 박명규 외, 『한반도 평화 신 로드맵』, 경기도: 나남출판, 2022.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 보완수정판, 서울: 일조각, 2007.
- 이효원, 『통일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14.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 통일문제이해』.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문제이해』.
- 통일부, 『통일백서』, 1995.
- 한반도포럼, 『남북관계 3.0』, 서울: 늘품플러스, 2012.
- Cassese, Antoni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 Legal Reapprais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artin, Elizabeth A., *A Dictionary of Law*, 4th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Castellino, Joshua, *International Law and Self-Determination*, Hagu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 Higgins, Rosalyn, *Problems and Process*, Oxford: Clarendon Press, 2000.
- 김병로, 「통일환경과 통일담론의 지형변화: 정부통일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 연구』 제26권 1호, 2014, 1~34쪽.
- 김상범·김종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계승·발전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제12권 제1호, 2016, 147~185쪽.
- 김진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약사(略史) -남북연합 논쟁을 중심으로-」 『북한학 연구』 제19권 제2호, 2023, 195~233쪽.
- 문성민·민준규,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통일과법률』 제25호, 2016, 49~81쪽.
- 박민, 「남북통합과정에서 자결권 행사의 주체(People)에 관한 연구」 『통일과 법률』

제58호, 2024, 66~95쪽.

- 신용호, 「한반도 통일과 민족자결권」 『법학논총』 제12집, 1995, 399~427쪽.
- 윤영관, 「한반도 통일: 원심력과 구심력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2022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자료집, 2022.4.29.
- 정대진,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통일과 담론』 제2집 1호, 2023, 89~119쪽.
- 정대진, 「탈영토 통일과 연결국가 네트워크」 『정전 70년 평화축제 통일 컨퍼런스』 자료집, 2023.3.20.
- 정대진,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홍현익 외, 『공정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서울: 시공사, 2021.
- 제성호, 「법적으로 본 남북관계의 위상」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89~115쪽.
- 홍성필, 「한반도 통합과 자결권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20권 3호, 2016, 141~169쪽.
- 박주화, 「통일에 대한 걸마음과 속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구자료, 2022.
- 정대진, 「탈영토 통일」 『KPI 이슈브리프』 제32호, 서울: 한반도평화연구원, 2023.3.
- 정대진, 「선평화·후통일 원칙의 현재적 의미와 발전 방향」 『평화담론』 2021-5,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22.2.
- 조성렬·정대진, 『현시기 한반도정세 평가와 바람직한 통일외교안보 정책 방향』 국회사무처 연구보고서, 2024.4.

The Hostile Two State Stanc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

Jung, Dae-Jin (Halla University)

Abstract

Does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 remain in effect at this point when North Korea's hostile two-state stance has been raised? Since the last century, the two Koreas have made great efforts to *heal* the passive and dependent historic result of *division*. However, in the 21st century and due to the recent claims of the two hostile states of North Korea, the two Koreas seem to be entering the path of *division* that appears less passive and more self-determined. In particular, as the sense of denial and avoidance of unification within South Korea is also spreading, both Koreas seem to be on the path of voluntarily choosing *separation*.

To reinvigorate unification discussions in this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envision about a new direction for unification. Discussions on various forms of unified nations, including the confederation and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also begin in earnest in order to arouse public opinion at a time when the burden of unitary state unification and questions about its feasibility are raised. Furthermore, if North Korea, the counterparty in this process, insists on the stance of two hostile states,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minimum momentum to continue discussing various forms of unified state after considering the intermediate stage of the Korean Commonwealth (confederation

of two Koreas) i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s suggesting two peaceful states rather than two hostile states. Therefore, rather than proposing grand proposal that risk devolving into unilateral monologues, a pragmatic and flexible approach is necessary. This would allow for continued unification discussions while maintaining the diverse objectives of a unified states, as informed by reinterpretations and revisions of the current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Keywords: Hostile two states,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Unified state form, Confederation, Federation, Unitary state

정대진 (Jung, Dae-Jin)

원주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강원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북한 김정은 시대 인간상과 부패 억제에 관한 연구」(2022), 「남북한 통합 형태의 법적 쟁점: 자결권을 중심으로」(2018)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북한 자료로 본 평양학 개론』(공저, 2024), 『통일교육의 이해』(공저, 2024) 등이 있다.

일반논문

김정은 시기 재생에너지에 관한 북한 내 연구와 국제 협력 연구 동향*

윤순진 (서울대학교)**

박정현 (서울대학교)***

김은진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북한 내 연구 동향과 국제 협력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북한 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과 국제 학술지 발표 논문들을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기간은 김정은 정권 출범 직전인 2010년부터 2023년까지다. 북한 내 발간 논문은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 목록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476편을 선정 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확보 가능한 논문 392편을 텍스트화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외 발간 논문은 Scopus와 Web of Science에 실린 논문 145편이다. 분석 결과, 북한 내 재생에너지 연구는 2010년 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2018년에 가장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특히 풍력발전기 부품과 저수지 발전소 운영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태양열과 지열에 대한 연구도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169>

* 이 연구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제1저자, 교신저자(ecodemo@snu.ac.kr)

*** 공동저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파리협정 채택 후에는 태양빛에 대한 연구가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었다. 북한 연구자들이 참여한 해외 연구는 수소, 소재, 전력 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중국과의 협력이 중심이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서 풍력과 태양빛의 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 연구에서는 수소와 전력 시스템, 에너지 관련 소재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관심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향후 남북간 재생에너지 연구 협력이 주목해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북한, 재생에너지, 연구 동향, 국제 협력, 워드 클라우드, 네트워크 분석

I.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중앙 주도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형발전소법」과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농촌을 비롯한 지방 스스로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북한 발전소 중 중소형 수력발전소는 약 220개로 북한 발전소(에너지 기업 포함)의 80.9%를 차지하며 대부분 2000년대 이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석기 외, 2018). 또한 북한은 2016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2030년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소비 감소(목표 2), 전력 산업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대체 에너지 이용 장려(목표 3),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확대(목표 4)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 실행 지표로는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을 제시하였다.¹⁾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이행 보고

를 위해 2021년 UN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서도 북한은 기후변화(목표 13) 관련 향후 계획에 재난위험경감대책 이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이행, 기후변화 인식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에너지 부문(목표 7)의 경우 전력 생산량 목표 증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형 국가 경제 달성, 친환경 원료 활용 촉진 등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였다.²⁾

북한 당국은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것을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³⁾ 북한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기사에서는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와 평양 류원신발공장, 평양화학품공장, 개성시 정보통신국, 사리원시 사리원담공장 등의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⁴⁾ DailyNK 보도에 의하면, 주택(살림집)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증가해 북한 주민들의 훈수품 구매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소 설치 건설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켜 갈등이 생기는 등의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⁵⁾

1)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3) 『로동신문』, 「주목을 끄는 재생에너지개발리용」, 2015년 11월 29일.

4) 『로동신문』, 「자연에너지 적극 개발리용」, 2019년 2월 25일; 『로동신문』, 「자연에너지를 적극 리용」, 2016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너지를 리용률을 높여 새 모습을 펼친 류원신발공장」, 2017년 11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너지의 효과적리용」, 2019년 8월 19일.

5) 『DailyNK』, 「나선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첫삽 뜨기도 전에 주민 돈 거둬들여」, 2021년 4월 29일, <<https://www.dailynk.com/20210429/>>; 『DailyNK』, 「태양광 발전 설치증가, 신혼부부 훈수품도 바뀌었다」, 2019년 11월 20일,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재생에너지가 북한 경제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스며들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책 실행 전 『경제연구』 등 기관지와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실은 후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1년 저탄소 경제를 언급하며 전기 생산에서의 저탄소화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법」 제정 전에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⁶⁾ 북한이라는 연구 대상의 폐쇄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관련 북한 정책들을 직접 살펴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언론매체인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에 실린 기사들을 통해 북한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북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바탕이 되는 연구들의 동향을 통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⁷⁾ 재생에너지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사회적 필요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관심이나 동향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연구』,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 『농업수리화』 등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학술지 자료를 통해 재생에너지

<<https://www.dailynk.com/%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B%B3%B4%EA%B8%89%EC%9D%B4-%EC%8B%A0%ED%98%BC%EB%B6%80%EB%B6%80-%ED%98%BC%EC%88%98%ED%92%88%EB%8F%84-%EB%B0%94%EA%BF%94%EB%86%A8%EB%8B%A4/>>.

- 6) 김성일, 「현시기 재생에너지기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2년 3호 (2012), 23~24쪽; 한철호, 「경제의 저탄소화는 새로운 경제발전방향」 『경제연구』 2011년 4호 (2011), 53~54쪽; 한철호, 「경제의 저탄소화를 위한 자원의 다양화」 『경제연구』 2012년 2호 (2012), 26~27쪽.
- 7) 윤순진·안새롬·홍중호·이찬희,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 『아태연구』 제26권 3호 (2019), 65~101쪽.

지 관련 북한 내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학술지에 실린 북한 학자들의 논문을 분석하여 이들의 관심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북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파악한다면 북한 당국의 정책적 관심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남북 협력 연구를 추진을 위한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차별성

북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의 경우 태양광, 풍력 같은 특정 에너지원을 주제로 에너지 잠재량이나 기술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거나 남북 에너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수행된 연구들이 존재한다. 먼저, 특정 에너지원 관련 연구들이 있다. 우선 태양광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의 태양광 패널 활용 현황에 대한 연구(신정수)와 태양광 기술 관련 연구(정지순 외) 등이 있다.⁸⁾ 풍력 경우에는 북한 풍력 자원을 분석한 연구(윤준희 외)나 남북 풍력자원을 비교 평가한 연구(이정태 외)가 있다.⁹⁾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한 연구로는 배성인, 윤순진 외, 김윤성 외, 허준영 외 등의 연구가 있다.¹⁰⁾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 중 북한의

8) 신정수, 「북한 가구부문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KDI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호 (2023), 69-78쪽; 정지순·최준희, 「북한의 태양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현황」 『북한포커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21), 3-5쪽.

9) 윤준희·서은경·박영산·김학성, 「종관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한 북한 지역의 풍력자원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제31권 3호 (2010), 225-233쪽; 이정태·김현구·윤창열·강용희, 「거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풍력자원 비교평가」 『신·재생에너지』 제15권 제2호 (2019), 16-23쪽.

재생에너지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재생에너지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남북 연구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연구자들의 국제 연구 활동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학술논문에 대한 자료 정리와 계량 분석을 시행한 연구들이 있다. 김유일은 1986년에서 2019년 사이 북한에서 해외에 발표한 논문을 계량 분석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동향 변화를 살펴보면서 발표 논문들의 연구자, 연구기관, 연구기관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¹¹⁾ 최현규 외는 2007년부터 2016년 기간 북한 과학자들의 국제학술논문(SCOPUS) 게재 동향을 분석하고 각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 해외 협력 기관, 발행 논문 수 등을 정리하였다.¹²⁾ 북한의 중국과의 학술 협력 분석 논문으로 노경란 외와 윤정원의 연구가 있는데, 노경란 외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논문들을 검토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 생산을 위한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중국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북한 연구기관 중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이 국제학술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¹³⁾ 윤정원은 북

10)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 (2010), 69~90쪽; 윤순진·임지원·안정권·임효숙·조영래,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환경논총』 제49권 (2010), 63~93쪽; 김운성·윤성권·이상훈,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 131~165쪽; 허준영·유진아·우창빈, 「LRRD 접근을 통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7권 4호 (2018), 95~130쪽.

11) 김유일, 「해외서지정보를 활용한 북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트렌드 변화분석(1986~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4호 (2021), 137~152쪽.

12) 최현규·노경란, 『북한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2007~20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한과 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학술논문(SCOPUS)으로 등록된 국제학술지 공저자 논문을 추출, 트리플헬릭스(Triple Helix) 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이 2010년도를 기점으로 중요한 협력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¹⁴⁾

선행연구 검토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 중 북한 내 재생에너지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북한 연구자들의 해외학술논문에 대한 연구는 존재하였으나, 재생에너지 분야로 특화해서 분석하기보다는 과학기술 분야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도 연구 내용 분석이 아닌 연구자 명단 분석, 연구 참여 기관이나 기관들 간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북한 연구자들의 국내 및 해외 논문들의 내용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고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북한 재생에너지 연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13) 노경란·김은정·최현규,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4호 (2016), 205~227쪽.

14) 윤정원,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헬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아시아리뷰』 제10권 2호 (2020), 291~319쪽.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분석대상은 재생에너지 관련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김정은 정권 시기 발표된 논문들로 한정하였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2011년 12월에 출범하였으나 2010년부터 살림집 건설 등 내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김정은 총비서가 2010년부터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된 논문을 수집하였다.¹⁵⁾ 해외논문의 경우,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선행연구(Alexandre-Tudó et al., Rodrigo, et al)를 참고하였다.¹⁶⁾ 이 논문에서 활용한 검색어는 <표 1>과 같다. 북한 논문과 해외 논문 검색 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되 북한 논문은 별도의 북한어가 있을 경우 북한어를 활용하였다.

¹⁵⁾ 2023년 자료의 경우 조사 당시(2023년 12월)까지 수집이 가능한 자료(2023년 6월 발행본)를 수집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연구 대상 기간에 2010~2011년을 포함한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2009년 1월 후계자로 공표된 후 공식적인 위원장 취임 전부터 수령독재라는 북한 정치의 특성상 권력 세습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지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형중,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KDI 북한경제 리뷰』 2019년 8월호 (2019), 3~29쪽.

¹⁶⁾ José Luis Alexandre-Tudó·Lourdes Castelló-Cogollos·José Luis Alexandre·Rafael Alexandre-Benavent, “Renewable energies: Worldwide trends in research, funding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newable Energy*, vol. 139 (2019), pp. 268~278; Rodrigo A. Estévez·Valeria Espinoza·Roberto D. Ponce Oliva·Felipe Vásquez-Lavín·Stefan Gelcich,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for Renewable Energies: Research Trends, Gaps and the Challenge of Improving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vol. 13, no. 6 (2021), pp. 1~13.

〈표 1〉 재생에너지 논문 검색어¹⁾

구분	선정 키워드
북한 논문	난방, 령에네르기, ²⁾ 메탄가스, 생물질, ³⁾ 수력, 수소, 자연에네르기, 재생에네르기, 조수력, 중소형발전소, 지열, 태양빛, 태양열, 파력, 폐열, ⁴⁾ 풍력, 해양에네르기
해외 논문	bio energy, biomass, geothermal, hydrogen, hydroelectric, marine energy(power), photovoltaic, renewable energy, solar(energy/heat), tidal energy(power), waste heat, water power, wave power, wind power, zero energy

- 주: 1) 북한에서는 에너지를 에네르기로 표기함. 또한 한국과 달리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란 용어를 씀
 2) 령에네르기는 에너지 제로를 의미하는 북한말임
 3) 생물질은 바이오매스를 일컫는 북한말임
 4) 북한에서는 폐열을 폐열로 표기함

북한 내 논문 수집을 위해 먼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 목록을 대상으로 웹크롤링을 진행하여 총 73,797건을 추출하였다.¹⁷⁾ 이 중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앞서 결정한 검색어를 적용하여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였고 제목과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그 중 관련 없는 일부 논문은 목록에서 삭제하여 476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 중

17)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STI)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한 간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북한의 과학기술과 관련 지식정보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지식플랫폼으로 구축한 사이트이다. 제공되는 정보는 북한문헌DB, 북한과기지식, 인물&기관, 테마 콘텐츠 등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북한의 과학기술 및 관련 지식정보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한다. 특히 북한문헌DB에는 북한의 학술지부터 발명 특허, 기술정책, 기술법령에 대한 논문과 문헌들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논문은 주로 과학기술 관련 분야에 속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확보 가능한 논문은 원본을 복사하고 스캔하여 전자화된 문서로 만들고, PDF 상태의 본문을 OC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가능한 텍스트로 변환하였다. 단, 학술지마다 논문 구성이 달라 텍스트화 진행 시 표, 그림, 초록, 참고문헌, 핵심어는 포함하지 않고 본문 내용만 포함하였다.¹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392편의 논문을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검색어별로 확인한 총 논문 건수와 텍스트화를 통해 본문 분석에 활용한 논문 건수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검색어별 북한 내 재생에너지 논문 수*

순위	검색어	논문 수 (제목 분석)	순위	검색어	확보 논문 수 (본문 분석)
1	풍력	113	1	풍력	96
2	수력	107	2	수력	93
3	태양빛	72	3	난방	60
4	난방	66	4	태양열	54
5	태양열	60	5	지열	47
6	지열	52	6	태양빛	44
7	생물질	13	7	생물질	8
8	자연에너지	10	7	령에너지	8
9	령에너지	9	9	조수력	7
10	조수력	7	10	자연에너지	6
11	폐열	5	11	폐열	4
11	수소	5	11	중소형발전소	4
13	중소형발전소	4	11	파력	4
13	파력	4	14	수소	2
15	재생에너지	2	14	재생에너지	2

¹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의 경우 2020~2021년, 2023년 자료는 소장되어 있지 않아 해당년도 자료는 본문 분석에 포함할 수 없었다.

15	메탄가스	2	16	메탄가스	1
17	해양에너지	1	16	해양에너지	1
총계		476	총계		392

주: *두 개 이상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되었음.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재생에너지 관련 논문은 SCOPUS와 Web of Science에서 검색하였다. SCOPUS 등록 논문의 경우 자료 검색 시 affiliation에서 North Korea로 검색된 2,595건 중 논문 title, abstract, author keywords, index keywords에 선정한 검색어를 검색하여 44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Web of Science의 경우 affiliation에서 국가 검색이 되지 않아 선정한 검색어를 입력하여 확인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country/regions에 North Korea로 등록된 학자를 확인하여 123편을 추출하였다. 두 검색 포털에서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되는 논문 22편을 제외하여 총 145편을 확보하였다. <표 3>은 Scopus와 Web of Science를 대상으로 검색어별로 수집된 논문의 편수와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총 수집 논문 내 비율을 보여준다.

<표 3> 포털·검색어별 재생에너지 해외 논문 수*

Scopus	논문 (편, %)	Web of Science (WoS)	논문 (편, %)	Scopus + WoS	논문 (편, %)
photovoltaic	15 34.1	hydrogen energy	29 23.6	hydrogen energy	31 21.4
renewable energy	9 20.5	wave energy	29 23.6	wave energy	28 19.3
hydrogen energy	8 18.2	waste energy	24 19.5	solar energy	25 17.2
solar energy	4 9.1	solar energy	23 18.7	waste energy	24 16.6
zero energy	2 4.5	photovoltaic	11 8.9	photovoltaic	20 13.8
geothermal energy	2 4.5	renewable energy	10 8.1	renewable energy	15 10.3
waste energy	1 2.3	zero energy	10 8.1	zero energy	10 6.9
biomass energy	1 2.3	waste heat	8 6.5	marine energy	8 5.5

methane energy	1	2.3	marine energy	8	6.5	waste heat	8	5.5
waste heat	1	2.3	biomass energy	5	4.1	biomass energy	6	4.1
geothermal heat	1	2.3	bio energy	4	3.3	bio energy	4	2.8
solar heat	1	2.3	geothermal energy	2	1.6	methane energy	3	2.1
hydropower	1	2.3	methane energy	2	1.6	geothermal energy	3	2.1
tidal energy	1	2.3	geothermal heat	2	1.6	geothermal heat	3	2.1
wave energy	0	0.0	solar heat	2	1.6	solar heat	2	1.4
bio energy	0	0.0	wind energy	2	1.6	tidal energy	2	1.4
marine energy	0	0.0	tidal energy	1	0.8	wind energy	2	1.4
methane heat	0	0.0	methane heat	1	0.8	hydropower	1	0.7
wind energy	0	0.0	hydropower	0	0.0	methane heat	1	0.7
합계	44	100	합계	123	100	합계	145	100

주: *두 개 이상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되었음.

2. 분석 방법

NetMiner 4x6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단어의 출현빈도에 따라 관련 연구의 주요 관심을 시각화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들이 서로 주요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관련 연구들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의 경우 출현빈도 상위 500개 단어를 시각화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단어 관계성 지정 시 문서(Documents)를 동시 등장 범위로 하여 1개 문서 내에서 등장한 단어 간의 관계 링크를 생성하도록 지정하였다. 바로 인접한 2개 단어끼리 링크를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한 번이라도 연결된 모든 링크를 추출하였다. 동시 출현을 기준으로 링크가 생성되기에 선후관계가 고려되지 않는 방향성 없는 네트워크로 지정하였으며 동일한 단어가 인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자기순환적 링크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였

고, 문서 간 링크 등장 수를 고려하여 그 합계를 반영하였다. 단,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 단어 전체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할 경우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되어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연구를 분석할 때는 연결 중심성(degree) 상위 20여 개 단어에 대해, 국내 연구 제목 분석의 경우 상위 5%, 내용분석의 경우 상위 1% 단어에 대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 내 논문의 경우 북한 고유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키워드 분석 시 북한 단어들을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단어들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에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북한용어사전 전체를 엑셀파일로 추출하여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정어로 활용하였다. 단, 분석 대상이 명사이기 때문에 단어 중 ‘다’로 끝나는 단어는 동사로 간주하고 삭제하였다. 또한, ‘연구’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당연히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단어(‘연구’, ‘방법’, ‘평가’)는 제외하였고, 영어 단어의 경우 제목에 기재되어 있는 영어 단어만 포함하였다. 제목 분석은 조사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문 분석의 경우 조사한 자료 중 확보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키워드별로 해당하는 논문의 본문 내용을 분석할 때는 해당하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령, ‘풍력’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에 대한 내용 분석 시 ‘풍력’ 키워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논문에 논문 초록이 없는 북한 논문과 달리 해외 논문의 경우 논문 초록에 연구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어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시 적용한 동의어로는 data와 datum을 설정하였으며 논문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analysis, content, method, paper, result, study와 재생에너지 관련 논문 특성상 당연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 energy를 제외어로 지정하였다.¹⁹⁾

IV. 분석 결과

1. 북한 내 재생에너지 연구 동향

1) 논문 제목 분석 결과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지별 논문을 보면,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기술혁신』에 가장 많은 논문(121편, 전체의 25.4%)이 실려 있어 재생에너지 연구가 주로 기술 부문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 외에 『기상과 수문』, 『전기, 자동화공학』,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 『기계공학』 등에서도 20편 이상의 논문이 게재되는 등 대부분의 연구가 공학과 자연과학 등 이공계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과학 계열로는 『경제연구』와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에 각각 9편과 1편, 총 10편이 실렸을 뿐이다. 이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경제학 관련 학술지에서만 재생에너지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추출한 논문이 과학기술네트워크에 수록된 학술지들만 대상으로 하였기에 과학기술분야나 경제학 이외 인문학이나 여타 사회과학 등 보다 다양한 영역의 학술지들에서 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다루지고

19) 북한 내 한글 논문에서는 energy에 해당하는 에네르기란 단어를 제외하지 않았지만 영어 논문에서 energy를 제외한 것은 북한 내 한글 논문과 영어 논문 검색의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 내 한글 논문에 대한 검색어의 경우 에네르기라는 단어 외에 다양한 단어가 검색어로 활용되었지만 영어논문의 경우 heat이 포함된 단어 외에는 대부분의 검색어에 energy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사한 논문들 대부분이 energy에 대한 연구라 energy란 단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연구 내용에 대한 세부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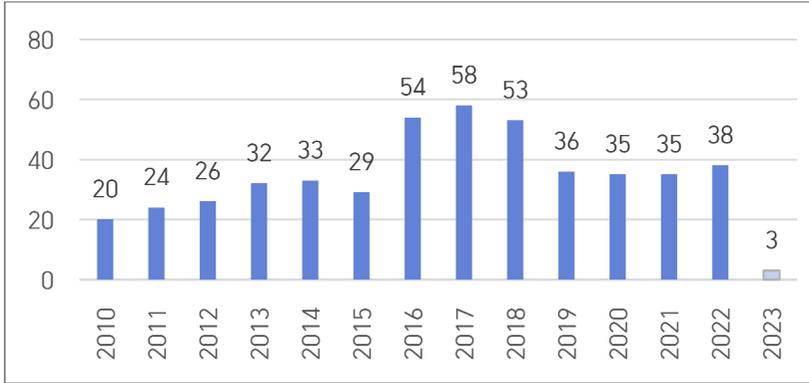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4〉 논문 제목으로 본 학술지별 북한 내 재생에너지 논문 수

학술지명	논문 (편, %)		학술지명	논문 (편, %)	
기술혁신	121	25.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수학	5	1.1
기상과 수문	48	10.1	김일성종합대학학보-물리학	4	0.8
전기, 자동화공학	47	9.9	정보과학	4	0.8
김책공업종합대학학보	34	7.1	김일성종합대학학보-지구환경 과학및지질학	3	0.6
기계공학	33	6.9	화학과 화학공학	3	0.6
조선건축	32	6.7	채굴공학	2	0.4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 과학	28	5.9	계량 및 규격화	1	0.2
지질 및 지리과학	25	5.3	김일성종합대학학보-경제학	1	0.2
과학원통보	24	5.0	김일성종합대학학보-정보과학	1	0.2
전자공학	17	3.6	김일성종합대학학보-화학	1	0.2
경제연구	9	1.9	물리	1	0.2
농업수리화	8	1.7	생물학	1	0.2
정보과학과 기술	8	1.7	수학	1	0.2
김일성종합대학학보-생명 과학	7	1.5	예방의학	1	0.2
컴퓨터와 프로그램기술	6	1.3	총계	476	100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연도별 게재 논문 수를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김정은 집권 시기에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된 2015년 직후인 2016년-2018년 기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논문 제목으로 본 연도별 북한 내 재생에너지 논문 수



주: 2023년은 6월까지의 자료만 확보되어 별도로 빗금처리하였음.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검색어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에너지원이나 에너지 이용 방식은 ‘풍력’(113편, 23.7%)이었으며, ‘수력’(107편, 22.5%), ‘태양빛’(72편, 15.1%), ‘난방’(66편, 13.9%), ‘태양열’(60편, 12.6%), ‘지열’(52편, 10.9%) 순으로 관련 연구가 많았다. 그 외 논문들은 10편 이하(총 편수의 0.2%에서 2.7%)일 정도로 연구가 현저하게 적었다.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편으로는 ‘풍력’, ‘수력’, ‘태양빛’,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 ‘리용’, ‘발전’, ‘발전소’, ‘결정’ 등의 에너지시스템 관련 용어들이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그림 2〉와 〈표 6〉 참조). 논문 제목을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는 키워드 ‘태양열’로 검색된 논문이 ‘태양빛’보다 많았으나, 실제 전체 논문 제목을 크롤링하여 확인한 결과 제목에 포함된 키워드가 ‘태양빛’이 ‘태양열’보다 많아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의 논문 분류에 다소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수력’은 ‘발전소’, ‘풍력’은 ‘발전기’, ‘태양빛’은 ‘전지’, ‘태양열’은 ‘온실’ 등과 연결이 강

〈표 5〉 논문 제목을 대상으로 한 검색어별 북한 내 재생에너지 논문 수¹⁾

검색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²⁾	
풍력	4	2	7	9	14	9	12	14	11	10	8	7	4	2	113	23.7
수력	6	8	11	14	5	3	12	2	11	7	5	9	14	0	107	22.5
태양빛	0	0	1	0	3	2	3	15	6	8	13	11	10	0	72	15.1
난방	4	9	2	4	3	8	9	13	4	3	2	1	4	0	66	13.9
태양열	3	7	1	2	3	4	9	15	9	3	0	3	1	0	60	12.6
지열	4	3	3	2	6	5	10	6	4	3	3	1	1	1	52	10.9
생물질	0	0	0	0	1	2	1	0	3	1	4	0	1	0	13	2.7
자연에너지	0	0	0	0	1	0	1	3	0	1	3	1	0	0	10	2.1
령에너지	0	0	0	0	0	0	1	4	3	0	0	0	1	0	9	1.9
조수력	2	1	1	0	0	0	3	0	0	0	0	0	0	0	7	1.5
수소	0	0	0	0	0	1	0	0	1	1	1	1	0	0	5	1.1
폐열	0	0	0	0	1	1	0	0	1	0	0	1	1	0	5	1.1
중소형발전소	0	0	2	1	0	0	0	0	0	0	0	0	1	0	4	0.8
파력	0	0	0	0	0	0	1	1	1	1	0	0	0	0	4	0.8
메탄가스	0	0	0	0	0	0	0	1	0	0	0	1	0	0	2	0.4
재생에너지	0	0	1	0	0	0	0	1	0	0	0	0	0	0	2	0.4
해양에너지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0.2
총계	23	30	29	32	37	35	62	75	55	38	39	36	38	3	4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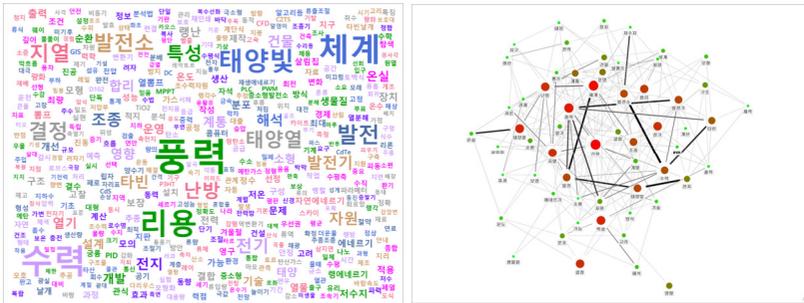
주: 1) 두 개 이상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되었음.

2) 계의 왼쪽 열은 2010~2023년 사이 총 논문 수(편)이고 오른쪽 열은 총 논문 가운데 비율(%)임.

해 서로 주요하게 연결된 단어에 차이가 있었다(〈그림 3〉 참조). 이는 수력, 풍력, 태양빛은 발전원으로 이용되고 태양열은 온실의 열원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다른 단어와 연결이 많아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리용', '체계', '풍력', '태양열', '특성'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리용'의 경우 대부분의 단어들과 골고루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지열', '풍력' 등과의 연결이 다른 단어보다 다소 높게 나타

나, 이용 측면에서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지열과 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2〉 북한 국내 재생에너지 논문 제목 **워드 클라우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표 6〉 북한 국내 재생에너지 논문 제목 출현 빈도(좌)와 연결 중심성(우) 상위 20개 단어

순위	단어	출현 빈도	순위	단어	출현 빈도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순위	단어	연결 중심성
1	풍력	114	11	난방	48	1	리용	88	11	발전	32
2	수력	99	12	특성	45	2	체계	71	11	발전기	32
3	체계	93	13	전기	41	3	풍력	52	11	발전소	32
4	리용	84	14	발전기	36	4	태양열	36	11	조종	32
5	태양열	72	15	조종	35	4	특성	36	11	태양열	32
6	발전	57	16	자원	34	6	결정	34	16	수력	30
7	지열	54	17	터빈	33	6	난방	34	17	터빈	28
8	발전소	53	18	전지	30	6	전기	34	18	계통	26
9	결정	52	19	건물	28	6	지열	34	19	운영	23
10	태양열	49	19	해석	28	10	합리	33	20	영향	22
									20	전지	22

2) 논문 본문 분석 결과

(1) 상위 5개 검색어별 논문 내용 상세 분석

북한 내 재생에너지 관련 논문의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문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관련 논문 중 빈출한 상위 5개 검색어와 관련된 논문에 대해 각각 출현 빈도를 통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풍력’ 연구는 주로 일정 출력을 확보하기 위해 풍차의 여러 요소(회전, 날개)에 관심을 가지고, 또한 일정 수준의 바람속도(풍속)를 확보하기 위한 관측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수력’의 경우 저수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연구가 많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확립, 모형 계산을 하는 등의 공학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난방’과 ‘지열’을 다룬 논문의 경우 본문 내용에서 발견된 키워드가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주로 지하수를 활용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펌프, 온도 등에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난방과 지열에 대한 높은 관심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북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양열’의 경우 태양열의 열기를 이용하여 온실의 공기 온도를 일정하게 보전하는 등 보온, 난방 관련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각 검색어별로 출현 빈도와 연결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표 7>,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7〉 각 검색어별 논문 내용 출현 빈도 상위 10개 단어

풍력		수력		난방		태양열		지열	
단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 빈도	단어	출현 빈도
전기	405(1)	발전소	411(1)	온도	310(1)	온도	344(1)	온도	393(1)
리용	398(2)	계산	348(2)	리용	258(2)	온실	329(2)	리용	319(2)
바람 속도	295(3)	리용	318(3)	지열	215(3)	열기	213(3)	추공	217(3)
출력	260(4)	저수지	291(4)	지하수	190(4)	태양	213(3)	지하수	204(4)
날개	228(5)	모형	227(5)	계통	178(5)	리용	177(5)	체계	181(5)
풍차	219(6)	자원	223(6)	체계	178(5)	공기	165(6)	난방	174(6)
회전	212(7)	자료	220(7)	건물	159(7)	복사	124(7)	자원	170(7)
풍속	204(8)	운영	218(8)	열펌프	159(7)	난방	111(8)	열펌프	157(8)
결정	189(9)	타빈	211(9)	열기	143(9)	열물	110(9)	계통	122(9)
발전기	189(9)	흐름	198(10)	보장	131(10)	보장	102(10)	순환	121(10)

주: 괄호 안 숫자는 각 단어의 출현빈도 순위를 말함.

〈표 8〉 각 검색어별 논문 내용 연결 중심성 상위 10개 단어

풍력		수력		난방		태양열		지열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단어	연결 중심성
리용	182(1)	리용	189(1)	리용	137(1)	온도	152(1)	온도	157(1)
전기	140(2)	계산	167(2)	온도	132(2)	온실	146(2)	리용	143(2)
날개	137(3)	저수지	143(3)	건물	106(3)	리용	107(3)	추공	99(3)
바람속도	115(4)	발전소	127(4)	지하수	104(4)	열기	90(4)	지하수	98(4)
풍차	111(5)	모형	113(5)	계통	94(5)	공기	83(5)	체계	83(5)
발전기	107(6)	운영	109(6)	열펌프	92(6)	태양	78(6)	열펌프	83(5)
조종	102(7)	자료	104(7)	지열	87(7)	건물	69(7)	난방	77(7)
결정	98(8)	진행	101(8)	체계	81(8)	설치	69(7)	건물	76(8)
출력	96(9)	타빈	101(8)	설치	74(9)	구조	67(9)	계통	71(9)
특성	95(10)	흐름	101(8)	보장	72(10)	보장	65(10)	순환	63(10)

주: 괄호 안 숫자는 각 단어의 연결 중심성 순위를 말함.

(2) 파리협정 전후 비교 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협력이 본격화된 파리협정을 분기점으로 삼아 전 세계가 합의한 온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다 높은 주목을 받았다.²⁰⁾ 북한 또한 파리협정을 비준한 당사국(2016년)으로 재생에너지를 주목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리협정 채택 직후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논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기에 논문 본문을 대상으로 파리협정 이전(2010년-2015년)과 이후(2016년-2022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단어 출현 빈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파리협정 이전에는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풍력’, ‘지열’, ‘수력’이 주요하게 나타났지만, 파리협정 이후에는 ‘풍력’, ‘태양빛’, ‘수력’ 순으로 출현빈도가 높았다. 파리협정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지열’이 20위 내 순위에서 사라지고 ‘태양빛’이 20위권 이내로 진입하면서 ‘풍력’ 다음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상에서 파리협정 전에는 ‘풍력’과 ‘지열’이 주요 발전원으로 다른 단어들에 많이 연결되었던 데 비해, 파리협정 이후에는 ‘풍력’에 이어 ‘지열’ 대신 ‘태양빛’이 주요 발전원으로 등장하여 다른 단어들과 비교적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풍력이 주요한 재생에너지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재생에너지원으로 북한 내에서 태양빛이 각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도가 높고 산악지형이 많은 북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풍력을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선택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20) 파리협정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당사국들(States Parties)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온도 목표에 합의하였다. 즉,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C를 넘지 않기로 하였고 더 노력해서 1.5°C 이하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하였다. 윤순진, 「제8장 “기후위기사대 탄소중립정책과 기후적응정책」 『탄소중립시대의 환경정책』, 박영사, 2023.

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빛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용 확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파리협정 전후로 ‘리용’이 항상 출현 빈도와 연결 중심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치—그것도 2위인 단어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면서—

〈표 9〉 파리협정 전후 북한 내 재생에너지 논문 본문 출현 빈도(좌),
연결 중심성(우) 상위 20개 단어

출현 빈도				연결 중심성			
단어	파리협정 전	단어	파리협정 후	단어	파리협정 전	단어	파리협정 후
리용	743(1)	리용	1018(1)	리용	325(1)	리용	490(1)
풍력	504(2)	온도	603(2)	계산	227(2)	온도	250(2)
계산	488(3)	에네르기	533(3)	온도	207(3)	체계	247(3)
온도	446(4)	계산	513(4)	조건	169(4)	경우	234(4)
지열	404(5)	체계	480(5)	설치	151(5)	계산	225(5)
자원	337(6)	풍력	479(6)	결정	144(6)	진행	216(6)
전기	328(7)	자원	477(7)	풍력	143(7)	에네르기	202(7)
에네르기	326(8)	전기	453(8)	경우	141(8)	특성	201(8)
흐름	317(9)	전력	448(9)	흐름	140(9)	결정	199(9)
발전소	292(10)	생산	424(10)	보장	139(10)	조건	199(9)
수력	282(11)	발전	410(11)	지열	137(11)	전기	191(11)
결정	280(12)	태양빛	376(12)	전기	136(12)	사이	185(12)
조건	279(13)	특성	362(13)	진행	135(13)	설치	182(13)
난방	274(14)	경우	328(14)	난방	125(14)	건물	170(14)
출력	244(15)	출력	327(15)	체계	125(14)	자료	167(15)
분포	242(16)	결정	320(16)	에네르기	124(16)	출력	162(16)
모형	226(17)	수력	320(16)	상태	116(17)	발전	158(17)
체계	225(18)	진행	318(18)	모형	115(18)	풍력	157(18)
발전	222(19)	문제	316(19)	발전	114(19)	보장	155(19)
건설	221(20)	자료	301(20)	자료	114(19)	구조	152(20)
결수	221(20)						

주: 괄호 안 숫자는 각 단어의 출현빈도와 연결 중심성에서의 순위를 말함.

를 나타내어 북한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크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 (<표 9> 참조). 또한 ‘에네르기’란 단어의 경우 파리협정 채택 전에 비해 채택 후 더 많은 출현빈도와 더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준다. 이는 그만큼 북한 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시사한다. 논문 본문에서는 에너지원 가운데 풍력이 파리협정 채택 전이나 후 모두, 또한 출현빈도와 연결 중심성에서 모두, 20위 이내에 드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에너지원의 경우 태양빛은 파리협정 후 출현빈도에서 상위(12위)를 차지하지만 연결 중심성에서는 파리협정 전후 모두 20위 내에 들지 않았다. 지열의 경우 파리협정 전에는 연결 중심성 20위 안에 속하였으나 파리협정 후에는 20위 밖으로 벗어났다. 연결 중심성에 있어서는 풍력을 제외하고는 특정 에너지원이 아니라 에너지 이용 방식이나 에너지 관련 구조나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주로 등장하였다.

2. 해외 학자들과의 협력 연구 동향

1) 전반적 경향

조사된 논문 145편은 형태별로 보자면 article 137편, conference paper 4편, review 3편, short survey 1편이었다. 그 가운데서 각 논문(article)이 수록된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총 91개의 학술지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수록하는 경우는 몇 건을 제외하고 없었다. 9편의 논문이 수록된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와 5편이 수록된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RSC Advances, 4편이 수록된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가 다수의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다.²¹⁾ 이는

²¹⁾ 학술지명을 영문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학술지 본래의 표기 방식을 따른 것이다.

북한 해외 협력 연구들이 주로 수소 에너지, 화학, 전기 재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10> 참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해외 학술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2019-2023년 동안 약 연 20건 정도의 해외 학술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4> 참조). 저자 구성을 살펴보면 해외 논문 145편 중 북한학자들만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91편(63%), 북한학자 외 다른 국가 학자들도 저자로 참여하여 국가간 연구 협력이 이뤄진 논문은 54편(3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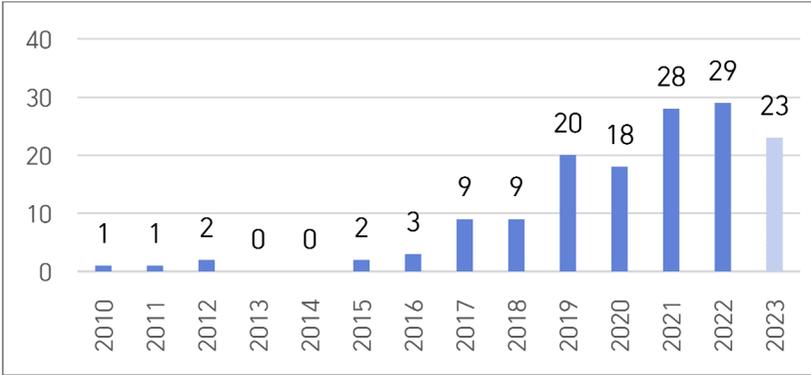
<표 10> 북한 해외 논문(article) 게재 건수별 학술지 분류

학술지명	논문 수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9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RSC Advances	5
COMMUNICATIONS IN MATHEMATICAL SCIENCES, Journal of Electronic Materials	4
ACS Applied Materials and Interfaces, ACTA MATHEMATICA SCIENTIA, ENERGY SOURCES PART A-RECOVERY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Proceedings of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Energy	3
ARCHIVE OF APPLIED MECHANICS, Bioresource Technology, CHEMICAL PHYSICS LETTERS, Electrochimica Acta,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EEE ACCES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JOURNAL OF MOLECULAR MODELING,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LETTERS, 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 NONLINEAR ANALYSIS-REAL WORLD APPLICATIONS, Physica B: Condensed Matter, Physical Review Materials, Wind Energy	2
ACS APPLIED ENERGY MATERIALS, ALCHERINGA, Animal Reproduction Science, APPLICATIONS OF MATHEMATICS, 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 AND ENERGY, APPLIED ORGANOMETALLIC CHEMISTRY,	1

AQUACULTURAL ENGINEERING, CERAMICS INTERNATIONAL, CHEMICAL PHYSICS, CHEMOSPHERE, CHIRALITY, COMPOSITE STRUCTURES, Energy and Buildings,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X, Energy Sources, Part A: Recovery,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HYDROMETALLURGY, INDIAN JOURNAL OF PHYSICS, INORGANIC CHEMISTRY, INTERNET TECHNOLOGY LETTERS, JOURNAL OF CHEMICAL INFORMATION AND MODELING,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S, JOURNAL OF EVOLUTION EQUATION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JOURNAL OF HAZARDOUS TOXIC AND RADIOACTIVE WASTE, JOURNAL OF HYDROLOGY,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JOURNAL OF MATERIALS SCIENCE, JOURNAL OF MECHANICS, JOURNAL OF MOLECULAR LIQUIDS,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MARINE ENERGY,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Scienc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B, JOURNAL OF POWER SOURCES, JOURNAL OF RADIOANALYTICAL AND NUCLEAR CHEMISTRY, JOURNAL OF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B-OPTICAL PHYSICS, JOURNAL OF WATER PROCESS ENGINEERING, LASER PHYSICS, MAGAZINE OF CIVIL ENGINEERING, Materials Advances, MATHEMATICAL METHODS IN THE APPLIED SCIENCES, MECCANICA, MECHANICS OF SOLIDS,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S A-PHYSICAL METALLURGY AND MATERIALS SCIENCE, MONATSSHEFTE FUR CHEMIE, Nonlinear Analysis: Real World Applications, OPTICAL MATERIALS, PHYSICA A-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 Physical Review B, PHYSICAL REVIEW B, PLASMONIC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G-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PROTEINS-STRUCTURE FUNCTION AND BIOINFORMATIC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Solar Energy, SOLAR ENERGY MATERIALS AND SOLAR CELLS, Solid Fuel Chemistry, STRUCTURAL CHEMISTRY, SUSTAINABLE ENVIRONMENT RESEARCH, Taiyangneng Xuebao/Acta Energae Solaris Sinica, Thermal Science, THIN-WALLED STRUCTURES

주: article 중 proceedings paper가 동시 기재되어 있는 1건은 article로 간주하였음.

〈그림 4〉 연도별 북한 해외 재생에너지 논문 수



주: 2023년 Web of Science 등록 논문은 12월 15일까지, SCOPUS 등록 논문은 12월 20일까지 등록 확인된 논문만 포함되어 온전한 1년 기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막대를 빗금 처리함; 2023년에 Web of Science에서 확인된 학술지(APPLIED CATALYSIS B-ENVIRONMENT AND ENERGY)에서 발행된 논문 1건의 경우, 2023년 12월에 수집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온라인에서는 2023년 12월 발간되었으나 인쇄물로는 2024년 5월 발간된 것으로 2023년 발간 논문으로 포함하였음.

에너지원들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hydrogen energy’(31편, 21.4%)였으며, ‘wave energy’(28편, 19.3%), ‘solar energy’(25편, 17.2%), ‘waste energy’(24편, 16.6%), ‘photovoltaic’(20편, 13.8%), ‘renewable energy’(15편, 10.3%) 순으로 관련 연구가 많았다(〈표 11〉 참조). 북한학자들만 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경우 ‘hydrogen energy’(21편), ‘solar energy’(19편), ‘wave energy’(16편) 순으로 관련 연구가 많았고, 국가 간 연구 협력이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wave energy’(12편), ‘hydrogen energy’(10편), ‘waste energy’(9편) 순으로 관련 연구가 많아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 검색어별 북한 재생에너지 관련 해외 논문 수¹⁾

검색어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²⁾	
hydrogen energy	1	0	0	0	0	0	0	2	3	6	0	8	5	5	1	31	21.4
wave energy	0	1	1	0	0	2	1	3	1	1	5	6	3	4	0	28	19.3
solar energy	0	0	0	0	0	0	1	1	3	5	3	5	7	0	0	25	17.2
waste energy	0	0	0	0	0	0	0	2	1	4	0	2	8	7	0	24	16.6
photovoltaic	0	0	0	0	0	0	1	1	2	5	4	4	2	1	0	20	13.8
renewable energy	0	0	0	0	0	0	0	1	1	3	4	2	2	2	0	15	10.3
zero energy	0	0	0	0	0	0	0	1	1	0	1	2	2	3	0	10	6.9
marine energy	0	0	1	0	0	0	0	1	1	2	0	0	1	2	0	8	5.5
waste heat	0	0	0	0	0	0	0	1	1	1	0	1	3	1	0	8	5.5
biomass energy	0	0	0	0	0	0	0	0	0	1	0	1	3	1	0	6	4.1
bio energy	0	0	0	0	0	0	0	1	0	1	1	0	0	1	0	4	2.8
methane energy	0	0	0	0	0	0	0	2	0	1	0	0	0	0	0	3	2.1
geothermal energy	0	0	0	0	0	0	0	0	2	0	0	0	0	1	0	3	2.1
geothermal heat	0	0	0	0	0	0	0	0	2	0	0	0	1	0	0	3	2.1
solar heat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2	1.4
tidal energy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2	1.4
wind energy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2	1.4
hydropower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	0.7
methane heat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0.7
총계	1	1	2	0	0	2	3	17	19	31	20	31	39	29	1	145	100

주: 1) 두 개 이상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논문의 경우 중복으로 계산되었음.
 2) 계의 왼쪽 열은 2010~2023년 사이 총 논문 수(편)이고 오른쪽 열은 총 논문 가운데 비율(%)임.

2) 논문 초록 분석 결과

논문 초록을 분석한 결과, hydrogen, calculation, model, material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해 수소와 재료에 대한 공학적 측면의 연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상 단어 간 연결 정도를 살펴본 결과 'hydrogen

5	performance	59	5	water	40
6	calculation	58	6	surface	39
7	model	56	7	solution	35
8	effect	54	8	performance	35
9	perovskite	53	8	effect	35
10	temperature	50	10	perovskite	33
11	cell	49	11	material	33
12	surface	48	12	process	31
13	stability	48	13	power	30
14	water	46	14	adsorption	30
15	condition	45	15	waste	29
16	property	44	16	calculation	29
17	process	43	17	wave	27
18	carbon	41	18	property	27
19	work	40	19	condition	27
20	efficiency	40	20	time	26
X			20	stability	26
			20	efficiency	26

3) 연구 협력 동향

(1) 연구 협력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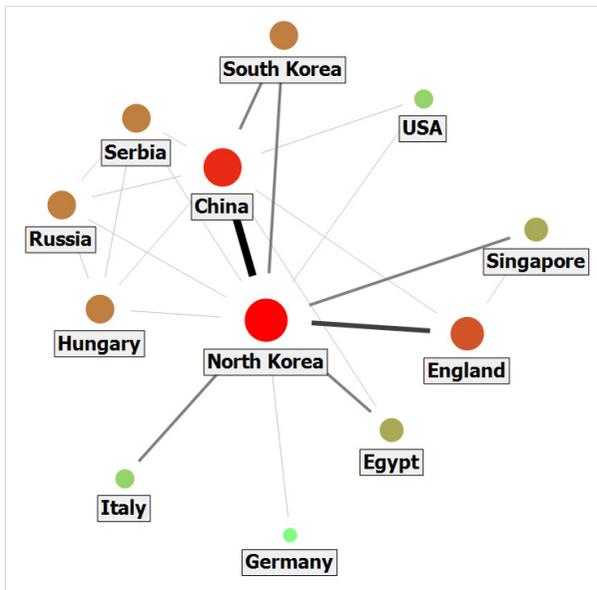
논문별로 저자 주소를 통해 확인된 국가명을 토대로 국가별 논문 수를 구하였다. 한 논문에 다양한 국적의 연구자가 있을 경우 각각의 국가와 모두 협력한 것으로 중복 계산하였고, 여러 연구자가 속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별도 가중치를 두지는 않았다. 그 결과 54편의 논문을 통해 11개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한 논문에 여러 국가 소속 연구자들이 함께 한 경우들이 있어서 54편에 등장한 국가 건수는 64회

였다. 북한과 함께 가장 많은 연구를 한 연구자들의 소속 국가는 중국이었고 게재 논문 수는 총 48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협력 연구 건수가 많은 국가는 3편의 영국이며 이집트, 이탈리아, 싱가포르, 한국이 각각 2편이었다. 한국 소속 저자가 확인된 논문 2편 중 1편은 한양대학교에 소속된 Jin G.가 참여하였으며 다른 1편의 경우 대전보건대학교

〈표 13〉 북한 해외 연구 협력 국가 목록

국가 명	논문 수	국가 명	논문 수	국가 명	논문 수	국가 명	논문 수
China	48	Italy	2	Germany	1	Serbia	1
England	3	Singapore	2	Hungary	1	USA	1
Egypt	2	South Korea	2	Russia	1	총 11개국	64건

〈그림 7〉 북한 해외 연구 참여 국가 네트워크 분석



소속의 Lee Dong-Chan, 고려대학교 Park Jino, 극지연구소의 Woo Jusun,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Kwon Yi Kyun 등 여러 한국인이 참여한 연구였다(〈표 13〉 참조). 해외 학술 활동 참여 국가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국과 북한과의 연결이 가장 높았으며, 북한-중국-한국, 북한-중국-미국, 북한-중국-이집트, 북한-세르비아-러시아-헝가리, 북한-영국-미국, 북한-영국-싱가포르 학자들과의 관계 또한 확인되었다(〈그림 7〉 참조).

(2) 연구 협력 기관

저자가 속한 기관에 따라 기관별로 협력 연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총 54편의 논문 중 중국 33개 기관, 한국 8개 기관, 이집트 2개 기관이 확인되었고, 영국,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러시아, 세르비아, 미국의 경우 1개 기관만 참여하였다. 중국 소속 기관 중 수도인 베이징에 위치한 기관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톈진 4개 기관, 장춘 3개 기관, 상하이 3개 기관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 논문 수로는 선양에 위치한 동북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소속 저자들이 10편의 논문에 참여하여 단일 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공동연구를 진행하였고,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이 6편, 난카이대학교(Nankai University)가 5편 순이었다(〈표 14〉 참조).

〈표 14〉 논문 수별 북한 해외 연구 참여 해외 저자 소속 기관

논문 수	기관	도시	국가
10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6	Chinese Academy of Sciences	Shenzhen	
5	Nankai University	Tianjin	
4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Harbin	

3	Beijing University of Chemical Technology	Beijing	England
	Chinese Academy of Sciences(B)	Beijing	
	Wuhan University	Wuhan	
	Imperial College London	London	
2	Hebei University	Baoding	China
	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Beijing	
	Jilin University	Changchun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angzhou	
	Zhejiang University	Hangzhou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Shanghai	
	Shanghai University	Shanghai	
	Tianjin University	Tianjin	
	Suez Canal University	Ismailia	Egypt
	International Centre for Theoretical Physics	Trieste	Ital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	Singapore	
1	Beijing Forestry University	Beijing	China
	COFCO NHRI	Beijing	
	Tsinghua University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Beiji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eijing	Beijing	
	changchu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angchun	
	Northeast Normal University	Changchun	
	Central South University	Changsha	
	JiangX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Ganzhou	
	Harbin Engineering University	Harbi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HKU)	Hong Kong	
	Nanjing Normal University	Nanjing	
	Tongji University	Shanghai	
	Suzhou Furong Environm Engn Co Ltd	Suzhou	
	HEBEI UNIVERSITY OF TECHNOLOGY	Tianjin	
Tianjin Ecoenvironm Comprehens Support Ctr	Tianjin		

Northwestern Polytechnical University	Xi'an	South Korea
Jiangsu University	Zhenjiang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Gwacheon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ch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University	Seoul	
Daejeon Health Sciences College	Taej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Taejon	
Agricultural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AENRI)	Giza	Egypt
Freie Universität Berlin	Berlin	Germany
Eötvös Loránd University	Budapest	Hungary
Southern Federal University	Rostov Na Donu	Russia
University of Belgrade	Belgrade	Serbia
Michigan Technological University	Houghton	USA

북한 기관의 경우 총 7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함흥의 2개 기관을 제외하고 모두 평양에 소속된 기관에서 대부분의 협력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 기관과 협력 연구가 제일 활발한 곳은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총 24편이었고, 국가과학원(14편), 김책공대(13편), 과학대학(11편)이 그 뒤를 이었다(〈표 15〉 참조). 나머지 3개 대학인 함흥화학공업대학(Hamhung University of Chemical Industry), 함흥화학공학대학(Hamhung University of Chemical Engineering), 평양기계공학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Mechanical Engineering)은 1편씩 게재하는 데 그쳤다.²²⁾

²²⁾ 'Hamhung Univertisy of Chemical Industry'가 함흥화학공업대학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Hamhung University of Chelical Engineering'의 경우 한국어명이 확인되지

〈표 15〉 북한 해외 연구 참여 북한 저자 소속 기관 및 논문 수

논문 수	기관	도시
24	Kim Il Sung University	Pyongyang
14	State Academy of Sciences	
13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11	University of Science	
1	Pyongyang University of Mechanical Engineering	Hamhung
	Hamhung University of Chemical Engineering	
	Hamhung University of Chemical Industry	

V. 결론

북한 내 재생에너지 연구는 연구 대상 기간 첫 해인 2010년에 20편이었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파리협정 채택과 발효 직후인 2016-2018년에 가장 많은 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을 통해 북한학자들의 국제적인 연구 활동 성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17년부터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 수가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9년 이후부터는 한 해 평균 20편 이상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연구활동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로동신문』의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연평균 보도도 파리협정 이전보다 파리협정 이후 63% 증가하였다. 이러한 보도로 미루어볼 때, 북한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가

않아 다른 대학인 것으로 추측되어 함흥화학공학대학으로 번역함. 최현규·노경란, 『북한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2007-20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정책을 통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²³⁾

북한 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주요 키워드별로 살펴본 결과, 전기에 대한 연구와 함께 난방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풍력 발전에 대하여서는 주로 풍력발전기 부품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수력 발전의 경우는 저수지 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난방과 지열의 경우는 지하수 이용과 온도 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고 태양열 관련해서는 온실과 연계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렇듯 북한 내에서는 풍력, 태양광(태양빛), 태양열, 지열 등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고 있는 반면 그 외의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파리협정 채택 이후에는 풍력과 함께 태양빛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태양에너지 연구가 발견되었으나, 수소나 파력, 폐기물 등 다른 에너지 연구와 함께 소재 연구, 전력 시스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본문에서 기술했듯이 북한 학자들만 참여한 국제학술지 논문들에서는 수소, 태양에너지(solar energy), 파력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북한 내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와 해외 학술 연구의 연구 내용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북한 내부에 비해 해외 학술지의 질적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소, 태양에너지, 파력과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북한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활발히 해외 학술활동을 하고 있

²³⁾ 산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이 제공하는 '북한 산업·기업 DB'에서 에너지 분야 보도내용을 추출 및 가공하여 저자가 도출한 수치임.

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연구 관심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 폐기물이 별로 다루이지 않는 데 비해 해외 협력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다룬다는 사실은 국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해외 협력 연구를 통해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수소의 경우 국내 연구에서는 연구 성과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국제 학술지에서는 북한 학자들만이 아니라 해외 학자들과의 협력연구에서도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 생산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드러낸다.

해외 학술 활동의 경우 북한 학자들로 구성되어 논문을 발표한 수가 많아(전체 국제 학술지 논문의 63%), 자체적으로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수행한 경우, 중국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한 저자가 공동 저자가 있는 중국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를 진행한 사례가 많아 북한의 해외 협력 연구에 중국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는 역으로 북한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에 연구 인력을 파견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해외 협력연구의 경우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보다는 수소나, 소재, 전력 시스템 등 에너지 이용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추후 한국의 연구자들이 북한 학자들과 연구 협력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포괄적이거나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재생에너지 연구 협력이 추진된다면 이를 통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 특히 에너지 전환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북한 내부 발표 논문과 해외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연구 분야와 대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도별 논문 수와 연구 대상에 대한 빈도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 재생에너지 연구 관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북한에서는 당국의 정책적 관심사가 연구 대상과 내용에 반영되고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사회인만큼 북한 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관심과 관심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북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재생에너지 관련 남북 협력 연구를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서 북한 당국이나 연구자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이 연구의 결과는 미래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연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발표 논문에 대한 양적 연구로, 북한 연구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관심사나 관심의 변화, 그러한 변화의 이유와 계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이사회의 폐쇄성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북한 연구자들을 직접 만나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자들과 협력 연구를 진행한 국내외 연구자들을 만나서 심층면접이나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면 향후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 연구 수행에 보다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윤순진, 「제8장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정책과 기후적응정책」 『탄소중립시대의 환경정책』, 박영사, 2023.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산업연구원, 2018.
- 최현규·노경란, 『북한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 연구: 2007-201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 DPRK,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
-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2021.
- 김성일, 「현시기 재생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2년 3호, 2012, 23~24쪽.
- 김유일, 「해외서지정보를 활용한 북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트렌드 변화분석(1986~201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4호, 2021, 137~152쪽.
- 김윤성·윤성권·이상훈,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환경법과 정책』 제21권, 2018, 131~165쪽.
- 노경란·김은정·최현규,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 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4호, 2016, 205~227쪽.
- 박형중, 「수령독재하 북한의 경제구조와 경제개혁,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8월호, 2019, 3~29쪽.
- 배성인, 「북한의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남북 협력 가능성 모색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1호, 2010, 69~90쪽.
- 신정수, 「북한 가구부문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KDI북한경제리뷰』 2023년 4월호, 2023, 69~78쪽.
- 윤순진·안새롬·홍종호·이찬희,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기후변화 담론 변화」 『아태연구』 제26권 3호, 2019, 65~101쪽.
- 윤순진·임지원·안정권·임효숙·조영래,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환경논총』 제49권, 2010, 63~93쪽.

- 윤정원,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헬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아시아리뷰』 제10권 2호, 2020, 291~319쪽.
- 윤준희·서은경·박영산·김학성, 「중관 바람 관측 자료를 이용한 북한 지역의 풍력 자원 분석」 『한국지구과학회지』 제31권 3호, 2010, 225~233쪽.
- 이정태·김현구·윤창열·강용혁, 「거시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 풍력자원 비교평가」 『신·재생에너지』 제15권 제2호, 2019, 16~23쪽.
- 정지순·최준혁, 「북한의 태양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현황」 『북한포커스』,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2021, 3~5쪽.
- 한철호, 「경제의 저탄소화는 새로운 경제발전방향」 『경제연구』 2011년 4호, 2011, 53~54쪽.
- 한철호, 「경제의 저탄소화를 위한 자원의 다양화」 『경제연구』 2012년 2호, 2012, 26~27쪽.
- 허준영·유진아·우창빈, 「LRRD 접근을 통한 남북 신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7권 4호, 2018, 95~130쪽.

José Luis Aleixandre-Tudó·Lourdes Castelló-Cogollos·José Luis Aleixandre·Rafael Alexandre-Benavent, "Renewable energies: Worldwide trends in research, funding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Renewable Energy*, vol. 139, 2019, pp. 268~278.

Rodrigo A. Estévez·Valeria Espinoza·Roberto D. Ponce Oliva·Felipe Vásquez-Lavín·Stefan Gelcich,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for Renewable Energies: Research Trends, Gaps and the Challenge of Improving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vol. 13, no. 6, 2021, pp. 1~13.

『로동신문』, 「자연에너르기 적극 개발리용」, 2019년 2월 25일.

『로동신문』,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리용」, 2016년 6월 9일.

『로동신문』, 「주목을 끄는 재생에너르기개발리용」, 2015년 11월 29일.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너르기리용률을 높여 새 모습을 펼친 류원신발공장」, 2017년 11월 25일.

『조선중앙통신』, 「자연에너르기의 효과적리용」, 2019년 8월 19일.

『DailyNK』, 「나선시, 태양광발전소 건설 첫삽 뜨기도 전에 주민 돈 거둬들여」, 2021년 4월 29일, <<https://www.dailynk.com/20210429/>>.

『DailyNK』, 「태양광 발전 설치증가, 신혼부부 혼수품도 바뀌었다」, 2019년 11월 20일,
<<https://www.dailynk.com/%ED%83%9C%EC%96%91%EA%B4%91-%EB%B0%9C%EC%A0%84-%EB%B3%B4%EA%B8%89%EC%9D%B4-%EC%8B%A0%ED%98%BC%EB%B6%80%EB%B6%80-%ED%98%BC%EC%88%98%ED%92%88%EB%8F%84-%EB%B0%94%EA%BF%94%EB%86%A8%EB%8B%A4/>>.

Trends in research on renewable energy with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during Kim Jong Un era

Yun, Su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Jeong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Eun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word cloud and network analyses on papers published in both North Korean domestic journals and international journals to identify trends in renewable energy research within North Korea and its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s. The study covers the period from 2010, just before the rise of the Kim Jong Un regime, to 2023. For domestic papers, 476 related to renewable energy were selected from the research listings in the North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Network, and 392 of these papers, available at the North Korean Data Cent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ere processed and analyzed. Additionally, 145 papers published internationally in Scopus and Web of Science were examined. The findings show that renewable energy research within North Korea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the 2010s, peaking between 2016 and 2018, with a focus on wind turbine components and reservoir power plant operations. There has also been significant research on solar and geothermal energy, particularl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Collaborative research involving North Korean researchers and international scholars has covered various topics

such as hydrogen, materials, and power systems, with a strong emphasis on collaboration with China. These trends indicate a persistent domestic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in North Korea, particularly in the use of wind and solar pow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have primarily focused on hydrogen, power systems, and energy-related materials. The findings offer insights into the evolving research trends in renewable energy within North Korea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research.

Keywords: North Korea, Renewable Energy, Research Trend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ord Cloud, Network Analysis

윤순진 (Yun, Sun-Ji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도시행정·공공정책 석사 학위와 환경·에너지정책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관심 영역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으로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지, 또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학과 환경사회학, 환경교육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박정현 (Park, Jeonghyeon)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사회학 이중전공) 졸업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2021)를 취득하고 이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 커뮤니케이션, 특히 기후위기 관련 커뮤니케이션이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텍스트 분석 방법을 주로 활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김은진 (Kim, Eunjin)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심리학 복수전공, 정치외교학 부전공) 졸업 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2017)를 취득하고 이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북한 개발협력, 북한환경협력, 재생에너지협력 등이며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논문

국제 수학학술지에 수록된 북한 피인용 논문 실적 분석*

김수연 (서울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논문 산출실적 분석을 통해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와 질적으로 미흡한 분야 파악, 우수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 내역 확인, 최우수 연구인력 파악 등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국제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MathSciNet에서 북한 연구자가 게재한 피인용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김정은 시기 들어 피인용 논문 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는 응용 및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수학 분야의 최우수 과학자는 국가과학원에 밀집되어 있으며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이 해외기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피인용 논문 생산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북한 과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여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주요 상대 국가는 중국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북한의 과학기술, 북한의 피인용 수학논문, 북한의 기초과학정책, 북한 국가과학원, 북한 수학 연구 국제협력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6.2.202409.211>

* 이 논문에 대한 세 분 심사자들의 소중한 논평에 감사를 드린다.

I. 서론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시 및 과학기술 우선 담론이 수시로 거론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당 대회에서 ‘과학기술강국’ 구상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로 경제, 국방 등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국가 건설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을 과학기술로 규정하고 과학기술 성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당국의 의지이다.¹⁾

일반적으로 외부사회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화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이에 “인터넷 접속도 자유롭지 않은 북한이 실제로 우주 발사체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정도로 과학기술 보유했을까?” 등 북한 과학기술 수준의 현주소와 미래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²⁾ 통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 분석 등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일을 위한 바탕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거의 모든 것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과학기술의 기초 학문인 수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
- 1) 지대룡,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 『경제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 제1호, 15~16쪽; 『수학』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2016) 제1호, 2쪽.
 - 2) 나승혁, 『북한 과학기술의 수준 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도출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6), 10~18쪽; 노경란 외,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서울: 한국비블리아 학회, 2016) 제27권 4호, 205쪽.

오늘날 북한은 수학 등 기초과학은 과학기술강국 건설의 ‘주추’라고 하면서 기초과학 연구 수준을 높여 이것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³⁾ 이에 북한 국내학술지나 국제학술지에 발표되는 수학 논문 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다.⁴⁾

그럼에도 그동안 북한 수학의 질적 수준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수학을 포함한 북한의 과학기술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로 1985~2005년 동안에 북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기술 분야별 논문을 분석한 최현규(2006), 2005~2015년에 북한 연구자가 게재한 국제학술지 논문(SCI)을 분석한 노경란 외(2016), 과학기술 전반의 수준·추진과제들을 살펴보고 남북 통일을 대비한 북한 과학기술 전략적 활용 방안을 도출한 나승혁(2016), 북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영역과 중단된 연구영역, 주요 연구 영역 등을 조사한 노경란·최현규(2020) 등이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국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거나 Web of Science에 발표된 논문 분석으로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그쳐 북한 수학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

3) 김정은, 『과학자들은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2014), 11~15쪽;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4) 북한 과학자가 북한 국내 전문학술지에 발표한 연평균 수학 논문 수는 김정일 시기(2001~2011년)에 123편, 김정은 시기(2012~2019년)에 180편이다.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수학 논문 수는 2004~2011년에 16편, 2012~2020년에 202편이다. 김수연,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2022), 130~138쪽.

5) 최현규, 「북한학술문헌으로 본 북한과학기술동향 분석」 『지식정보인프라』 제22권 (2006), 62~69쪽; 노경란 외,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205쪽; 나승혁, 『북한 과학기술의 수준 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도출 연구』, 10~18쪽; 노경란·최현규, 「저자 동시인용 분석을 이용한 북한 과학기술의 지적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4호 (2020), 169~190쪽.

수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는데, 2001~2010년 기간에 북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수학 논문들을 대상으로 수학 연구 분야 등 북한 수학연구 상황을 조사한 김도한·신정선(2016), 2012~2020년 기간에 북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수학 논문들을 대상으로 북한 수학 연구 방향 등을 분석하고 남북수학협력 방안을 도출한 김수연(2022)이다.⁶⁾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북한 국내학술지나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수학 논문들을 통해 수학연구 방향과 중점 연구 분야 등 북한 수학 연구 동향을 분석 하는데 그치고 있어 북한 수학의 질적 수준, 우수 연구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는 쉽지 않다. 한편 피인용 논문은 해당 논문의 저자 의도가 아닌 인용하는 논문 저자의 필요에 의해 선택되기에 특정한 논문이 피인용되는 경우에 그 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인용자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⁷⁾ 이에 인용이 많은 논문일수록 영향력이 크고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논문이라는 가정하에 논문의 피인용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 수준을 확인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한다.⁸⁾ 예로 논문의 피인용 지수(citation index)는 논문, 연구자 등의 질적

6) 김도한 외, 『북한의 수학연구 현황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수연,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 123~166쪽.

7) 이수상,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9권 4호 (2018), 56쪽; 신은자, 「한국 재료공학 논문의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1호 (2013), 133쪽.

8) 최용진 외, 「우리나라 SCI급 논문의 저자유형별 피인용 격차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7), 46~47쪽;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연구재단, 2021); 박현우 외, 「주요국의 학문분야별 과학연구의 영향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3호 (2010), 392~403쪽.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⁹⁾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 논문 산출실적 분석을 통해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와 질적으로 미흡한 분야 파악, 우수 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 내역 확인, 최우수 연구인력 파악 등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는 국제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MathSciNet에서 2004년 1월 1일~2023년 12월 26일 기간 동안에 북한 연구자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피인용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미국수학회 AMS(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서 발간하는 MathSciNet은 650여 개 출판사의 저널 1,900여 종에 실린 230만 개 이상의 논문 아티클 링크와 360만 개 이상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125,000개 이상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국제수학학술지에서 통용되는 분류체계 “MSC 2020”¹¹⁾에 의해 분류·조사하였다. 그리고 피인용 논문의 공저자 관계를 이용하여 우수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북한의 해외공동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내에서 각 연구기관의 위치와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 Centrality), 사이중심(Betweenness

-
- 9) 유재언, 「가족·가정 논문의 피인용 증가를 위한 대안 모색, 논문의 주제 및 게재학술지의 인용관계망에 따른 피인용횟수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8권 1호 (2016), 2쪽.
- 10) 미국수학학회는 1888년 설립된 수학전문학회로서, 미국 및 전 세계적으로 약 30,000명의 개인회원과 약 580개의 기관회원을 보유하고 MathSciNet 전문서비스,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글로벌 수학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미국수학회』 (2023), <<https://www.ams.org/home/page>>.
- 11) 미국수학회 등에서 통용되는 ‘2020년판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의 줄임 표기법이다. MSC 2020의 대분류 분야는 총 63개이며 필자는 대분류만 적용하였다.

Centrality)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분석을 위해 분석 툴 Gephi 0.10.1¹²⁾을 사용했다.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이에 연결정도를 높게 가지는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이에 따른 영향력이 높다.¹³⁾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이에 근접중심성을 높게 가지는 기관일수록 네트워크에서 정보 접근이 더 용이하다.¹⁴⁾ 사이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리 역할 수행 정도를 측정하며 이에 사이중심성이 클수록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통제력도 더 커진다.¹⁵⁾

이 연구는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논문 산출 실적 분석을 통해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와 질적으로 미흡한 분야, 우수 논문 생산을 위한 해외공동연구, 최우수 연구인력 등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기초과학정책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네트워크분석 소프트웨어 Gephi는 2012년 GSC(Google Summer of Code)에 선정되었으며 마지막 버전인 Gephi 0.10.1은 2023년에 출시되었다. Gephi는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Gephi>>.

13) 전희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계학회 논문집과 응용통계연구 공저자 네트워크 비교」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제26권 2호 (2015), 335~346쪽.

14) 위의 논문, 335~346쪽.

15) 이민희 외, 「공저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응용통계분석」 『응용통계연구』 24권 6호 (2011), 1261~1262쪽.

II. 북한 국제 수학 피인용논문의 일반현황 분석

1. 김정은 정권 시기 피인용 논문 수 증가 실태와 원인 분석

북한에서 국제수학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이때부터 2023년 기준 모두 38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중 국제수학학술지에 1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은 49%인 191편이다.¹⁶⁾ 이 가운데 김정일 정권 시기(2004~2011년)에 11건, 김정은 정권 시기(2012~2023년)에 180건이 피인용되었다. 거의 대부분 피인용 논문들이 김정은 시대에 발표된 셈이다.

〈표 2-1〉 김정일 정권 시기 국제학술지에 피인용된 논문수 및 점유율 (단위: 건)

발행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논문수	1	2	0	4	3	2	3	1	16
피인용 논문수	0	2	0	4	1	1	2	1	11
점유율(%)	0	100	0	100	33	50	67	100	69

¹⁶⁾ 한국이 11년 동안(2009~2019) 발표한 SCI급 피인용 상위 1% 논문 중 수학 분야 논문 수는 115편이며 이들의 평균 피인용 수는 628이다. 또한 이 기간 한국이 발표한 SCI급 피인용 논문 수는 12,160편이다.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64~68쪽; 그러나 MathSciNet에서 북한 연구자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는 3편에 불과하며 이들의 평균 피인용 수는 20이다. 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 수학 분야의 우수논문 발간이 한국 수학 분야에 비해 31배(피인용 상위 1%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 기준) 이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2019년 기간 한국의 연평균 SCI급 피인용 수학 논문 수가 1105편인데 비해 2012~2023년 기간 북한의 연평균 피인용 수학 논문 수가 15편이어서 남북 대비 수학 논문의 질적 수준(연평균 피인용 논문 수 기준)이 70배 이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를 포함해 논문에서 나오는 %는 모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표 2-2〉 김정은 정권 시기 국제학술지에 피인용된 논문 수 및 점유율(단위: 건)

발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논문수	7	6	16	15	16	24	19	42	57	56	51	62	371
피인용 논문수	3	5	10	11	11	19	12	25	37	24	14	9	180
점유율(%)	43	83	63	73	69	79	63	60	65	43	27	15	49

일반적으로 게재 후 3년 이내 논문은 시간 경과에 따라 피인용 논문 선정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¹⁷⁾ 이에 2021~2023년을 제외하고 2004~2020년 기간 국제학술지에 피인용된 북한 과학자의 수학 논문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2~2020년 기간에 국제학술지에 피인용된 논문의 연평균증가율(CAGR)은 37%이다.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3배로 대폭 증가했고, 2017~2020년 기간 피인용 논문 건수는 2004년부터 20년간 피인용 논문 건수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김정은 시기 들어 피인용 논문 수의 증가는 우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부족한 자원, 심화하는 재정난 가운데 과학기술을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과학기술로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관련된다.¹⁸⁾ 또 김정은 시기 들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의 증가와도 관련된다. 북한에서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는 김정은 시기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시기 북한 연구자가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17)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30쪽.

18) 『로동신문』 2020년 2월 21일; 「북,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인재육성은 공화국 위력 과시 위한 정치적 문제」 『통일뉴스』 (온라인), 2024년 2월 5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86>>.

논문 게재 수의 연평균증가율은 22%이다. 특히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에 발표한 논문 수는 2004년부터 발표한 전체 논문 건수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2012~2020년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피인용논문 수가 2004~2011년 피인용논문 수 대비 16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2011년 피인용논문 점유율(69%)이 2012~2020년 피인용논문 점유율(49%)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논문이 게재된 지 오래수록 피인용 되거나 피인용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¹⁹⁾과 관련된다. 또한 2004~2011년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가 적은 것이 주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수학논문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하고²⁰⁾ 전반적으로 논문 수가 많을수록 피인용 횟수도 높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²¹⁾와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야별 분석

1) 피인용논문 분야별 분포

북한이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 가운데서 피인용 논문들을 MSC

19) 유재언, 「가족·가정 논문의 피인용 증가를 위한 대안 모색, 논문의 주제 및 게재학술지의 인용관계망에 따른 피인용횟수 분석을 중심으로」, 10쪽.

20) 2023년에 피인용 논문 자료를 추출하였으므로 2023년에 게재한 논문들이 피인용 횟수가 적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게재 후 3년 이내 논문은 시간 경과에 따라 피인용 논문 선정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2021~2023년 피인용 횟수의 변화를 지켜볼 것이다.

21) 재료공학, 고고학 등 분야의 연구논문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논문 수가 많으면 피인용 횟수도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신은자, 『한국 재료공학 논문의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144쪽; Hutson, S. R, "Self-citation in archaeology: Age, gender, prestige, and the self"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13, no. 1 (Fall 2006), pp. 1~18.

2020 분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40개 분야에서 게재된 387편의 논문 중 28개 분야에서 191편의 논문들이 701회 피인용 되었다. 이는 MSC 2020 분류의 44%에 해당하는 분야들에서만 피인용된 셈이다. 북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1.8로 나타났다.

2015~2019년에 북한 논문은 313회 피인용 되었고 이에 이 기간 북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횟수는 2.6이다. 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굳이 수치로 비교해 본다면 북한 수학의 연구수준(평균피인용 수 기준)은 같은 기간 논문 1건당 세계평균 피인용수(6.3) 대비 41%, 한국평균 피인용수(6.9) 대비 37.7% 수준이다. 분야별 피인용 논문 수 및 피인용 횟수는 <그림 2-1>과 같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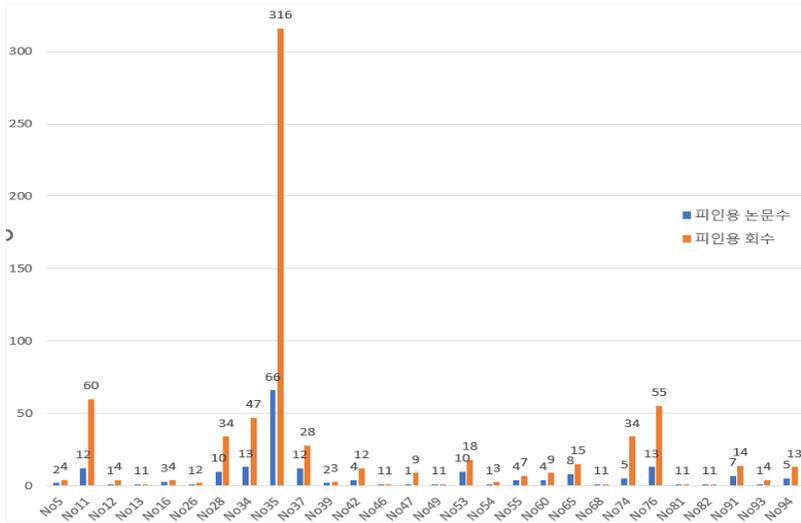
북한 논문의 피인용 횟수 실적은 분야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35(편미분방정식) 분야가 피인용 횟수 316으로 전체 피인용 횟수의 45%를 차지해 피인용 횟수 실적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11(수론) 분야가 피인용 횟수 60으로 전체 피인용 횟수의 9%를 차지해 2위를 기록한 데 비하면 많은 격차를 보인 것으로 된다. 다음 76(유체역학) 3위, 34(상미분방정식) 4위, 28(측도와 적분)과 74(가변체 역학) 5위 등이 뒤를 잇고 있다.

2) 피인용 상위 30% 논문 분야별 분포 분석

일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상위 1%,

²²⁾ 피인용된 논문이 없는 분야는 표에 표기하지 않았다. 논문을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피인용 되지 못한 분야는 3(수리논리학과 기초론), 15(선형과 다중선형대수), 41(근사와 전개), 57(다양체와 셀 복체), 62(통계학), 70(입자역학과 계), 78(광학, 전자기학), 80(고전열역학, 열전달), 83(상대성과 중력이론) 86(지구물리학), 90(OR과 수리계획), 92(생물학과 타 자연과학) 분야이다.

〈그림 2-1〉 분야별 피인용 논문 수 및 피인용 횟수



10% 등의 고평인용 논문을 활용한다.²³⁾ 과학기술연구센터(CWTS,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소속)는 WoS DB로 상위 1%, 10%, 50% 등의 논문 피인용 비율을 활용해 평가한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을 발표한다.²⁴⁾

본 연구에서는 우수 논문의 분야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인용 상위 30% 논문 62편을 수집하였다.²⁵⁾

23) 한국연구재단에서는 Highly Cited Paper 즉 CA(Clarivate Analytics)가 제작하는 ESI(Essential Science Indicators) DB에서 제공하는 지표로 최근 10년 내외에 발표된 SCI 논문 중 동일 게재연도 및 분야별 피인용 수를 기준으로 상위 1%에 속하는 논문 중 한국 논문을 세계 상위 1% 논문과 비교하여 분석하여 한국의 연구 수준과 역량을 진단하였다.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21쪽.

24) 이수상,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54쪽.

25) 일반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피인용 상위 1% 논문 등을 분석하지만, 북한의 경우 MathSciNet에서 피인용 상위 1% 북한 논문 수는 3편

〈표 2-3〉 분야별 피인용 전체 상위 30% 논문 점유율(단위: 편, %)

분야	11	12	28	34	35	37	42	47	53	60	65	74	76	93	94	
30%	논문수	5	1	4	5	29	3	2	1	1	1	1	1	6	1	1
	점유율	8.1	1.6	6.5	8.1	46.8	4.8	3.2	1.6	1.6	1.6	1.6	1.6	9.7	1.6	1.6
전체	논문수	12	1	10	13	66	12	4	1	10	4	8	5	13	1	5
	점유율	6.3	0.5	5.2	6.8	34.5	6.3	2.1	0.5	5.2	2.1	4.2	2.6	6.8	0.5	2.6

분야별 피인용 상위 30% 논문 실적은 35(편미분방정식), 76(유체역학), 34(상미분방정식), 11(수론), 28(측도와 적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5(편미분방정식)와 76(유체역학) 분야의 점유율이 각각 46.8%, 9.7%로 순위 1, 2를 기록해 점유율에서 5배 정도의 많은 격차를 보였고, 이에 피인용 상위 30% 논문들이 전 분야에 걸쳐 균형적인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수론), 12(수체론과 다항식), 28(측도와 적분), 34(상미분방정식), 35(편미분방정식), 42(유클리드 공간 위의 조화해석), 47(작용소론), 76(유체역학), 93(시스템이론, 제어)의 경우 분야 내 전체 논문 점유율보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 점유율이 더 높아, 양 대비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동력학계와 에르고딕 이론), 53(미분기하학), 60(확률론과 확률과정), 65(수치해석), 94(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분야 등에서 양 대비 질적으로 미흡함을 보였다. 이에 북한 수학 내부의 상대적인 강점 분야는 35(편미분방정식), 76(유체역학), 34(상미분방정식), 11(수론), 28(측도와 적분)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피인용 논문 분포를 보면 응용 또는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인 94(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76(유체역학), 34(상미분방정식), 60(확률

에 불과하여 피인용 상위 1% 논문만으로 여러 분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은 피인용수 4회 이상인 논문들이다.

론과 확률과정), 35(편미분방정식), 65(수치해석), 74(가변체 역학), 91(게임이론, 경제학, 사회 및 행동과학) 등이 121편으로 63.4%에 달한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의 80% 이상도 연구 분야가 응용 및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순수수학의 57(다양체와 셀 복체), 13(가환대수), 22(위상군, 리군), 14(대수기하학), 20(군론과 일반화), 15(선형과 다중선형대수: 행렬이론), 18(카테고리 이론, 호몰로지 대수), 17(비결합환과 대수) 등 주요 분야는 피인용 논문 수가 한편 또는 한편도 없다. 이를 통해 북한 수학의 우수연구가 응용 또는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수학연구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²⁶⁾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가 응용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북한의 기초과학정책과 관련된다. 북한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 수학의 지대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을 주체성 있게 발전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²⁷⁾ 이는 수학 등의 기초과학 연구가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

²⁶⁾ 2001~2009년에 MathSciNet에 발표된 전 세계 수학 논문은 649,884편 중에서 응용 또는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인 게임이론, 상미분방정식, 경제학, 사회 및 행동과학, 편미분방정식, 확률론과 확률과정, 수치해석, 가변체 역학, 유체역학, 정보와 통신, 회로이론의 논문수는 178,946편으로 점유율은 27.5%이다. 또한 순수수학 분야인 가환대수, 다양체와 셀 복체, 선형과 다중선형대수 행렬이론, 비결합환과 대수, 카테고리 이론, 호몰로지 대수, 군론과 일반화, 위상군, 리군, 대수기하학의 논문은 48124편으로 7.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김도한 외, 『북한의 수학연구 현황 분석』, 49~51쪽.

²⁷⁾ 북한은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을 주체성 있게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기초과학부분의 과학연구 목적은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도움을 주는 것” 등으로 밝히고 있다.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1985. 8. 3)」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245-246쪽; 『수학』, 1998년 제3호, 3쪽; 『광명백과사전 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16쪽; 『로동신문』 1999년 1월 12일.

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²⁸⁾ 실제로 북한 수학학술지『수학』의 권두언들에서는 수학자들이 기초과학의 발전뿐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발전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타나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우선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다.²⁹⁾ 또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연구가 경제발전에서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라는 북한당국의 지시 관철을 위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 부문 교수·연구원들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연구성과들이 노동신문과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등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³⁰⁾ 결국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연구에서 주체성의 강화는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북한 기초과학의 본질을 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³¹⁾

28) 북한은 수학부문 연구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전력문제 해결 등 실용적이고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2019년 제1호, 4쪽.

29) 『수학』, 2017년 제1호, 3쪽; 『수학』, 2016년 제1호, 2쪽.

30) 「국가과학원, 지능화된 화재경보체계 개발 등」 『통일뉴스』(온라인), 2020년 3월 19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610>>;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2018년 제1호, 3쪽.

31)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과학에서 주체 확립”을 강조했는바, 이는 과학기술을 주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자체의 기술·설비·자원으로 북한의 사회주의건설에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성과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김근배, 「북한과학기술의 역사적 전개」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서울: 경인문화사, 2006), 186~388쪽; 박찬석, 『과학기술발전은 주체확립의 중요한 담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3~10쪽; 김동규, 김형찬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 영인본)』(서울: 교육과학사, 2000), 627쪽;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3~6쪽; 김정은, 『과학자들은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9~10쪽; 북한은 수학 등 기초과학 부문의 연구원들이 과학연구에서 주체를 세움으로써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학』, 2012년 제1호, 3쪽; 『수학』, 2014년 제1

3) 피인용 상위 20%, 10%, 3% 논문 분야별 점유율 추이 분석

논문의 고 피인용 수준이 증가할수록 35(편미분방정식), 11(수론), 74(가변체 역학) 분야의 피인용 논문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표 2-4〉 분야별 피인용 상위 30%·20%·10%·3% 논문 점유율(단위: %)

분야	11	12	28	34	35	37	42	47	53	60	65	74	76	93	94
상위 30%	8.1	1.6	6.5	8.1	46.8	4.8	3.2	1.6	1.6	1.6	1.6	1.6	9.7	1.6	1.6
상위 20%	9.1	0	6.8	9.1	52.2	0	0	2.3	2.3	2.3	2.3	2.3	9	0	2.3
상위 10%	14.2	0	4.8	4.8	57.1	0	0	4.8	0	0	0	4.8	9.5	0	0
상위 3%	16.65	0	0	0	66.7	0	0	0	0	0	0	16.65	0	0	0

특히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35(편미분방정식) 분야의 점유율이 가장 큰 폭 상승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12(수체론과 다항식), 28(측도와 적분), 34(상미분방정식), 37(동력학계와 에르고딕 이론), 42(유클리드 공간위의 조화해석), 47(작용소론), 53(미분기하학), 60(확률론과 확률과정), 65(수치해석), 76(유체역학), 93(시스템이론, 제어), 94(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분야의 논문 점유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의 가장 우수한 논문들이 35(편미분방정식) 분야에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11(수론)과 74(가변체 역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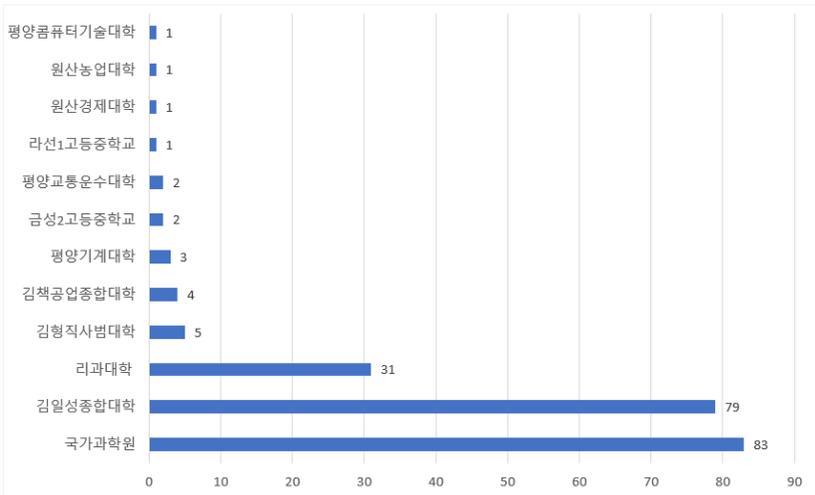
호, 3쪽; 『수학』, 2016년 제1호, 3쪽; 『수학』, 2018년 제1호, 3쪽; 『수학』, 2019년 제1호, 2쪽.

3. 기관별 분석

1) 기관별 피인용논문 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북한 기관은 22개이며 그중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12개이다. 논문 게재 기관 중 절반가량(55%)만이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셈이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음에도 한편도 피인용 되지 못한 기관은 평양교통운수대학, 평양건축대학, 사리원지질대학, 남포의학대학, 청진공업대학, 청진2사범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오중흡청진1사범대학이다.

〈그림 2-2〉 기관별 피인용 논문 발표 건수



기관별 피인용 논문 발표 건수를 보면 국가과학원이 전체의 38.9%로 가장 많은 피인용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37%), 리과대학

(14.6%)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피인용 논문의 76.1%가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산된 셈이다.

2) 기관별 피인용 상위 30% 논문 수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발표한 기관은 7개이다. 피인용 논문 발표기관 중 절반가량(58%)만이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된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 최다 발표기관은 국가과학원이다. 국가과학원이 53.8%(35편) 점유율로 가장 많은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발표하였고 김일성종합대학(23.1%, 15편), 리과대학(15.4%, 10편), 김형직사범대학(2편), 원산농업대학·김책공업종합대학·평양컴퓨터기술대학(1편) 순이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의 76.9%가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산된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피인용 논문 발표 건수에서 국가과학원이 김일성종합대학의 1.05배로서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인용 상위 30% 논문은 2.3배로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수학의 질적연구에서 국가과학원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쓴 연구자 44명 중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연구자는 24명(5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가과학원 10명(22.7%), 리과대학 6명(13.6%)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직사범대학, 원산농업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의 경우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를 각각 1명씩 보유하고 여타의 기관에는 연구자들이 한 명도 없어 우수 연구인력이 소수 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등을 과학발전의 중요기관으로 지정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국가적 투자를 집중³²⁾함으로써 경

32) 김정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17쪽; 김

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전략적 의도가 있다. 국제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기관 대부분이 평양에 소재한 기관이라는 점은 지방연구기관·대학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나 투자³³⁾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기관별 피인용 상위 20%, 10%, 3% 논문 수

논문의 피인용 수준(피인용 백분율)이 증가할수록 국가과학원의 피인용 논문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5> 참조). 반면에 국과과학원을 제외한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등의 피인용 논문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피인용 상위 20%, 10%, 3% 수준의 우수논문은 국가과학원을 중심으로 생산됨을 알 수 있다.

<표 2-5> 기관별 피인용 상위 30%·20%·10%·3% 논문 점유율(단위: %)

구분	상위30%		상위20%		상위10%		상위3%	
	논문 수	점유율	논문 수	점유율	논문 수	점유율	논문 수	점유율
국가과학원	35	53.8	28	60.9	17	81	5	83.3
김일성종합대	15	23.1	9	19.6	1	4.7	0	0
김형직사범대학	2	3.2	0	0	0	0	0	0
리과대학	10	15.4	7	15.1	3	14.3	1	16.7
평양컴퓨터기술대학	1	1.5	1	2.2	0	0	0	0
원산농업대학	1	1.5	0	0	0	0	0	0
김책공업종합대학	1	1.5	1	2.2	0	0	0	0
계	65	100	46	100	21	100	6	100

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연구」, 172쪽.

33)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연구」, 175쪽.

피인용 상위 3% 논문 6편 중 리과대학(1편)과 국가과학원(2편)의 논문은 2004~2011년에 발표된 논문이다. 김정은 시기에 발표된 피인용 상위 3% 논문 3편 모두 국가과학원이 발표한 것이다. 이에 김정은 시기 들어고 피인용 수준의 우수논문은 국가과학원 위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평인용 수준의 우수논문 발표 규모에 있어 국가과학원의 독주가 눈에 띄는 반면, 대학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드는 점은 북한의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중점 기관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북한은 오랫동안 소련식 고등교육 모델을 추구하면서 연구는 연구기관에 일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³⁴⁾ 더불어 최고 연구기관으로서의 국가과학원의 설립·운영을 통해 소련형 지식체제의 도입을 공고히 하였다.³⁵⁾ 결국 구소련 사회주의 연구개발체계 도입으로 인해 북한의 연구개발체계는 국가과학원 중심으로 수립되었다.³⁶⁾

하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은 명실공히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 기관이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 서지적 특성을 보면 소속기관 유형의 대부분은 대학이다.³⁷⁾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연구중심대학의 중요역할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³⁸⁾ 이에 김정은 정권은

34) 소련식 고등교육 모델은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분리, 일반대학과 간부를 양성하는 특수대학 병존등의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정근식 외,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제1호 (2017), 112쪽; Etrama, Emma, Anu Kõu, and Samir KC., “Early Transition Trends and Differences of Higher Education Attainment in the Former Soviet Un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New York: Fi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XLIX, 2014), pp. 20-23; 엄현숙, 「북한의 대학 혁신 연구, 교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6권 2호(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23), 72쪽.

35) 정근식 외,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123쪽.

36) 나승혁, 『북한 과학기술의 수준 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도출 연구』, 61쪽.

37) 이수상,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53쪽.

38) Philip G. Altbach 외 저, 신정철 외 역,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과주: 교육과학사, 2007), 214~215쪽.

대학 발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연구중심대학 건설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³⁹⁾ 그럼에도 북한에서 대학교수교양 전반에 걸쳐 당적 통제·검열 실시 등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 보장이 부족하고⁴⁰⁾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 졸업한 후 군대를 다녀와서 당 간부로 출세하고자 대학원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⁴¹⁾ 성분이나 토대 등의 요인으로 인재가 중앙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현상,⁴²⁾ 대학과목 중 정치사상관련 과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⁴³⁾ 군사학이 필수과목으로 정해지며 군사집단체제 내에서 학습·생활 등 대학교육의 정치군사화⁴⁴⁾, 대학의 열악한 재정난⁴⁵⁾ 등의 현실적 문제들로 해서 연구중심대학 건설은 아직 멀었다.

-
- 39)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등을 연구형 대학으로, 첨단산업 창설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2018년 제1호, 4쪽;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서울: 통일연구원, 2020), 246쪽; 「북,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인재육성은 공화국 위력 과시 위한 정치적 문제」 『통일뉴스』(온라인), 2024년 2월 5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86>>.
- 40)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과천: 진인진, 2017), 627쪽;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188쪽.
- 41) 엄현숙, 「북한의 대학 혁신 연구, 교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26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23), 87쪽;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162쪽.
- 42) 최규빈 외,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서울: 통일연구원, 2021), 169~177쪽; 김정원, 「북한교사가 바라보는 북한 학교교육의 의미」 『통일교육 연구』 13권 2호 (한국통일교육학회, 2016), 1~24쪽.
- 43)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202쪽;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연구」, 190쪽.
- 44) 정근식 편, 『북한의 대학: 역사, 현실, 전망』, 65~66쪽;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193쪽;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연구」, 213쪽.
- 45)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계연구」, 170~174쪽; 최규빈 외,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151쪽; 「北 대학교수도 탈북자 송금 중매업에 나섰다. ‘생활고 심각」 『데일리 NK』(온라인), 2020년 7월 1일, <<https://www.dailynk.com/>>;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260쪽.

Ⅲ. 북한의 국제협력 분석

1. 북한 과학자와 국제협력한 해외기관 분석

북한은 피인용 논문 191편 중 36%에 달하는 69편을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생산하였다.⁴⁶⁾ 북한은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해 10년 동안은 국제협력 공동연구 위주로 피인용 논문을 생산하였다.⁴⁷⁾ 이에 2007-2011년 국제협력 비율은 100%에 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이후 2014년부터 북한 단독 피인용 논문 비율이 증가하면서 국제협력 공동연구 점유율은 2015년 45%에서 2022년 21%로 감소하는 등

46) 한국이 11년간(2009~2019년) 발표한 SCI급 피인용 상위 1% 논문 중 수학 분야 국제협력 연구 논문 수는 86편이며 협력 비율은 74.8%이다.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81쪽; 그러나 MathSciNet에서 북한 연구자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피인용 상위 1% 논문 중 국제협력 연구 논문 수는 2편이며 협력 비율은 66.7%에 불과하다. 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북한 수학 분야의 국제협력이 한국 수학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7) 본 연구에서 북한단독연구는 북한 내 위치한 연구기관에서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이며 국제협력 공동연구는 북한을 포함한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2개 이상 연구기관에서 수행된 연구를 의미한다. 2000년대 이후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기술을 추격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증대 등 비용부담을 줄이고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 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윤정원,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헬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아시아리뷰』 10권 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0), 292쪽; 오늘날 글로벌 연구 협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정부, 글로벌R&D지원센터로 국제협력 강화」 『매일경제』 (온라인), 2024년 7월 21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37955?sid=105>>.

국제협력 피인용 논문의 점유율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논문의 평균 피인용수는 4.7로서 북한 단독 논문보다 1.5 배로 높다. 이에 북한의 경우 우수한 논문을 발간 하는데서 국제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2004-2023년에 북한 과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여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해외기관은 29개이다(〈그림 3-1〉 참조).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과 프랑스의 Paris VIII 대학이 북한과 협력하여 각각 가장 많은 15편의 피인용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TU Darmstadt) 7편, 중국 난징과학기술대학(Univ. of Sci. Tech. of Nanjing) 5편 등의 순이다. 국제협력의 57.3%가 중국의 연구기관이거나 대학들이며 이는 북한과의 주요 피인용 공동논문 생산국가가 중국임을 말해준다.

〈그림 3-1〉 주요 해외기관별 공동연구 피인용 논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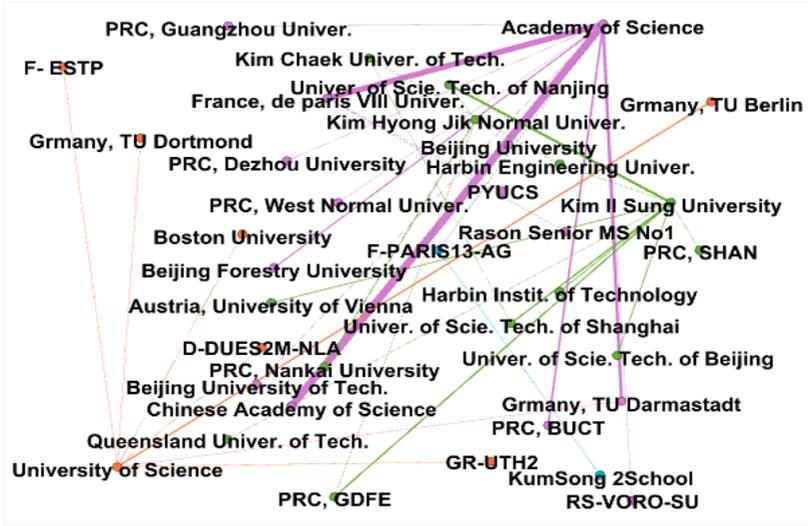


해외기관들과 국제협력을 진행하여 피인용 논문을 생산한 북한 기관은 8개이다. 87회 진행된 국제협력 중 그중 국가과학원이 55%로 가장 활발히 국제협력을 했다. 뒤를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24.4%, 리과대학 10.5%, 김형직사범대학 5%, 김책공업종합대학 2.1%, 평양컴퓨터기술대학·금성2고등중학교·라선1고등중학교 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국가과학원은 중국과학원과 15회에 달하는 가장 많은 국제협력을 진행하였으며 프랑스의 파리 VIII 대학과 12회,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중국 북경임업대학(Beijing Forestry University), 중국 북경화공대(PRC, BUCT)과 다수의 공동연구를 하여 피인용 논문을 생산했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정보과학부·역학부는 중국 난징과학기술대학 응용수학부와 5회에 달하는 가장 많은 국제협력을 진행하였으며 중국 광둥재경대학(PRC, GDFE), 중국 하얼빈공업대학(Harbin Instit. of Technology) 수학과·운송공학부와 다수의 공동연구를 하여 피인용 논문을 생산했다. 북한 리과대학은 독일 베를린공과대학(TU Berlin)과 3회, 김형직사범대학 수학과는 중국 남개대학(Nankai University)과 2회에 달하는 가장 많은 국제협력을 진행하여 다수의 피인용 논문을 발표하였다(<그림 3-2> 참조).⁴⁸⁾

또한 북한 국가과학원은 중국의 더저우대학(Dezhou University), 북경대학(Beijing University), 북경공업대학(Beijing UT), 서부사범대학(West Normal Univer)과, 김일성종합대학은 중국의 상하이과학기술대학(Univer. of Scie. Tech. of Shanghai), 하얼빈공업대학, 산둥대학(SHAN), 하얼빈공정대학(Harbin Engineering Univer), 호주 퀸즐랜드기술대학(Queensland Univer. of Tech), 오스트리아 비엔나종합대학(Austria, University of Vienna)과 리과대학은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러시아 보로네시주립대학

⁴⁸⁾ Gephi 0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외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작성하였다.

〈그림 3-2〉 해외기관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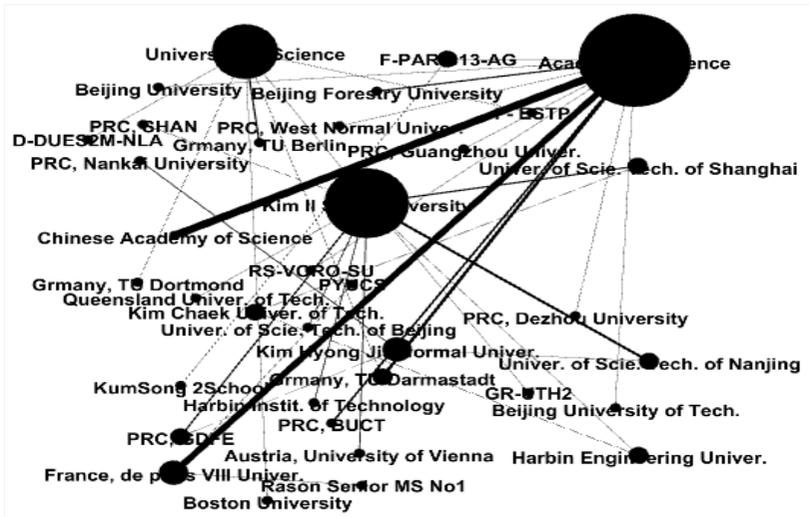


(VORO SU), 미국 보스턴대학(Boston University), 독일 뒤스버그에센대학(Duisburg Essen Univ.)과 김형직사범대학은 중국 난징과학기술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중국 하얼빈공정대학, 중국 상하이과학기술대학, 프랑스 ESTP 연구소 등과 골고루 국제협력을 진행하여 피인용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국가과학원이 42편으로 가장 많은 피인용 논문을 게재하였고,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17편, 리과대학 7편, 김형직사범대학 4편, 김책공업종합대학 2편, 평양컴퓨터기술대학·금성2고등중학교·라선1고등중학교가 각각 1편 순이다. 종합적으로 해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피인용 논문 생산은 국가과학원이 가장 활발히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순이다.

국제협력 피인용 논문 69편을 국제협력 네트워크 분석 대상으로 하고 노드(Node)와 엣지(Edge)가 각각 36개, 72개인 네트워크의 속성을 살펴

보기 위해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는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관들 중에서 어떤 기관이 중심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게 하며 향후 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논문 생산을 위한 기관별 전략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이에 연결정도를 높게 가지는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선택의 폭이 넓고 이에 따른 영향력이 높다.⁴⁹⁾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국가과학원이 score 12으로 가장 높은 연결정도를 가졌고,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프랑스의 de paris VIII대학·김형직사범대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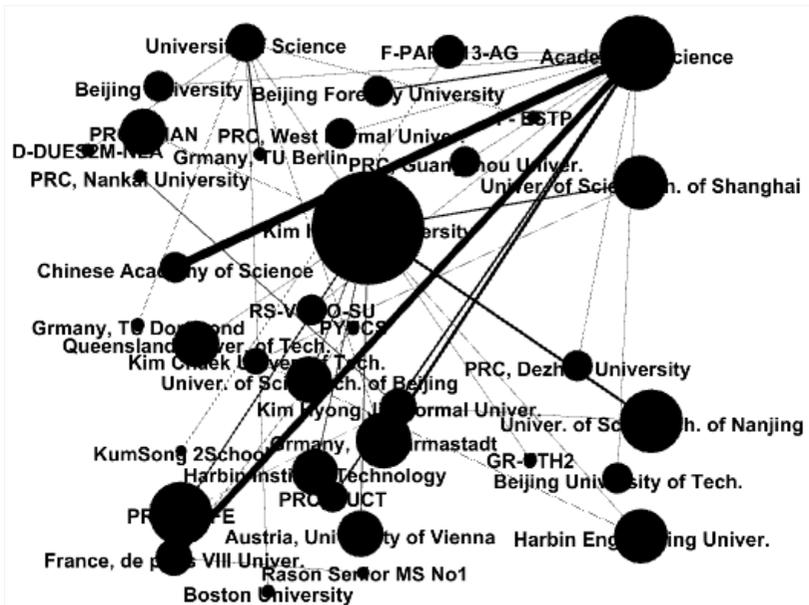
<그림 3-3> 공동연구 네트워크 내 연결중심성 상위기관 시각화



⁴⁹⁾ 전희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계학회 논문집과 응용통계연구 공저자 네트워크 비교」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335~346쪽.

근접중심성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이에 근접중심성을 높게 가지는 기관일수록 네트워크에서 정보 접근이 더 용이하다.⁵⁰⁾ 공동연구 네트워크 내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김일성종합대학이 9.00으로 가장 높은 근접정도를 가졌고, 이어 국가과학원, 중국 난징과학기술대학, 중국 광둥재경대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4〉 참조). 이에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중국 난징과학기술대학은 네트워크에 자신의 자원을 빠르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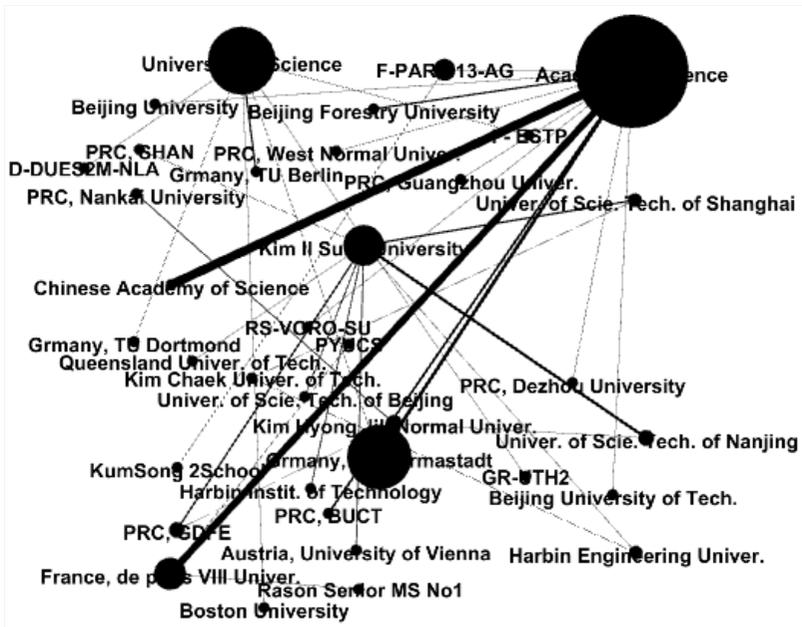
〈그림 3-4〉 공동연구 네트워크 내 근접중심성 상위기관 시각화



50) 위의 글, 335~347쪽.

사이중심성(매개중심성)은 은 네트워크 내에서 다리 역할 수행 정도를 측정하며 이에 사이중심성이 클수록 네트워크 흐름에 대한 통제력도 더 커진다.⁵¹⁾ 사이중심성 분석 결과 국가과학원이 200.00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과대학,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프랑스의 파리 VIII 대학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3-5> 참조). 이에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등이 네트워크 흐름에 권력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5> 공동연구 네트워크 내 사이중심성 상위기관 시각화



51) 이수상,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405~428쪽.

2. 피인용 상위 30% 논문의 국제협력 분석

피인용 상위 30% 논문 62편 중 분야별 국제협력 논문 수를 살펴보면 35(편미분방정식) 분야가 국제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1(수론), 76(유체역학), 42(유클리드 공간 위의 조화해석)와 37(동력학계와 에르고딕 이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수체론과 다항식), 53(미분기하학), 65(수치해석), 74(가변체 역학), 93(시스템이론, 제어), 94(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분야의 국제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을 통해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발표한 북한 기관은 5개이다. 국가과학원 24편, 김일성종합대학 3편, 김형직사범대학 2편, 리과대학 2편, 평양컴퓨터기술대학 1편 순이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해외기관은 중국과학원(CAS) 9편이다. 이어 프랑스 파리 VIII 대학 7편, 독일 다름슈타트공과대학 4편, 중국 북경화공대 3편, 중국 북경임업대학 2편, 독일 도르트문트공과대학(TU Dortmund)·독일 뒤스버그에센대·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중국 광저우대학(PRC, Guangzhou Univer)·중국의 난징과학기술대학, 남개대학, 북경대학, 북경공업대학, 북경과학기술대학(Univer of Scie. Tech. of Beijing), 하얼빈공업대학·프랑스 ESTP 연구소·호주 퀸즐랜드기술대학이 각각 1편 순으로 나타났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 발표 해외기관의 57%가 중국의 연구기관이거나 대학들이며 이는 북한과의 주요 우수 공동논문 생산국가가 중국임을 보여준다.

2004-2011년 기간에 발표된 피인용 상위 30% 논문 7편 중 독일 71%, 프랑스와 중국이 각각 14.5%를 차지했다. 이에 이 시기 북한과의 주요 우수한 공동논문 생산국가가 독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들어 2012-2023년 기간 발표된 피인용 상위 30% 논문 30편 중 중국 90%, 독

일·오스트리아·호주가 각각 3.3%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논문이 대폭 증가하였다. 결과 김정은 시대 들어 피인용 상위 30% 우수 공동논문을 생산하는 국제협력의 중심이 독일로부터 중국으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북한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조⁵²⁾하고 있지만, 대북제재 등으로 국제적 고립이 심화 되면서 정책적 노력의 효과가 제한적⁵³⁾인 상황과 관련된다. 결국 북한의 해외 과학기술 협력은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⁵⁴⁾ 이에 북중 간 과학기술협력은 증가하고 있다.⁵⁵⁾

3. 피인용 상위 20%, 10%, 3% 논문의 국제협력 분석

일반적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상승한다.⁵⁶⁾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사되었다. 피인용 상위 20%·10%·3%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피인용도가 중

52)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5년, 324쪽, 『조선중앙년감』, 2016년, 445쪽, 『조선중앙년감』, 2017년, 389쪽;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제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66~168쪽.

53) 윤정원,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헬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293쪽.

54)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에 구소련 등 일부 동구 국가들은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기피 하였지만, 중국의 경우 이례적으로 양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북한과 우호적인 과학기술협력을 추진 해오고 있다. 위의 논문, 292~293쪽; 이춘근, 「북한-중국의 과학기술협력과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8권 3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05), 7~30쪽.

55) 노경란 외,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205~227쪽.

56)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98쪽.

가함에 따라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인용 상위 20% 국제협력 논문 중 중국의 과학원(7편), 북경화공대학(3편), 북경임업대학(2편), 북경과학기술대학·북경공업대학·북경대학·난징과학기술대학(각각 1편)이 9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점유율 57.1%를 차지했다. 또 프랑스의 ESTP 연구소(1편), 파리 VIII 대학(5편)이 6편으로 점유율 21.4%를, 독일의 다름슈타트공과대학(4편), 뒤스버그에센대학(1편)이 논문 5편으로 점유율 17.9%를, 호주의 퀸즐랜드기술대학(1편)이 점유율 3.6%를 차지했다. 이에 국가별 피인용 상위 20% 논문 국제협력 연구 비율은 중국, 프랑스, 독일, 호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인용 상위 10% 국제협력 논문 중 중국의 과학원(3편), 북경임업대학(2편), 북경화공대학·북경공업대학·북경대학(각각 1편)이 8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점유율 53.3%를 차지했다. 또 프랑스의 ESTP 연구소(1편), 파리 VIII 대학(3편)이 4편으로 점유율 26.7%를, 독일의 다름슈타트공과대학(2편), 뒤스버그에센대학(1편)이 논문 3편으로 점유율 20%를 차지했다. 이에 국가별 피인용 상위 10% 논문 국제협력 연구 비율은 중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 독일과의 협력으로 피인용 상위 20%, 10%의 우수논문을 생산하는 비율은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으로 피인용 상위 20%, 10%의 우수논문을 생산하는 비율은 하락하였다.

피인용 상위 3% 국제협력 논문 중 독일의 다름슈타트공과대학(2편), 뒤스버그에센대학(1편)이 논문 3편으로 점유율 50%를 차지했다. 또 프랑스의 ESTP 연구소(1편), de paris VIII 대학(1편)이 2편으로 점유율 33.3%를, 중국의 북경임업대학이 논문 1편으로 점유율 16.7%를 차지했다. 이에 북한의 피인용 상위 3% 우수논문들은 독일과의 협력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프랑스, 중국의 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인용 상위 3% 국제협력 논문 6편 중 4편은 2007~2010년에 독일의 다름슈타트공과대학(2편), 뒤스버그에센대학(1편), 프랑스의 ESTP 연구소(1편)들이 북한과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발표한 논문들이다. 김정은 시기 들어 발표된 피인용 상위 3% 국제협력 논문은 북경임업대학(1편)과 파리 VIII 대학(1편)이 게재한 2편뿐이다. 이에 김정은 시기 피인용 상위 3%의 우수논문들은 중국, 프랑스와의 협력으로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시기 국가별 국제협력 연구 비율을 살펴보면, 피인용 상위 20% 국제협력 논문 중 중국의 과학원, 북경화공대학 등이 9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점유율 60%를 차지했고 이어 프랑스의 파리 VIII 대학이 5편으로 점유율 33.3%를, 호주의 퀸즐랜드기술대학(1편)이 점유율 6.7%를 차지했다. 이에 국가별 피인용 상위 20% 논문 국제협력 연구 비율은 중국, 프랑스, 호주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피인용 상위 10% 국제협력 논문 중 중국의 과학원, 북경임업대학 등이 8편을 발표해 가장 많은 점유율 72.7%를 차지했고 이어 프랑스의 파리 VIII 대학이 3편으로 점유율 27.3%를 차지했다. 이에 국가별 피인용 상위 10% 논문 국제협력 연구 비율은 중국, 프랑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김정은 시기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으로 피인용 상위 20%, 10%의 우수논문을 생산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김정은 시기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프랑스와의 협력으로 피인용 상위 20%, 10%의 우수논문을 생산하는 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논문을 생산하기 위한 국제협력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과학자를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고⁵⁷⁾ 과학기술·지식 유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

57) 최현규 외, 「북한과학자의 국제학술논문(SCOPUS) 분석연구: 2007-2016」 『북한

다는 측면 등이 있어 향후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북한 수학 연구 우수인력 분석

1. 최고 피인용 논문 저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최고 피인용 논문의 저자는 홍권일(리과 대학)이다. 독일 DUES2M의 Neff, Patrizio를 주저자로 하고 홍권일과 프랑스 ESTP의 Jeong, Jena를 공저자로 하여 2010년에 발표된 논문 “The Reissner-Mindlin plate is the Γ -limit of Cosserat elasticity(Math. Models Methods Appl. Sci)”은 33명의 해외연구자들에 의해 2023년까지 꾸준히 피인용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저자 Neff, Patrizio은 2023년에도 가변체역학 분야 논문을 발표한,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변체역학 분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⁵⁸⁾ 그럼에도 홍권일은 2010년 이후 더는 Neff, Patrizio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10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홍권일은 2011년과 2014년에 북한 국내학술지 『과학원 통보』에 미시구조를 가진 튼성체의 모형 등에 관한 논문을 2번 게재했고, 그 이후 한 번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학술활동 또는 공개 학술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⁵⁹⁾

과학기술연구 시리즈 03』(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56쪽.

58) MathSciNet 검색 결과 Neff, Patrizio은 2002년에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해 2023년 기준 180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그중 86.3%가 가변체역학 분야의 논문들이다.

59) 북한은 국방과학원 등에서 연구하는 주요 논문들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국방 관련 연구활동에 대한 파악은 어렵다.

김정은 시기 들어 2012~2023년 기간에 발표된 논문 중 피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은 2012년과 2017년에 게재된 홍학호(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의 논문이다. 홍학호는 2012년 단독으로 편미분방정식 분야의 논문 “Global stability of viscous contact wave for 1-D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s”을 게재하였으며 2017년에는 주저자로서 중국 북경임업대학(Beijing Forestry University)의 Wang, Teng과 공동연구를 하였다.⁶⁰⁾

일반적으로 게재 후 3년 이내 논문은 시간 경과에 따라 피인용 논문 선정 여부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⁶¹⁾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하여 2021년 북한의 피인용 논문수를 살펴보면 논문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피인용 논문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2021년 국가과학원수학연구소 소속 김광호·최준엽이 2021년에 발표한 수론 분야의 논문 “Solving $x^{q+1}+x+a=0$ over finite fields”은 2021년 북한 피인용 논문의 평균 피인용수 2.9를 훨씬 웃도는 12를 기록해 우수논문으로 평가된다.

북한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 저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과학원이다. 국가과학원이 17편 논문 저자를 보유해 77.3% 점유율로 가장 많은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리과대학(18.2%), 김일성종합대학(4.5%)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의 99.5%가 국가과학원과 리과대학 소속 저자들에 의해 생산된 셈이다. 주목되는 것은 피인용 논문 발표 건수에서 국가과학원이 김일성종합대학의 1.05배로서 양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은 17배로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

⁶⁰⁾ MathSciNet 검색 결과 Wang, Teng은 2014년에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해 2023년 기준 27편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그중 80.5%가 편미분방정식 분야의 논문들이다.

⁶¹⁾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30쪽.

를 통해 북한 수학의 최우수논문 생산에서 국가과학원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 중 국가과학원이 생산한 논문의 57%, 14.3%가 오직 편미분방정식 분야와 수론 분야 논문이라는 사실은 국가과학원이 편중된 연구 분야에서만 최우수논문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일수록 고 피인용 논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⁶²⁾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들은 모두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다. 그리고 이들 중 9.5%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IF 기준 수학 분야 TOP 5 학술지⁶³⁾에 게재되었다. 홍학호는 미분방정식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J. Differential Equations에 고피인용 논문 2편을 게재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

11년간(2012~2021년) 게재된 북한 최고 피인용 논문의 피인용수는 18이다. 11년간(2009~2019년) 게재된 SCI급 한국 최고 피인용 논문의 피인용수가 354⁶⁴⁾인데 비하면 북한 최고 피인용 논문의 피인용수는 훨씬 작은 편이어서 북한 수학 논문의 질적 수준은 한국에 대비할 수 없이 많은 격차를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⁶⁵⁾ 그럼에도 북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62) 위의 책, 7쪽.

63) IF(Impact Factor) 기준 수학 분야 TOP 5 학술지는 APPLIED MATHEMATICS AND(1순위), COMPUTERS & MATHEMATICS WITH APPLICATIONS(2순위), APPLIED MATHEMATICS LETTERS(3순위), JOURNAL OF DIFFERENTIAL EQUATIONS(4순위), ANNALS OF STATISTICS(5순위)이다. 위의 책, 86쪽.

64) 위의 책, 103쪽.

65) 2009~2019년 기간에 게재된 SCI급 한국 논문 중 피인용수가 가장 높은 논문은 지구과학 분야의 논문(피인용수 8,933)이다. 한국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에는 수학 분야 논문이 없다. 위의 책, 102쪽; 이에 전반적 수준에서 볼 때 한국 최고 피인용수 수학 논문의 피인용수 354가 결코 높은 수치도 아니다.

최고 피인용수 상위 10위 논문 중 81%에 달하는 17편이 북한 과학자가 주 저자임을 감안하면 북한의 수학연구 능력도 일정한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파악된다.

2. 피인용 수 상위 20위 우수 연구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북한 과학자 중 피인용 수가 가장 많은 연구자는 홍학호이다(<표 4-1> 참조).

<표 4-1> 피인용 수 상위 20위 우수 연구자 목록

순위	이름	소속기관	피인용수	주요 연구 분야
1	홍학호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123	유체역학, 편미분방정식
2	김진명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104	조화해석, 측도와 적분, 편미분방정식
3	리명환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78	함수해석, 편미분방정식
4	김광호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61	수체론과 다항식, 정보 통신, 회로이론, 수론
5	신철민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56	유체역학, 편미분방정식
6	김두진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49	유체역학, 편미분방정식, 시스템이론, 제어
7	한성철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48	결합환과 대수, 가환대수, 수론
8	리성일	리과대학 수학과	35	동력학계 에르고딕이론, 측도와 적분, 작용소론
9	신충식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31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유체역학
10	주현희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28	동력학계와 에르고딕이론, 일반위상수학
11	최희철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26	함수방정식, 수치해석, 상미분방정식
12	정금성	김일성종합대학 수학과	22	수치해석, 상미분방정식

13	안진명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21	편미분방정식
14	최정혁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20	수체론과 다항식, 정보 통신과 회로이론, 수론
15	윤철희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18	측도와 적분, 실함수
16	리덕남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17	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수론
17	김문철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15	수치해석, 확률론과 확률과정
18	최준엽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14	정보 통신, 회로이론, 수론
19	박순애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11	수치해석, 상미분방정식
20	박철규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11	수치해석, 확률론과 확률과정

홍학호는 2012년에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2023년 기준 29편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다. 그는 김정은 시대(2012~2023년) 들어 논문을 발표한 저자 중 최다 논문을 게재한 저자이기도 하다. 홍학호의 편미분방정식 분야 논문들의 피인용 수는 해당 분야 전체 피인용수의 34.2%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이에 홍학호는 북한 편미분방정식 분야 등의 핵심 연구자라고 할 수 있다.

2위의 김진명은 2004년에 최초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17편을 발표하였다. 『해석수학』 등 다수의 전공 서적 집필과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2015년에 “2.16 과학기술상”을 받은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해석수학 강좌장이며 유클리드 공간 위의 조화해석, 측도와 적분, 편미분방정식 분야 등의 주요 우수 연구자이다.⁶⁶⁾

3위의 리명환과 4위의 김광호는 국제학술지에 각각 19, 17편의 논문을 발표한 편미분방정식, 수론, 정보와 통신 및 회로이론 등 분야의 대표적인 주요 연구자이다. 김광호는 프랑스의 파리 VIII 대학(파리8대학) 수학과와 지속적으로 정보이론과 수학적 응용 등에 대해 공동연구를 하고 있

66) 「과학기술 분야 최고상인 ‘2.16 과학기술상」 『통일뉴스』 (온라인, 2023년 5월 10일,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948>>).

으며 국제·국내학술지에 암호학과 관련된 “2진체 타원곡선 연산의 고속 도화 연구” 등의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여 북한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연구자이다.⁶⁷⁾ 과학기술 업적으로 “2020년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된 김광호는 프랑스와의 공동연구 과정에 파리 VIII 대학 시엠 메나제 교수로 부터 “수준이 높은 과학자”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⁶⁸⁾

신철민과 김두진은 국제학술지에 각각 18, 35편의 논문을 발표한 유체 역학, 편미분방정식 등 분야의 주요 연구자이다. 김두진은 편미분방정식 중에서도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바, 2006년 마드리드 세계수학자대회에서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주제로 강연도 한 북한에서 가장 국제적인 연구를 하는 수학자라고 볼 수 있다.⁶⁹⁾

피인용수 상위 20위 최우수 과학자를 가장 보유한 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이며 이어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리과대학 수학부 순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리과대학 수학부가 각각 피인용수 상위 20위 과학자의 55%, 40%, 5%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인용수 상위 1-6위에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5명(83%)이 기록되어 수학 분야의 북한 최우수 과학자는 국가과학원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저자를 보유한 12개의 기관 중 피인용수 상위

67)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전국적인 수학경시대회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두각을 나타냈던 리광호는 리과대학을 졸업하고 20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도유망한 과학자이다. 한국 「북한과학기술 톱아보기」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온라인), 2024년 2월 21일,

<<https://www.youtube.com/watch?v=YrbtZeqWMjw>>.

68) 「프랑스 학자, 북한 수학자에 ‘수준 높은 과학자’ 칭찬」 『연합뉴스』 (온라인), 2021년 11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2044700504?input=1195m>>.

69) 김도한 외, 『북한의 수학연구 현황 분석』, 25쪽.

20위 과학자를 보유한 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국가과학원 수학 연구소, 리과대학 수학부 등 평양에 소재한 3개 기관에 불과해 최우수 저자의 소속기관 등장 빈도에서는 불균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리과대학 등을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국가 부흥을 이루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와 관련된다.⁷⁰⁾ 오늘날 김일성종합대학 등의 우수 연구진 대부분은 북한 영재교육을 이수하고 중요대학에 진학하여 박사원(대학원) 등을 거치면서 육성된 인재들이다.⁷¹⁾ 김정은 시대 들어 박사학위 취득이 상승하는 등 연구 활동에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 박사학위자 배출 규모에 있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독주가 극성을 부리고, 지방으로 갈수록 그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⁷²⁾ 등은 대학·연구소 간 우수 연구자 보유 격차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게 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논문 산출 실적 분석을 통해 북한 수학의 강점 분야와 질적으로 미흡한 분야, 우수

70) 김정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14쪽; 「北, 여명거리 입주 시작…김일성대 교수 먼저」 『연합뉴스』 (온라인), 2017년 4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8040000014?input=1195m>>; 「칠순 맞은 북한 국가과학원…특별 대우받는 연구기지」, 『연합뉴스』 (온라인), 2022년 12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2097500535>>.

71)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정책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 (2019), 101쪽.

72) 위의 글, 102쪽.

논문 생산을 위한 해외공동연구, 최우수 연구인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북한 과학자가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한 피인용논문 산출실적 분석 결과 첫째, 김정은 시기 들어 피인용 논문 수는 김정일 시기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피인용논문 수는 191건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 대비 12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였다. 피인용논문의 증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부족한 자원, 심화되는 재정난 가운데 과학기술로 경제건설·국방력 강화의 길을 열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와 관련된다.

둘째, 북한 수학의 강점분야는 응용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피인용 상위 30% 논문의 80% 이상의 연구 분야가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확률론과 확률과정, 가변체역학, 유체역학, 게임이론, 정보와 통신, 회로이론 등 응용 및 응용적 색채가 강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논문의 고 피인용 수준이 증가할수록 편미분방정식, 가변체 역학 등 분야의 피인용 논문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수수학의 가환대수, 다양체와 셀 복체, 대수기하학, 비결합환과 대수, 카테고리 이론, 호몰로지 대수, 군론과 일반화, 위상군, 리군 등 주요 분야는 피인용 논문 수가 한편 또는 한편도 없다. 이는 북한의 기초과학정책과 관련된다. 오늘날 북한은 수학 등 기초과학의 연구가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건설에 복무하는 북한의 기초과학정책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수학연구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과학적 역량을 갖춘 북한 수학의 연구 및 교육 기관은 소수이며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 리과대학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북한 피인용 논문의 76%가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저자를 보유한 12개의 기관 중 피인용수

상위 20위 과학자를 보유한 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수학부,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이과대학 수학부 등 평양에 소재한 3개 기관에 불과해 최우수 저자의 소속기관 등장 빈도에서는 불균등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과학원은 북한 수학의 질적연구에서 중심이다. 북한 수학 분야의 최우수 과학자는 국가과학원에 밀집되어 있다. 고 피인용 수준의 우수 논문 발표 규모에 있어 국가과학원의 독주가 눈에 띄는 반면에 대학으로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북한 대부분 대학들이 교육중점 기관이라는 것과 관련된다. 구소련 사회주의 연구개발체제 도입으로 인해 오랫동안 국가과학원 중심의 연구개발체제를 수립하고 있던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대학 발전에서 세계적인 동향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연구중심대학 건설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 부족, 대학원로의 진학 기피, 대학의 열악한 재정난, 폐쇄적이고 경직된 대학 제도 등의 현실적 문제들은 연구중심대학 건설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북한의 질적 우수논문은 국제협력을 통해 더 많이 생산된다.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북한 논문은 피인용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피인용 논문은 국제협력 공동연구보다는 주로 북한 단독 연구를 통해 생산되었다. 그럼에도 국제협력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는 4.7로서 북한 단독 논문보다 1.5배로 높다. 북한의 피인용 상위 10%, 3% 논문의 57.1%, 83.3%가 국제협력 연구 결과이다. 피인용도 증가에 따라 국제협력연구 비율이 상승하는 상관관계로 볼 때 북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생산하는 데서 국제협력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피인용 논문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 분석 결과 북한 국가과학원이 해외기관들과의 협력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리과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순으로 나

타났다. 국가과학원은 중국과학원과 피인용 논문 생산을 위한 가장 많은 국제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 파리 VIII 대학과 활발하게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에서 비교적 국제적인 과학적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평가되는 이들과의 남북협력은 기술적 면에서 볼 때 상호 협력 효과가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북한 과학자와 국제협력 연구를 진행하여 피인용 논문을 발표한 상대 국가는 중국, 프랑스, 독일 등에 편중되며 특히 중국은 최근 그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북한과 협력하여 피인용 상위 30%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해외기관도 중국과학원이다. 중국이 북한 과학자를 유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정책적으로 줄이고 있고 과학기술·지식 유출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 등이 있어 향후 동향을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수학학술지에 발표된 피인용 논문을 통한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 분석은 북한의 기초과학정책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남북 과학기술협력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인용(Self-Citation)의 영향력 상존 즉 피인용 논문 통계에 자기 스스로 인용한 논문도 포함되는 분석의 한계도 있다. 또한 북한 국내 수학학술지에 발표된 피인용 논문을 통한 북한 수학 연구의 질적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지 못했고, 우수 연구자들의 논문을 그 분야 수학자들과 함께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 『경제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년 제1호, 15~16쪽.
- 김정일,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1985. 8. 3)」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245~246쪽.
- 김정은, 『과학자들은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4.
- 김정은, 『주체혁명의 새 시대 김일성종합대학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6년.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수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년 제1호, 2쪽.
- 『광명백과사전 10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8, 16쪽.
- 『수학』,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2016년 제1호, 2쪽.
- 『수학』,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1998년 제3호, 3쪽.
- 『수학』,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2017년 제1호, 3쪽.
-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5년, 324쪽.
-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6년, 445쪽.
-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17년, 389쪽.
- 김도한 외, 『북한의 수학연구 현황 분석』,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나승혁, 『북한 과학기술의 수준 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 도출 연구』,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016.
- 조정아 외,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한국연구재단, 『2009~2019 주요국의 피인용 상위 1% 논문실적 비교분석 보고서』, 서울: 한국연구재단, 2021.
- Altbach, Philip G., 외 저, 신정철 외 역,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파주: 교육과학사, 2007, 214~215쪽.
- Etrama, Emma, Anu Kõu, and Samir KC., *Early Transition Trends and Differences of Higher Education Attainment in the Former Soviet Un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New York: Fi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XLIX, 2014.

- 김수연,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1호, 2022, 123~166쪽.
- 김수연, 『북한의 간부양성체제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3쪽.
- 노경란 외, 「국제학술논문을 통해 본 북한의 과학기술지식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7권 4호, 2016, 205~227쪽.
- 노경란·최현규, 「저자 동시인용 분석을 이용한 북한 과학기술의 지적 구조 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31권 4호, 2020, 169~190쪽.
- 박현우 외, 「주요국의 학문분야별 과학연구의 영향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권 3호, 2010, 392~403쪽.
- 신은자, 「한국 재료공학 논문의 피인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30권 1호, 2013, 133쪽.
- 엄현숙, 「북한의 대학 혁신 연구, 교수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6권 2호, 2023, 72쪽.
- 엄현숙, 「김정은 시대 고등교육정책 연구: 박사학위 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19권 4호, 2019, 101~102쪽.
- 유재언, 「가족·가정 논문의 피인용 증가를 위한 대안 모색, 논문의 주제 및 게재학술지의 인용관계망에 따른 피인용횟수 분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28권 1호, 2016, 2쪽.
- 윤정원, 「북한-중국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트리플헬릭스 접근을 기반으로」 『아시아리뷰』 제10권 2호, 292~293쪽.
- 이민희 외, 「공저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응용통계분석」 『응용통계연구』 24권 6호, 2011, 1261~1262쪽.
- 이수상, 「피인용 최상위 학술논문의 서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9권 4호, 2018, 56쪽.
- 이수상, 「연구자 네트워크의 중 연구 성과의 연관성 분석: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3호, 2013, 405~428쪽.
- 이춘근, 「북한-중국의 과학기술협력과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8권 3호, 7~30쪽.
- 전희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통계학회 논문집과 응용통계연구 공저자 네트워크 비교」 『한국데이터정보학회지』 제26권 2호, 2015, 335~346쪽.
- 정근식 외, 「북한에서 소련형 대학 모델의 이식과 희석화」 『아시아리뷰』 제7권 제

1호, 2017, 112쪽.

최현규, 「북한학술문헌으로 본 북한과학기술동향 분석」 『지식정보인프라』 제22권, 2006, 62~69쪽.

최용진 외, 「우리나라 SCI급 논문의 저자유형별 피인용 격차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3호, 2017, 46~47쪽.

Hutson, S. R, "Self-citation in archaeology: Age, gender, prestige, and the self", *Journal of Archaeological Method and Theory*; vol. 13, no. 1, 2006, pp. 1~18.

『NK경제』 2022년 1월 6일.

『YTN 뉴스』 2023년 7월 2일.

『통일뉴스』 2024년 2월 5일, 2023년 5월 10일, 2020년 3월 19일.

『데일리 NK』 2020년 7월 1일.

『로동신문』 2016년 5월 9일.

『로동신문』 2017년 1월 16일.

『로동신문』 2022년 10월 29일.

Performance analysis of North Korean cited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mathematical journals

Kim, Su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quality level and capacity of North Korean mathematics research by analyzing the production performance of cited papers published by North Korean scientists in international mathematical journals, identifying areas of strength and qualitative deficiencies in North Korean mathematics, identify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networks to produce excellent papers, and identifying the best researchers. The study aims to analyze cited papers published by North Korean researchers on Math.Sci.Net, a database of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mathematical journal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umber of cited paper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Kim Jong-un period compared to the Kim Jong-il period, and that the strengths of North Korean mathematics are weighted towards applied and applied tinge fields. North Korea's top scientists in the field of mathematics are concentrated 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it was found that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and Kim Il-sung University are the most active in producing cited paper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overseas institutions. By conduc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with North Korean scientists, we were able to identify that the

main partner country that published the cited paper was China.

Keywords: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North Korea's cited mathematics paper, North Korea's basic science policy, North Korea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 Korean mathematics research

김수연 (Kim, Suyeon)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 수학연구 동향 분석과 남북 수학협력 방안」(2022), 「북한 간부양성체계의 변천 및 특성」(2020)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북한을 휩쓸다』(공저, 2021), 『남북금융용어사전』(공저, 2021) 등이 있다.

일반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Distress)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김경미 (이화여대)

국문요약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Distress)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양상과 집단 구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횡단데이터로 이루어진 30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은 저PTSD/저DISTRESS, 중PTSD/중DISTRESS, 고PTSD/고DISTRESS 집단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외상 사건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공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노출 빈도가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사회에서 학력을 취득하는 수준이 높고, 결혼을 하는 것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잠재프로파일 양상과 영향요인에 따른 사회심리학적 개입의 중요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디스트레스(distress),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

I. 서론

이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면서 심리, 신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유발하여 이주민이 낯선 사회에 적응하는 데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 더욱이 외상 사건 노출은 심리·정신건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동안 외상 사건 노출이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디스트레스(distress)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장되었다.²⁾ DSM-5에서는 위협적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 등의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³⁾ 더불어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외상 빈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후 두려움, 무력감, 공포 같은 정서 반응이 표현되지 않아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1) Richard A. Bryant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fugee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2023), pp. 413~436.

2) Meaghan L O'Donnell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centered approaches to investigating patterns of trauma expos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57 (2017), pp. 208~225.

3) Matthew J Friedman et al., "Considering PTSD for DSM-5" *Depression and Anxiety*, vol. 28, no. 9 (2011), pp. 750~769.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분쟁과 이주에 노출된 집단은 잠재적으로 외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가지 외상 사건에 노출되면 추가로 다른 외상 사건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⁴⁾ 이러한 영향으로 충격적인 외상 사건이 누적되면 심리·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 가족과의 이별 및 죽음, 정치사상적 외상, 강제노동, 고문 등을 경험한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에 기반한 생명의 위협, 대인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같은 다양한 외상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외상 사건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신체건강 및 정신적 충격에 영향을 줄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타인과 관련된 사고를 목격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들은 81.4%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이러한 영향으로 불안, 악몽, 정서적 고통, 회피, 우울,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키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한 외상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

4) Bryant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fugees", pp. 413-436.; Zachary Steel et al., "Association of torture and other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with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populations exposed to mass conflict and displac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302, no. 5 (2009). pp. 537-549.

5) 김희경,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4호 (2012), 1003-1022쪽.

6) 허성호 외,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스트레스연구』 제21권 3호 (2013), 193-202쪽; Dahae Kim et al., "Exploring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North Korean

레스와 디스트레스는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우울, 불안, 자살경향성, 불면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의 결과로 디스트레스가 양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외상 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디스트레스의 위험이 동반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 이주민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자살충동의 동반율이 50%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울(44%)과 불안(40%)이 외상 후 스트레스(36%)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⁷⁾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논의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단일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로 발전하는 위험 요소는 다양하며 외상의 심각성, 종류, 맥락에 따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관적인 심리 반응과 대처 수준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중첩성에 기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

defectors: a latent class mixed analysis" *Frontiers in Psychiatry*, vol. 13 (2022), pp. 1-12; Yunhwan Lee et al.,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0, no. 3 (2001), pp. 225-229.

7) Tania Storm and Marianne Engberg, "The impact of immigration detention on the mental health of torture survivors is poorly documented - a systematic review" *Danish Medical Journal*, vol. 60, no. 11 (2013), A4728; G Turrini et al., "Efficacy and acceptabilit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vol. 28 (2017), pp. 376-388.

요성이 제기된다.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은 기존의 변수 중심 접근법이 집단을 동질적(homogeneous)으로 보는 것과 달리 집단이 이질적(heterogeneous)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로 인하여 외상에 노출된 집단이 이질적일 수 있으므로 개인마다 외상 노출 패턴과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이 제기되면서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centered approaches)을 활용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영향을 분석하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⁸⁾ 사람 중심 접근법의 한 종류인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외상 사건의 이질성을 이해하면서 동질적인 집단을 파악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별 차이를 확인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우울, 자살경향성, 불안, 불면증)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은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우울, 자살경향성, 불안, 불면증)

⁸⁾ Ateka A. Contractor and Nicole H. Weiss, "Typologies of PTSD clusters and reckless/self-destructive behavi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iatry Research*, vol. 272 (2019), pp. 682~691; Grant N. Marshall et al., "All PTSD symptoms are highly associated with general distress: Ramifications for the dysphoria symptom clus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9, no. 1 (2010), pp. 126~135.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데 있어 인구사회학 변인과 외상 사건 노출 빈도가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사람은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의 주요한 위기나 한 번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확인하는 연구의 폭이 넓혀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 회피, 침습, 인지와 정서의 부정적 변화, 과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⁹⁾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외상은 사람에 의한 것으로 반복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다양하게 축적된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것이다. 외상 사건에 노출된 사람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이들은 부정적 정서와 사고(事故) 경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인간의 정서적 뇌인 변연계(limbic system)가 위협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상에 노출될 경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지 않기 위하여 대처 기제를 발휘하기 때문이다.¹⁰⁾ 외상 사건 경험자는 대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를 견뎌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외상 사건의 영향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예를

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10) 박철욱·안현의,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0권 4호 (2009), 1893쪽.

들어 뉴욕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6년이 지나도 여전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더욱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사건 경험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해마다 외상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에 증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플래시백, 악몽 또는 침투 기억으로 외상 사건을 실제로 재경험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인관계 및 성격 측면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 가령 만성적 외상에 노출된 사람은 정서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신체화 증상과 심리적 혼란이 가중된다. 더불어 외로움, 일상생활의 어려움, 우울, 불안 등이 높고, 주의집중력 결핍과 같은 인지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¹²⁾ 이러한 영향은 심리 및 정신건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stress)라는 단어는 Selye가 위협에 대한 “싸움이나 도피” 반응, 이를 테면 환경 자극에 대한 강렬하거나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특징 지은 것과 관련이 있다.¹³⁾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며, 위협을 당하거나 변화 또는 도전적 상황에 처한 개인이 보이는 신체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distress) 반응이다. 스트레스원(stressor)은 스

11) Robert M Brackbill et al., “Asthm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5 to 6 years following exposure to the World Trade Center terrorist attack”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302, no. 5 (2009), pp. 502~516.

12) Salah U Qureshi et al., “Does PTSD impair cognition beyond the effect of trauma?”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vol. 23, no. 1 (2011), pp. 16~28.; Jennifer A Sumner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in a large cohort of middle-aged women” *Depression and Anxiety*, vol. 34, no. 4 (2017), pp. 356~366.

13) Bruce S. McEwen and Huda Akil, “Revisiting the stress concept: implications for affective disorders,” *Journal of Neuroscience*, vol. 40, no.1 (2020), pp. 12~21.

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 또는 사건을 의미한다. Lazarus와 Folkman은 개인에게 부과된 요구가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선다고 자각할 때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⁴⁾ 그래서 개인의 안전이 위협하다고 지각되는 스트레스는 자극 또는 반응 자체가 아니라 환경적 자극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하나의 변인 보다는 다수의 변인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stimulus-oriented stress),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response-oriented stress),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stress as a transaction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특수한 환경적 사건을 경험할 때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 질병, 실직, 재난 사건,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의 외적인 환경에 중점을 둔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이 혼란을 경험하거나 신체화 증상을 보이면서 긴장,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 반응 또는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위협, 부담, 위해(危害)를 인식할 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스트레스 개념 중에서 ‘자극 및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불리한 환경 자극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심리적 고통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디스트레스(distress)로 정의하고자 한다. 디스트레스는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부터 우울, 불안, 부정적 사고 등 역기능 문제를 유발하는 심리적 고통을 의미하며, 일상생활 적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¹⁵⁾

¹⁴⁾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pp. 55~116.

¹⁵⁾ Grant N. Marshall et al., “All PTSD symptoms are highly associated with general

한편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삶을 창조해 나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 및 정서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eustress)라고 하며, 나쁜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한다.¹⁶⁾ 유스트레스는 스트레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의미하며, 디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디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며 행동 및 정서적으로 통제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울과 불안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이다.¹⁷⁾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심리적 손상을 입은 상태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정신건강 또한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영향 요인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사람이 동일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의 특성 및 환경 요인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유형과 심각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인구사회학 변인과 외상 사건 경험 빈도,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distress: Ramifications for the dysphoria symptom cluster”, pp. 126~135.

16) 김성수·김영애, 『정신건강의 이해』 (경기: 양서원, 2011), 88쪽.

17) Clairice, T Veit and John, E Ware,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51, no. 5 (1983), pp. 730~742.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 사건 경험자의 성별 및 연령 같은 인구사회학 변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일관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Minihan et al.,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외상 사건 노출 빈도, 이주 이후 생활의 어려움을 측정한 연구에서 외상 사건 노출 빈도와 이주 이후 생활의 어려움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으나, 성별 및 연령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Rahman et al., 또한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인종, 취업유무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 및 학력,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¹⁹⁾ 그러나 Galatzer-Levy et al., 연구는 성별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이와 같이 인구사회학 변인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가 상이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외상 사건 경험 빈도가 높을수록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디스트레스와 기타 정신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외상 사건 경험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자살경향성, 불면증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²¹⁾ 이로

18) Savannah Minihan et al., "Patterns and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fugee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32 (2018), pp. 252~259.

19) Akm Fazlur Rahma et al., "A latent class analysis of PTSD symptoms among inner city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98 (2018), pp. 1~8.

20) Isaac R Galatzer-Levy et al., "Patterns of lifetime PTSD comorbidity: a latent class analysis" *Depression and Anxiety*, vol. 30, no. 5 (2013), pp. 489~496.

21) Joseph W Boffa et al., "PTSD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mong firefighter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84 (2017), pp. 277~283; N. Tarrier and L. Gregg, "Suicide risk in civilian PTSD patients" *Social Psychiatry*

인하여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기능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초래된다. 더불어 외상 후 스트레스와 자살경향성은 정적 관계를 기반하고 있는데, Boffa et al., 연구에 따르면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인구사회학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경향성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면증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함께 발생하며, 외상 경험자의 70~90% 이상이 악몽 같은 수면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²⁾ 불면증은 인지와 정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억 강화 및 감정 조절에도 영향을 주어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켜 충동적으로 공격적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²³⁾ 뿐만 아니라 불면증은 정서적 불균형을 가중시켜 외상 사건에 대한 기억을 소거(extinction)하여 두려움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회피하거나 사회 활동 또는 직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²⁴⁾

3.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영향 요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회에서 육체적, 정서적으로 외상을 경험할 뿐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9, no. 8 (2004), pp. 655~661; Marla Zucker et al.,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vol. 7, no. 1 (2006), pp. 19~31.

- 22) Catrin Lewis et al., "Sleep disturba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 system review and meta-analysis of actigraphy stud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vol. 11, no. 1 (2020), pp. 1~12.
- 23) Marike Lancel et al., "Disturbed Sleep in PTSD: Thinking Beyond Nightmares" *Frontiers in Psychiatry*, vol. 12 (2021), pp. 1~11.
- 24) Andrea N. Goldstein and Matthew P. Walker, "The role of sleep in emotional brain func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2014), pp. 679~708.

만 아니라 제3국 체류과정에서도 발각, 체포 두려움, 가족과의 이별, 대인관계 폭력, 복송 위기 등 다양한 외상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²⁵⁾ 외상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 불면증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심리·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남한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김희경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531명 중 81.4%가 한 번 이상 외상 사건을 경험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지 3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한 외상 사건의 빈도 및 유형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발병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15.3%로 남한주민(1.7%)보다 9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²⁶⁾ 더불어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을 4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였다.²⁷⁾

더욱이 이들은 악몽, 회피, 부정적 정서,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업과 대인관계, 일상생활 부적응을 경험한다.²⁸⁾ 외상 사건에 노출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에서 정서적 불안과

25)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189~213쪽; Dahae Kim et al., “Exploring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a latent class mixed analysis” *Frontiers in Psychiatry*, vol. 13 (2022), pp. 1~12.; Mi Kyung Lee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cientific Reports*, 12:3989 (2022).

26) 이경은 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임상적 특성」 『Anxiety and Mood』 제14권 2호 (2018), 80~87쪽.

27) 박소희 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 종단적 추세: 외로움,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4년 추적 연구」 『Anxiety and Mood』 제17권 2호 (2021), 49~58쪽.

28) 허성호 외,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193~202쪽; Kyung Hwa Lee et al., “Neur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regulation in traumatized North Korean refugees”

우울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악몽으로 인한 주의력 및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경험한다.²⁹⁾ 그래서 외상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주의력 및 기억력, 집중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 인지기능 변화 관계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상 직후 인지처리 방식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인지를 부정적으로 재평가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Mary et al., 연구는 파리 테러 사건에 노출된 102명과 비노출된 73명을 기능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을 활용하여 트라우마와 관련된 두려움과 침습 기억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³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상 사건에 노출된 집단이 비노출된 집단에 비하여 침습 외상 기억에 대하여 부정적 반추가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 인지조절을 포함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건강한 기억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인지 및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³¹⁾ 전진용은 심리적 외상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인지기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³²⁾ 연구결과

Translational Psychiatry, vol. 11, no. 452 (2021), pp. 1~10.

29) 박상민 외, 『북한이주민 지원 실무자를 위한 핸드북』 (IOM 국제이주기구, 2011).

30) Alison Mary et al. "Resilience after trauma: the role of memory suppression" *Science*, vol. 367 (2020), pp. 1~13.

31) Nambeom Kim et al., "Alexithymia and frontal-amygdala functional connectivity in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Medicine*, vol. 50 (2019), pp. 334~341; Kyung Hwa Lee et al., "Neur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regulation in traumatized North Korean refugees", pp. 1~10; Sehyun Jeon et al.,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thalamus in North Korea refugee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ientific Reports*, 10:3194 (2020).

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외상군(28명)은 남한 일반군(33명)에 비하여 뇌파(geodesic sensor net)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별성이 나타났으며, 스트룹 검사(stroop color-word test), 선로 잇기(trail making test), 숫자외우기(digit span forward, backward, sequencing), 기호쓰기(coding) 등에서 낮은 수행 능력을 보임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인지기능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취약성을 보이기도 한다.³³⁾ 이러한 일환으로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의 악순환, 남한사회에서의 희망 부재,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안위 문제 등의 압박감에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³⁴⁾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자살 위험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심리·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체화하는 남한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사회제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2) 전진용, 『탈북민의 심리적 외상과 전두엽 기능과의 관련성』(카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22~30쪽.

33) 김경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미래사회』 제12권 6호 (2021), 101~105쪽; 허성호 외,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193~202쪽.

34) 김재엽 외, 「탈북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4권 2호 (2013), 33~56쪽; 윤지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시도 경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프로파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 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북한이탈주민이 재북 시, 탈북기간, 남한 입국 이후에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과 심리적 트라우마와 관련된 심리적 질환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집된 조사이다.³⁵⁾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는 2017년 4월 4일 ~ 2017년 5월 30일 동안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눈덩이 표집으로 추출되었으며, 조사응답자는 300명이다. 이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관련 설문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성별 분포는 남성이 55명(18.3%), 여성이 245명(81.7%)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디스트레스는 우울, 자살경향성, 불안, 불면증 척도로 구성하였다.

³⁵⁾ 이소희 외,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17), 3쪽.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CL-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측정은 Weathers et al.,이 제작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를 Blevins et al.,이 DSM-5 기준으로 개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5판(PCL-5)을 박주연 외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³⁶⁾ PCL-5는 ‘그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괴롭고 원하지 않는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그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악몽을 반복해서 꾸다.’, ‘그 스트레스 경험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외부 자극을 피한다.’, ‘그 스트레스 경험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내기 어렵다.’ 등으로 총 20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문항의 Cronbach's α 는 .975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 우울

우울은 건강질문지-9(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HQ-9)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어떤 일에도 관심이나 재미가 없음’, ‘처지는 느낌, 우울감 혹은 절망감’, ‘잠들기 어려움, 깨지 않고 쪽 자기 어려움, 혹은 너무 많이 잠’, ‘피곤함 혹은 기운 없음’, ‘식욕(입맛) 저하 혹은 과식’, ‘나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김’, ‘신문 읽기나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³⁶⁾ 박주연 외, 『재난정신건강평가 워크북』; Christy A Blevins et al,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 5(PCL 5):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28, no. 6 (2015), pp. 489~498; F. W, Weathers et al., *The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LEC-5)* (2013), Retrieved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PTSD website: <<http://www.ptsd.va.gov>>.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의 Cronbach's α 는 .917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 자살경향성

자살경향성은 K-MINI Plus를 사용하였다. K-MINI Plus는 DSM-V와 ICD-10의 정신질환 진단을 위해 1998년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된 구조화된 척도로 유상우 외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이다.³⁷⁾ 자살경향성 척도는 6문항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죽기를 바랐던 적이 있습니까?', '자해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자살에 대해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자살을 계획했었습니까?',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한 차례라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 = 1, 아니오 = 0으로 재코딩 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50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4) 불안

불안은 불안장애선별검사(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GAD-7)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으로 '초조, 불안, 조마조마함',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 없음', '이런저런 다양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함', '진정하기 어려움',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안절부절 못함', '쉽게 짜증이 남',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김'이었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951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37) 유상우 외, 「한국판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타당도 연구」 『Anxiety and Mood』 제2권 1호 (2006), 50~55쪽.

(5) 불면증

불면증은 불면증 심각도 척도(insomnia Severtiy Index, ISI)를 기반으로 ‘잠들기 어려움’,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움’, ‘너무 일찍 깨는 문제, 현재 당신의 수면 패턴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불면증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면증으로 인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당신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불면증에 관하여 얼마나 걱정하고 있습니까?’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의 Cronbach's α 는 .933으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2) 영향변인

이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인구사회학 요인과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인구사회학 요인

성별은 남자 = 1, 여자 = 0으로 재코딩하였으며, 연령과 남한 거주 기간은 연속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남한에서의 결혼은 기혼 및 동거 = 1, 미혼, 이혼, 별거, 사별, 기타, 무응답 = 0으로 재코딩하였으며, 북한에서 기혼자라 할지라도 남한에서 결혼한 상태가 아니면 미혼으로 응답한 결과이다. 남한에서의 취업 경험은 예 = 1, 아니오 = 0으로 재코딩하였다.

(2) 생활사건 체크리스트(Life Event Checklist; LEC-5)

DSM-5 진단기준에 포함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사건 경험 여부와 외상 사건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National Center for PTSD에서 제작한 생활사건 체크리스트 5판(LEC-5)을 사용하였다. LEC-5는 심리 외상 측정을 위해 사용하며 자연재난, 신체폭력, 심각한 인간적 고난 등 17가지 외상 사건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겪음’과 ‘목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외상 빈도를 사용하였다. 북한 및 탈북기간 외상 사건은 직접경험 및 목격 = 1로, 무응답 = 0으로 재코딩하였으며, 각 변인별 평균을 산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Cronbach's α 는 각각 .703, .677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IV. 분석방법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구분하고, 인구사회학 변인(성별, 연령, 남한 거주 기간, 남한에서의 학력 취득, 취업경험, 결혼유무)과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빈도가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림 4-1> 참조). 이를 위해 SPSS 21.0과 Mplus 7.31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 정보를 확인하고,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노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은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통해 연구 변인간의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파악하고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모집단이 동질적(homogeneous)이라는 가정 하에 변수 간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변수 중심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과 달리, 모집단이 이질적(heterogeneous)이며 질적으로 다른 하위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집단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심 접근법(person-oriented approach)을 기반으로 한다. 잠재프로파일 계층은 탐색 절차를 통해 결정되므로, 최종모형 선택을 위해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증, 정보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려면 반복적으로 잠재계층 수를 증가시키며 잠재계층이 $k-1$ 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형($k-1$ class 모형)과 k 개의 잠재계층을 가진 모형(k class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p 값의 유의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³⁸⁾ 이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 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와 우도비 검정인 LMR-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AMLR(Adjusted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계층을 파악한다. AIC, BIC, saBIC는 수치가 낮을수록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하며,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집단에 정확히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³⁹⁾ 이 연구는 Entropy 지수가 .8 이상일 때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⁴⁰⁾ 그리고 잠재

³⁸⁾ Wang, Jichuan and Wang, Xiaoq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 using Mplus* (Hoboken, NJ: Wiley, 2020). pp. 339~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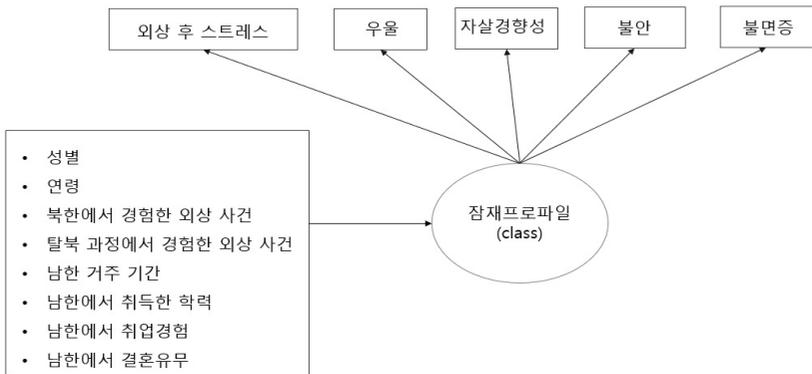
³⁹⁾ Karen L. Nylund et al,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14, no. 4 (2007), pp. 535~569.

⁴⁰⁾ Wang, Jichuan, and Wang, Xiaoq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

프로파일 분류를 위한 잠재지표 변수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분석척도를 5점 척도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인과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노출 빈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추정방법(three-step approach) 중 하나인 R3STEP 방법을 사용하였다. R3STEP 방법은 독립변수가 잠재프로파일 모형에 포함되어 분석될 경우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⁴¹⁾ 이러한 R3STEP 방법은 잠재프로파일이 독립변수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측정오차를 보정하는 장점을 가진다.

〈그림 4-1〉 연구 모형



using Mplus, pp. 339~442.

41) Tihomir Asparouhov and Bengt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21, no. 3 (2014), pp. 329~341; Jeroen K. Vermunt,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vol. 18, no. 4 (2010), pp. 450~469.

V. 연구결과

1.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유형을 탐색하기 위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종속변수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과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평균적으로 1.79 값을 보였다. 디스트레스 영역은 불면증($M = 2.04$)과 우울($M = 1.91$)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불안($M = 1.79$)이 중간, 자살경향성($M = 1.31$)이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 종속변수와 영향변인의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을 살펴본 결과는 <표 5-2>와 같다. 전반적으로 종속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존재하였으나 영향 변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여성과 부적상관이 존재하며, 연령은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과 부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연구모형의 변인 기술통계

	M (평균)	SD (표준편차)
외상 후 스트레스	1.79	1.15
우울	1.91	1.12
자살경향성	1.31	1.61
불안	1.79	1.30
불면증	2.04	1.14

〈표 5-2〉 연구모형 변인 간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861 **												
3	.684 **	.630 **											
4	.876 **	.828 **	.599 **										
5	.807 **	.780 **	.580 **	.775 **									
6	-.084	-.105	-.085	-.124 *	-.089								
7	-.080	-.054	-.031	-.109	.002	.095							
8	.157 **	.115 *	.159 **	.107	.148 *	.192 **	.082						
9	.241 **	.210 **	.253 **	.218 **	.164 **	-.097	-.233 **	.076					
10	-.032	-.028	.027	-.082	-.033	.046	.404 **	-.059	-.119 *				
11	-.258 **	-.232 **	-.190 **	-.250 **	-.217 **	-.006	-.291 **	-.012	.004	.052			
12	.080	.042	.149 **	.030	.039	.001	-.169 **	.060	.141 *	.193 **	.125 *		
13	-.173 **	-.129 *	-.154 **	-.155 **	-.138 *	.104	.070	-.055	-.025	.164 **	.113 *	.096	

* 주: $p < .05$, $p < .01$ **

* 주: 1. 외상 후 스트레스, 2. 우울, 3. 자살 경향성, 4. 불안, 5. 불면증, 6. 성별, 7. 연령, 8. 북한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9.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10. 남한 거주 기간, 11. 남한에서의 학력취득, 12. 남한에서의 취업경험, 13. 남한에서의 결혼유무

2. 인구사회학 정보

인구사회학 정보는 〈표 5-3〉과 같으며, 북한이탈주민 300명 중에서 남성은 55명(18.3%), 여성은 245명(81.7%)이다. 연령은 46~50세(14.0%) 및 51~55세(14.0%), 41~45세(10.7%)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66~70세(8.7%), 71~75세(8.0%), 56~60세(7.3%), 76~80세(7.3%), 61~65세(7.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9~25세 및 36~40세가 각각 5.7%(17명), 26~30세가 5.0%(15명), 31~35세가 4.7%(14명)로 나타났다. 연령은 전반적

으로 중년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남한 거주 기간은 6~10년이 40.7%로 높게 나타났으며, 0~5년이 39.3%, 11~15년이 18.3%, 16~24년이 1.7%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학력 취득 여부는 대학 이상이 18.0%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가 6.7%, 남한에서 학력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75.3%로 나타났다. 남한 입국 이후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는 49.0%였으며,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51.0%로 나타났다. 남한에서 결혼한 경우는 25.0%이며, 미혼은 75.0%로 나타났다.

〈표 5-3〉 인구사회학 정보

영향요인		N = 300				
성별	남(1)	55(18.3%)				
	여(0)	245(81.7%)				
연령 (19-87세)	19-25세	17(5.7%)	41-45세	32(10.7%)	61-65세	21(7.0%)
	26-30세	15(5.0%)	46-50세	42(14.0%)	66-70세	26(8.7%)
	31-35세	14(4.7%)	51-55세	42(14.0%)	71-75세	24(8.0%)
	36-40세	17(5.7%)	56-60세	22(7.3%)	76-87세	28(9.3%)
남한 거주 기간 (2017년 기준)	0-5년	118(39.3%)		11-15년	55(18.3%)	
	6-10년	122(40.7%)		16-24년	5(1.7%)	
남한 에서	학력 취득	무학(1)		226(75.3%)		
		초등(2)		0(0%)		
		중등(3)		3(1.0%)		
		고등(4)		17(5.7%)		
		대학이상(5)		54(18.0%)		
	취업 경험	있다(1)		147(49.0%)		
		없다(0)		153(51.0%)		
	결혼 유무	기혼(1)		75(25.0%)		
미혼(0)		225(75.0%)				

3.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 빈도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경험 빈도는 <표 5-4>와 같다. 외상 경험은 사회적 공간별로 상이한 특성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은 심각한 인간적 고난이 81.7% 수준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자연재난(69.7%), 신체폭력(63.0%), 화재 또는 폭발(45.0%), 교통사고(38.0%), 급작스러운 변사(3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중단되고, 수해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무너진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은 신체폭력 및 감금이 각각 18.7% 수준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성폭력 및 불편한 성적 경험이 각각 9.3%, 무기로 공격당함 및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경험이 각각 8.0%, 교통사고(6.3%), 심각한 인간적 고난(6.0%), 목숨이 좌우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이 되거나 북송 위협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탈북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도 의료지원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위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性) 관련 트라우마(18.6%) 빈도가 높은 이유는 북한이탈여성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신매매, 매매혼, 성폭력 경험과 탈북과정에서 북송되는 것보다 생존을 위하여 성범죄에 협치하는 소극적 거래를 선택하는 양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⁴²⁾

42) 김경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104쪽.

〈표 5-4〉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빈도

	외상 사건(직접 겪음 및 목격)	북한(N)	탈북과정(N)
1	자연재난(홍수, 태풍, 폭풍, 지진)	209(69.7%)	11(3.7%)
2	화재 또는 폭발	135(45.0%)	5(1.7%)
3	교통사고(자동차, 선박, 기차, 비행기)	114(38.0%)	19(6.3%)
4	직장, 집, 여가활동 중 심각한 사고	31(10.3%)	8(2.7%)
5	독성 물질 노출(유독성 화학물질, 방사능)	15(5.0%)	1(0.3%)
6	신체폭력(예: 공격당하거나, 가격(손, 주먹, 몽둥이로 공격)당하거나, 따귀를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두들겨 맞음)	189(63.0%)	56(18.7%)
7	무기로 공격당함(예: 총이나 칼에 맞거나, 칼, 총, 폭탄으로 위협 당함)	73(24.3%)	24(8.0%)
8	성폭력(성폭행, 성폭행 시도, 완력이나 위협 하에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하게 됨)	37(12.3%)	28(9.3%)
9	기타 원하지 않거나 불편한 성적 경험	24(8.0%)	28(9.3%)
10	전투나 전쟁터 노출(군 근무 또는 민간인으로서)	19(6.3%)	-
11	감금(예: 납치, 유괴, 인질, 전쟁 포로, 중국에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96(32.0%)	56(18.7%)
12	목숨이 좌우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	101(33.7%)	15(5.0%)
13	심각한 인간적 고난(예: 강제노동, 지속적 굶주림, 식량부족, 지속적인 노숙 상태, 고문)	245(81.7%)	18(6.0%)
14	급작스러운 변사(살인, 자살)	105(35.0%)	4(1.3%)
15	급작스러운 사고사	99(33.0%)	7(2.3%)
16	나 자신 때문에 발생했던 다른 사람의 심각한 부상, 상해, 사망	5(1.7%)	1(0.3%)
17	그 밖의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이나 경험	39(13.0%)	24(8.0%)

4.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잠재프로파일 계층은 잠재프로파일 수를 2개에서 5개 집단의 모형적합도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하였다(〈표 5-5〉 참조).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기준은 정보지수 함수(AIC, BIC, saBIC), 우도비 검정(LMR, ALMR, BLRT), 분류 질(Entropy)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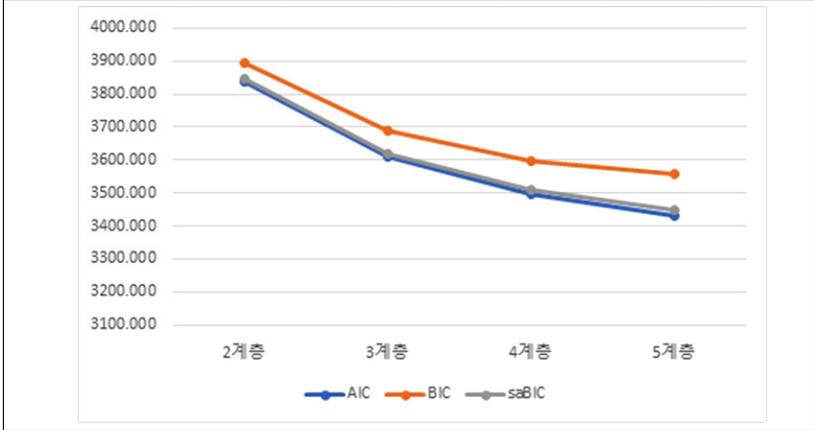
분석 결과 모형적합도 기준으로 정보지수 함수(AIC, BIC, saBIC)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정보지수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성을 의미하나 보통의 경우 정보지수는 잠재집단 수가 증가하여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감소폭 둔화 지점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수 있다.⁴³⁾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에서 3개, 3개에서 4개로 증가하는 경우 정보지수가 감소하였고, 5개에서는 감소양상이 미비했다.

Entropy 지수는 2계층에서 .957로 가장 높았으며, 4계층에서 .897로 가장 낮게 나타나 .8 이상의 값의 결과를 보여주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LMR과 BLRT 검증을 실시한 결과 2계층($p < .001$)과 3계층($p < .05$), 5계층($p < .05$)에서 유의한 값이 나타났으며, 4계층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형적합도, 우도비 검정, 정보지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최적의 잠재계층은 3계층으로 선정하였다.

⁴³⁾ Nylund-Gibson, Karen and Choi, Andrew Young,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4, no. 4 (2018), pp. 440~461.

〈표 5-5〉 잠재계층의 모형적합도 및 우도비 검정 결과 및 정보지수

모형	AIC	BIC	saBIC	Entropy	LMR	ALMR	BLRT
2	3836.646	3895.907	3845.164	.957	.000	.000	.000
3	3608.135	3689.618	3619.847	.908	.020	.022	.000
4	3494.652	3598.358	3509.559	.897	.079	.084	.000
5	3430.092	3556.021	3448.193	.918	.020	.022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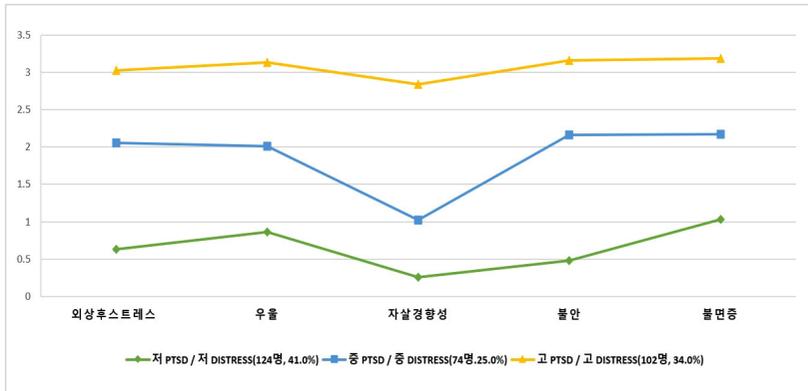
* 주: 모형비교 검증의 LMR, ALMR, BLRT는 p 값을 제시함.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잠재프로파일은 〈그림 5-1〉과 같이 시각화하였는데, 잠재계층이 상, 중, 하 패턴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각각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평균(M) 및 표준오차($S.E$)는 〈표 5-6〉과 같다. 먼저 1집단은 124명(41.0%)을 포함하며, 낮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저PTSD/저DISTRESS’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집단은 74명(25.0%)을 포함하며, 중간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임에 따라 ‘중PTSD/중DISTRESS’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집단은 102명(34.0%)을 포함하며, 높은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을 보임에 따라 ‘고PTSD/고DISTRESS’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5-1〉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잠재프로파일



〈표 5-6〉 집단 별 평균(M) 및 표준 오차(S.E)

	저PTSD / 저DISTRESS 집단		중PTSD / 중DISTRESS 집단		고PTSD / 고DISTRESS 집단	
	124명(41.0%)		74명(25.0%)		102명(34.0%)	
	M	S.E	M	S.E	M	S.E
외상 후 스트레스	0,631	,058	2,052	,173	3,021	,090
우울	0,860	,062	2,008	,165	3,128	,107
자살경향성	0,260	,061	1,026	,313	2,836	,218
불안	0,476	,057	2,164	,187	3,156	,111
불면증	1,031	,082	2,171	,168	3,187	,082

5.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 변인과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빈도의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한 결과는 <표 5-7>과 같다. 먼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 저PTSD/저DISTRESS 집단과 중PTSD/중DISTRESS 집단을 비교한 결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Est = 4.367, p < .05$)이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출될수록 저PTSD/저DISTRESS 집단보다 중PTSD/중DISTRESS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 저PTSD/저DISTRESS 집단과 고PTSD/고DISTRESS 집단을 비교한 결과 북한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Est = 2.154, p < .05$)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Est = 5.423, p < .01$)이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 남한에서의 학력 취득($Est = -0.413, p < .001$)과 결혼($Est = -0.789, p < .05$)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다양한 외상 사건에 노출될수록 저PTSD/저DISTRESS 집단보다 고PTSD/고DISTRESS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 학력 취득이 높고, 결혼을 할수록 저PTSD/저DISTRESS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인 중PTSD/중DISTRESS 집단과 고PTSD/고DISTRESS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남한

에서의 학력 취득($Est = -0.302, p < .05$)이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학력 취득이 높을수록 중PTSD/중DISTRESS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빈도는 세 집단에 비하여 고PTSD/고DISTRESS 집단에 소속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의 학력 취득이 높고, 결혼을 할수록 저PTSD/저DISTRESS 집단과 중PTSD/중DISTRESS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7〉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에 대한 추정 결과

	저PTSD / 저DISTRESS(준)		중PTSD / 중DISTRESS(준)	
	vs 중PTSD / 중DISTRESS	vs 고PTSD / 고DISTRESS	vs 고PTSD / 고DISTRESS	
	<i>Est(S.E.)</i>	<i>Est(S.E.)</i>	<i>Est(S.E.)</i>	
성별	0.161(0.378)	-0.743(0.406)	-0.904(0.474)	
연령	-0.016(0.011)	-0.012(0.008)	0.003(0.009)	
북한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0.672(0.920)	2.154(0.895) *	1.482(1.041)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4.367(1.996) *	5.423(1.784) **	1.056(1.654)	
남한 정착기간	-0.018(0.035)	-0.022(0.032)	-0.004(0.038)	
남한에서	학력 취득	-0.111(0.093)	-0.413(0.112) ***	-0.302(0.134) *
	취업 경험	0.101(0.319)	0.098(0.277)	-0.003(0.345)
	결혼 유무	-0.350(0.360)	-0.789(0.339) *	-0.439(0.426)

주: $p < .05^*$, $p < .01^{**}$, $p < .001^{***}$

VI.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인과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빈도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저PTSD/저DISTRESS’, ‘중PTSD/중DISTRESS’, ‘고PTSD/고DISTRESS’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 특성으로 저PTSD/저DISTRESS 집단은 전반적으로 낮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낮은 디스트레스 수준이 나타나 비교적 적응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중PTSD/중DISTRESS 집단은 중간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수준이 나타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고PTSD/고DISTRESS 집단은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높은 디스트레스 수준이 나타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SM-5에서 정의한 외상 사건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공존하며, 높음 - 중간 - 낮은 단계의 세 가지 패턴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외상에 노출된 경험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공존하는 동질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앞서 제시했던 인구사회학 정보에 따르면 중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고난의 행군 직후 탈북한 세대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북한과 탈북과정에서 신체 및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는 외상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 이질적인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고령층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남한 사회 입국 이후의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사회심리학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PTSD/고DISTRESS 집단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공존율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32.7% 수준이 정신 질환 및 신체적 장애로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성(13.3%)이 남성(7.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⁴⁾ 여성의 경우 신체화 증상으로, 남성은 외로움과 고독이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위치에 따른 가족과 이웃의 부재에 기반한 외로움은 사회적 불황(social recession)이라고 할 만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세 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불면증은 우울과 불안, 자살충동과 상호영향을 미치며 신경 기능의 손상을 유발시켜 인지 및 정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감정과 행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⁴⁵⁾ 이러한 경향은 과각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서 상황이나 맥락 조건을 파악하고 반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불면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사람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지만 외상 사건 경험이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경로가 없다고 제기되기도 한다.⁴⁶⁾ 그러므로 외상 사건에 노출된 이들을 부적응하는

44) 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2), 31~32쪽.

45) Lewis et al., "Sleep disturba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pp. 1~12.; Lancel et al., "Disturbed Sleep in PTSD: Thinking Beyond Nightmares", pp. 1~11.

존재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 맥락에 대한 넓은 이해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빈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외상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고PTSD/고DISTRESS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탈북과정에서만 외상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중PTSD/중DISTRESS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이 외상 노출 빈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가 공존하는 위험요인으로 일상생활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중PTSD/중DISTRESS 집단과 고PTSD/고DISTRESS 집단은 심리·정서 및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고PTSD/고DISTRESS 집단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Complex Posttraumatic Stress)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는 반복적으로 지속된 외상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며 정서, 행동, 대인관계, 주의력, 의식, 자기인식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저하된다. 북한이탈주민은 우울과 불안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로 인한 언어장벽, 한국인과의 상호작용 어려움, 차별 등으로 남한 사회 적응에 이중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를 동시에 고려한 사회심리적인 치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복합외상(Integrative Treatment of Complex Trauma: ITCT) 프로그램은 사회, 문화, 인종이라는 민감성에 관심을 기울인 치료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감소시

46) Melissa P. Schnurr and Brenda J. Lohman, "Longitudinal impact of toddler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 22, no. 9 (2013), pp. 1015~1031.

47) 한나영 외,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신경정신의학』 제54권 1호 (2015), 105~111쪽.

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⁴⁸⁾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정신건강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복합외상 프로그램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탐색도 필요해 보인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인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의 학력 취득과 결혼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한 사회에서 학력 취득이 높을수록 고PTSD/고DISTRESS 집단보다 저PTSD/저DISTRESS 집단과 중PTSD/중DISTRESS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서 학력을 취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⁴⁹⁾ 따라서 학업성취,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같은 회복탄력성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교육이해관계자들이 다층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담사와 협력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⁵⁰⁾ 한 걸음 더 나아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의력 결손 및 인지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하여,⁵¹⁾ 인지-기억체계의 어려움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외상 전의 인지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상 경험 이후 형성된 인지기능의 변화가 학업과

48) Adam Alvarez, "Seeing Race in the research on youth trauma and education: a critical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0, no. 5, 2020, pp. 583-626.

49) Chengqi Cao et al, "Patter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of chinese earthquake surviv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9 (2018), pp. 1-8.

50) Dakota L, King-Whint, "The role of school counselors in supporting mental health models in schools.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vol. 17, no. 4 (2019), pp. 1-24.

51) 전진용, 『탈북민의 심리적 외상과 전두엽 기능과의 관련성』(카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Thomas C. Neylan et al., "Attention, learning, and memor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7, no. 1 (2008), pp. 41-16.

일상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인지 능력은 장시간 교육을 통해 배양되며 성장환경, 영양상태 등의 전반적인 사회발전 수준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인지능력의 정확한 평가는 학력성취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 정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과 기억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은 외상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식 및 비공식 교육기관을 통해 고등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 난민이나 이주민의 연구에서도 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에 안정적인 직업지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선택하는 연구에서도 나타난다.⁵²⁾ 그리고 앞서 제시했던 인구사회학 정보에 따르면 36세 ~ 55세가 44.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 정부는 만 35세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학특례입학 및 등록금을 지원하여 대학학위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 제한은 북한이탈주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로 작용하여, 이들은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은행제 기관을 활용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한다. 고등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본인데,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직업지위 획득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교육지원정책이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교육지원제도가 아동·청소년 및 청년 중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변화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⁵²⁾ Nancy, Arthur and Sarah, Flynn. "Career development influ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pursue permanent immigration go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vol. 11, no. 3 (2011), pp. 221~237.

다.⁵³⁾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남한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면서 낮은 자존감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며 자퇴나 중퇴 등의 학업중단을 경험한다.⁵⁴⁾ 이러한 상황은 일종의 이주민 역설(immigrant paradox)로,⁵⁵⁾ 이주민은 고등교육이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에 중요하다는 규범적 견해를 수용하여 언어, 문화, 경제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교육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주민에게 정체성 혼란과 정서적 불안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낮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연령 제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결혼을 할수록 고PTSD/고DISTRESS 집단보다 저PTSD/저DISTRESS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가족 해체와 상실을 경험하는데, 남한 입국 이후 결혼을 하거나 북한 및 제3국에 두고 온 가족과 재결합하면서 서로를 돌보며 사회적 안정망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 출신은 북한이탈주민이 58.04%로 높은 편이며, 조선족이 15.18%, 남한이 12.50%, 한족이 4.46% 순이다.⁵⁶⁾ 이들이 같은 북한이탈주

53) 노경란·허선주, 「비전통적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탈북민의 학업 유지 노력에 대한 질적 연구」 『문화와 융합』 제44권 12호 (2022), 844쪽.

54) 김경미·김안나,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위 취득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53권 3호 (2022), 203쪽; 김경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159쪽.

55) Emily Greenman, "Educational attitudes, school peer context, and the 'immigrant paradox' in edu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2013), pp. 698~714.

56) 이소희 외,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

민과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외로움 때문이며, 조선족 및 한족이 배우자인 경우 여성이 남한에 입국하여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이후 자녀와 함께 탈북과정에서 매매혼으로 맺어진 배우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람과 결혼하는 이유는 남한 사회 정착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보호를 받으면서 남한 사회를 배우고 경제적 안정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이다.⁵⁷⁾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에 대한 애착은 정착에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불안과 우울증, 인지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관계 등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그러므로 그동안 남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집중했던 정책지원을 넘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학력을 취득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⁹⁾ 이는 남한에서 취득한 학력이 직업과 연계되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며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구사회학 변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이 연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필

회, 2017), 54쪽.

57) 한순옥·이기숙,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결혼 의미와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2호 (2014), 210~211쪽; 채명자·임춘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결혼생활 변화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3권 4호 (2019), 77~78쪽.

58) 「배우자 있고 vs 없고…더 ‘건강하게 늙는’ 사람은?」 『헬스조선』 (온라인), 2024년 9월 12일,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11/2024091102477.html>.

59) 김현경,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2), 1~31쪽.

요가 있다. 가령 이 연구는 성별과 연령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 사회에 거주하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72.1%⁶⁰⁾ 정도로 높은 편이며, 불안이 여성과 부적상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이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연구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 경험하는 외상이 성별과 무관하게 전방위적으로 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취업경험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28.8%와 남성 북한이탈주민 33.5%가 심신장애로 경제활동이 저조한 편이다.⁶¹⁾ 더욱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난을 경험하면서 남한주민에 비하여 키와 체질량지수(Mody Mass Index, BMI) 격차가 크고,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 유병률 또한 높은 편이다.⁶²⁾ 이들은 남한 입국 초기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진단받거나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소득 발생율이 11.0%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노동시장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외 난민 연구에서도, 난민은 다른 그룹(Natives and other migrants, non-refugee)에 비해서 건강상 문제로 직업 종류와 근로 시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높으며, 정착하고자 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습득과 사회적 관

60)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부』 2024년 6월 30일,
 <<http://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61) 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60쪽.

62) 정승호 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BOK 경제연구 제2023-19호』 (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3), 13쪽.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⁶³⁾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전문가가 협력하는 협력적 우울증 관리(collaborative depression care) 지원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⁶⁴⁾

북한이탈주민은 제조업(19.7%)과 숙박 및 음식업(14.6%) 분야에 재직하는 비율이 높으며, 직업유형은 서비스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가 각각 23.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월 가구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70%에 달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4.5%로 남한주민(2.7%)보다 높은 편이다.⁶⁵⁾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무 및 우대 채용과 고용보조금 지급 등의 취업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체감하는 직업만족도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에 따른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 불안이 심리적 취약성을 가중시켜 스트레스 원인으로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주의 및 전체주의 제도에 익숙한 문화와 가치관이 내재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성취동기가 약하거나 사고와 행동이 수동적인 성향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⁶⁾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이

⁶³⁾ Isabel, Ruiz, and Carlos, Vargas-Silva, "Differences in labour market outcomes between natives, refugees and other migrants in the UK"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18 (2018), pp. 855-885.

⁶⁴⁾ Katon, Wayne et al., "Collaborative depression care: history, evolution and ways to enhance dissemination and sustainability" *General Hospital Psychiatry*, vol. 32, no. 5 (2010), pp. 456-464.

⁶⁵⁾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23), 44~45, 47~48쪽.

⁶⁶⁾ Syngjoo Choi et al., "North Korean refugees' implicit bias against South Korea predicts market earning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69 (2024), 103276; Nicola Fuchs-Schündeln and Paolo Masella, "Long-Lasting Effects of Socialist Edu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8, no. 3 (2016), pp. 428-441.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횡단연구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인과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종단연구 혹은 인과추론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 변인이 남한 사회에서의 학력 취득과 결혼을 제외한 다른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인구사회학 예측 변인을 통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발현이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의 외상 노출 빈도가 위험요인이었지만, 남한 사회에서 학력을 취득하는 수준이 높고, 결혼을 하는 것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및 디스트레스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심리학적 개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수·김영애, 『정신건강의 이해』, 경기: 양서원, 2011.
- 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22.
- 남북하나재단, 『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23.
- 박상민 외, 『북한이주민 지원 실무자를 위한 핸드북』, IOM 국제이주기구, 2011.
- 박주언 외, 『재난정신건강평가 워크북』, 대한불안의학회, 2016.
- 이소희 외,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7.
- 정승호 외,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경제적 적응에 대한 연구」 『BOK 경제연구 제 2023-19호』, 서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i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13.
-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Wang, Jichuan, and Wang, Xiaoqia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 using Mplus*. Hoboken, NJ: Wiley, 2020.
- 김경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미래사회』 제12권 제6호, 2021, 94~116쪽.
- 김경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김경미·김안나,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위 취득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4년제 대학 졸업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제53권 3호, 2022, 179~207쪽.
- 김재엽 외, 「탈북여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4권 2호, 2013, 33~56쪽.
- 김현경, 「북한이탈주민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8권 1호, 2012, 1~31쪽.

- 김희경,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4호, 2012, 1003~1022쪽.
- 노경란·허선주, 「비전통적 고등교육기관에서 성인 탈북민의 학업 유지 노력에 대한 질적 연구」 『문화와 융합』 제44권 12호, 2022, 843~855쪽.
- 박소희 외,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의 종단적 추세: 외로움,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4년 추적 연구」 『Anxiety and Mood』 제17권 2호, 2021, 49~58쪽.
- 박철옥·안현의, 「새터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용서, 경험회피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0권 4호, 2009, 1891~1905쪽.
- 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2호, 2009, 189~213쪽.
- 윤지혜,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시도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이경은 외,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임상적 특성」 『Anxiety and Mood』 제14권 2호, 2018, 80~87쪽.
- 유상우 외, 「한국판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타당도 연구」 『Anxiety and Mood』 제2권 1호, 2006, 50~55쪽.
- 전진용, 『탈북민의 심리적 외상과 전두엽 기능과의 관련성』, 카톨릭관동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논문, 2021.
- 채명자·임춘희,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결혼생활 변화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3권 4호, 2019, 65~87쪽.
- 한나영 외, 「북한이탈주민진료센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한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사회 적응 및 삶의 질 관계」 『신경정신의학』 제54권 1호, 2015, 105~111쪽.
- 한순옥·이기숙,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결혼 의미와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4권 2호, 2014, 197~233쪽.
- 허성외 외,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스트레스연구』, 제21권 3호, 2013, 193~202쪽.

Alvarez, Adam. "Seeing Race in the research on youth trauma and education: a critical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90, no. 5 (2020), pp. 583~626.

Asparouhov, Tihomir. and Muthén, Bengt.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r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21, no. 3 (2014), pp. 329~341.
- Arthur, Nancy. and Flynn, Sarah, "Career development influ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who pursue permanent immigration go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vol. 11, no. 3 (2011), pp. 221~237.
- Blevins, Christy A. et al.,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 5(PCL 5): Development and initial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28, no. 6 (2015), pp. 489~498.
- Boffa, Joseph W. et al., "PTSD symptoms and suicidal thoughts and behaviors among firefighter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84 (2017), pp. 277~283.
- Brackbill, Robert M. et al., "Asthma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5 to 6 years following exposure to the World Trade Center terrorist attack"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302, no. 5 (2009), pp. 502~516.
- Bryant, Richard A.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fugee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2023). pp. 413~436.
- Cao, Chengqi. et al., "Pattern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posttraumatic growth in an Epidemiological sample of chinese earthquake surviv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sychology*, vol. 9 (2018), pp. 1~8.
- Choi, Syngjoo. et al., "North Korean refugees' implicit bias against South Korea predicts market earning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69 (2024), 103276.
- Contractor, Ateka A. and Weiss, Nicole H. "Typologies of PTSD clusters and reckless/self-destructive behaviors: a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iatry Research*, vol. 272 (2019), pp. 682~691.
- Friedman, Matthew J. et al., "Considering PTSD for DSM-5" *Depression and Anxiety*, vol. 28, no. 9 (2011), pp. 750~769.
- Fuchs-Schündeln, Nicola and Masella, Paolo. "Long-Lasting Effects of Socialist Educa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98, no. 3, pp. 428~441.
- Galatzer-Levy, Isaac R. et al., "Patterns of lifetime PTSD comorbidity: a latent class analysis" *Depression and Anxiety*, vol. 30, no. 5 (2013), pp. 489~496.
- Goldstein, Andrea N. and Walker, Matthew P. "The role of sleep in emotional brain

- function”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2014), pp. 679-708.
- Greenman, Emily. “Educational attitudes, school peer context, and the ‘immigrant paradox’ in education”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2013), pp. 698-714.
- Jeon, Sehyun, et al.,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of the thalamus in North Korea refugee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cientific Reports*, 10:3194 (2020).
- Kim, Dahae, et al., “Exploring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in North Korean defectors: a latent class mixed analysis” *Frontiers in Psychiatry*, vol. 13 (2022), pp. 1-12.
- Kim, Nambeom, et al., “Alexithymia and frontal-amygdala functional connectivity in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Medicine*, vol. 50 (2019), pp. 334-341.
- King-Whinte, Dakota L. “The role of school counselors in supporting mental health models in schools” *Journal of school counseling*, vol. 17, no. 4, 2019. pp. 1-24.
- Lancel, Marike, et al., “Disturbed Sleep in PTSD: Thinking Beyond Nightmares” *Frontiers in Psychiatry*, vol. 12 (2021), pp. 1-11.
- Lee, Mi Kyung, et al., “Factor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growth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Scientific Reports*, 12:3989 (2022).
- Lee, Kyung Hwa, et al., “Neural correlat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regulation in traumatized North Korean refugees” *Translational Psychiatry*, vol. 11, no. 452 (2021), pp. 1-10.
- Lee, Yunhwan, et al., “Trauma experie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vol. 20, no. 3 (2001), pp. 225-229.
- Lewis, Catrin, et al., “Sleep disturbanc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 system review and meta-analysis of actigraphy studie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vol. 11, no. 1 (2020), pp. 1-12.
- Marshall, Grant N, et al., “All PTSD symptoms are highly associated with general distress: Ramifications for the dysphoria symptom clust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19, no. 1 (2010), pp. 126-135.
- Mary, Alison, et al., “Resilience after trauma: the role of memory suppression” *Science*, vol. 367 (2020), pp. 1-13.
- McEwen, Bruce S. and Akil, Huda. “Revisiting the stress concept: implications for

- affective disorders,” *Journal of Neuroscience*, vol. 40, no.1 (2020), pp. 12~21.
- Minihan, Savannah. et al, “Patterns and predictor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refugee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 232 (2018), pp. 252~259.
- Neylan, Thomas C. et al., “Attention, learning, and memor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17, no. 1 (2008), pp. 41~16.
- Nylund, Karen L. et al.,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 14, no. 4 (2007), pp. 535~569.
- Nylund-Gibson, Karen. and Choi, Andrew Young. “Ten frequently asked question about latent class analysis” *Translational Issue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4, no. 4 (2018), pp. 440~461.
- O'Donnell, Meaghan L. et al., “A systematic review of person-centered approaches to investigating patterns of trauma expos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57 (2017), pp. 208~225.
- Rahman, Akm Fazlur. et al., “A latent class analysis of PTSD symptoms among inner city primary care pati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 98 (2018), pp. 1~8.
- Ruiz, Isabel. and Vargas-Silva, Carlos. “Differences in labour market outcomes between natives, refugees and other migrants in the UK”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 18 (2018), pp. 855~885.
- Qureshi, Salah U. et al., “Does PTSD impair cognition beyond the effect of trauma?”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vol. 23, no. 1 (2011), pp. 16~28.
- Schnurr, Melissa P. and Lohman, Brenda J. “Longitudinal impact of toddler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vol. 22, no. 9 (2013), pp. 1015~1031.
- Sumner, Jennifer A. et 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in a large cohort of middle-aged women” *Depression and Anxiety*, vol. 34, no. 4 (2017), pp. 356~366.
- Steel, Zachary. et al., “Association of torture and other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 with mental health outcomes among populations exposed to mass conflict and displac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 302, no. 5 (2009), pp. 537~549.
- Storm, Tania, and Engberg, Marianne. “The impact of immigration detention on the mental health of torture survivors is poorly documented—a systematic review” *Danish Medical Journal*, vol. 60, no. 11 (2013), A4728.
- Tarrier, N., & Gregg, L. “Suicide risk in civilian PTSD pati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39, no. 8 (2004), pp. 655~661.
- Turrini, G. et al., “Efficacy and acceptability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in asylum seekers and refugee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Epidemiology and Psychiatric Sciences*, vol. 28 (2017), pp. 376~388.
- Veit, Clairice T. and Ware, John E.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51, no. 5 (1983), 730~742.
- Vermunt, Jeroen K.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vol. 18, no. 4 (2010), pp. 450~469.
- Wayne, Katon. et al., “Collaborative depression care: history, evolution and ways to enhance dissemination and sustainability” *General Hospital Psychiatry*, vol. 32, no. 5 (2010), pp. 456~464.
- Zucker, Marla. et al., “Dissociative symptomatolog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disorders of extreme stress” *Journal of Trauma and Dissociation*, vol. 7, no. 1 (2006), pp. 19~31.
- 「배우자 있고 vs 없고...더 '건강하게 늙는' 사람은?» 『헬스조선』 (온라인), 2024년 9월 12일,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11/2024091102477.html>.
- 「북한이탈주민정책」 『통일부』 2024년 6월 30일, <<http://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Weachers, F. W. et al., The life events checklist for DSM-5(LEC-5), Retrieved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PTSD, 2013, <<http://www.ptsd.va.gov>>.

Exploring the influence of latent profiles on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in North Korean defectors

Kim, Kyoungmi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atent profiles of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di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group categorization. A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on 300 individuals using cross-sectional data of the trauma survey of human rights victims of North Korean defectors provided by the National Medical Cent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three distinct profil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low PTSD/low distress, moderate PTSD/moderate distress, and high PTSD/high distress. Second, the higher the frequency of traumatic event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North Korea and during the defection process, the higher the co-occurrence of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Third, the influential factors affecting the latent profile of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were found to be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in North Korea and during the defection process as a risk factors, and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marriage in South Korean society as protective factors. Based on these analyses, we discuss the latent profile of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highlight the important implication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ccording to the influencing factors, and propose avenue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North Korean defectors, PTSD, distress, latent profile analysis

김경미(Kim, Kyoungmi)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형태 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2024),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교육사회학 연구동향 분석」(2023), 「북한이탈주민의 대학학위 취득의 가치에 대한 연구」(2022),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북한의 원격교육체제 탐색」(2022), 「김정은 시기의 북한 고등교육정책 변화 방향 분석」(2020) 등이 있다.

『통일과 평화』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20년 1월 7일

개정 2020년 4월 14일

개정 2024년 4월 1일

제1장 논문투고 및 게재

1. 『통일과 평화』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한다.
2. 『통일과 평화』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게재 희망 학술지의 간행 2개월 전(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투고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투고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를 『통일과 평화』 편집위원회(jpus.jams.or.kr)를 통해 제출한다.
5. 투고논문의 첫 페이지에 투고자 이름은 물론 본문 가운데 ‘필자’, ‘졸고’ 등으로 하여, 투고자의 신상을 짐작하게 하는 그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6. 제출된 원고는 익명의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 ‘수정 후 게재’, ‘충분한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통보된다. 원고 제출자는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7. 교정쇄는 필자에게 2회 또는 3회에 걸쳐 전달되며,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8. 투고논문에는 연구윤리서약, KCI문헌유사도검사결과서를 첨부한다. 유사율이 높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원고의 총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되,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10. 논문 제출 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통일과 평화』에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게재와 함께 논문의 저작권을 통일평화연구원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저자(들)가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통일과 평화』 게재 논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를 본 논문으로 인용한다.

제2장 원고 작성 요령

[제목, 목차, 저자명]

1. 논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제목, 목차 등은 『통일과 평화』 최근 간행호에 따른다.
2. 원고는 논문제목, 국문저자명, 국문요약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논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요약문, keywords,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3.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I”, “1”, “1)”, “(1)”의 순차로 매긴다.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의 이름과 소속, 직위를 밝힌다.
5. 감사의 글이나 연구지원기관 등은 <*표>를 하여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본문]

1. 본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 한자 등은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다음 괄호 안에 기재한다.

[논문 요약문]

1. 논문 요약문은 단순 요약이 아닌 해당 논문의 독창적인 견해 및 연구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작성한다.
2. 국문요약문은 원고지 3매, 영문요약문은 200단어 분량으로 작성한다.
3. 영문요약문은 외국인 학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통일평화연구원 원어민의 교정 단계를 거친다.

[인용문]

1. 본문에서 짧은 인용은 “ ”로, 긴 인용은 본문보다 들여쓰기로 하며, 강조의 표시는 < >로 한다.
2. 북한연구의 특성상 원문을 인용할 경우가 많은 바, 직접 인용 시 원문 그대로 표기한다.
 - 북한 자료는 출판시기에 따라 미세한 변화가 있으므로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등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판연도를 명기한다.
 - 예) 김일성, 「인민군대는 공산주의학교이다(1960. 8. 25)」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98~299쪽.

[표, 그림]

1. 표나 그림의 상단에 표, 그림의 번호(표 3-3, 그림 2-5)를 부여한다.
2. 하단에는 출처 또는 자료라고 쓴 후 완전한 각주양식으로 표기한다.

[각주]

1.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외국어의 경우 원어대로 표기하고, 국한문 혼용의 경우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형식의 범례는 다음과 같다.
2. 처음으로 어떤 저작에 관해 주를 사용할 때는 완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완전한 양식이란 저자의 이름, 저서의 이름(논문이름), 그리고 출판에 관한 사항(저서인 경우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논문인 경우 학술지의 이름, 권, 호, <vol. no.>, 학술지의 출판 년, 월), 페이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의 각주에 여러 문헌을 사용할 때는 마침표 없이 < ; >로 연결한다.

(1) 단행본

- 이운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 법문사, 1993), 20~28쪽.
-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55-57.
- 저자의 이름으로 연구기관, 단체, 정부의 기관 등도 사용되며, 편, 편저, 편역, 1인 이외의 공저, 공편 등의 사항을 표기한다.
-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1999), 20쪽 참조.
-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 김세균 외 공저,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최종태·김강식, 『북한의 노동과 인력관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3~36쪽.
 - Chong-Shik Chung and Chong-Wook Chung, eds., *Major Powers and Peace in Korea*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9), pp. 25-34.
- F. Parkinson 저, 정규섭·강원식 역, 『국제관계사상』 (서울: 일신사, 1994), 15쪽.

(2) 논문

<학술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명』 제×권 ×호 (출판년도)의 양식으로
- 전인영, 「동북아 군사정세 전망과 한국의 안보」 『전략연구』 제9권 1호 (2002), 6~51쪽.
- Donald S.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단행본 수록>

- 김세균, 「북한의 '수령 중심의 당·국가 융합체제'의 성립과 공고화 과정」, 김세균 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3~36쪽.

- Chong-Sik Lee, "Stalinism in the East," in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5), p. 247.

- 북한자료의 경우

예)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과 한 담화(1970년 5월 22일)」, 사회과학출판사 편,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12~136쪽.

<학술회의>

- 저자, 「논문제목」 『학술회의 대주제』, 주최 및 학술회의 명 (학술회의 날짜)
- 양문수, 「김정일 방중 이후의 남북경협: 북중경협 확대와 한국정부의 과제」 『북한경제진단과 남북 및 북미관계 전망』, 북한연구학회 2006년 춘계 학술회의 (2006년 3월 31일).

(3) 학위논문

- 권영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남한점령지역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0), 20~35쪽.
-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10~15쪽.
- Taik-young Hamm,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96), pp. 7-21.

(4) 신문

- 『로동신문』 2004년 8월 15일.
- *The Korea Times*, April 20, 2003.

(5) 인터넷 자료

- 뉴스 기사의 경우
「우리가 버린 脫北 청소년들」 『조선일보』 (온라인), 2004년 7월 14일,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7/200407140421.html>>.

– 논문 등의 경우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2004), <<http://www.budreview.com/html/18/18-nondan-yoo-sun-ho.htm>>.

3. 첫 번째 표기한 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

(1) 바로 앞번호의 각주를 다시 사용할 경우는 국문은 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로, 영문은 Ibid.로 처리한다.

(2) 주 번호상 바로 앞 번호가 아닌 경우는 출판사항을 삭제하고 저자 이름, 저서 및 논문명의 축소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

– 이은주,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22쪽.

– Suh, Kim Il Sung, p. 60.

– 함인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치관의 변화」, 270쪽.

– Macdonald, “American Imperialism,” p. 577.

4. 구술 자료의 전거는 면답자, 구술자, 면담일자, 면담장소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한다. 특별한 경우 구술자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일반적으로 국문단행본, 영문단행본, 국문논문, 영문논문, 기타의 순서로 배열한다.

2. 각각은 저자의 이름에 따라 국문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영문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3. 영문의 경우 저자명을 기록할 때 성(last name)을 먼저 쓴다.

4. 참고문헌 작성의 기본양식은 각주 작성 양식과 동일하되, 출판지와 출판사명의 괄호가 제거된다.

– 최완규,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 마산: 경남대학교출판부, 1996.

– Suh, Dae-Sook,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김연철, 「저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추격발전과 전통적 정치체제: 북한, 루마니아, 알바니아 비교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1호, 2004, 107~128쪽.
- Macdonald, Donald S. "American Imperialism: Myth or Reality?"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0, no. 3 (Fall 1986), pp. 575-583.

『통일과 평화』 연구윤리 규약

제정 2009년 5월 6일

개정 2019년 11월 20일

제1장 저자(투고자)의 연구윤리와 책임

제1조(중복투고 및 게재의 금지)

『통일과 평화』 이외의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중인 원고는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 및 게재할 수 없다.

제2조(교신저자 및 책임저자의 역할)

- ①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3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② 저자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변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

다음의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중복게재의 심의와 원칙)

- ① 중복게재 및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결정한다.
- ②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 거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조(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하는 사항도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 시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재한다.

- ① 부적절한 출처행위
- ② 참고문헌의 왜곡: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하며,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하는 행위
- ③ 하나의 출처로부터 집중적으로 차용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출처를 밝히는 행위
- ④ 텍스트의 재활용 행위(자기표절)의 금지: 저자(투고자)는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출간된 텍스트의 일부를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르지 않고 재사용하는 행위

- ⑤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수 개의 논문으로 분할하여 게재하는 행위

제7조(논문의 수정)

저자(투고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의 연구윤리

제8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심사 의뢰)

-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투고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의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11조(심사결과의 통보)

심사위원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심사서 작성)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될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여부를 판정한다.
- ②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제16조(소명 기회의 보장 및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저자(투고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약 위반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제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저자(투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가 제재를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게재를 불허한다.
- ②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논문의 학술지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를 적용한다.
- ③ 향후 5년간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한 이후 그 사실을 공식적인 연구업적 관리 기관에 통보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②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칙 2.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모집 및 제출

1. 『**통일과 평화**』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하는 전문학술지로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입니다. 본지는 21세기 한반도 미래비전을 구성할 두 핵심 키워드인 ‘통일’과 ‘평화’를 중심으로, 그 개념, 이론과 방법론, 관련 현상 및 담론/현실 분석 등을 통해 이를 학술적으로 본격 조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본지는 통일 과정 및 정책, 통일학의 이론과 방법론, 미/일/중/러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사회 각 분야 연구와 더불어, 인간/자연/사회를 둘러싼 제반 폭력과 비평화 구조, 소수자와 인권, 환경문제와 생태, 지구화가 야기하는 각종 위기와 갈등 등 평화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통일학/평화학의 다학제적·융합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용적, 정책적, 사회과학적 접근은 물론, 통일/평화의 인문적, 철학적, 종교적, 예술적, 문명론적 가치와 그 실현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하는 논문도 환영합니다.
2. 보내실 글은 독창성을 갖는 순수학술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보내실 원고는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글로,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통일과 평화**』는 학술논문과 함께 서평(book review)과 현장보고(field report)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서평은 위에 제시한 주제와 관련된 2권 이상의 학술서적을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 저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을 제시하는 글이며, 현장보고는 위에 제시된 주제와 관련된 ‘현장’을 기록, 조사하여 소개하는 글입니다. 논문의 형식을 갖춘 서평과 현장보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이며, 단순 서평과 현장보고는 50매 내외입니다.
4. 『**통일과 평화**』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JAMS)을 활용하여 원고 모집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를 투고하실 분께서는 통일평화연구원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 홈페이지(<https://jpus.jams.or.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메인의 [신규논문제출]을 클릭하여 연구윤리서약 동의 후 필요 항목을 기입하고 원고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후 심사 역시 시스템상으로 진행되며, 투고자는 홈페이지에서 심사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5. 보내신 글은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투고 시 심사료와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되어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고는 첨부된 <원고제출 및 집필요령>에 따라 ‘아래아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편집위원회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 (031) 5176-2332
Fax | (031) 624-4751
E-mail: tongil-journal@snu.ac.kr

통일과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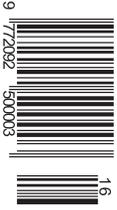


Vol.16, No.2
2024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CONTENTS

Special Articles	Uncompleted Post-Cold Wa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80s
Shen Zhihua	From “One Korea” to “Two Koreas” : The Transformation of China’s Perception and Policy about South Korea, 1978–1992
Lee, Sangsook	The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rth Korea’s Diplomacy Change in mid–1980’s
Xie Dingyuan · Gao Yangkai	Competition for International Legitimacy : An Analysis of the Inter–Korean Olympic Talks, 1984–1988
Project Articles	North Korea’s Two-State Declaration and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Jung, Dae–Jin	The Hostile Two State Stanc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
Articles	
Yun, Sun–Jin · Park, Jeonghyeon · Kim, Eunjin	Trends in research on renewable energy withi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during Kim Jong Un era
Kim, Suyeon	Performance analysis of North Korean cited papers published in international mathematical journals
Kim, Kyoungmi	Exploring the influence of latent profiles on post–traumatic stress and distress in North Korean defectors



ISSN 2092-500X

10,000원